

제5차 (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보고서 -

황수경 · 김기현 · 김지경
이상호 · 손희전

요 약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1998년 6월 IMF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미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0가구에 대해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 현재 제6차년도 실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2002년에 실시된 제5차년도 조사결과는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거쳐 학술대회용으로 선공개(pre-release)된 상태이다. 본 보고서는 데이터클리닝이 마무리된 제5차년도(2002년) KLIPS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초분석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1~4차 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다. 가장 큰 변화는 가중치를 도입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5차년도에 비로소 KLIPS의 가중치 체계가 완비됨에 따른 것이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KLIPS는 두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갖는데, 당해연도 자료의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두 개 이상의 연도간 비교를 위해서는 패널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또 다른 변화는 기초분석의 범위와 수준을 자료의 소개와 기초통계량 제시 이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득분포 및 빈곤을 분석을 통한 빈곤구조 및 추이 분석, 사교육 이용실태 및 사교육비의 지역별 격차 분석,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 및 유형별 근로실태 분석 등은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목 차

요 약	i
제1장 머리말	1
제2장 한국노동패널 5차조사의 개요	16
제1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16
제2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20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20
2. 설문내용	22
제3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26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	26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28
제4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31
1.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	31
2.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35
제5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38
1. 이사 가구의 특성	38
2. 분가 가구의 특성	40
3. 비성공 가구의 특성	41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42
<보론>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부여	44

제3장 조사가구의 특성	49
제1절 가구 및 세대 구성	49
제2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53
1. 가구주의 특성	54
2. 가구원의 특성	55
제3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57
1. 출생아의 특성	58
2. 사망자의 특성	59
제4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61
제4장 가계 경제	65
제1절 가구 소득	65
1. 가구의 총소득	66
2. 소득원천별 가구 소득	71
제2절 가계 소비	73
1. 생활비	73
2. 저 축	78
제3절 주거형태 및 비용	82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82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 비용	86
제4절 자산 및 부채	89
1. 부동산 자산	89
2. 금융 자산	91
3. 가구의 부채	93
제5장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99
제1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현황	99
1.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 여부	100
2. 사교육·보육시설 비용	105

3. 사교육·보육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109
제2절 사교육 이용 유형	112
1.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의 종류	112
2. 연령별 사교육 이용 현황	114
3. 사교육 종류에 따른 유형과 비용	117
제3절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122
1.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122
2. 자녀단위 사교육비	130
제4절 보육시설 이용 및 비용	133
1. 보육시설의 이용 여부 및 현황	133
2. 모(母)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과 경제적 부담	139
제6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144
제1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45
1. 경제활동상태	145
2.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51
제2절 취업자의 특성	155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155
2. 취업자의 구직 활동	161
제3절 미취업자의 특성	166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비구직 이유	166
2.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168
3.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172
제7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176
제1절 고용형태	177
1. 근로계약	177
2. 종사상 지위	179
3. 시간제/전일제 근로	185
제2절 근로시간	187
1. 근로시간 규칙성과 정규근로시간	187

2. 초과근로시간	192
제3절 임금	193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194
2.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	198
제4절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203
1. 사회보험	203
2. 노동조합	206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211
1. 비정규직의 규모	212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214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만족도	217
제8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221
제1절 종사상 지위	222
제2절 근로시간	224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224
2. 주당근로시간	225
제3절 근로소득	229
제4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	232
1. 사업체의 창업	233
2. 사업체의 운영	237
3. 이직희망 여부	238
제9장 생활·직무만족도 및 조직 몰입, 사회계층 소속감	241
제1절 생활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	242
제2절 직무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 몰입	249
1. 직무만족도	249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254
3. 조직 몰입	260

표 목 차

<표 2- 1> 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8
<표 2- 2> 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20
<표 2- 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5차년도 응답 결과	21
<표 2- 4> 5차년도(2002년) 설문 내용	23
<표 2- 5> 5차년도(2002년) 설문 내용(계속)	24
<표 2- 6>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30
<표 2- 7>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	34
<표 2- 8>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37
<표 2- 9> 5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42
<표 2-10>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 수	46
<표 2-11>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변수명	47
<표 3- 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50
<표 3- 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52
<표 3- 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53
<표 3- 4> 연도별 가구주의 성·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55
<표 3- 5> 1~5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56
<표 3- 6> 2~5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58
<표 3- 7> 2~5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60
<표 3- 8> 비동거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61
<표 3- 9> 비동거 부모님의 생존 여부	62
<표 3-10> 비동거 부모님과의 왕래 빈도	63
<표 3-11> 비동거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63
<표 3-12> 비동거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64
<표 4- 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67
<표 4- 2>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69

<표 4- 3>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빈곤추이	70
<표 4- 4>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71
<표 4- 5> 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74
<표 4- 6>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75
<표 4- 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부담	76
<표 4- 8> 1~5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저축액	78
<표 4- 9>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80
<표 4-10> 1~5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83
<표 4-11> 1~5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86
<표 4-12>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90
<표 4-13>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91
<표 4-14> 금융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92
<표 4-15>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93
<표 4-16> 부채 잔액 분포	94
<표 4-17>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 분포	94
<표 5- 1> KLIPS의 사교육 관련 측정항목과 예	100
<표 5- 2>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101
<표 5- 3> 자녀수 대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101
<표 5- 4> 가구주 특성에 따른 사교육 이용 여부	102
<표 5- 5> 자녀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 여부	104
<표 5- 6>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지출 비용	106
<표 5- 7> 자녀수에 따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106
<표 5- 8>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	107
<표 5- 9> 자녀1인당 사교육·보육비용 지출 분포	108
<표 5-10> 자녀연령별 사교육·보육비용	108
<표 5-11> 소득수준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정도	110
<표 5-12> 사교육·보육비 지출 금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	111
<표 5-13>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112
<표 5-14> 자녀연령별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기관	113

<표 5-15>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수, 이용횟수, 시간, 비용 ...	116
<표 5-16> 자녀연령별 사교육 종류에 따른 비용	116
<표 5-17>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의 수	117
<표 5-18>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의 수에 따른 유형	119
<표 5-19> 자녀별 두 종류 사교육이용자의 유형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수업료	120
<표 5-20> 자녀별 세 종류 사교육이용자의 유형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수업료	121
<표 5-21> 사교육 이용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123
<표 5-22> 지역별 자녀수대비 사교육이용자녀수 비율	123
<표 5-23> 소득수준별 가구의 총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125
<표 5-24>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분포 : 지역별 비교 ...	126
<표 5-25>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의 증가율 : 지역별 비교	128
<표 5-26> 강남권과 신도시 지속거주 가구의 총 사교육비 변화	129
<표 5-27> 강남권과 신도시 지속거주 가구의 총소득 변화	129
<표 5-28> 자녀 1인당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131
<표 5-29> 자녀연령별 자녀당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132
<표 5-30> 7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여부	133
<표 5-31> 7세 이하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 여부	134
<표 5-32> 7세 미만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가족구성	135
<표 5-33> 보육시설 이용자녀의 연령별 평균 이용횟수, 시간, 비용	136
<표 5-34>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및 월평균 비용	137
<표 5-35> 보육시설과 사교육 모두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분포와 이용기관	138
<표 5-36>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모(母)의 특성	139
<표 5-37>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의 부담정도	142
<표 6- 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998~2002년	144
<표 6- 2>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8~2002년	145
<표 6- 3>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 : 2002년	150

<표 6- 4> 성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151
<표 6- 5>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1998~2002년	152
<표 6- 6>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	155
<표 6- 7> 경황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156
<표 6- 8>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	157
<표 6- 9> 경황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158
<표 6-10>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159
<표 6-1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2002년	159
<표 6-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160
<표 6-13> 취업자의 현직장 지속 여부	161
<표 6-14>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 1998~2002년	166
<표 6-15>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 1998~2002년	167
<표 6-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2002년 ..	172
<표 6-17>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998~2002년	173
<표 6-18>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 : 2002년 ..	174
<표 6-19>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174
<표 7- 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2년	176
<표 7- 2>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 유무 비교	177
<표 7- 3> 근로계약 평균기간	178
<표 7- 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1~5차)	180
<표 7- 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181
<표 7- 6>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기업체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182
<표 7- 7>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186
<표 7- 8>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188
<표 7- 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188
<표 7-10>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유무	188
<표 7-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190
<표 7-12> 임금근로자의 기업체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191

<표 7-1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과근로 분포	192
<표 7-14> 초과근로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193
<표 7-15>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산정방식	194
<표 7-16>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산정방식과 산정결과 액수	195
<표 7-17> 성별로 본 성과급제 실시 여부 및 종류	197
<표 7-18> 사업체 특성별로 본 성과급제 실시 여부 및 종류	197
<표 7-19>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199
<표 7-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200
<표 7-2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201
<표 7-22>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	202
<표 7-23 >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비교(3~5차)	204
<표 7-2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204
<표 7-25>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205
<표 7-2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208
<표 7-27>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존재유무 및 가입 여부	209
<표 7-28> 본인의 인식과 종사상 지위에 의한 비정규직	212
<표 7-2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213
<표 7-30>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 여부	218
<표 8- 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2년	221
<표 8- 2>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222
<표 8- 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223
<표 8- 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근로일수	225
<표 8- 5>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27
<표 8- 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228
<표 8- 7>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229
<표 8- 8>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	231

<표 8- 9>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적 특성 및 매출액규모별 월평균소득	232
<표 8-10>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234
<표 8-11> 일자리 시작 당시의 투자액	235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235
<표 8-13>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236
<표 8-14> 현재 사업(일)의 가치	237
<표 8-15>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업체 장기적 전망	237
<표 8-16>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서의 이직 희망 여부	238
<표 9- 1> 항목별 생활만족도 분포 : 2002년	245
<표 9- 2>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소속감 변화(경제적 수준) : 2000~2002년	247
<표 9- 3>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소속감 변화(사회적 지위) : 2000~2002년	247
<표 9- 4>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계층 소속감(경제적 수준) : 2002년 ...	248
<표 9- 5>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계층 소속감(사회적 지위) : 2002년	249
<표 9- 6>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 : 2002년	252
<표 9- 7>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2년	255
<표 9- 8>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 : 2002년	256
<표 9- 9>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2년	258

그림목차

[그림 1- 1]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및 자료 생산과정	4
[그림 2- 1] 노동패널 각 연도별 유효표본 가구수(원표본가구 유지율) ..	29
[그림 2- 2] 조사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30
[그림 2- 3] 노동패널 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32
[그림 2- 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32
[그림 2- 5] 가구소득 수준별 1~5차년도 계속응답 비중	33
[그림 2- 6]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36
[그림 2- 7]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 수 추이	36
[그림 2- 8] 5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39
[그림 2- 9] 분가가구 성공률(2~5차년도)	40
[그림 2-10] 5차년도 지역별 신규 분가가구 분포	41
[그림 2-11] 4차년도 비성공 사유별 5차년도 성공비율	41
[그림 2-12]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 (2~4차년도)	43
[그림 3- 1] 5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 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 수	51
[그림 3- 2] 4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54
[그림 3- 3] 사망자의 사망원인	60
[그림 4- 1] 5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68
[그림 4- 2] 5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 가구 분포	72
[그림 4- 3] 5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72
[그림 4- 4] 5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생활비	75
[그림 4- 5]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77

[그림 4- 6] 1~5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79
[그림 4- 7] 5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80
[그림 4- 8] 5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81
[그림 4- 9] 5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83
[그림 4-10] 5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84
[그림 4-11] 5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84
[그림 4-12] 5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87
[그림 4-13] 5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평균)	88
[그림 4-14] 5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88
[그림 4-15] 5차년도 소유 부동산자산의 종류 분포	90
[그림 4-16] 2~5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	92
[그림 4-17] 5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95
[그림 4-18] 5차년도 가구의 가족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96
[그림 5- 1] 월평균 사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분포	105
[그림 5- 2]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분포	108
[그림 5- 3]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110
[그림 5- 4] 사교육 종류별 월평균 사교육비	114
[그림 5- 5] 지역별 가구의 월평균 총 사교육비	124
[그림 5- 6] 지역별 가구 총 소득대비 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율	127
[그림 5- 7] 자녀 1인당 지역별 평균 사교육비용 : 지역별 비교	131
[그림 5- 8] 모(母)의 경제활동유형과 자녀이용 보육시설 종류에 따른 보육비용	140
[그림 5- 9] 모(母)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종류에 따른 보육비용	141
[그림 5-10] 보육시설 이용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142
[그림 6- 1]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1998~2002년	146
[그림 6- 2] 각 연도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147
[그림 6- 3] 각 연도별 연령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148
[그림 6- 4] 각 연도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149
[그림 6- 5] 각 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비교 : 1998~2002년	149

[그림 6- 6] 20~25세 연령 cohort별 경황 상태	153
[그림 6- 7] 55~60세 연령 cohort별 경황 상태	154
[그림 6- 8] 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중 비교 : 1998~2002년	162
[그림 6- 9] 교육수준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163
[그림 6-10] 산업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163
[그림 6-11] 직업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164
[그림 6-12] 취업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2002년	164
[그림 6-13] 취업 중 구직 방법 : 2002년	165
[그림 6-14] 미취업 중 비구직 이유 : 2002년	167
[그림 6-15]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 2002년	168
[그림 6-16]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비교(비공/비공식) : 2002년 ·	169
[그림 6-17]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비교(사적/제도적) : 2002년 ·	170
[그림 6-18]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2002년	171
[그림 6-19] 연령별 구직방법 : 2002년	171
[그림 6-20]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 2002년	172
[그림 6-21] 시간제근로 희망 이유	175
[그림 7- 1] 유기계약자들의 근로계약기간 계약 반복 · 갱신 여부	178
[그림 7- 2] 연령 · 학력별 임시 · 일용직의 추이 : 1998~2002년	181
[그림 7- 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시 · 일용직 비중	184
[그림 7- 4] 직업별 임시 · 일용직의 추이	185
[그림 7- 5] 1~5차년도 시간제근로의 비중 : 1998~2002년	185
[그림 7- 6]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분포	189
[그림 7- 7]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 여부와 성과급제 유형별 추이	196
[그림 7- 8]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 : 1998~2002년 ...	209
[그림 7- 9]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210
[그림 7-10] 다양한 조작적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213
[그림 7-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215
[그림 7-12]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216
[그림 7-13]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217
[그림 8- 1]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226
[그림 8- 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비교	230

[그림 8- 3] 현재의 월평균소득수준별 이직희망자의 비중	239
[그림 9- 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2년	242
[그림 9- 2]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연령별 추이 : 1998~2002년 ...	243
[그림 9- 3]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교육수준별 추이 : 1998~2002년	244
[그림 9- 4]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2002년, 점수)	245
[그림 9- 5]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경제적 수준) : 2000/2002년	246
[그림 9- 6]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사회적 지위) : 2000/2002년	246
[그림 9- 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2000~2002년	250
[그림 9- 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2년	251
[그림 9- 9]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2002년	252
[그림 9-10]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성별/고용형태별) : 2002년	253
[그림 9-11]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산업별) : 2002년	253
[그림 9-12]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직업별) : 2002년	254
[그림 9-13] 연도별 청년층 및 고등교육 졸업자의 교육불일치 추이 : 1999~2002년	257
[그림 9-14]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2년	259
[그림 9-15]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2년	259
[그림 9-16] 성별/고용형태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260
[그림 9-17] 연령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261
[그림 9-18] 교육수준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261
[그림 9-19] 산업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262
[그림 9-20] 직업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262

제 1 장

머리말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가 시작된 지도 어언 6년이 흘렀다. 한국노동패널은 1998년 6월 IMF 경제위기 한복판에서 급변하는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미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5,000가구를 추출하여 1998년 1차 조사가 시작된 이래,²⁾ 2003년 현재 제6차년도 실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2002년에 실시된 제5차년도 조사 결과는 1차 데이터클리닝 작업을 거쳐 학술대회용으로 선공개(pre-release)된 상태이다.

한국노동패널이 처음 시작될 당시만 해도 이 조사가 5년 이상 계속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패널조사는 매년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을 반복·추적 조사하므로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통계조사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고 패널조사의 역사가 짧은 우리로서는 패널응답

-
- 1)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 2) 한국노동패널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 조사구(전국 21,983조사구)를 모집단으로 하고 있고,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 표본틀을 사용하였다. 조사구의 추출 방법은 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부만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각 조사구 내에서는 1997년 고특의 조사대상가구 중에서 5-6가구를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는 방식으로 표본이 설정되었다. 표본 추출과정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한국노동패널 1차년도 자료분석(1999)』 및 강석훈(20203) 참조.

2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응답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이 적지 않았다. 한국노동패널보다 먼저 시작되었던 대우패널조사는 1993년부터 시작하여 1997년 제5차 조사를 끝으로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는데, 마지막으로 실시된 제5차 조사에서 대우패널은 전년대비 표본이탈률이 무려 21.7%(원표본유지율 60%)에 이르러 별도의 보정이 없는 한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우려반 기대반 속에서 진행되어온 한국노동패널의 6차년도 표본유지율은 77%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1%p 증가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이러한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우수한 패널자료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³⁾

KLIPS는 기본적으로 5,000개의 패널표본가구에 거주하는 전 가구원(약 13,00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가구특성,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실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부가조사를 제외한 기본설문만으로도 2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가구용 자료에서는 가구원의 인적 사항, 변동 가구원 관련 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자원 교류, 주거상태, 자녀 교육과 보육, 가구의 소득과 소비, 가구의 자산과 부채,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인용 자료에서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 훈련, 고용상의 특성, 근로시간, 직무만족 및 생활만족, 구직활동, 노동시장 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⁴⁾ 즉 조사내용의 범위는 임금 및 근로시간, 교육 훈련, 노동이동 등 노동시장 내에서의 일차적인 정보 이외에 개인의 경제 활동 전반과 관련된 배경 요인과 행태 요인 등 원인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한 기본조사 이외에도 구체적인 정책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필요시에 부가조사를 수행해왔다. 부가조사는 3차, 4차, 그리

3) 미국 PSID : 제6차 조사(1973년) 78%, 독일 GSOEP : 제6차 조사(1989년) 79%, 영국 BHPS : 제6차 조사(1994년) 77%

4) KLIPS는 조사형식면에서는 가구 단위의 추출을 통한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미국의 PSID와 유사하며, 연구내용 측면에서는 개개인들의 노동시장 경험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NLSY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고 6차년도 조사에서 이루어졌는데, 3차년도에는 만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였고, 4차년도에는 만 4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차년도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및 은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 50세 이상의 개인에 대해 중고령자 부가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층 부가조사는 학력, 자격증, 재학 중 직업훈련, 재학 중 취업 경험, 졸업 후 첫 일자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건강과 은퇴 부가조사는 건강상태, 장애/장해 여부, 질병, 의료기관 이용, 부양과 피부양, 건강상의 문제와 근로, 은퇴와 노후 생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고령자 부가조사에서는 은퇴에 대한 대비, 은퇴전후의 취업활동, 부양의무 및 사회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한국노동패널의 성과는 양적인 측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국가통계기관에서 수행하는 어느 조사 못지않은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본 보고서의 서술과정에서 한국노동패널의 대표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다른 자료와의 비교가 수시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평가는 자료의 이용자수와 연구결과에 대한 공신력일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더라도, 불과 5년 사이에 총 150여편의 연구논문이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발표되었고, 내년(2004년) 2월에 개최될 제5차 학술대회에는 현재 일반연구자 44명,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참여자 24명을 포함한 총 68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계획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국가통계를 제외하고 하나의 자료가 이처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한국노동패널이 거의 유일하다 할 것이다. 패널차수가 더해질수록 한국노동패널에 대한 수요자는 더욱 급속도로 증가할 것임을 쉽게 예측해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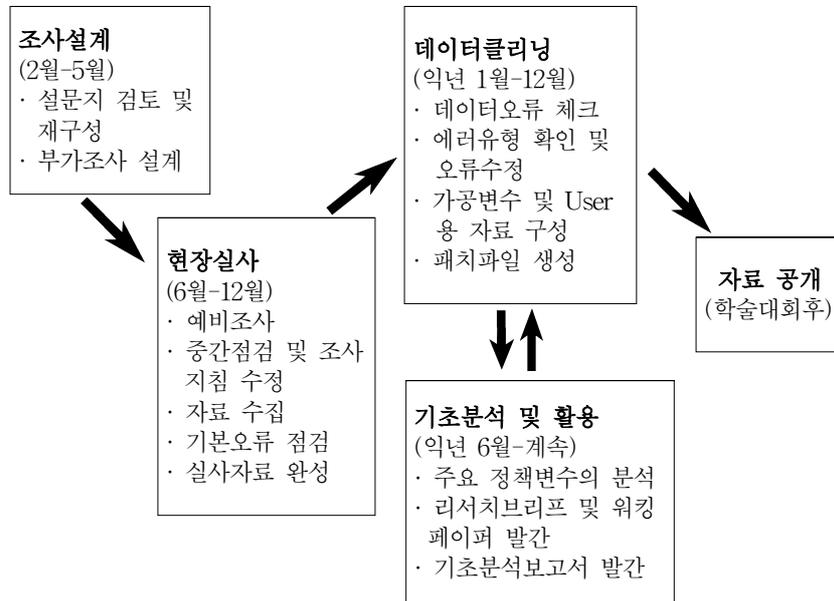
KLIPS가 명실상부한 패널조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기까지 본원의 패널팀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다. KLIPS는 다른 일회성 조사들과는 달리 전국의 5,000가구와 그 가구에 속한 13,000여명의 개인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대규모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1개년도 조사가 마무리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까지 무려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매년 설문지 검토를 시작으로 현장 실사, 데이터의 가공 및 발간, 자료의 분석 및 활용 등

4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자료 생산 및 분석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해(2002년) 데이터 오류수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워킹페이퍼 발간을 통해 자료이용의 저변을 확대한 데 이어, 2003년에는 가중치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모수 추정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고 향상된 데이터의 결과 처리능력을 기반으로 『KLIPS 리서치브리프』를 발간하여 보다 신속하게 조사결과를 공표,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5차년도를 기점으로 KLIPS가 정책 수립의 기초를 확립하고 학문적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안정적인 틀거리를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본 보고서는 최종 데이터클리닝이 마무리된 제5차년도(2002년) 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기초분석보고서이다. 이번 보고서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1~4차 보고서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림 1-1) 한국노동패널의 조사 및 자료 생산과정



우선 가장 큰 변화는 가중치를 도입하여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5차년도에 비로소 KLIPS의 가중치 체계가 완비되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다. 패널자료의 특성상 KLIPS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가중치를 갖는데, 그 하나는 패널 가중치이고 다른 하나는 횡단면 가중치이다. 전자는 원표본가구와 원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가중치이고 후자는 추가가구 및 추가가구원까지를 포괄하여 부과되는 가중치이다.⁵⁾ 양 가중치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를 것인데, 본 보고서에서는 당해 연도 자료의 분석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두 개 이상의 연도간 비교를 위해서는 패널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보고되는 수치는 대부분 가중치가 반영된 구성비이거나 기초통계량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자료의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 표본수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의 변화는 기초분석의 범위와 수준을 자료의 소개와 기초통계량 제시 이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소득 분포 및 빈곤률 분석을 통한 빈곤구조 및 추이 분석, 사교육 이용실태 및 사교육비의 지역별 격차 분석,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 및 유형별 근로실태 분석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물론 이러한 진전은 『KLIPS 리서치브리프』를 통한 사전적인 분석 토양이 마련된 데 힘입은 바 크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보고서의 구성과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5차년도 패널조사의 진행경과와 주요설문내용, 그리고 실사결과 등 KLIPS 제5차조사의 개요를 서술한다. 제1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개요에 대해, 제2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의 구성과 설문내용에 대해, 제3절에서는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대해, 제4절에서는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대해, 제5절에서는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조사자의 특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덧붙여, 보론에서는 1~5차년도 가중치의 개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가중치의 이용방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추가하고 있다.

제2장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

5) KLIPS 제5차년도 가중치 체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제2장 보론 참조.

6 제5차(2002)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약 1%p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단위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6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57명이며,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도 409명에 이른다. 이러한 안정적인 표본유지율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면접원 및 응답자 관리, 실사과정의 체계적 점검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내용에 있어서의 특징으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 유형설문을 통해서 근로시간 관련 항목중에서 교대제 시행여부, 교대제 형태, 근무시간 변경 주기 등이, 취업자용 설문을 통해서 비정규직 실태와 관련하여 근로의 지속가능성, 현재 일자리의 향후 지속가능기간, 현재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용역 여부, 독립도급근로여부, 가내근로여부 등에 대한 문항이 처음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체의 창업당시 자본금 및 월평균소득과 현재의 화폐가치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으며, 개인설문조사 대상자 중 만 30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수능(학력고사)시험여부와 시험점수를 질문하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에는 별도의 부가조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제3장에서는 5차년도 KLIPS 조사에 성공한 4,298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 지난 5년간의 KLIPS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 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교류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제3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4차년도의 3.5인보다 낮은 3.4인이며,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8.4%로 가장 높지만 전년대비 0.2%p 감소한 데 반해 1인가구의 비중은 11.2%로 전년대비 1.4%p 증가하였다. 세대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가 2/3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세대 가구 비중도 12%를 차지하여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조사 대상자인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 이후 여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여성이 50.1%(1차년도 조사당시 여성 51.4%), 남성이 49.9%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갖게 되었다. 평균연령은 40.4세이며, 5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5.6%로 1차년도 (13.0%)에 비해 2.6%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층은 동기간 11.7%에서 9.9%로 오히려 낮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줄고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5차년도 기간동안 총 출생아는 611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는 1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가구일수록 출생비중이 낮다. 1~5차년도 기간동안 총 사망자는 275명으로 남성이 57.1%이 여성(47.9%)보다 많다. 사망당시의 평균연령은 68.4세이며, 사망원인은 노환(132명), 질병(111명), 사고(24명)의 순이다.

제4장 가계경제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다루고 있다. 우선 제1절 가구소득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 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5차년도의 연간총소득은 2,616만원(월평균 21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1만원이 늘었다.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면 4차년도에 비해 308만원이 증가하였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의 비중 또한 1차년도 25.0%에서 5차년도 17.9%까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대빈곤은 1차년도 23.9%에서 2차년도에는 23.4%로 하락하였으나, 3차년도 23.7%, 4차년도 24.1%, 5차년도 25.4%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5차년도 기간동안 계속해서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이른바 ‘빈곤함정’에 빠진 가구의 비중은 절대빈곤이나 상대빈곤 모두 6.7% 수준이다.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9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식비의 비중이 1~5차년도 기간동안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외식비, 사교육비,

통신비 등의 항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3.2%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1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1차년도 당시 저축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그치고 있으나 5차년도에는 28.5%를 차지하여 IMF 경제위기 이후 저축률의 회복이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7.5%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0.6%)보다 약 7%p 증가하였다. 평균 부채잔액도 1차년도 773만원에서 5차년도 1,092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제5장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을 중심 주제로 다룬다.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조사된 항목(기관의 수와 종류, 주당이용횟수, 1회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가계부담정도)을 중심으로 가구와 자녀단위의 사교육 이용현황 및 지출비용을 4개의 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월평균 지출비용을, 제2절에서는 자녀연령별 사교육기관 이용현황, 유형 및 사교육비를 분석하며, 제3절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격차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의 이용 및 비용을 분석한다.

우선 5차년도 조사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61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녀수 대비 69.5%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사교육이용여부는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고 근로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부(wealth)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영유아기 때부터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70가구의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20만7천원이다. 자녀의 연령대별로는 7세 이하의 경우 월 16만8천원, 초등학생인 8세~13세의 경우 월 18만1천원, 중·고등학생의 경우 29만1천원으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사교육비가 큰 폭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의 이용 유형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에서는 학원과 학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연령대에서는 학원과 과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 간 불평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을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의 강남권(62만7천원)과 비강남권(29만8천원)이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고, 경기도의 경우도 신도시(46만8천원)와 비신도시(25만7천원)도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강남권과 그외 지역의 사교육비의 차이는 주로 월 200만원 이상 소득자를 중심으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평균 13.1%이고, 서울의 강남권이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제6장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의 변화 추이와 2002년도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1절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볼 것인데, 1998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였던 취업자 비중은 2002년에 53.9%로 증가하였다. 한편 실업자 비중은 지난 5년간 전 연령대에서 공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교육수준별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고졸 미만의 경우 1999년 6.4%에서 2002년 2.0%로 4.4%p 감소하였으며 고졸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4.1%p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반면 전문대졸의 경우 동기간 동안 0.5%p, 대졸자의 경우 0.6%p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2001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볼 때 각각 0.5%p, 1.0%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산업 및 직업별로 취업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산업별로는 2000년에 광공업의 비중이 22.7%까지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21.2%로 1.5%p 감소하였고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반대로 200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1998 → 2002 = 20.9% → 23.2%)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농

립어업직은 감소하는 양상(9.4% → 6.4%)을 보여주었다. 사무직은 200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1998 → 2000 → 2002 = 14.0% → 11.0% → 12.4%)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생산직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31.5% → 37.2% → 35.6%)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다음으로 3절에서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각 연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별과 상관없이 구직희망자의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당시 지난해 구직을 했다는 응답 비중이 25.7%에서 2002년 5차 조사의 경우 7.8%로 17.9%p나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동기간동안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절에서는 또한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구직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취업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구직의 비중이, 미취업자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구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직장 경험이 있거나 취업 중인 사람의 경우 직업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의 양과 질에 있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취업자에 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 7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임금, 근로조건 등과 관련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섯 개 절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분석대상은 조사대상자의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라고 응답한 자에 한정된다. 우선 제1절에서는 근로계약유무와 근로계약기간,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에 따른 고용형태별로 임금근로자의 특성을 살펴본다. 제2절에서는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및 초과급여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제3절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그리고 임금내역 등에 대해 살펴본다. 제4절에서는 사회보험 가입실태 및 사업장에서의 노동조합 유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비정규직의 규모와 근로시간, 임금, 복리후생 및 만족도 등을 살펴본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5차 조사에서 파악된 임금근로자의 수는 3,975명으로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68.1%이다.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차년도 62.4%에서 2차년도 64.7%, 3차년도 65.2%, 4차년도 67.3%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은 각각 11.2%, 10.3%를 차지하고 있다. 4차년도와 비교하여 상용직종사자(78.4%)의 0.1%p, 일용직종사자(9.9%)는 0.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 정규근로시간은 48.8시간이며, 직업별로 살펴볼 때 서비스직(53시간)이 가장 긴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문관리직(44시간)은 가장 짧은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중 32.5%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주 평균으로는 7.8시간, 시간당초과급여는 5,9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차년도와 비교할 때 초과근로시간은 0.4시간 감소하였고 초과급여는 4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차년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131만 8천원, 시간당 평균임금은 6,700원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93만 8천원으로 남성대비 59.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당임금으로 살펴보면 67.5%로 그 격차가 줄어든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볼 때, 대졸이상의 경우는 189만 2천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중졸이하의 경우는 월평균임금이 91만5천원원으로 대졸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4만6천원으로 임시직에 비해 1.8배, 일용직에 비해서는 1.6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의 월평균임금(171만원) 및 시간당임금(9천1백원)이 가장 높은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임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체 종류별로는 정부기관의 월평균임금이 193만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월평균 임금은 173만 2천원으로 사무직에 비해 1.2배, 생산직과 서비스업에 비해 약 1.6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체 임금근로자의 62.2%가 1개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보험별로 살펴보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55% 전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40~50% 미만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근로자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정규직-비정규직여부를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 세 번째는 고용형태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고용유형을 판별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고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일용직으로 파악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2%로 자기판단에 의한 비정규직 규모(22.1%)와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여 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원으로 정규직(142만원) 근로자의 약 78%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천3백원으로 정규직 근로자(6천9백원)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의 월평균임금은 정규직 여성보다 낮지만, 이를 시간당임금액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여성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시간당 월평균임금이 82만원으로 정규직 여성(101만원)에 비해 19만원이 낮으나, 시간당임금은 오히려 정규직 여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특수직 연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36.0%, 건강보험 38.7%, 고용보험, 32.8%, 산재보험 28.7%로 정규직 근로자의 보험 가입률과 비교할 때 2/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지급률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절반 수준인 3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8장은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을 다룬다. 제5차 조사에서 파악된 비임금근로자 수는 1,980명이다. 우선 제1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특징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

성 여부, 주당 평균근로일수, 주당 평균근로시간에서 나타난 특징을 살펴 보며, 제3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살펴본 후 이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과 비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살펴본다.

비임금근로자의 특성과 관련된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비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57.2시간으로 연도별로 큰 차이는 없으나 임금근로자(약49시간)에 비하면 약 8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8시간으로 남성(57시간)보다 약 1시간 정도 근로시간이 더 길다.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하여 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51시간)보다 주당 6시간 더 일하고,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여성 임금근로자(46시간)보다 12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월평균명목소득)은 209만9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5년간 추세로 살펴보면, 1차년도 126만9천원에서 2차년도 128만4천원, 3차년도 140만7천원, 4차년도 177만9천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 소득에서 성별 격차는 매우 크게 나타나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남성과 여성을 교차하여 월평균임금 수준을 비교하면, 비임금 남성>임금 남성>비임금 여성>임금 여성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업체 창업에 있어서 비임금근로자의 가장 큰 애로점은 자금 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체의 중장기적 전망은 건설업과 공공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이직 희망 의사에 있어서는 6.7%가 일정금액(세후 160만원 이상 희망) 이상이면 옮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1.8%는 자리만 있다면 옮기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보다 자영업자의 이직 의사가 2배 더 많았으며, 성별로는 여성(9.7%)이 남성(8.2%)보다 높은 이직의사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의사가 높은 가운데 30세 미만인 연령층의 비중이 1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생활·직무 만족도 및 조직 몰입, 사회계층 소속감 등을 다룬다. 2~8장에서는 객관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었다면 이 장은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을 다루고 있다. 먼저 생활만족도와 관련하여 분석해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998 → 2002 = 2.89 → 3.13). 성별로 볼 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응답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2.91 → 3.12)보다는 여성의 경우(2.87 → 3.13)가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 약간 더 빠르게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평균 생활만족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고졸미만의 경우 60.0점인데 비해서 대졸자는 67.2점으로 7.2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2000년과 2002년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상류층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중류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하류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제적 수준이든 사회적 지위든 상관없이 2000년 당시 중류층의 사회계층 유지율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의 사회계층 유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계층의 하락과 사회계층의 상승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이동이 하강이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를 비롯하여 5차년도 조사부터 처음 설문문항에 포함된 조직몰입 등을 다루었다. 먼저 직무만족도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불만족의 응답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99년부터 만족의 응답비중이 불만족 응답비중을 상회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다양한 측면의 직무만족도를 1998년과 2002년을 비교해보면, 직무만족 점수가 5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취업안정성(1998 → 2002 = 1.37점 → 3.09점)과 일의 내용(1.52 → 3.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낮아진 경우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45 → 3.24), 인사고과의 공정성(2.95 → 2.94) 등이었다. 이어서 2002년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 기술(기능)수준의 직무 불일치를 살펴보았는데, 교육 불일치의 측면에서 취업자 10명 중 2명꼴(19.9%)로 하향취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술(기능) 불일치를 살펴보면 교육 불일치와 유사하게 취업자 중 19.0%가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19.7%)이 여성(17.9%)보다 과잉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교육수준별 응답 유형 역시 교육 불일치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 조사부터 처음 설문문항에 포함된 조직몰입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직몰입의 정도가 높으며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서 조직몰입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은 조직몰입도를 보여주었다.

제 2 장

한국노동패널 5차조사의 개요

제 1 절 한국노동패널조사란

한국노동패널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구성원(5,000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다.⁶⁾

패널자료는 횡단면적 자료와 시계열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패널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960년부터 패널조사를 시행한 미국은 현재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1966년부터 시작된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1979년부터 시작된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그리고 가구와 개인의 소득 및 소비에 초점을 맞추어 1968년에 시작된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등의 패널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패널조사로는 미국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Education Statistics

6) 한국노동패널조사와 연구는 노동부의 고용보험 연구사업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울러 본 조사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을 받아 수행되고 있다 (통계청 승인번호 : 33601).

Center)에서 주관하고 1988년부터 조사되고 있는 국가교육중단연구조사인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PS(Beginning Post-secondary Student Longitudinal Study),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B&B(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외에도 1993년에 시작된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1991년에 시작된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1984년에 시작된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이 있다⁷⁾. 한국의 경우 전국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패널조사는 1993년부터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 Korea Household Panel Study)가 있으나 1998년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까지 가구패널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이 유일한 상황이다. 한편, 최근 들어 청년층 실업 문제 등이 심각하게 인식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개인단위의 패널조사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중앙고용정보원의 경우 2001년부터 만 15세~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을 표본으로 하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2002년부터 청년층 교육·고용 패널 자료 구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패널조사가 전반적으로 출발단계에 있는 시점에 노동시장 관련 기초조사자료의 미흡 및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분석적인 노동시장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의 수립과 평가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1999년부터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노동패널 학술대회가 개최되어 8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2003년 10월 현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워킹 페이퍼가 16편 발간되었으며, 145편의 학술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정책보고서, 학위논문 등이 한

7) 아시아 지역의 패널조사로는 1993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인도네시아의 IFLS(Indonesia Family Life Survey)를 비롯하여 일본의 JPSC(Japanese Panel Survey on Consumers), 대만의 PSFD(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2001년도부터 조사가 시작된 호주의 HILDA(Household, Income and Labor Dynamics in Australia) 등이 있다. 한편 전 세계의 패널 연구 현황에 대해서는 미국의 PSID 홈페이지 중 세계 각국의 패널조사를 소개한 페이지(<http://www.isr.umich.edu/src/psid/panelstudies.html>)를 참고.

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나온 상태이다⁸⁾. 또한, 올해부터는 노동패널 팀 연구원들에 의해 정책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리서치 브리프’가 새롭게 시도되어 지금까지 총 3편이 발간되었다.

〈표 2-1〉 1~5차년도 조사 결과 비교

	1차조사('98)	2차조사('99)	3차조사('00)	4차조사('01)	5차조사('02)
조사성공가구수 ¹⁾	5,000가구	4,509가구	4,267가구	4,248가구	4,298가구
유효표본가구수 ²⁾	5,000가구	4,379가구	4,045가구	3,865가구	3,798가구
표본유지율 ³⁾	-	87.6%	80.9%	77.3%	76%
분가가구수	-	130가구	222가구	383가구	500가구
가구원 수 ⁴⁾	13,317명	12,042명	11,206명	11,051명	1,0965명
실사기간	6월~10월	7월~12월	5월~10월	5월~10월	4월~9월

- 주: 1) ‘조사성공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유효표본가구와 조사 성공한 분가가구를 포함한 총 조사성공가구임.
 2)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의미함.
 3) ‘표본유지율’은 1차년도에 조사에 성공한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해당년도에 조사 성공한 유효표본가구의 비임.
 4)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 수.

〈표 2-1〉을 통해서 조사년도별 경과를 살펴보면, 1998년에 실시된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원표본 5,000가구 총인원 17,505명 중 3,775가구가 조사 성공되어 원표본 성공률은 75.3%였으며 추가 표본으로 1,227가구를 조사하여 총 조사된 가구는 5,000가구였다. 이중 15세 이상 가구원 13,738명 중에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은 13,317명이었다.

1999년에는 한국노동패널 제1차 조사에 포함된 원(原)표본가구⁹⁾에 대하여 제2차 조사가 실시되었다.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2차 조사에 성공한 유효표본가구¹⁰⁾는 4,379가구로 표본유지율은 87.6%이며 원표본

8)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발표된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문, 정책보고서 및 워킹페이퍼는 노동패널 홈페이지(<http://kli.re.kr/klips/>)에서 자료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들은 원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9) “원표본가구”는 제 1차년도에 표본으로 추출되어 1차 조사완료된 유효표본가구를 의미한다.
 10) “유효표본가구”는 원표본가구 중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표본가구

가구의 가구원이 분가하여 새로 일가를 이룬 경우 이들을 추적조사한 130 분가표본가구¹¹⁾를 포함하여 제2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509 가구였다. 개인응답자를 기준으로 볼 때, 제2차 조사는 1차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11,237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84.4%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0년에는 제3차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원표본 5,000가구 중에서 제3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표본유지율은 80.9%이며 분가한 222가구를 포함하여 제3차 조사에 포함된 총 가구수는 4,267가구였다. 이어서 제3차 조사의 총 응답 가구원은 11,206명이며 이 중 기존 조사자는 10,740명이고 신규 조사자는 466명이었다.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는 10,540명을 재조사하는데 성공하여 79.1%의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2001년에 실시된 제4차 조사에는 총 4,248가구가 조사되었으며, 이중 원표본가구는 3,865가구로 77.3%의 표본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분가한 가구는 383가구이며 총 응답가구원은 11,651명이었다. 가구원의 표본유지율을 살펴보면, 1차 조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 13,321명 중에서 4차 조사에 성공한 가구원은 11,051명이었으며 이중 기존 조사자는 10,607명, 신규 조사자는 444명이었다. 4차조사에 성공한 가구원 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10,332명이며 신규 조사자 중 원가구원은 240명이었다.

2002년에 실시된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는 원표본 3,798가구 및 분가한 500가구를 합하여 총 4,298가구가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원표본유지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해 약 1%가 감소하였다. 표본유지율을 개인단위

를 의미하며 조사대상 표본가구에 속한 면접대상 가구원, 특히 우선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응답한 “면접대상자”들이 설문지의 거의 모두와 핵심적 문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하여 조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조사대상가구의 가구원 중 가구주와 그 배우자 및 자녀들과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중인 가구원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하며 우선조사대상 전원에 대한 조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만이 “유효표본가구”에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1) “분가표본가구”는 1차년도 조사시에는 “원표본가구원”이었으나 조사 이후 결혼이나 세대분리 등으로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적으로 형성한 가구 또는 분가하여 들어간 다른 가구를 말한다.

로 살펴보면 조사에 성공한 개인 10,965명 중에서 기존 조사자는 10,563명이며, 새로 진입한 신규가구원도 402명에 이른다.

전반적인 실사현황을 살펴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이제 중단면 조사로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조사가 수행될 경우 각종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노동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기초자료로 자리잡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 2 절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과 설문내용

1.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한국노동패널 자료는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나뉘며, 개인용은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나뉘어 지고,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뉘어진다. <표 2-2>를 통해서 연도별로 노동패널 자료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 자료와 개인용 자

<표 2-2> 1~5차년도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구성

			1차년도 (1998)	2차년도 (1999)	3차년도 (2000)	4차년도 (2001)	5차년도 (2002)
가구용 자료			○	○	○	○	○
개 인 용 자 료	유형 ①~⑧		×	○	○	○	○
	개 인 공 통	취 업 자	임금근로	○	○	○	○
			비임금 근로		○		
		미취업자	○		○	○	
신규용 자료			×	○	○	○	○
부가조사 자료			×	×	○	○	×

주: 3차년도는 청년층, 4차년도에는 건강과 은퇴에 대한 부가조사가 실시되었음.

료로 나뉘고, 개인용 자료는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1999년 2차년도 조사자료는 개인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탈퇴 및 이동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일자리별 유형 설문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밖에 가구용, 개인 공통, 그리고 연령이 15세가 되거나 혼인 등으로 조사가구에 편입되어 조사에 새로 참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응답자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3〉 개인설문지의 유형별 구성 및 5차년도 응답 결과

		지난 조사 당시부터 계속된 일자리		지난 조사 이후 새로 시작한 일자리	
		임금	비임금	임금	비임금
일자리 지속 여부	지속	유형 ① (2,722명)	유형 ③ (1,679명)	유형 ⑤ (1,277명)	유형 ⑦ (395명)
	중단	유형 ② (987명)	유형 ④ (326명)	유형 ⑥ (153명)	유형 ⑧ (18명)

2000년에 실시된 3차년도 조사자료는 가구용과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로 나뉜 개인용 자료, 신규, 그리고 부가조사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3차년도부터 중요한 쟁점에 대한 심층조사를 위해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3차년도에는 청년층의 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이동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청년층” 부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4차년도 조사자료는 3차년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개인용 자료의 경우 임금·비임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취업자 공통으로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청년층 조사에 이어서 “건강과 은퇴”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2년 5차년도 조사에서는 별도의 부가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조사자료 형태는 기존자료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2차년도 조사부터 등장한 유형 설문은 지난 조사의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과 현재 일자리 관련 응답 사항을 토대로 모두 8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3>과 같다. 유형 설문의 응답 대상은 지난 조사 당시, 또는 조사 이후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개인이며 유형설문지에는 일자리의 업종, 직종, 근로형태와 임금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유형 ①~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응답자로 유형 ①

과 유형 ③은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와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하던 일자리를 그만둔 경우이다. 유형별 정의를 살펴보면 유형 ①은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②는 지난 조사 당시 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경우이다. 유형 ③은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유형 ④는 지난 조사 당시 비임금근로자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경우이다. 유형 ⑤는 지난 조사 이후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⑥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유형 ⑦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되며 유형 ⑧은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로 현재 그 일을 그만 둔 비임금근로자가 해당된다.

5차년도 노동패널 조사에서 신규진입자를 제외한 기존응답자의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1개 이상의 유형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의 61.2%인 6,360명이며 이 중 지난 조사 당시 일자리를 가졌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중 53.3%인 5,62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5차년도에 조사된 총일자리 수는 7,557개이며, 이중 유형①이 35.2%(2,722개), 유형②가 12.8%(987개), 유형③이 21.7%(1,679개), 유형④가 4.2%(326개), 유형⑤가 16.5%(1,277개), 유형⑥이 2.0%(153개), 유형⑦이 5.1%(395개), 유형⑧이 0.2%(18개), 그리고 신규 조사자의 일자리가 2.3%(179개)이다.

2. 설문내용

한국노동패널조사의 5차년도 설문지는 기존조사와 동일하게 가구용설문, 예비조사설문, 유형설문, 취업 및 미취업자용 설문, 신규 조사자용 설문으로 구성되며, 별도의 부가조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각 설문지 구성별로 설문내용¹²⁾을 조사 자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4>, <표 2-5> 참조).

우선 가구용 설문은 크게 가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전체 가구 관련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4차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설문 내용상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가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성별·연령·학

12) 1~4차년도 조사자료의 설문내용은 'KLIPS 1~4차 User's Guide'를 참조할 것.

〈표 2-4〉 5차년도(2002년) 설문 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 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 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 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 항목
예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시 일자리 응답내용 확인과 현재 지속여부 ▪ 지난 조사 이후 새로운 일자리 종사상 지위와 현재 지속여부
유형①, 유형② 유형⑤, 유형⑥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 형태 및 규모 ▪ 근로계약관련 문항 ▪ 근로시간관련 문항 ▪ 임금관련 문항 ▪ 일자리를 통한 사회보험 가입여부 ▪ 일자리의 노동조합 ▪ 일자리 그만둘 당시의 상황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구직활동 관련 문항
유형③, 유형④ 유형⑦, 유형⑧ (비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조사 이후 일자리 관련 변경사항 ▪ 일자리의 종업원 수와 가족종사자의 수 ▪ 일자리의 근로시간 ▪ 일자리의 매출액과 소득 ▪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상황 ▪ 구직활동관련 문항 ▪ 일자리의 직업 및 산업 ▪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금액으로 환산) ▪ 사업체의 장기적 전망 ▪ 임금근로자로의 전직의사 ▪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혹은 투자액 ▪ 사업비용 조달방법 ▪ 창업과정의 어려움

력·가구주와의 관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사항 이외에 가구원의 추가·분가·사망 등 가구원의 변동사항 등이 조사되었다. 가구단위로 조사된 내용으로는 주거(변동)상황,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관계, 가구의

〈표 2-5〉 5차년도(2002년) 설문 내용(계속)

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 근로시간관련 문항 ▪ 직무만족도 ▪ 현재 하는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 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 대학입학 수능 시험 치른 년도, 시험점수(30세이하만 해당) ▪ 혼인상태 ▪ 비정규직의 고용조정, 파견근로여부 등 (임금근로자만 해당) ▪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미취업자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상태 ▪ 구직활동 ▪ 구직방법 ▪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 구직시 어려움 ▪ 교육 및 직업훈련 ▪ 사회보험 수급관련 문항 ▪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 대학입학 수능 시험 치른 년도, 시험점수(30세이하만 해당) ▪ 혼인상태 ▪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설문의 모든 내용 포함 ▪ 만 15세 이후의 이전 일자리의 경력 ▪ 부모님의 학력 ▪ 만 14세 무렵의 아버님(계시지 않았던 경우 어머님)의 경제활동 상태 ▪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 혼인력과 출산력

소득·소비·자산·부채 등이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과 관련하여 사교육의 이용여부·종류·주당이용횟수·월평균수업료·경제적 부담정도 등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개인단위로 조사되는 설문지는 크게 응답자에게 어떠한 유형설문을 조

사할 것인가를 판별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예비설문, 기존의 응답자에 대해 일자리 단위별로 조사하는 유형설문, 유형설문에서 조사되는 내용 이외에 개인단위의 질문으로 구성된 취업자 및 미취업자용 설문, 마지막으로 새로 조사에 진입한 응답자에 대해 조사하는 신규조사자용 설문으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1, 유형2, 유형5, 유형6)으로는 일자리의 산업 및 직업,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상태, 근로시간, 임금, 일자리 단위로 가입되는 사회보험 관련내용,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근로시간 관련 항목중에서 교대제 시행여부, 교대제 형태, 근무시간 변경 주기 등이 추가로 조사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해 조사되는 내용(유형3, 유형4, 유형7, 유형8)으로는 일자리의 종업원 수, 근로시간, 매출액과 소득, 구직활동관련 문항, 직업 및 산업 이외에, 현재 하는 사업의 가치 및 장기적 전망, 사업체 시작당시 비용, 창업과정의 어려움 등과 같은 내용들이 조사되었으며, 4차년도에 조사되었던 사업체 시작동기, 창업훈련, 산재보험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전체 개인을 취업자 혹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조사된 설문에는 공통적으로 경제활동상태, 구직활동, 사회보험수급, 학교명, 학교 유형, 소재지, 전공 등 정규교육 관련 문항, 혼인상태,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생활만족도 및 경제적 여건 등이 기존의 조사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만 30세 이하의 청년층에 대해서는 대학입학 수능(학력고사) 시험여부와 시험점수를 질문하는 문항이 올해 새롭게 조사되었다. 취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관련 추가문항, 직무만족도, 일의 교육, 기술 수준 적합도 등이 조사되었으며,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성, 비구직사유 등 미취업 상태와 관련된 문항이 조사되었다. 특히, 취업자 중에서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인 경우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실태에 대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의 지속가능성, 현재 일자리의 향후 지속가능기간, 현재 일자리의 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용역 여부, 독립도급근

로여부, 가내근로여부 등에 대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조사되었다¹³⁾.

신규용 설문은 당해년도에 조사되는 유형1~유형8에 해당되는 모든 설문내용 및 취업자·미취업자용 설문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단위의 조사에 처음으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만 15세 이후에 가졌던 일자리의 직업, 산업, 종사상 지위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학력, 만 14세 무렵 부모님의 경제활동상태, 출생지와 만 14세 무렵의 주요 성장지 및 혼인력과 출산력에 대한 조사까지 포괄하고 있다. 신규 조사자의 경우에는 유형설문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일자리를 최대 2개까지 조사하며, 가장 중요한 일자리의 경우에는 ‘가(임금근로자)’와 ‘나(비임금근로자)’항목을, 두 번째로 중요한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임금근로자)’와 ‘라(비임금근로자)’항목을 통해 묻고 있다.

제 3 절 조사방법과 조사결과

1. 조사과정 및 조사방법¹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실사는 민간조사업체인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5차년도 조사는 2002년 4월에서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조사방법은 면접원이 질문하고 그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면접타계식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 등의 원인으로 면접원이 조사대상자를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용 설문지에 한하여 유치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 시기는 가구용 설문지와 각각의 개인용 설문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면접원이 가구원 중 한 명과 만나서 가구용 설문지

13) 비정규직 관련된 문항은 자료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조사 문항과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었다.

14) 한국노동패널의 표본 크기, 표본틀 및 추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노동패널 인터넷 사이트(<http://www.kli.re.kr/> klips)를 참고.

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가구의 표본대상 가구원을 파악한 후에 개인용 설문지를 면접하거나 면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치를 해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때, 개인이 설문지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응답 시기가 가구용 설문지와 달라지게 되고, 한 가구 내에서도 개인간의 응답 시기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구용 설문은 주로 가구주 본인이나 가구주의 배우자를 면접하였으나 일부는 자녀나 노부모를 통한 설문 응답도 있었다. 가구용 설문지는 반드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개인용 설문지는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사정에 따라서 장기 출타중인 경우 설문지를 가정 내에 유치하기도 하고 밤늦은 시간에만 접촉이 가능한 경우 전화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설문지 답변을 받기 위해 한 가지 방식만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한 후 부족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은 전화로 재확인 작업을 하는 등 설문지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기간동안 유학, 출장, 여행, 입원, 실종, 행상 등의 이유로 함께 거주하지 않아 면접조사에 응할 수 없는 가구구성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실시기간 중 가구로 일시 또는 완전 복귀하는 사람은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구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가구원(예, 영내거주 군인 및 전투경찰, 취학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교도소, 소년원, 요양원 등 사회보호시설 수용자 등)은 개인용 설문지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단, 이들의 인적사항 등은 가구용 설문지에서 질문하였다. 넷째, 전화면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조사일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예, 취업으로 외지에 상주하는 가구원, 사업상 장기간 출타중인 사람, 아르바이트 학생, 영내거주 직업군인 및 경찰 등)에 대한 개인용 설문지는 해당 가구원에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또한 정신박약, 허약, 치매, 노환 등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응답할 수 없는 성인은 가장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대리응답하였다.

실사 관리 측면에서는 응답률을 높이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 응답자와 면접원에 대한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먼저, 면접원에게 조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조사가 시작되기 전 노동부 공문 및 노동패널 소식지를 발송하고 이사가구의 추적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발송한다. 만일 조사대상가구가 이사한 경우 이를 조사기관에 알려오면 선물을 제공하며, 생일카드도 보내고 있다. 특히, 4차년도 조사부터는 응답 가구에 대해 3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함으로써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조사응답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욱 높이고 있으며, 조사 종료 후 10여 가구를 추천하여 선물을 지급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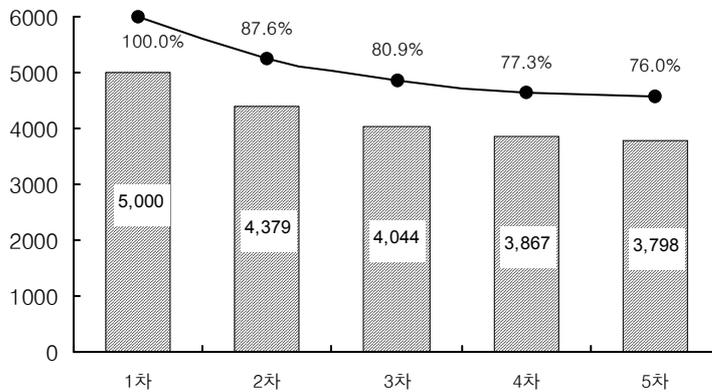
한편, 조사대상가구가 보다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응답자와 직접 접촉하게 되는 면접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매년 조사가 시작되기 전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당해년도에 변경된 설문 내용과 면접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과정 중에도 각 지역의 실사 감독자와 면접원들을 대상으로 실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한다.

2. 조사결과 및 원표본유지율

조사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표본이탈(sample attrition)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표본유지율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차년도 한국 노동패널조사의 총 조사표본은 4,298가구와 그 가구 내에 포함된 14,257명이며, 이들 중에서 15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면접에 성공한 가구원의 수는 기존 조사자 10,557명과 신규조사자 409명을 합한 10,966명이다. [그림 2-1]을 통해서 유효표본가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차조사에서 실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가구는 원표본가구의 87.6%인 4,378가구였으며 3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 수는 4,045가구로 원표본가구의 80.9%에 해당한다. 4차조사에서 성공한 가구 수는 3,865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7.3%이며,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전년도에 비해 1.3%p가 하락한 3,798가구로 76%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만을 놓고볼 때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은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그림 2-1) 노동패널 각 연도별 유효표본 가구수(원표본가구 유지율)



2-6>은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의 원표본가구 유지율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2차년도 원표본 가구의 표본유지율은 미국의 PSID나 독일의 GSEP, 영국의 BHPS와 마찬가지로 88%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패널조사 초기에 표본이탈률이 높다는 일반적인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3차년도의 표본유지율을 비교해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패널조사에 비해 3~4%p 낮으나 영국의 BHPS의 결과와 동일하며, 4차년도의 유지율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6%p, 영국에 비해서는 3%p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의 유지율은 외국패널과의 격차가 더욱 좁혀져서 미국에 비해서는 3%p, 영국에 비해서는 1%p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최초의 가구패널조사인 대우패널(KHPS)과 비교해보면, 이 기간동안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이 일관되게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양 조사 간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한국노동패널은 전반적으로 외국의 주요 패널조사에 비해서 손색이 없으며, 아직 패널조사의 경험자체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다.

패널조사 표본은 표본설계당시의 모집단을 대표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이탈률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임의의 특성에 따라 편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노동패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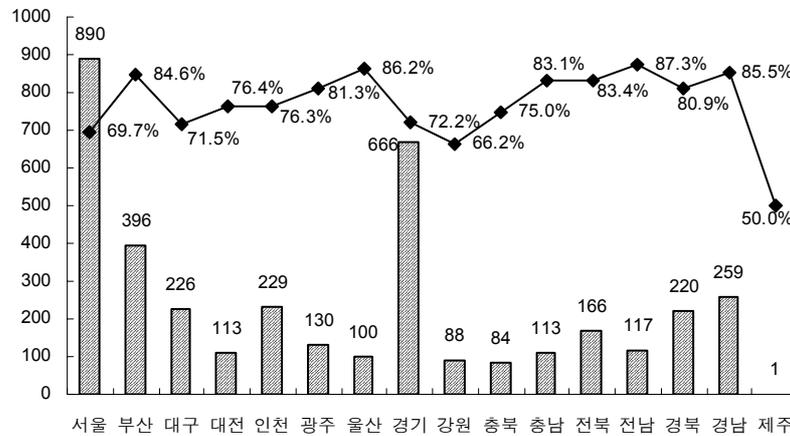
〈표 2-6〉 각국의 가구패널 조사와 KLIPS의 원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천명, %)

	미국 PSID	독일 GSOEP	영국 BHPS	대우 KHPS	KLIPS
2차년도	88%(1969)	90%(1985)	88%(1991)	79%(1994)	88%(1999)
3차년도	84%(1970)	86%(1986)	81%(1992)	68%(1995)	81%(2000)
4차년도	82%(1971)	85%(1987)	80%(1993)	62%(1996)	77%(2001)
5차년도	79%(1972)	81%(1988)	77%(1993)	60%(1997)	76%(2002)

주: 영국의 BHPS는 원표본가구의 원 표본유지율임.

(그림 2-2) 조사성공 가구의 지역별 분포



표본추출은 인구주택 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15개 광역시 및 도를 층화하여 다시 가구를 추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지역에 따라 고른 조사성공률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유지율을 조사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에 따라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차년도 원표본 5,000가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표본 성공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2〕 참조), 원표본 조사성공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87.3%를 기록한 전남지역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86.2%를 기록한 울산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성공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경우 66.2%를 보이고 있는 강원지역이며, 그 다음으로는 69.7%를 차지하는 서울이며,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타지역

에 비해 현저하게 성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을 포함한 경남지역과 광주를 포함하는 호남지역은 조사가 가장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과 경남은 각각 84.6%와 85.5%의 조사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광주, 전북, 전남 지역도 각각 81.3%, 83.4%, 87.3%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전체 표본가구중 가장 많은 가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은 각각 69.7%와 72.2%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조사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¹⁵⁾.

이렇듯 한국노동패널의 조사성공률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편익의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표본이탈이 누적되고 일부지역의 표본이탈이 더욱 크다면 표본추가(sample supplement)를 통해서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¹⁶⁾.

제 4 절 응답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

1.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

여기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 조사에 이르는 기간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조사에 참여한 계속응답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3]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연도별로 계속해서 응답한 가구 수와 1차년도 대비 비중을 제시하고 있다. 1~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응답한 가구는 3,257가구로 1차년도 5,000 원표본가구의 65.1%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원표본 비중이 2차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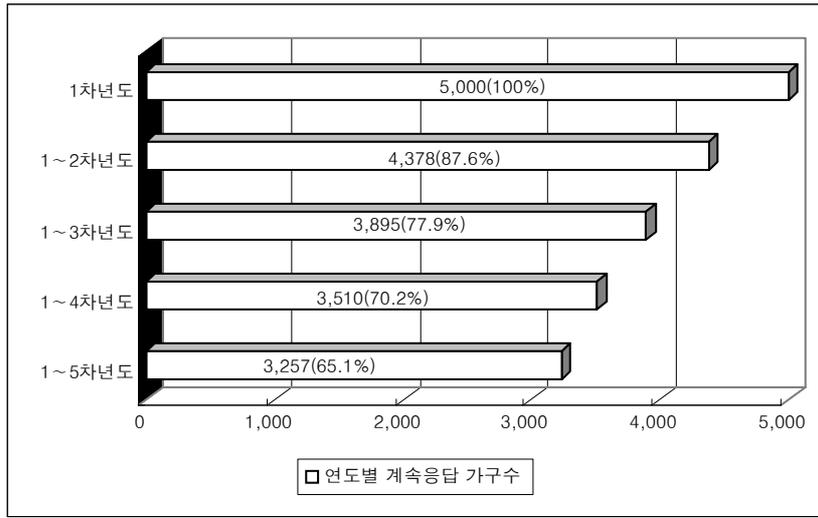
15) 지역간에 조사성공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동일한 면접원을 어느정도로 유지하였는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경기, 대구 지역의 경우 면접원의 교체가 상대적으로 잦았던 반면, 호남지역과 부산·경남·대전지역은 면접원의 90% 이상이 이전년도에 패널조사를 했던 면접원이었다.

16) 이와 관련하여 KLIPS 조사 주체는 이미 표본추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광 (2003), 『한국노동패널 오차분석 및 표본추가』를 검토하기 바란다.

도의 경우 87.6%를 보여주었으며 3차년도에 77.9%, 4차년도에 70.2%, 5차년도에는 65.1%를 보여주고 있어 매년 원표본 비중자체는 감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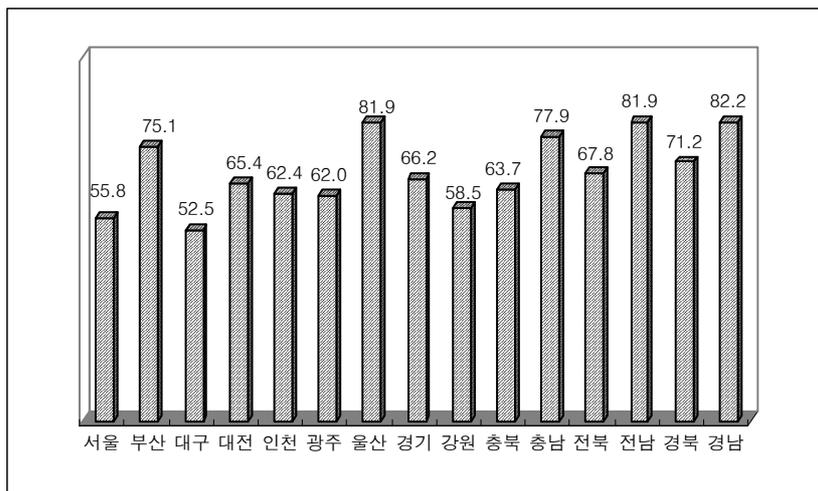
[그림 2-3] 노동패널 조사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수

(단위: 가구, %)



[그림 2-4] 노동패널 조사 지역별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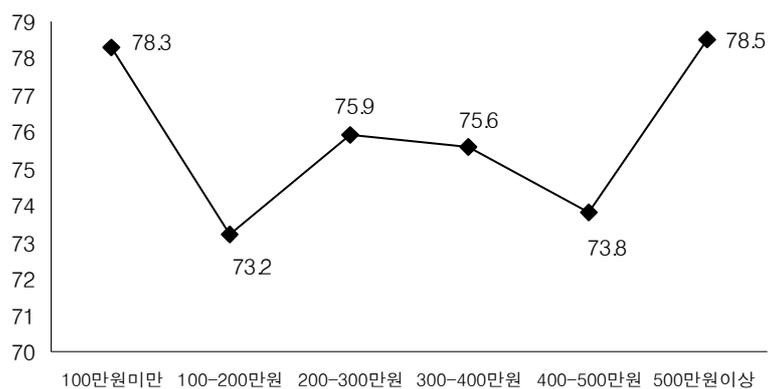
있으나 감소폭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를 통해서 5차년도 현재 지역별 계속응답 가구의 비중을 살펴 보면, 대구지역이 52.5%로 1차년도 원표본가구 대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서울과 강원도 지역 또한 각각 55.8%와 58.5%로 60% 미만의 계속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울산(81.9%), 전남(81.9%), 경남(82.2%)은 계속응답률의 평균(65.1%)을 15%p 이상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차년도 평균 원표본유지율(76%)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즉, 원표본유지율에 있어서의 지역간 격차가 매년 누적되어 오는 과정에서 1~5차년도 계속응답률의 격차 또한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2-5]는 가구소득 범주별로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 중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5차년도 총가구소득(명목소득)을 다섯 개의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계속응답 가구의 소득범주별 비중은 최하위 및 최상위 범주의 비중이 가장 높고, 중하위 및 중상위 범주의 비중이 가장 낮은 'W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와 5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의 계속응답 비중이 각각 78.3%와 78.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월평균 가구총소득이 100~200만원으로 중하층에 속하는 가구와 400~500만원

[그림 2-5] 가구소득 수준별 1~5차년도 계속응답 비중

(단위: %)



미만의 중상층에 속하는 가구의 경우 계속응답 가구 비중이 각각 73.2%와 73.8%를 차지하고 있다.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에 속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주의 84.5%가 남성으로 1차년도 조사(85.9%)당시에 비해 그 비중이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1.6% 증가한 94.7%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차년도 조사당시 40대(27.9%) > 30대 (27.1%) > 50대 (19.7%) > 60세 이상(17.6%) > 30세 미만(7.6%) 순으로 나타난데 반해,

<표 2-7>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가구주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원표본가구(1차)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 ²⁾
전 체		5,000 [100.0]	3,217 [100.0]
성 별	남 성	4,293 [85.9]	2,719 [84.5]
	여 성	707 [14.1]	498 [15.5]
혼인상태	기혼(무배우 포함)	4,656 [93.1]	3,094 [94.7]
	미 혼	333 [6.9]	123 [3.8]
연 령	30세 미만	380 [7.6]	32 [1.0]
	30대	1,357 [27.1]	609 [18.9]
	40대	1,397 [27.9]	961 [29.9]
	50대	984 [19.7]	708 [22.0]
	60세 이상	882 [17.6]	907 [28.2]
교육수준	고졸 미만	1,910 [38.2]	1,416 [44.0]
	고 졸	1,819 [36.4]	1,110 [34.5]
	대학 재학 및 중퇴	147 [2.9]	66 [2.1]
	전문대졸	241 [4.8]	148 [4.6]
	대졸 이상	882 [17.6]	477 [14.8]
취업상태	임금근로자	2,229 [44.6]	1,438 [44.7]
	비임금	1,440 [28.8]	965 [30.0]
	미취업자	1,331 [26.6]	814 [25.3]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해당 가구에 가구주가 없거나 개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40case는 제외.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의 경우 40대가 여전히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이 28.2%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50대(22.0%), 30대(18.9%) 순으로 나타나며, 가구주의 연령이 30세 미만인 경우는 1.0%에 그치고 있어, 조사차수가 늘어남에 따라 연령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계속응답 가구 중 상대적 고학력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속응답 가구 중 가구주의 학력이 고졸미만인 경우가 1차년도(38.2%)보다 5.8%p 증가한 44%로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은 1차년도(17.6%)보다 2.8% 감소한 14.8%로 관찰되고 있다.

취업상태별로는 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주의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44.6%)와 거의 유사한 44.7%이며, 비임금근로자는 1차년도(28.8%)보다 1.2%p 증가한 30%, 미취업자의 비중은 1차년도(26.6%)보다 1.3%p 감소한 25.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살펴볼 때, 2~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1번 이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은 가구주의 특성이 여성인 경우보다는 남성인, 기혼인 경우보다는 미혼인, 중고령자보다는 저연령층인, 저학력층보다는 고학력층인,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인 경우가 미세하나마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

이번에는 1차년도에서 5차년도 조사까지 한 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 조사에 응답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연도별로 응답한 15세 이상 원표본가구원의 수를 살펴보면 [그림 2-6]과 같다. 1차년도 조사당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총가구원인 17,506명 중 개인조사에 성공한 15세 이상 가구원은 총 13,321명¹⁷⁾이었다. 2차년도에는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 가구원 12,039명 중 97.3%에 해당하는 11,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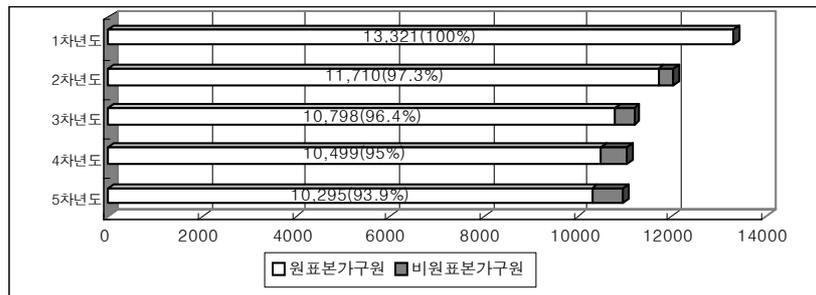
17) 1차년도 개인용자료에는 13,738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중 417명은 가구조사를 통해서 성별·연령·교육수준·경제활동상태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적정보만 조사되었을 뿐, 개인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1차년도 개인조사에 성공한 총응답자수를 13,321명으로 정의하였다.

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3차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1,205명 중 96.4%에 해당하는 10,798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으며, 4차년도에는 총 11,051명의 조사성공가구원 중 95%에 해당하는 10,499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5차년도에는 조사성공가구원 10,966명 중 93.9%에 해당하는 10,295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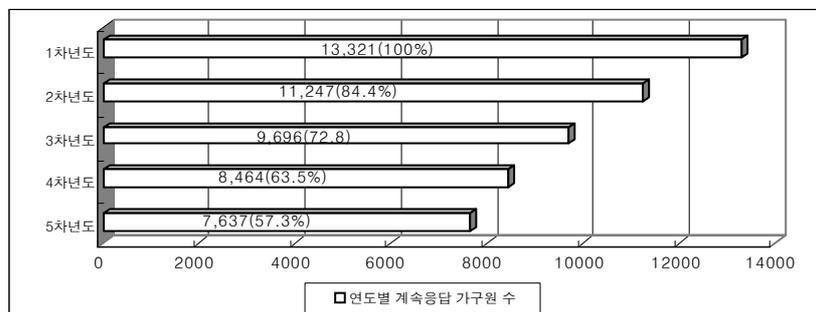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연도별로 원표본가구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원표본가구원의 경우 만 15세가 되어 개인조사에 진입하게 되는 비중보다 사망, 이민, 조사 거부 등의 이탈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데다가, 원표본가구원의 결혼, 합가 등으로 인해 비원표본가구의 진입요 인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7]과 같다. 1차년도 총 조사 성공가구원 13,321명 중 84.4%인 11,247명이 2차년

[그림 2-6] 각 연도별 조사성공가구원 대비 원표본가구원 수 추이



[그림 2-7] 각 연도별 계속응답 가구원 수 추이



도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3차년도 조사에는 전년도보다 11.6%p가 감소한 9,696명의 원표본가구원이 응답하였다. 4차년도에는 9.3%p가 감소한

〈표 2-8〉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의 특성¹⁾

(단위: 명, %)

		1차년도 가구원	1~5차년도 계속응답 가구원
전 체		13,321 [100.0]	7,637 [100.0]
성별	남 성	6,467 [48.5]	3,514 [46.0]
	여 성	6,854 [51.4]	4,526 [54.0]
혼인 상태 ²⁾	기혼(무배우 포함)	9,466 [71.1]	6,485 [81.9]
	미 혼	3,853 [28.9]	1,971 [18.1]
연령	15~19세	1,566 [11.8]	794 [2.2]
	20~24세	1,258 [9.4]	626 [7.1]
	25~29세	1,486 [11.2]	860 [7.9]
	30~39세	3,045 [22.9]	2,033 [21.9]
	40~49세	2,547 [19.1]	1,691 [23.8]
	50~59세	1,694 [12.7]	1,207 [15.8]
	60세 이상	1,725 [12.9]	1,246 [21.3]
교육 수준 ³⁾	무 학	856 [6.4]	618 [9.7]
	고졸 미만	4,569 [34.3]	3,176 [30.5]
	고 졸	4,407 [33.1]	2,816 [33.8]
	대졸 미만	1,138 [8.5]	528 [6.1]
	전문대졸	713 [5.4]	428 [6.8]
	대졸 이상	1,637 [12.3]	891 [13.1]
취업 상태	임금근로자	4,012 [30.1]	2,570 [38.0]
	비임금근로자	2,415 [18.1]	1,704 [21.7]
	미취업자	6,894 [51.8]	4,183 [40.4]

주: 1) 1차년도(1998년) 조사 당시 응답을 기준으로 함.

2) 혼인상태가 무응답인 2명은 분석에서 제외.

3) 고졸미만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재학, 휴학, 수료, 중퇴자를 포함. 대졸미만은 전문대 및 일반대학의 재학, 휴학, 수료 및 중퇴자를 포함. 교육수준이 무응답인 1명은 분석에서 제외.

8,464명의 가구원이 조사에 성공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6.2%p가 감소한 7,637명이 조사에 성공하였다. 1~5차년도 기간동안 계속응답한 가구원 수의 감소추세는 계속 완화되고 있으나, 1차년도 원표본가구원의 5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향후 이들에 대한 더욱 주의 깊은 조사 관리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계속응답 가구원과 1차년도 조사성공 원표본가구원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표 2-8>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계속응답 가구원의 성별비중이 1차년도 51.4%에서 2.4%p 증가한 54.0%로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의 비중이 1차년도 71.1%에서 10.8%p 증가한 81.9%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은 1차년도와 비교할 때 고연령층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 5년간 연령의 자연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수준별로는 무학, 전문대졸, 대졸 이상의 계속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차년도 계속응답자 중 무학인 경우는 9.7%로 1차년도(6.4%)에 비해 3.3%p가 증가하였으며, 전문대는 1.4%p가 증가한 6.8%, 대졸 이상은 13.1%로 0.8%p가 증가하였다.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1~5차년도 기간동안 누락 없이 지속적으로 응답한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1차년도에 비해 7.9%p가 증가하였으며, 이 기간동안 미취업자의 비중은 11.4%p가 감소한 40.4%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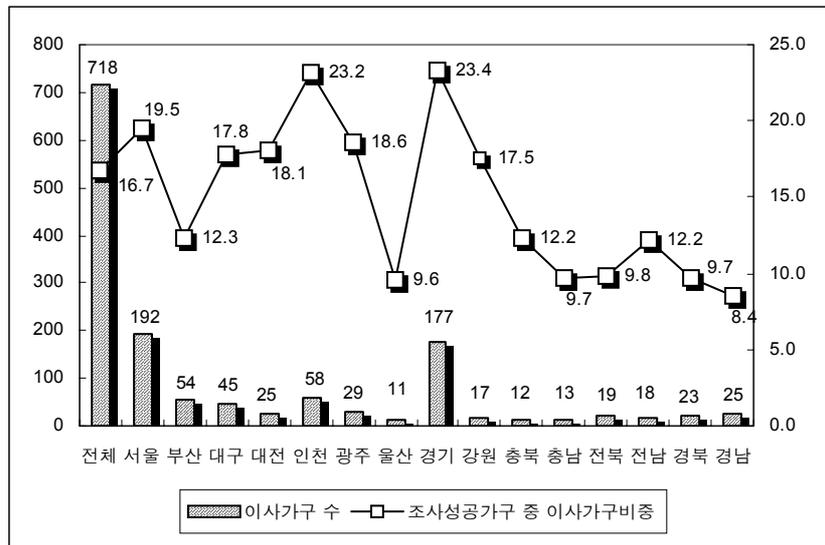
제 5 절 이사·분가 가구와 신규 조사자의 특성

1. 이사 가구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인구이동률이 2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경제활동,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인구이동은 인구사회학적으로도 중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지만, 동일한 가구를 추적조사해야 하는 패널조사의 경우 조사성공과 직결되는 문

18) 통계청,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제시된 수치는 2000년 총인구 대비 전입자 비중이다.

[그림 2-8] 5차년도 이사가구 분포



제이기도 하다.

KLIPS 5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이사가구는 총 조사성공가구(4,298가구)의 16.7%(718가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8]을 통해 각 지역별로 전체성공가구 중 이사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23.4%로 이사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인천(23.2%), 서울(19.5%) 순이었다. 한편, 이사가구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경남(8.4%), 울산(9.6%), 충남(9.7%), 경북(9.7%), 전북(9.8%)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에서 파악되고 있는 인구이동률 또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가장 높은데 반해, 경상북도 및 대구지역의 인구이동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구이동의 추세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그림 2-2]에서 살펴보았던 지역별 표본유지율 차이의 상당 부분이 이사가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일한 가구를 추적해야 하는 패널조사에서 이사빈도가 어느 정도 표본이 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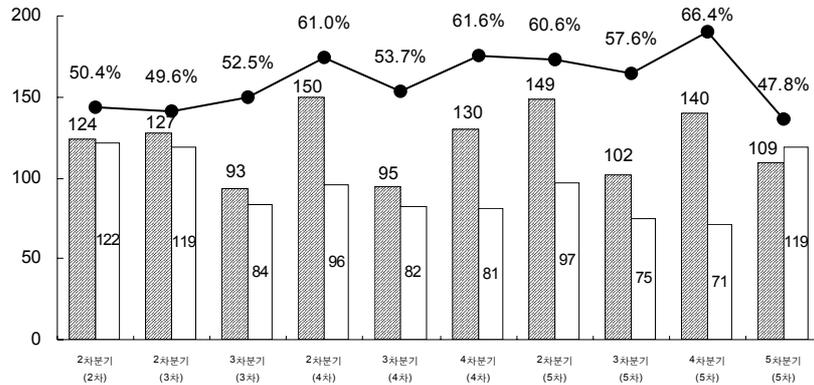
2. 분가가구의 특성

KLIPS 5차 조사에서는 5,000개의 원표본가구로부터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500가구가 표본에 추가되었다([그림 2-9] 참조). 조사에 성공한 4,298가구는 원표본인 3,798가구와 분가한 500가구를 합한 것이다. 분가한 500가구는 2차년도 조사당시 분가한 246가구중 조사에 성공한 149가구(60.6%), 3차년도에 분가한 177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102가구(57.6%), 4차년도에 분가한 211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140가구(66.4%), 5차년도에 분가한 228가구 중 조사에 성공한 109가구(47.8%)를 합한 수치이다.

조사에 성공한 분가가구 중 5차년도에 신규로 분가한 109가구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2-10]과 같다. 신규분가가구 중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된 가구는 각각 22.9%와 1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남지역도 1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1.8%), 인천(2.8%), 충북(2.8%), 경북(2.8%)지역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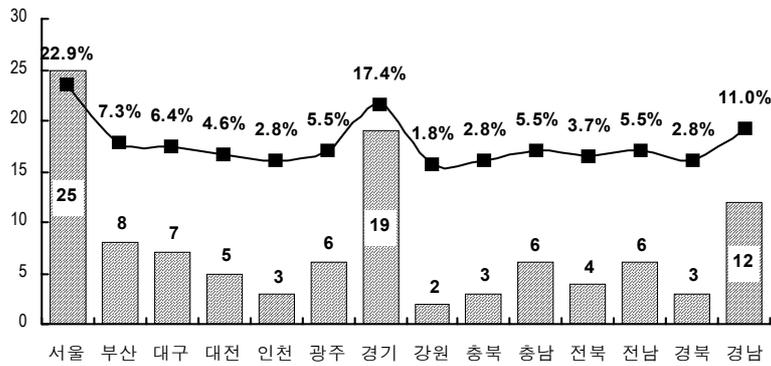
(그림 2-9) 분가가구 성공률(2~5차년도)

(단위: 가구수, %)



[그림 2-10] 5차년도 지역별 신규 분가가구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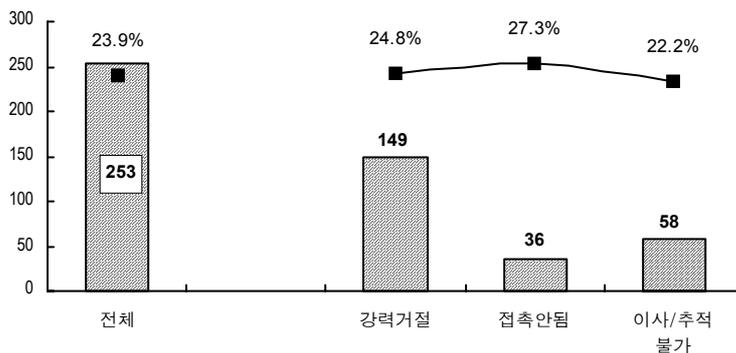
(단위: 가구수, %)



3. 비성공 가구의 특성

4차년도 조사당시 비성공가구 1,311가구(합가가구 제외) 중 5차년도 조사에 성공한 가구수는 253가구로 23.9%가 조사에 성공하였다. 4차년도 조사당시의 거절 사유별로 5차년도 조사성공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그림 2-11]참조), ‘강력거절’ 중 24.8%, ‘접촉안됨’ 중 27.3%, ‘이사/추적불가’ 중 22.2%가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거절 사유별 조사성공 비중

[그림 2-11] 4차년도 비성공 사유별 5차년도 성공비율



은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신규 조사자의 특성

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의 신규 조사자는 409명으로 이중 원표본가구에 속하는 가구원은 232명, 비원표본가구원으로 신규조사된 가구원은 177명이었다.

이중 원표본가구원이면서, 신규 조사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1-4차 조사 시 원표본가구원이거나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5차조사 시 연령이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응답하는 경우 등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원표본 가구원은 232명으로 신규 조사자의 56.7%이며, 이중 지난 조사에서 응답을 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는 10명이며, 나머지 222명은 5차년도 조사에서 만 15세가 되어 새롭게 응답한 경우이다.

〈표 2-9〉 5차년도 신규 조사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전 체	원표본 가구원	비원표본 가구원
전 체		409 (100.)	232 (56.7)	177 (43.3)
성별	남 성	225 [55.0]	144 [62.1]	81 [45.8]
	여 성	184 [45.0]	88 [37.9]	96 [54.2]
가구주와 의 관계	가구주	45 [11.0]	3 [1.3]	42 [23.7]
	가구원	364 [89.0]	229 [98.7]	135 [76.3]
거주지역	서울	91 [22.3]	55 [23.7]	36 [20.3]
	광역시	121 [29.6]	66 [28.5]	55 [31.1]
	도	197 [48.2]	111 [47.8]	86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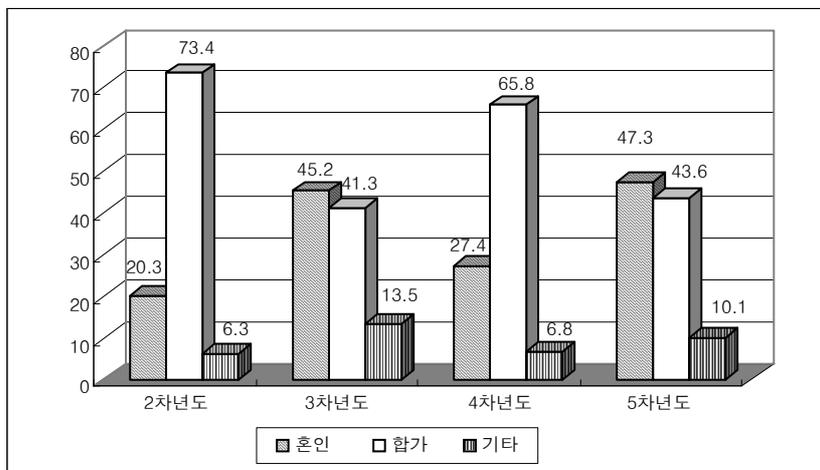
5차년도 신규응답자 중 원표본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9>참조), 남성이 144명(61.7%)으로 여성(88명, 37.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는 3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55명(23.7%), 광역시가 66명(28.5%), 기타 도지역이 111명(47.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원표본 가구원은 아니지만 5차년도에 신규로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의 수는 전체 신규 응답자의 43.3%(177명)로 이는 3차년도의 35.6%(466명 중 163명)보다는 7.7%p가량 높은 수치이지만, 4차년도의 45.9%(444명 중 204명)보다는 약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원표본 신규 가구원 중에서 추가된 사유가 조사된 응답자는 110명이며, 이들 중 혼인이 52명(47.3%), 합가가 48명(43.6%), 1차조사에서 누락된 개인이 3명(2.7%), 학업이 1명(0.9%)이며, 나머지는 구체적인 추가사유를 밝히지 않은 기타응답자가 6명(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2]를 통해서 2-4차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2차년도와 4차년도의 조사결과가 합가의 비중이 전체 추가사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3차년도와 5차년도의 조사결과는 혼인으로 인한 추가사유가 합가보다 약간 높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2-12) 비원표본 가구원이면서 신규로 조사에 참여한 이유(2~4차년도)

(단위: %)



〈보론〉 한국노동패널의 가중치 부여¹⁹⁾

표본조사자료의 결과가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에도 표본자료에 대표성을 부여할 목적으로 1999년 가중치(이하 ‘구 가중치’)를 개발한 바 있다²⁰⁾.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의 구 가중치가 공개된 이후 추출확률계산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2차년도 이후의 가중치를 개발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2003년에 보완된 가중치(이하 ‘신 가중치’)는 통계청의 해당 부서의 협조하에 인구센서스 및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조사구 내 가구수와 동부 및 읍면부 도시조사구 비중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구 가중치를 보완한 것이다. 여기서는 신 가중치의 부여방법 및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 부여방법

1차년도 조사의 가중치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계산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이 추출될 확률(selection probability)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것은 표본 조사구의 추출확률과 표본가구의 추출확률로 구분된다. 먼저 표본조사구의 추출확률은 인구센서스의 10% 표본조사구에 선정되고 다시 한국노동패널의 표본조사구로 선정될 확률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표본조사구에서 최종 표본가구로 추출될 확률은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로 총접촉가구수를 나눈 값과 인구센서스 조사구 내의 전체 가구수로 고용구조특별조사의 응답가구수를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최종적인 표본의 추출확률은 조사구 추출확률과 최종 표본가구

19) 한국노동패널 2003년도 가중치 부여방법은 강석훈(2003),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를 참조.

20) 강석훈(1999), 『KLIPS 1차 웨이브에서 가중치 부여방법에 관한 연구』, 『제1회 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을 참조.

추출확률의 곱으로 계산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답률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지역에 따라 응답가구와 비응답가구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응답률 계산에 지역정보나 조사구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특성들을 가중치에 반영해 주는 것이다.

한편, 한국노동패널 가중치 부여에는 적절한 자료가 확보될 수 없는 관계로 사후층화(poststratification)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우선 한국노동패널의 1차 조사가 1998년도임을 고려할 때 가구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는 통계청의 1995년 인구센서스 자료이나 이를 사용하여 사후층화를 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 개인 단위의 사후층화 자료로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자료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 등이 있으나, 장래인구추계 자료는 광역시는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대한 연령·성별 인구분포 추계가 제시되지 않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구조특별조사 자료는 전수조사자료가 아닌 표본조사 자료이므로 사후층화 의미가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 부여방법

그동안 한국노동패널은 2차년도 조사 이후의 가중치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이번에 신 가중치가 공개되면서 1차년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와 함께 2~5차년도 자료에 대한 가중치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차년도 조사부터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 자료의 특성상 1차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 번째, 1차년도 조사에 응답한 가구 및 가구원이 2차년도 조사 이후에 응답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조사간 표본이탈(panel attrition)이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 표본가구에 결혼·동거·입양·출생 등의 이유로 새롭게 진입한 가구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표본가구원(non-sample household)으로 인해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가구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한국노동패널 신 가중치는 2차년조 조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부여되었다. 1단계로 이미 산출

된 1차조사의 개인가중치를 가구원들의 상이한 응답률을 이용하여 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가구와 가구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응답여부에 관한 로짓(logit) 모형을 설정한 후 도출된 계수를 사용하여 모든 가구원들의 응답 확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응답확률의 역수를 최초의 개인 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가중치(non-response adjusted weights)를 산출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새롭게 산출된 해당조사의 개인 가중치를 평균하여 적절한 조정절차를 거친 후 가구가중치를 산출한다. 이 때 결혼·동거 등의 사유로 새롭게 진입한 비표본가구원의 경우에는 0의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이렇게 해서 가구차원의 무응답 조정 가중치가 산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산출된 가중치는 스케일 조정을 거쳤다. 1998년 가구가중치는 이미 스케일 조정된 것이므로 그대로 사용했으나, 나머지 연도의 경우에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2000-2005)의 5년간 총가구수 증가율을 평균한 값을 KLIPS 1차년도 가중치합계에서부터 매년 곱해주어 산출하였다. 개인가중치의 스케일 조정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농가 생산가능인구(1998-2002)의 5년간 평균증가율을 이용하여 1차년도 개인 가중치 합계에 평균증가율 값을 매년 곱해주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친 최종적인 가중치의 결과값은 <표 2-10>과 같다.

<표 2-10>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사례 수

(단위: 명)

	가구가중치	개인가중치
1차년도	11,276,899	30,039,370
2차년도	11,453,518	30,503,448
3차년도	11,632,899	30,974,696
4차년도	11,815,100	31,453,224
5차년도	12,000,165	31,939,145

3. 가중치 변수 및 이용방법

<표 2-11>은 지금까지 설명한 가중치 부여방법에 따라 산출된 가중치

의 변수명과 분석단위를 제시하고 있다. 각 연도별 가중치는 현재 한국노동패널 홈페이지(www.kli.re.kr/klips)에 엑셀 파일(.xls), SPSS 파일(.sav), SAS 파일(.sd2) 등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상의 가중치는 한국노동패널의 분석 단위에 다르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개략적인 사용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구 차원의 분석에는 가구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으며, 종단면 분석이나 횡단면 분석 중 어떤 것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중치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 차원의 분석에는 연구자의 분석목적에 따라 개인 횡단면 가중치와 개인 종단면 가중치가 사용될 수 있다.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비표본 가구원의 추출확률이 표본가구원과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비표본 가구원을 포함하여 해당연도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비표본 가구원을 제외하고 원표본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중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현재 개발된 가중치의 스케일이 조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추계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대표 모집단의 총사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다음장부터 제시될 요약통계들에서는 각 특성별 비중만 제시하였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표 2-11〉 KLIPS의 신가중치(2003년 가중치)의 변수명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가구분석		w1_h	w2_h	w3_h	w4_h	w5_h
개인분석	횡단면 분석	w1_p	w2_pc	w3_pc	w4_pc	w5_pc
	종단면 분석	w1_p	w2_pl	w3_pl	w4_pl	w5_pl

참고문헌

- 강석훈(1998), 『유럽의 패널조사 현황과 시사점』, 한국노동패널연구 1997-03, 한국노동연구원.
- (2003), 『KLIPS의 가중치 부여방안 연구』,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2, 한국노동연구원.
- 김기현(2003), 『한국노동패널조사의 2003년 가중치』,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통권 제25호,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광(2003), 『한국노동패널 오차분석 및 표본추가』,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2, 한국노동연구원.
- 금재호(1998a), 『고용관련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한국노동패널연구 1997-01, 한국노동연구원.
- (1998b), 『패널조사의 응답자 관리』, 한국노동패널연구 1997-05, 한국노동연구원.
- (1998c), 『패널예비조사의 목적과 내용』, 한국노동패널연구 1997-06, 한국노동연구원.
- 신동균(1998), 『미국 패널데이터의 현황과 시사점-PSID, NLSY, KHPS, KLIPS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연구 1997-02, 한국노동연구원.

제 3 장

조사가구의 특성

이 장에서는 5차년도 노동패널 조사에 성공한 4,298가구와 그 가구의 구성원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가구와 가구원들의 현황 및 구성변화를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 1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주의 특성과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지난 5년간의 노동패널 조사기간 동안 새로 출생한 아동과 사망한 응답자의 특성을 통해 조사표본내에서의 인구변동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과 교류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에 대해 다룰 것이다.

참고로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이 가구일 경우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는 개인중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단, 제2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분석에서는 해당되는 가중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제 1 절 가구 및 세대 구성

이 절에서는 가구 및 세대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가구 개념과 마찬가지로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의미하며 가구원에는 함께 살고 있는 친·인척을 비롯하여 함께 살고 있지 않으나 교육,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와 경제적 교류가 있는 미혼자녀도 포함된다. 다만, 따로 사는 미혼 자녀 중 재학이나 군복무, 다른 지방 근무 등의 이유가 아니면서 경제적으로 교류가 없거나 기혼자녀 중 따로 사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나 파출부, 운전사, 하숙생 등 친·인척이 아닌 경우도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표 3-1>을 통해서 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의 가구원 수를 살펴보면, 평균 가구원 수는 1-4차년도보다 낮은 3.4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 수의 분포는 4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3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3인(19.4%), 2인(15.2%)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 연도별 가구원 수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1인	10.2	9.1	10.3	9.8	11.2
2인	13.1	12.4	13.7	13.3	15.2
3인	19.4	18.6	19.7	18.4	19.4
4인	38.1	38.6	38.0	38.6	38.4
5인	13.8	14.9	13.6	14.5	12.3
6인 이상	5.5	6.4	4.7	5.4	3.6
평균(인)	3.5	3.6	3.5	3.5	3.4

연도별 가구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으나 4인가구와 5인가구의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0.2%p와 1.8%p 하락한 반면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은 각각 1.4%p와 1.9%p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및 가구추계자료²¹⁾에서 추정된 1인가구의 비중과 비교할 때 약 4-5%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3-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지별로 가구원 수를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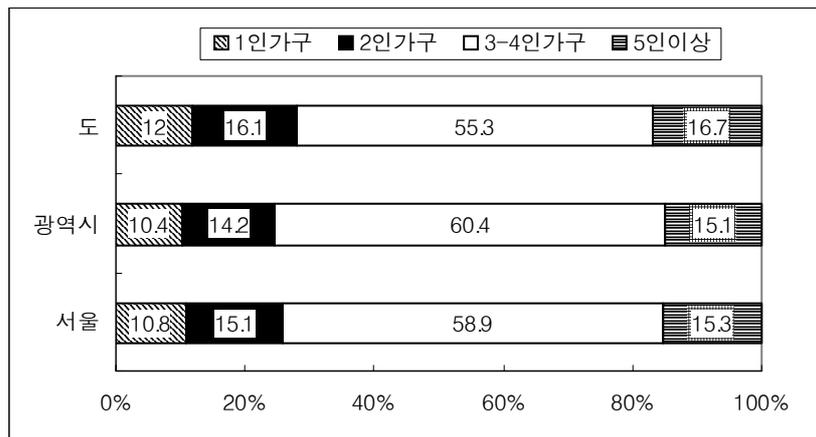
21) 인구센서스 및 가구추계에 의한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 2001년 15.8%, 2002년 16.1%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교해 보면, 서울 지역 거주자의 평균가구원 수가 3.37명, 광역시가 3.39명, 도지역이 3.35명으로 거주지별 평균가구원 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도지역의 가구구성이 서울 및 광역시에 비해 3-4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1-2인가구의 비중 및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서울 및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덜 된 도시지역의 경우 혼자 사는 노인, 혹은 노인부부로 이루어진 1-2인 가구나 5인 이상의 가구원이 함께 사는 확대가족 형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사가구의 세대구성²²⁾을 <표 3-2>를 통해 살펴보면, 가구주와 그의

(그림 3-1) 5차년도 거주지별 가구원 수 비중 및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22) 가구의 세대별 구성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의에 따랐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인 가구 : 가구구성원이 1명인 가구.

1세대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 가구주와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 또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그 형제로 이루어진 가구가 속한다.

2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가 같이 사는 경우가 속한다.

3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이 경우에는 가구주와 그 자녀, 가구주의 손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가구주와 그 부모, 그리고 가구주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4세대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세대에 걸쳐 사는 가구.

자녀 혹은 부모가 같이 사는 2세대 가구가 68.9%로 2/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와 그의 배우자 또는 가구주와 그의 형제,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의 형제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는 1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인가구가 10.9%이고, 가구주와 그의 자녀, 가구주의 손자·손녀가 같이 살거나 가구주와 그의 부모, 가구주의 자녀가 함께 사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은 8.3%였다. 그러나, 가구주와 그의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4대에 걸쳐 사는 4세대 가구는 0.1%에 불과하였다.

세대구성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세대 가구는 1차년도에 그 비중이 10.1%에 그쳤던데 반해 5차년도 조사에서는 약 1.7%p가 증가한 반면, 3세대 가구는 1차년도 9.8%에 비해 오히려 1.5%p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핵가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 연도별 세대 구성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가구수)	5,000	4,508	4,266	4,248	4,298
1인 가구	10.2	9.7	10.2	10.8	10.9
1세대 가구	10.1	10.1	10.7	10.9	11.8
2세대 가구	69.8	70.3	69.7	69.2	68.9
3세대 가구	9.8	9.8	9.3	8.8	8.3
4세대 가구	0.1	0.1	0.1	0.2	0.1

다음으로 <표 3-3>은 부부만 사는 경우(부부단독),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부모+미혼자녀), 부모님 중 한 분과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편부모+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 구성을 중심으로 가족구성형태별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부모+미혼자녀 가구가 5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어 이것이 전형적인 핵가족 유형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부단독 가구가 10.8%, 편부모+미혼자녀 가구가 6.6%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핵가족 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 74.4%, 2차년도 74.8%, 3차년도 75.1%, 4차년도 75.8%, 5차년도 76.0%로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의

경우 핵가족 가구의 비중이 2000년 68.3%, 2001년 68.5%, 2002년 68.6%로 각각 나타나고 있어 노동패널조사의 핵가족 비중이 약 8%p정도 높은 가운데 핵가족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3-3〉 연도별 가족 구성 형태별 변화 추이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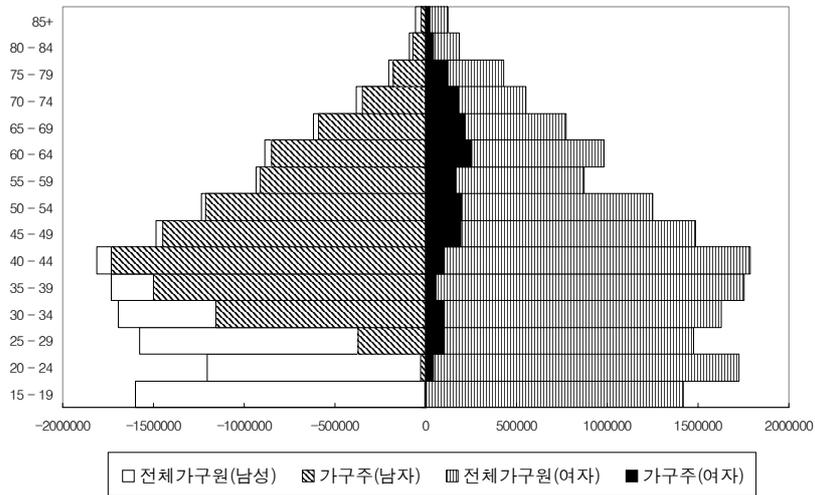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체(가구수)	5,000	4,528	4,266	4,248	4,298
핵가족가구	74.4	74.8	75.1	75.8	76.0
부부 단독	9.0	9.0	9.5	10.2	10.8
부모+미혼자녀	59.3	59.6	59.1	59.2	58.6
편부모+미혼자녀	6.1	6.2	6.5	6.4	6.6
1인가구	10.2	9.7	10.2	10.8	10.9
비핵가구	15.4	15.5	14.8	13.4	13.1

제 2 절 가구주 및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패널조사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노동패널 조사의 가구주는 “가구원 중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정의는 인구센서스의 정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가구에 대한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비혈연관계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²³⁾.

23) 인구센서스에는 비혈연관계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 한 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 3-2] 4차년도 성·연령별 가구주의 분포



주: 그림의 가로축 항목의 값들은 가중치를 곱한 후의 케이스임.

1. 가구주의 특성

먼저 15세 이상 전체 가구원 대비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그림 3-2] 참조),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부터 가구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남성 가구주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연령대부터 90% 이상이 남성 가구주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가구주의 비중이 훨씬 낮으며 남성과는 달리 60대 초반에 이르러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3-4>를 통해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48.9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여성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5.5세로 남성 가구주(47.8세)보다 약 8세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의 성별 비중은 남성이 85.3%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0.8%p

〈표 3-4〉 연도별 가구주의 성·연령별·교육수준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5,000	4,508	4,266	4,248	4,298
성 별	남 성	86.1	86.1	86.0	85.7	85.3
	여 성	13.9	13.9	14.0	14.3	14.7
혼인 상태별	미 혼	6.6	5.9	6.1	5.6	5.9
	기혼유배우	77.3	80.9	80.0	79.7	78.9
	기혼무배우	16.1	13.2	13.9	14.7	15.2
연령별	30세미만	7.6	6.0	5.0	4.7	5.2
	30대	27.3	27.0	26.2	23.7	22.9
	40대	28.0	27.7	28.1	29.2	28.3
	50대	19.5	20.3	19.9	20.2	20.3
	60세이상	17.6	19.0	20.8	22.0	23.4
	평 균	46.4	47.1	47.8	48.4	48.9
교육수 준별	무학	6.2	6.1	6.1	5.8	6.1
	고졸미만	32.1	32.0	32.1	33.2	31.8
	고졸	36.2	35.7	35.5	34.1	34.1
	대재및중퇴	2.9	2.7	2.5	2.6	2.4
	대졸이상	22.6	23.5	23.7	24.3	25.7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이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연령층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가운데 40대의 비중이 2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가구주의 비중이 1~5차년도 기간동안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가구원의 특성

여기서는 개인설문과 신규 조사자 설문에 응답한 15세 이상 가구원 10,965명(개인조사 10,563명 + 신규조사자 402명)의 응답 결과를 토대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5>를 통해서 5차년도 조사 15세 이상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당시 여성의 비중이 51.4%로 남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조사차수가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여 5차년도 조사에 이르게 되면 여성이 50.1%, 남성이 49.9%로 거의 동일한 분포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3-5> 1~5차년도 조사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13,321	12,039	11,205	11,051	10,966
성 별	남 성	48.6	48.9	49.3	49.6	49.9
	여 성	51.4	51.1	50.7	50.4	50.1
연 령	15~19세	11.7	11.8	11.3	10.4	9.9
	20~24세	9.4	9.3	9.4	10.0	10.0
	25~29세	11.2	10.8	10.7	10.6	10.5
	30~39세	23.0	22.9	22.6	21.7	21.7
	40~49세	19.1	19.0	19.2	20.1	20.0
	50~59세	12.6	12.5	12.3	12.3	12.3
	60세 이상	13.0	13.8	14.6	15.0	15.6
	평균(세)	39.2	39.5	39.8	40.1	40.4
가구주 와의 관계	가구주	37.5	37.6	37.7	38.2	38.5
	배우자	29.6	29.1	28.7	28.3	28.2
	부 모	4.0	3.7	3.5	3.1	2.8
	자 녀	27.1	28.1	28.7	29.2	29.3
	형 제	1.1	1.1	1.0	0.7	0.7
	기 타	0.6	0.5	0.5	0.6	0.5
혼인 상태	미 혼	28.8	29.7	30.6	30.8	31.0
	기혼유배우	61.2	62.5	61.4	60.9	60.3
	기혼무배우	10.0	7.8	8.0	8.3	8.7
교육 수준	무 학	8.2	7.9	7.6	7.2	7.1
	고졸미만	32.7	31.6	30.6	30.3	28.9
	고 졸	32.9	32.8	32.4	30.8	30.5
	대재밋중퇴	8.5	8.8	9.2	9.9	9.6
	전문대졸	5.4	5.9	6.4	7.1	7.9
	대졸이상	12.4	13.1	13.8	14.8	16.0

다음으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40.4세로 1~5차년도 조사기간을 경과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차년도 현재 60세 이상 고연령층의 비중은 15.6%로 1차년도 (13.0%)에 비해 2.6%p 높아진 반면 15세 이상 19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1차년도의 11.7%에서 9.9%로 낮아졌다. 개인 응답자의 주 연령대는 21.7%를 차지하고 있는 30대지만, 40대의 경우에도 20.0%로 두 연령대의 격차가 조사를 거듭할수록 좁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원들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자녀가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형태가 95%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조)부모의 비중은 1차년도 4.0%에서 5차년도에는 1.2%p 까지 하락한데 반해, 자녀의 비중은 1차년도 27.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2.2%p가 증가한 29.3%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원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자가 3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비중도 7.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졸미만의 학력 소지자도 28.9%에 이르고 있으나, 1차년도(32.7%)에 비해서는 3.8%p정도 감소한데 반해,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이상의 학력소지자는 23.9%로 1차년도 17.8%에 비해 6.1%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 3 절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

한국노동패널의 조사대상 가구에는 매년 가구원의 출생·결혼 등으로 인한 가구원의 진입 및 유학·군입대·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이 발생하게 된다. 이 중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은 인구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인구변동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서는 가구원의 출생과 사망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²⁴⁾.

24) 이 절의 분석에는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KLIPS에서 부여되는 개인단위의

1. 출생아의 특성

1~5차년도 기간동안 총 출생아는 611명이며, 각 연도별 출생아의 수는 2차년도 148명, 3차년도 122명, 4차년도 191명, 5차년도는 15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 조사에서는 남아의 비중이 각각 50.7%, 54.1%, 54.7%로 여아의 출생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4차년도에는 여아의 출생비중이 55.4%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6〉 2~5차년도 출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611	148	122	191	150
성별	남 성	310 (50.7)	75 (50.7)	66 (54.1)	87 (45.6)	82 (54.7)
	여 성	301 (49.3)	73 (49.3)	56 (45.9)	104(55.4)	68 (45.3)

5차년도 조사에서 출생아가 태어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1.3%, 광역시가 32.0%, 기타 도지역이 56.7%로 도시화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출생하는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출생아의 비중을 살펴보면,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3.3%,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6.7%, 300만원 이상인 경우가 24.0%로 나타나고 있어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가구에서 아동의 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생아의 비중을 원가구 여부별로 살펴보면, 원표본 가구인 경우가 44.7%, 비원표본 가구인 경우가 5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원표본가구가 주로 가구내에서 성인이 된 가구원 중에서 혼인으로 인해 분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가중치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1~5차년도 조사기간동안 출생하는 가구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인가중치가 부여될 수 없으며, 사망자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개인조사에서 당연히 누락되므로 역시 가중치를 부여받을 수 없다.

2. 사망자의 특성

여기서는 1~5차년도 기간동안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 사망한 가구원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5차년도 기간동안 총 사망자는 275명으로 이 중에서 2차년도 사망자가 64명, 3차년도는 59명, 4차년도는 92명, 5차년도 가 60명을 차지하고 있다²⁵⁾. 각 연도별 사망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3-7>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2~5차년도 기간동안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57.1%(157명), 여성이 47.9%(118명)로 남성이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2차년도의 경우 사망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68.8%로 여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여성의 비중이 39.0%로 증가하고 4차년도에는 여성이 55.4%로 과반수를 초과하게 된다. 그러나, 5차년도 조사에서는 남성 대 여성의 비중이 3대 2로 다시 남성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사망당시의 연령을 살펴보면, 1~5차년도 기간동안의 전체 사망자 중에서 사망당시 50세 미만이었던 가구원의 비중은 15.6%이며, 50~59세가 10.9%, 60~69세는 19.6%, 70~79세는 28.4%, 80이상은 25.5%로 나타나고 있어, 이 기간동안 사망한 가구원의 절반 이상이 70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1~5차년도 기간동안 사망당시의 평균연령은 68.4세이며, 이 중 2차년도 사망자는 65.5세, 3차년도 69.3세, 4차년도 70.7세, 5차년도는 66.8세인 것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노환이 48%(132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질병이 40.4%(111명), 사고가 8.7%(24명), 기타가 2.9%(8명)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사망원인이 기타인 경우를 제외한 267명에 대해 연도별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3-3]과 같다. 분석결과, 사망원인이 노환인 경우는 1~4차년도 조사기간동안 점차 증가하다가 4~5차년

25) 실제 사망자수는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보다 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실사과정에서는 노인독거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조사할 가구원이 없게 되므로 조사성공가구에서 제외되었다. 이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료상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6차년도 조사부터는 이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보를 누적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망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기간에 감소한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5차기간동안 오히려 증가하여 노환(40.0%)보다 3.3%p 높은 43.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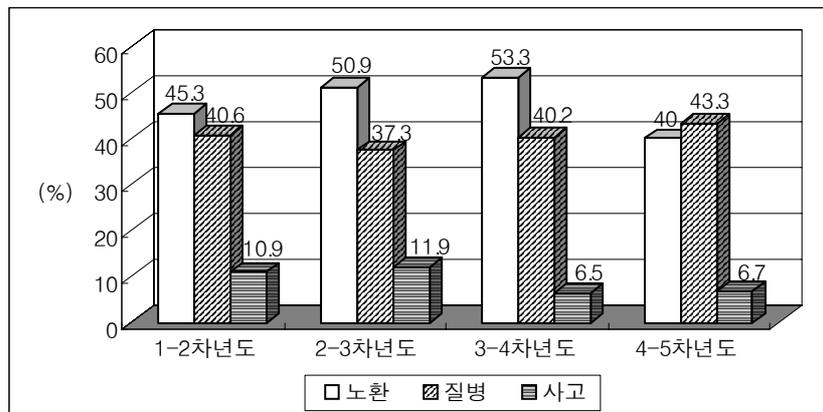
〈표 3-7〉 2~5차년도 사망자의 특성

(단위: 명, %)

		전 체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275 [100.]	64 [100.]	59 [100.]	92 [100.]	60 [100.]
성별	남 성	157 [57.1]	44 [68.8]	36 [61.0]	41 [44.6]	36 [60.0]
	여 성	118 [47.9]	20 [31.3]	23 [39.0]	51 [55.4]	24 [40.0]
사망 당시 연령	50세 미만	43 [15.6]	13 [20.3]	7 [11.9]	10 [10.9]	13 [21.7]
	50~59세	30 [10.9]	6 [9.4]	6 [10.2]	12 [13.0]	6 [10.0]
	60~69세	54 [19.6]	18 [28.1]	15 [25.4]	11 [12.0]	10 [16.7]
	70~79세	78 [28.4]	14 [21.9]	17 [28.8]	26 [28.3]	21 [35.0]
	80세 이상	70 [25.5]	13 [20.3]	14 [23.7]	33 [35.9]	10 [16.7]
	평균(세)	68.4	65.5	69.3	70.7	66.8

[그림 3-3] 사망자의 사망원인

(단위: 명, %)



제 4 절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이 절에서는 가구주(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지 않을 경우에 부모님과 경제적 교류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와 관련된 조사는 4차년도부터 가구설문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주요 조사내용으로 비동거 부모님의 존재여부, 부모님과 왕래 빈도, 경제적 교류 여부,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먼저 비동거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8>과 같다. 5차년도 조사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응답이 64.4%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양가 부모님 모두 계신다는 응답은 34.8%로 가장 많으며,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여성일 경우(18.9%)가 남성인 경우(10.7%)보다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경우 가부장제도로 인해 남성의 부모님은 함께 살면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인 경우에는 친부모와 동거하면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8> 비동거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단위: %)

비동거 부모님이 계시는지 여부	4차년도	5차년도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만 있음	10.4	10.7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만 있음	19.1	18.9
양가 부모님 모두 있음	35.4	34.8
소 계	64.9	64.4
양가 부모님 모두 없음	35.1	35.6

다음으로 비동거 부모님이 계실 경우,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구주(혹은 배우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약 50%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이면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73.9%에 이르고 있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는데 따른 비동거 부모의 사망률이 더욱 높아져 이들이 60세 이상인 경우 모두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12.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구주(혹은 배우자)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만 생존해 계신다는 비중이 높아져 남성과 여성에서 각각 70%와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비동거 부모님의 생존 여부

(단위: %)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혹은 배우자) 여성인 경우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모두 생존	아버지만 생존	어머니만 생존
전 체		51.0	6.3	42.6	48.5	5.1	46.4
가 구 주 의 연 령	30세 미만	73.9	6.2	19.9	84.7	2.0	13.3
	30대	64.4	3.8	31.8	66.6	3.0	30.4
	40대	44.8	7.7	47.5	41.0	6.7	52.3
	50대	21.6	9.8	68.6	27.2	6.1	66.7
	60세 이상	21.0	10.6	68.4	12.6	6.7	80.7

비동거 부모님과 왕래 정도는 가구주(혹은 배우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잦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0>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자주 왕래한다는 비중이 56.9%, 가끔 왕래한다는 비중은 39.3%인데 반해, 여성인 경우에는 가끔 왕래한다(51.7%)가 자주 왕래한다(43.4%)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월평균 방문 횟수에 있어서도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자주 왕래 월5.2회, 가끔 왕래 연4.4회)인 경우가 여성(자주 왕래 월4.6회, 가끔 왕래 연3.7회)인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별 왕래 빈도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남녀 모두 연령이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약 80%정도가 자주 왕래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비동거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비동거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먼저 남성 가구주(혹은 배우자)의 경우 교류가 있다는 응답은 67.1%인데 반해 여성인 경우에는 52.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에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는 비중은 남성이 24.6%, 여성이 27.1%인데 반해, 도움을 드리는 비중은 가구주의 성별에 관계없이 약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0> 비동거 부모님과과의 왕래 빈도

(단위: %)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혹은 배우자) 여성인 경우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자주 왕래	가끔 왕래	거의 안함
전 체		56.9	39.3	3.8	43.4	51.7	4.9
가구주의 연령	30세 미만	79.5	17.3	3.3	78.2	20.0	1.8
	30대	62.8	35.3	1.9	50.5	46.1	3.4
	40대	49.5	45.9	4.6	37.3	57.2	5.5
	50대	48.3	45.8	6.0	34.4	58.7	6.9
	60세 이상	47.2	39.0	13.8	30.8	61.8	7.5
평균방문횟수		월 5.2회	연 4.4회	-	월 4.6회	연 3.7회	-

<표 3-11> 비동거 부모님과과의 경제적 교류 여부

(단위: %)

월평균 가구소득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경제적 교류 있음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경제적 교류 있음	받는 도움	드리는 도움
전 체	65.9	24.6	89.1	52.8	27.1	88.4
100만원 미만	43.6	34.7	77.0	36.0	38.0	73.1
100~200만원	61.0	24.5	88.3	45.2	32.8	84.3
200~300만원	68.6	25.6	90.0	54.5	26.4	91.8
300만원 이상	77.2	21.7	91.5	66.4	20.9	92.1

한편,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경제적 교

류를 한다는 응답이 남성가구주(혹은 배우자)일 경우 43.6%, 여성일 경우에는 36%에 그치고 있지만,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남성이 77.2%, 여성이 66.4%로 약 1.8배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는 비중은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비동거 부모님과의 경제적 교류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먼저 연간 총금액으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보다는 부모님께 받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도 총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부모님께 받는 금액은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과 여성이 각각 211만원과 155만원인데 비해,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35만원과 69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주로 가구주의 연령이 젊을수록 혼인이나 취업 등으로 인한 분가가 많으므로 이들의 경제적 독립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3-12> 비동거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혹은 받는 금액

(단위: 만원)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가구주(혹은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부모님께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부모님께 받는 금액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
가 구 주 연 령	30세 미만	361	143	114	153
	30대	225	125	140	73
	40대	140	135	205	58
	50대	201	159	101	70
	60세 이상	52	175	78	47
지난해 연간총금액		211	135	155	69

제 4 장

가계 경제

이 장에서는 가구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5차년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에 대해 각 항목별 액수와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 1절 가구소득 부문에서는 가구의 총소득 및 각 항목별 소득분포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가구소비를 생활비와 저축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가구의 주거형태에 대해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가구의 자산을 크게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후, 부채의 특성에 대해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구가중치를 사용한 것이며, 예외적으로 분석내용의 특성상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이를 밝히도록 하였다.

제 1 절 가구 소득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등 6개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그 중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은 세부 항목별로 조사되었다. 각 영역별 가구소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은 가구원 중 근로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도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다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지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소득은 가구원 중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및 실업급여 등의 사회보험을 수급한 액수의 총액을 의미한다. 이전소득은 가구원 중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친척, 친지로 부터 받은 지원금과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보조금의 총액을 의미한다. 기타소득에는 보험금 지급이나 퇴직금, 복권 탄 돈과 같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소득의 총액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구의 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5차년도의 경우 2001년 한해) 얻은 소득으로 세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하며 연간 총액으로 대답하게 했다. 다만, 1차년도의 경우 조사일 이전 1년 간 소득으로 1997년 4월부터 1998년 11월에 걸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1. 가구의 총소득

가구의 총소득은 전년도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회보험소득,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 등 모든 항목별 가구소득을 합한 액수이다.

<표 4-1>을 통해 연도별로 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를 거듭할수록 가구의 총소득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차년도의 연간총소득은 2616만원(월평균 218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10.5만원이나 늘어났으며 이를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환산하더라도 4차년도에 비해 307.5만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총소득을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5차년도 조사가구의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는 소득몫이 전체 소득의 31.3%로 최하위 10분위에 비해 44배

〈표 4-1〉 연간 가구 총소득 및 10분위 소득비교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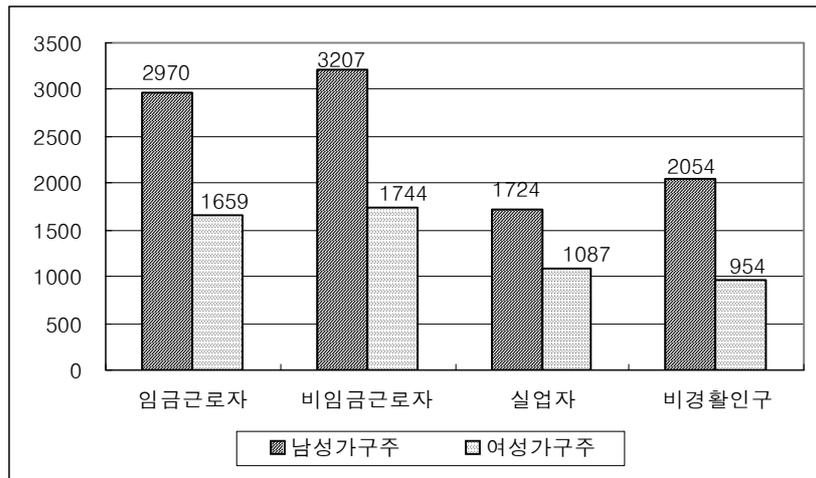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5,000		4,359		4,147		4,094		4,298	
1분위	5469	30.3	5719	30.5	5927	29.8	6535	30.6	8185	31.3
2분위	2934	16.3	3032	16.2	3185	16.0	3477	16.3	4133	15.8
3분위	2347	13.0	2371	12.7	2485	12.5	2750	12.9	3300	12.6
4분위	1916	10.6	1954	10.4	2152	10.8	2274	10.7	2767	10.6
5분위	1656	9.2	1684	9.0	1804	9.1	1909	8.9	2305	8.8
6분위	1315	7.3	1348	7.2	1492	7.5	1582	7.4	1916	7.3
7분위	1102	6.1	1125	6.0	1200	6.0	1237	5.8	1567	6.0
8분위	774	4.3	827	4.4	893	4.5	915	4.3	1134	4.3
9분위	449	2.5	502	2.7	551	2.8	492	2.3	679	2.6
10분위	70	0.4	165	0.9	188	0.9	150	0.7	184	0.7
명목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실질소득	1999		1987		2084		2205		2513	

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0분위 소득의 변화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최상위 1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이 1차년도 30.3%에서 3차년도에 29.8%까지 하락하였으나 5차년도에는 다시 31.3%를 차지하여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최하위 10분위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몫은 1차년도 0.4%수준에서 2-3차년도 기간동안 소폭 증가하였으나, 4-5차년도 기간동안 다시 하락하였다.

5차년 가구 총소득을 가구주의 성별 및 경제활동 상태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4-1]과 같다. 먼저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 연간 가구 총소득이 2852만원으로,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1320만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를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가구주가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남성 : 3207만원, 여성 : 1744만원)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임금근로자(남성 : 2970만원, 여성 : 1659만원)로 나타났으며, 실업자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1724만원과

1087만원,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에는 남녀 각각 2054만원과 954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 5차년도 성별·경제활동상태별 가구 총소득



한편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국노동패널 조사대상 가구의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다.

먼저 절대빈곤²⁶⁾은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월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구한 것이다. 분석결과 1차년도 절대빈곤가구의 비중은 25.0%에서 2차년도 28.2%로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부터는 감소추세로 변하여 5차년도에 이르면 17.9%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래 절대빈곤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므로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에는 상대빈곤의 개념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상대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

26)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2000년에 기초생활보호법의 개정으로 산출 기준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1997-1999년의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산출한 수치이다. 한국노동패널의 가구소득은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보고되므로 1997년 최저생계비를 1차년도에, 1998년 최저생계비를 2차년도에, 1999년 최저생계비는 3차년도 자료에 각각 대응시켰다.

〈표 4-2〉 절대빈곤율 및 상대빈곤율

(단위: 만원,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5,000	4,359	4,147	4,094	4,298
상류층	21.3	21.0	20.6	23.1	20.8
중간층	11.2	11.3	12.3	12.6	11.3
중하층	43.7	44.3	43.3	40.2	42.5
최하층(상대빈곤)	23.9	23.4	23.7	24.1	25.4
절대빈곤	25.0	28.2	24.6	24.3	17.9

주: OECD(1995)기준에 따라 중위소득(median income)의 50%를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중위값의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정의한다. 한편 중위값의 50~70% 수준을 중하층으로, 70~150%를 중간층으로 분류하였다.

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빈곤은 OECD(1995) 기준으로 소득분포 중위값²⁷⁾(medianincome)의 50% 수준을 일컬으며, 가구 소득이 여기에 못 미치는 가구를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구로 정의한다. 1~5차년도 기간동안의 상대빈곤가구(최하층)의 추이는 1차년도 23.9%에서 2차년도에는 23.4%로 하락하였으나, 3차년도에 23.7%, 4차년도 24.11%, 5차년도에는 25.4%까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위소득의 50~70%수준에 해당하는 중하층의 비중도 4차년도에 비해 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차년도 조사에 비해서는 1.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유경준(2003)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할 경우 총소득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의 50%)이 1996년 13.3%에서 2000년 18.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노동패널의 조사결과가 절대적 수치면에서는 높지만, 동태적 추세면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5차년도 기간동안 한번도 누락되지 않고 계속응답한 3,275가구에 대해서 빈곤의 변화추이를 살펴본다(<표 4-3> 참조). 절대

27) 여기에서 사용된 가구소득은 가구원수를 통계하기 위하여 월평균소득을 가구원수에 루트를 취한 값으로 나누어준 것이다.

빈곤의 추이를 각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는 절대빈곤상태가 아니었으나 그 다음해에 빈곤상태에 처한 가구의 비중이 1-2차년도에는 16.9%에서 4~5차년도에는 13.4%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될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3〉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의 빈곤추이

(단위: %)

		1-2차년도	2-3차년도	3-4차년도	4-5차년도
절대 빈곤	非빈곤→非빈곤	61.4	62.2	64.4	68.0
	빈곤→非빈곤	9.6	12.4	9.5	12.7
	非빈곤→빈곤	12.1	8.8	10.2	5.9
	빈곤→빈곤	16.9	16.6	15.9	13.4
	계속 빈곤	6.7			
상대 빈곤	非빈곤→非빈곤	68.5	69.9	68.2	67.9
	빈곤→非빈곤	9.7	8.9	7.1	9.5
	非빈곤→빈곤	8.9	8.3	10.5	7.4
	빈곤→빈곤	12.9	12.9	14.2	15.2
	계속 빈곤	6.7			

주: 1~5차년도 계속응답가구인 3,275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음.

또한 전년도에는 빈곤가구가 아니었으나 다음해에는 절대빈곤에 처한 가구의 비중 역시 1-2차년도에는 12.1%였으나 4-5차년도에는 5.9%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빈곤율의 추이는 절대빈곤과는 상이한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전년도에 상대빈곤상태에 있었으면서, 다음해에도 상대빈곤에 처하게 된 가구의 비중은 1-2차년도 기간동안 12.9%였으나 4-5차년도 기간동안은 15.2%로 이 기간동안 2.3%p가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전년도에 상대빈곤 상태가 아니었으나 다음해에 빈곤상태에 빠진 가구의 비중은 3~4차년도 기간동안만 증가했을 뿐 전반적으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5차년도 기간동안 계속 해서 빈곤상태에 빠져있는 이른바 '빈곤함정'에 빠진 가구의 비중은 절대빈곤이나 상대빈곤 모두 6.7%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표 4-4>에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먼저 가구 소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IMF 직후인 2차년도 조사 당시 83.4%로 1차년도에 비해 2.4%p가 하락하였으나, 이후 3,4년도에는 각각 85.8%와 87.4%로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 다시 84.2%로 하락하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득원은 전체 소득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소득이며, 이전소득이 3.3%, 사회보험소득 2.0%, 금융소득은 1.7%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소득원은 4차년도에 비해 4.7%가 증가한 부동산소득이며, 다음이 각각 0.6%p와 0.7%p가 증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5차년도 조사에서의 급격한 가구소득 증가가 주로 부동산 소득 증가에 기인한 반면, 사회보험 및 이전소득 증가는 빈곤계층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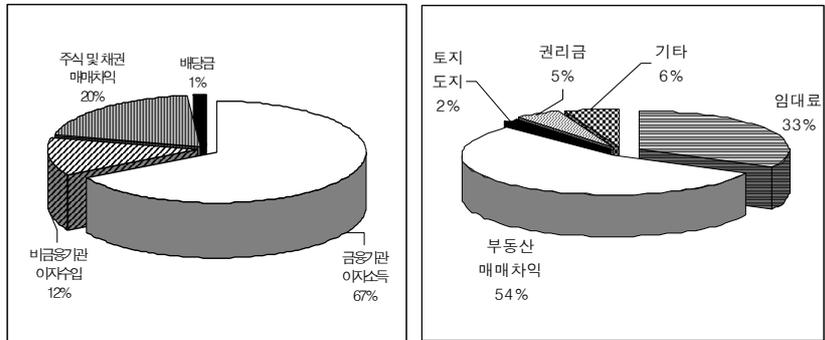
각각의 소득원천에 대한 항목별 구성을 살펴보면([그림 4-2]참조),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기관 이자소득이 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이 20%, 비금융기관의 이자수입이 12%를 차지하였으며, 배당금의 비중은 1%에 그치고 있다.

<표 4-4> 가구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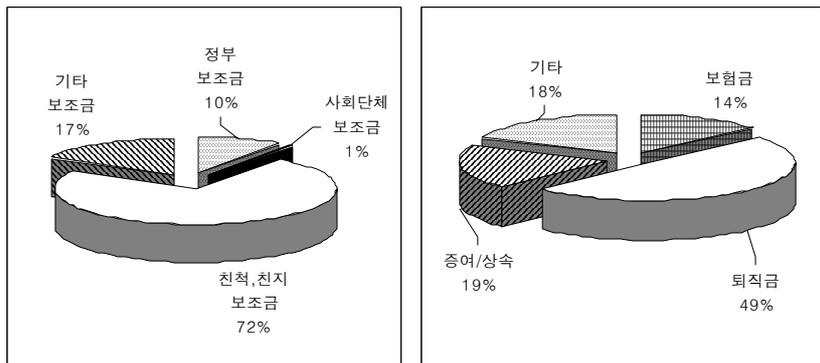
(단위: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5,000	4,359	4,147	4,094	4,298
근 로 소 득	85.8	83.4	85.8	87.4	84.2
금 용 소 득	2.5	2.2	3.3	2.0	1.7
부 동 산 소 득	2.1	4.2	2.7	3.0	6.7
사 회 보 험 소 득	2.7	1.2	1.4	1.5	2.0
이 전 소 득	2.1	2.7	2.4	2.7	3.3
기 타 소 득	4.9	6.2	4.3	3.4	2.2
연평균 총소득	1803	1928	2039	2205	2616

(그림 4-2) 5차년도 가구의 금융소득 및 부동산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그림 4-3) 5차년도 가구의 이전소득 및 기타소득의 항목별 보유가구 분포



부동산 소득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차익이 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서 부동산 임대료가 33%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권리금과 토지를 도지 준 것은 각각 5%와 2%에 그치고 있다.

[그림 4-3]에서 보여지듯이, 이전소득의 항목별 구성비중은 친척친지 보조금이 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보조금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한국의 사회부조 형태가 여러 선진국처럼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의 형태가 아니라, 친척이나 친지와 같은 혈연관계에 의한 사적이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원으로는 퇴직금이 49%로 약 절반에 이르

며, 증여/상속이 19%, 보험금의 비중은 14%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2 절 가계 소비

이 절에서는 5차년도 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비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가계소비는 작년 한해(5차년도의 경우 2001년) 동안 소비한 생활비와 저축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생활비는 월평균 교육비, 주거비, 식품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각종 공과금 등 생활하는데 드는 돈을 의미하며, 저축이나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은 제외된다. 동시에 혼수 장만, 교통사고 보상금 등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도 생활비에서 제외된다. 4차년도 조사의 경우 지난 조사와는 달리 월평균 생활비 외에 세부 항목별 생활비를 질문하고 있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식비(주식비와 부식비), ② 외식비, ③ 공교육비(학교등록금, 납입금 등), ④ 사교육비(학원, 과외비 등), ⑤ 차량유지비(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포함), ⑥ 주거비(주택관리비, 월세, 냉난방비 등), ⑦ 경조사비, ⑧ 보건의료비, ⑨ 문화비(TV·케이블TV·위성TV 시청료 또는 취미, 여가 등에 들어가는 돈), ⑩ 내구재(전자제품이나 가구) 구입비, ⑪ 통신비(전화, 인터넷, 휴대폰 사용료 등), ⑫ 용돈, ⑬ 기타 생활용품비 등이다. 이 중 용돈항목은 5차년도 조사에 새로 추가된 항목이다. 저축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일반저축, 개인연금, 적금, 보험, 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저축 역시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4차년도 조사부터 세부항목별 저축액을 묻고 있는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① 예·적금, ② 개인연금, ③ 보장성보험(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④ 저축성보험(재테크보험, 교육보험 등), ⑤ 계, ⑥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 생활비

<표 4-5>는 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4-5〉 1~5차년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추이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986	4,473	4,248	4,210	4,290
50만 원 미만	19.56	17.47	16.73	14.65	12.47
50만~75만원미만	23.13	21.70	22.03	17.17	13.28
75만~100만원미만	12.26	14.83	11.25	13.19	9.64
100만~150만원미만	26.55	29.74	27.75	29.70	28.35
150만~200만원미만	12.49	11.84	15.48	16.45	20.52
200만 원 이상	6.02	4.42	6.77	8.84	15.74
평균(만원)	101	101	108	118	137

5차년도 조사에서 월평균 생활비는 전년도에 비해 19만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의 경우 IMF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차년도와 비교할 때 생활비의 증가가 발견되고 있지 않으나, 3차년도는 전년도보다 7만원이 증가한 108만원, 4차년도에는 118만원까지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137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비 항목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50만원 미만의 소비계층은 1차년도 19.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는 12.5%까지 감소한 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계층은 1차년도 6%에서 5차년도에는 2배가 넘는 15.7%까지 증가하였다.

〈표 4-6〉을 통해 가구의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1.3%, 50~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2.3%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에 속하는 각위 70% 이상이 월75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00~15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50~200만원 미만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39.5%로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비중이 57.1%에 이르고 있어 가구소득수준별로 생활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계층별 평균생활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월소득이 300만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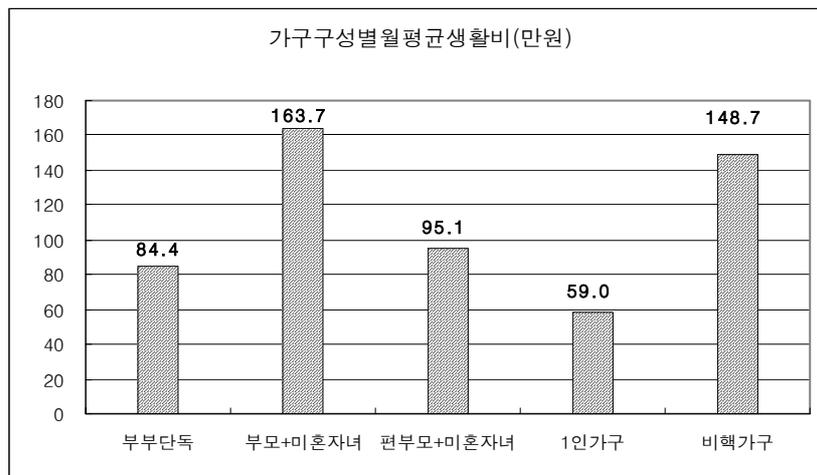
상인 가구의 평균생활비는 233.5만원으로 월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 (평균생활비 61.9만원)보다 3.8배나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6〉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생활비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19	1,294	975	902
50만원 미만	41.3	3.5	1.3	0.7
50만~75만원미만	32.3	12.9	2.3	0.7
75만~100만원미만	11.2	16.0	5.7	1.9
100만~150만원미만	10.2	48.2	35.3	13.3
150만~200만원미만	4.1	17.8	39.5	25.9
200만원 이상	0.8	1.7	16.0	57.6
월평균 저축액(만원)	62	113	159	234

[그림 4-4] 5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생활비



[그림 4-4]를 통해서 5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 및 지역별 월평균 생활비를 살펴보면 가구구성별로 전형적인 핵가족 구성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생활비가 169.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인가구가 59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확대가족을 의미하는 비핵가구의 경우 148.7만원으로 가구원수가 더 많음에도 불

구하고 부모-미혼자녀 가구보다 월평균 생활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님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95.1만원으로 부부단독가구보다 0.7%p(94.4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역별로는 가구소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이 157.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는 135만원, 도지역은 127.9만원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표 4-7〉 주요 항목별 생활비 부담

(단위: %)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생 활 비	100	100	100
식 비	34.5	28.4	24.1
외 식 비	3.2	3.9	4.2
공 교 육 비	9.3	8.2	7.0
사 교 육 비	8.4	8.9	8.9
차 량 유 지 비	9.0	10.5	9.8
주 거 비	12.1	11.6	9.8
경 조 사 비	8.3	5.0	4.5
보 건 의 료 비	5.1	4.2	3.7
문 화 비	2.3	5.2	2.2
내 구 재	2.2	1.3	1.4
통 신 비	-	7.2	7.4
용 돈	-	-	14.4
기 타	5.8	5.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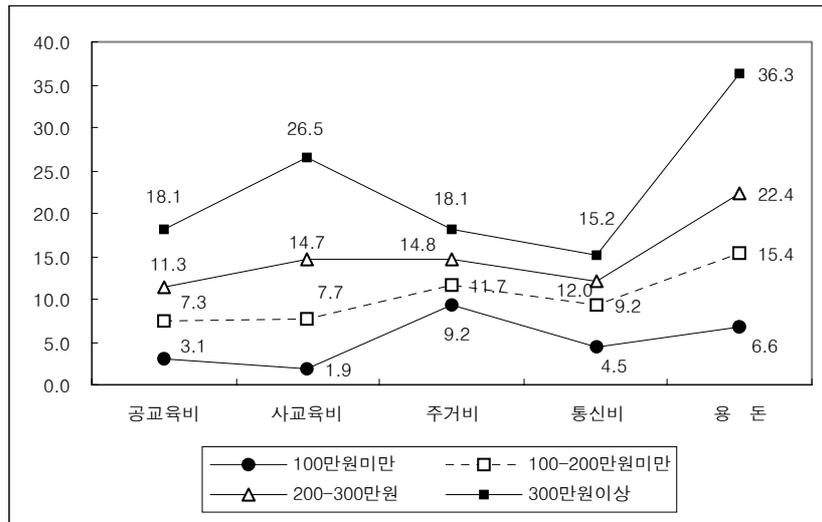
주요 생활비 항목별 비중²⁸⁾을 살펴보면(〈표 4-7〉참조), 식비의 비중이 전체 생활비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24.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담정도는 2~5차년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반해 외식비의 비중은 2차년도 3.2%에서 4차년도 3.9%, 5차년도

28) 한국노동패널 2, 4, 5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의 평균생활비 항목 외에도 각각의 생활비 항목별 액수를 함께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전체 생활비'는 항목별 생활비의 합계를 기준(100%)으로 설정하고 분석한 것이다.

4.2%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교육비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공교육비의 경우 2차년도 9.3%에서 5차년도에는 2.2%p 감소한 7.0%로 나타난 반면, 사교육비의 비중은 2차년도 8.4%에서 5차년도에는 0.3%p가 증가한 8.9%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주거비 및 경조사비의 부담 정도는 2~5차년도 기간동안 각각 2.3%p와 3.8%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용돈의 비중은 14.4%로 식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비 또한 4차년도에 비해 0.2%p 증가한 7.4%로 나타나 인터넷 및 휴대전화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5]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주요 생활비

(단위: 만원)



[그림 4-5]를 통해 5차년도 가구소득 계층별 평균생활비를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가구소득별 생활비 지출편차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항목이 용돈과 사교육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가구당 자녀의 수나 가구원 수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수 있으나, 사교육비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평균 1.9만원인데 비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평균 26.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소득계층간에 25만원 가량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용돈항목의 경우에도 월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에서는 가구당 6만6천원이 지출되고 있으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6만6천원으로 30만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와 통신비 같이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지출은 소득계층별로 그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저축

5차년도 조사가구 중 저축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73.2%이며, 월평균 저축액은 41만7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8>참조).

<표 4-8> 1~5차년도 가구의 저축 유무 및 월평균저축액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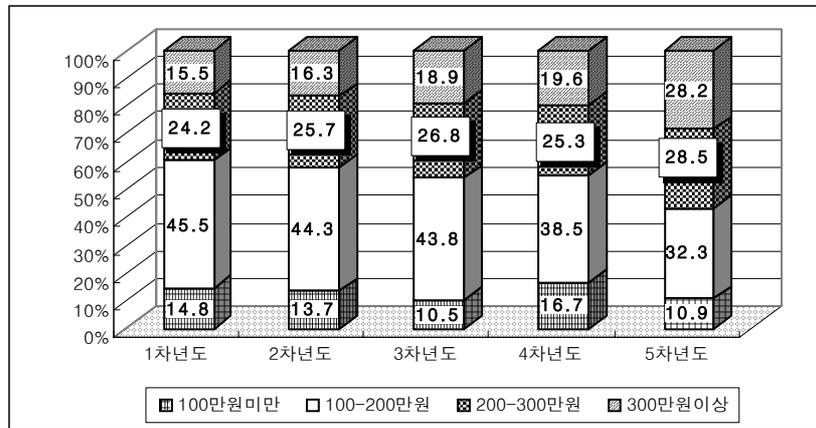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965	4,458	4,247	4,186	4,292
저 축 안 함	46.1	47.4	48.5	30.2	26.8
저 축 함	53.9	52.6	51.5	69.8	73.2
월평균저축액	33만원	25만원	29만원	35만원	42만원

1~5차년도 기간동안 저축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는 저축을 한 가구가 53.9%에서 2차년도(52.6%)와 3차년도(51.5%)까지는 소폭 감소하다가 4차년도에는 69.8%까지 증가하였으며, 5차년도에는 73.2%까지 증가하였다. 월평균 저축액의 변화 또한 1차년도에는 33만3천원에서 2차년도(24만8천원)까지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3차년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5차년도에는 41만 7천원이 된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이나 생활비 지출과 그 맥락을 거의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그림 4-6]을 통해 각 소득계층별 저축가구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이후 감소된 저축률의 회복이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의 저축률은 여전히 그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의 경우 1차년도 당시 저축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에 그치고 있으나 평균 저축가구의 비중이 가장 낮았던 3차년도에도 1차년도보다 3.4%p 증가한 18.9%로 나타나고 있으며, 5차년도에는 28.2%까지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200~300만원인 가구역시 1차년도 24.2%에 그쳤으나 5차년도에는 4.3%p가 증가한 28.5%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6] 1~5차년도 저축을 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이에 반해 월평균 소득이 100~200만원인 가구는 전체 저축가구 중 1차년도에 45.5%를 차지하였으나 5차년도에는 오히려 13.2%p가 감소한 32.3%로 조사되었으며,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차년도 14.8%에서 5차년도 10.9%까지 그 비중이 하락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살펴볼 때 저소득층은 최근 전반적인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유지에 급급하여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표 4-9>를 통해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의 경우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92.8%로 이들 소득계층의 경우 저축액수 측면에서도 그다지 큰 액수를 저축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200만원 미만 소득계층 가구의 경우 여전히 월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비중이 59.3%로 가장 높으며, 월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가구의 경우 50~100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가구의 비중이 30.4%에 이르고 있다.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41.4%가 월 100만원 이상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구소득규모별 월평균 저축액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이를 월평균 저축액을 통해서 비교해보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8만5천원인데 반해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가구는 월평균 저축액이 103만3천원으로 약 5.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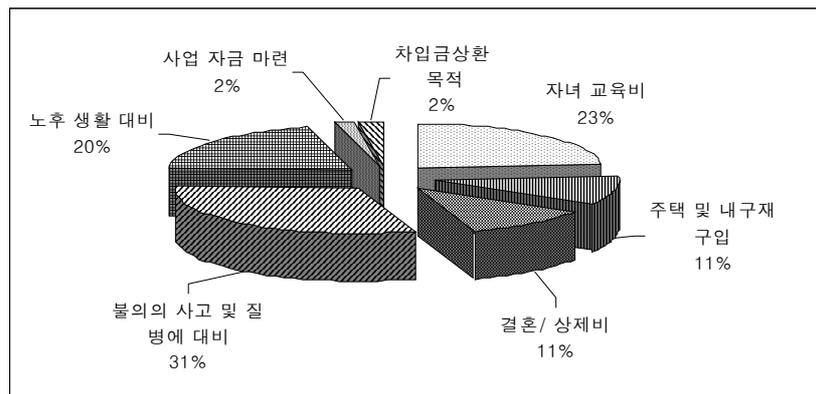
다음으로 5차년도에 저축을 한 가구의 저축 목적을 살펴보면 [그림 4-7]과 같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의의 사고 및 질병

〈표 4-9〉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

(단위: 가구, %,만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가구 수)	362	1,024	883	850
25만원 미만	92.8	59.3	36.1	19.7
25~50만원 미만	4.1	21.5	19.6	13.1
50~100만원 미만	2.4	16.7	30.4	25.9
100만원 이상	0.7	2.6	13.9	41.3
월평균 저축액(만원)	19	32	54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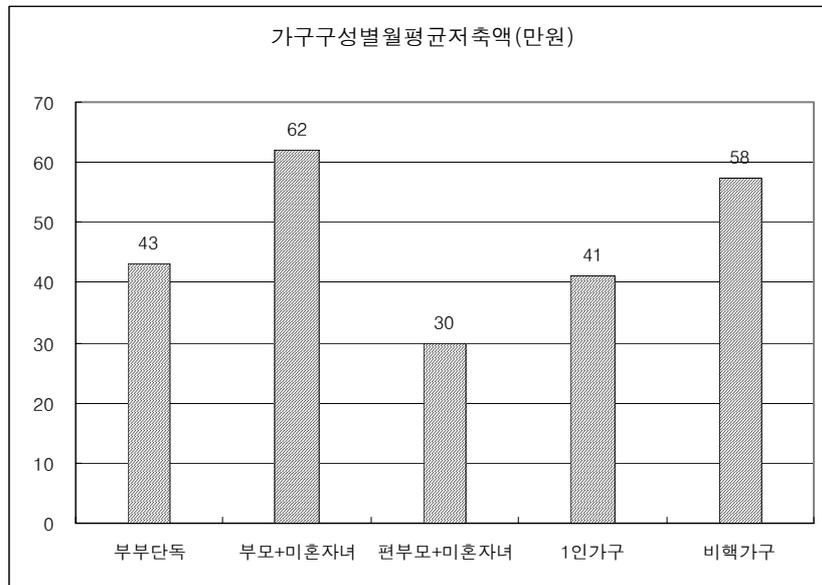
(그림 4-7) 5차년도 가구의 저축 목적 분포



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전체 응답가구 중 31%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는 '자녀교육비'와 '노후 생활대비'가 각각 23%와 20%로 이들 세 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내구재 구입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가구의 비중은 11%로 그리 크지 않았으며, 결혼이나 상·제례를 위해서 저축하고 있는 비중 역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그림 4-8]을 통해서 가구구성별로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 보면 생활비 지출이 가장 컸던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의 월평균 저축액이 6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분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경우 월평균 저축액이 29.8만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67.9만원으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51.7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도 지역은 54.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8] 5차년도 가구의 가구구성별 월평균 저축액



제 3 절 주거형태 및 비용

이 절에서는 5차년도 패널가구의 주거형태와 비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조사에서는 매년 주거와 관련 입주형태 및 주택의 종류, 주택의 평수, 주거지의 시가 및 전·월세금 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주형태는 자가·전세·월세·기타로 구분되며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타로 구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정의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동당 건축면적이 200평(660m²)을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한다. 자기 집인 경우 단독주택은 대지면적과 연건평, 주거지의 시가 등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인 경우 주택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기재 없이 실제로 사용하는 주거면적의 평수를 기재하게 하였고 전세금(임대보증금)과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전세의 경우 월세금을 기재하게 한 것은 주택의 소유형태가 전세일지라도 전세금 외에 월마다 돈을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만약 전세금 이외에 더 내는 돈이 월10만원 이상이라면 입주형태가 월세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였다. 월세의 경우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용평수와 월세금을 기재하게 하였다.

1. 입주형태 및 주거 비용

먼저 <표 4-10>을 통해 5차년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60.1%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전세 27.6%, 월세 7.3%로 나타나고 있다. 1~5차년도 입주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소유자의 비중이 1차년도 55.8%에서 5차년도에 이르러 4.3%p가 증가한 반면, 전·월세의 비중은 1차년도 40.4%에서 5.5%p정도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0〉 1~5차년도 가구의 입주형태 분포

(단위: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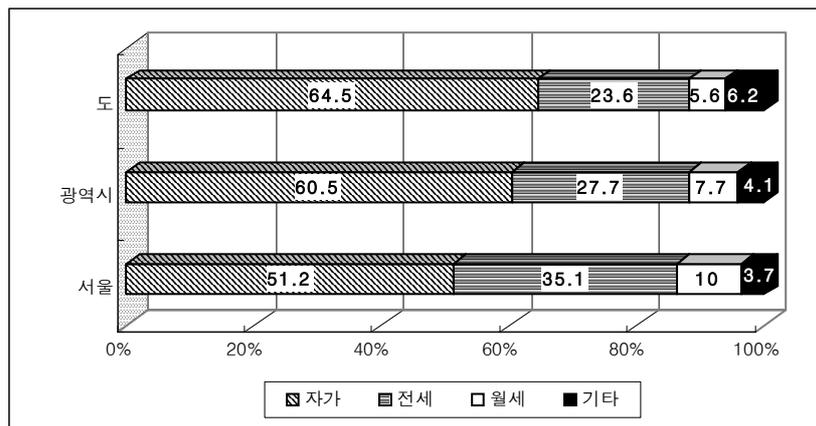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5,000	4,508	4,258	4,248	4,287
자 가	55.8	56.6	56.8	59.2	60.1
전 세	31.0	30.1	30.4	28.6	27.6
월 세	9.3	9.1	8.4	7.6	7.3
기 타	3.8	4.2	4.3	4.6	5.0

[그림 4-9]를 통해서 5차년도 조사가구의 거주지별 입주형태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 지역의 자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경우 전·월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거주지별 자가 비중은 도 지역이 64.5%로 서울(51.2%)보다 13.3%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역시(60.5%)에 비해서도 4%p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전·월세 비중은 서울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지역의 전세와 월세 비중은 각각 35.1%와 10%로 나타나고 있으나 광역시는 각각 27.7%와 7.7%, 도지역은 23.6%와 5.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거주지별 편차는 집값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0]을 통해, 거주지별 자가의 평균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살펴보

(그림 4-9) 5차년도 거주지별 입주형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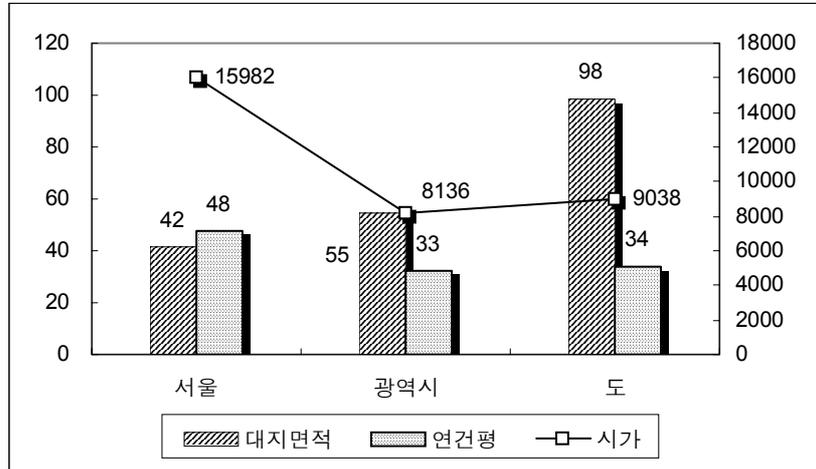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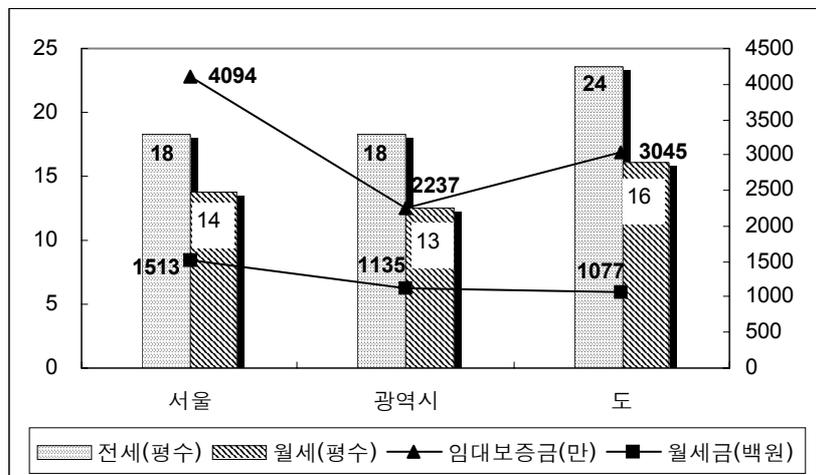
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지면적의 경우, 도 지역이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약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연건평이나 시가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정원이나 마당, 차고 같은 대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반면 실제 주거공간은 가능한 한 넓게 확보하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도 지역의 대지면적은 평균 98평인데 비해서 광역시는 55평, 서울은 42평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인 연건평은 서울이 가장 넓은 42평인데 비해서 광역시는 33평, 도지역은 34평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시가를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1억5천982만원인데 비해, 광역시는 서울의 50.9%에 해당하는 8천136만원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도지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약간 높은 56.6%수준(9천38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요컨대, 서울지역의 경우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주거지역의 주거공간이 타 지역에 비해 2배가량 더 넓고 집값 또한 2배가량 더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림 4-11]은 거주지가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주택의 실제 사용평수와 전·월세금을 비교하고 있다. 먼저 전세인 경우 도 지역의 평수가 24평으로 각각 18평에 그친 서울과 광역시에 비해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세의 경우도 비슷한데 도지역에 거주할 경우 실제평수가 16평인데 반해 서울과 광역시는 이보다 2~3평이 작은 14평과 13평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월세 거주자의 실제 평수는 전세에 비해 적게는 4평(서울)에서 많게는 8평(도지역)까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 거주자가 활용가능한 주거공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전·월세 평균 임대보증금은 4천94만원으로 광역시(2천237만원)보다는 약 1.8배 정도 높으며, 도지역(3천45만원)보다도 1.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월세금 또한 서울지역의 경우 15만원인데 비해 광역시와 도는 이보다 4만원이 낮은 11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0) 5차년도 거주지별 자가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
(단위: 평, 만원)



(그림 4-11) 5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평, 만원)



2. 주택의 종류 및 주거비용

<표 4-11>은 1~5차년도 주택종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차년도 조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37.3%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이며, 다음으로는 36.5%를 차지한 단독주택과 12.3%를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기간동안 주택 종류별 추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거주자가 1차년도 3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차년도에 이르러 5%p이상 증가한 반면, 나머지 주택의 거주자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단독주택비중의 감소(1970년 95% → 2000년 49.9%), 아파트의 비중증가(1970년 0.7% → 2000년 36.8%)라는 추세가 KLIPS에서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거주지별 주택 종류의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12]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서울지역과 광역시의 경우 아파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데 비해 도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비중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단독주택 거주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도지역이 41.5%로 광역시(34.7%)와 서울(29.6%)에 비해 각각 7.8%p와 11.9%p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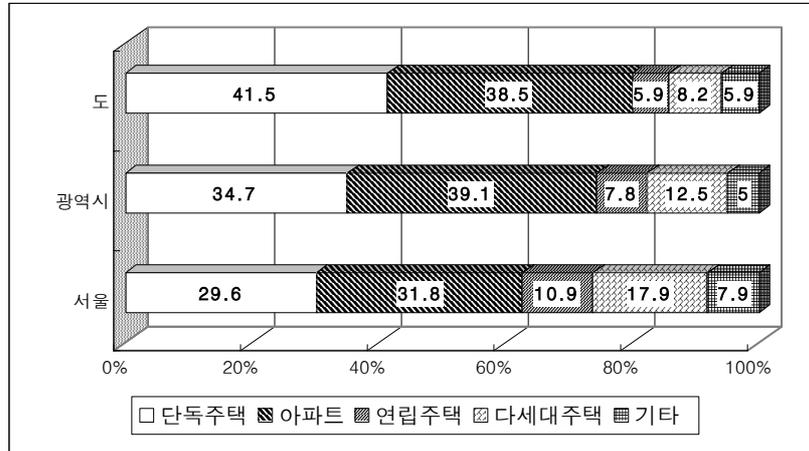
<표 4-11> 1~5차년도 가구의 주택종류 분포

(단위: 가구,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996	4,506	4,250	4,248	4,286
단 독 주 택	39.2	38.4	37.8	38.0	36.5
아 파 트	32.0	33.5	34.5	35.7	37.3
연 립 주 택	8.1	7.8	8.0	7.8	7.7
다 세대주 택	16.2	15.3	14.8	12.0	12.3
기 타	4.5	5.0	4.9	6.6	6.1

[그림 4-12] 5차년도 거주지별 주택종류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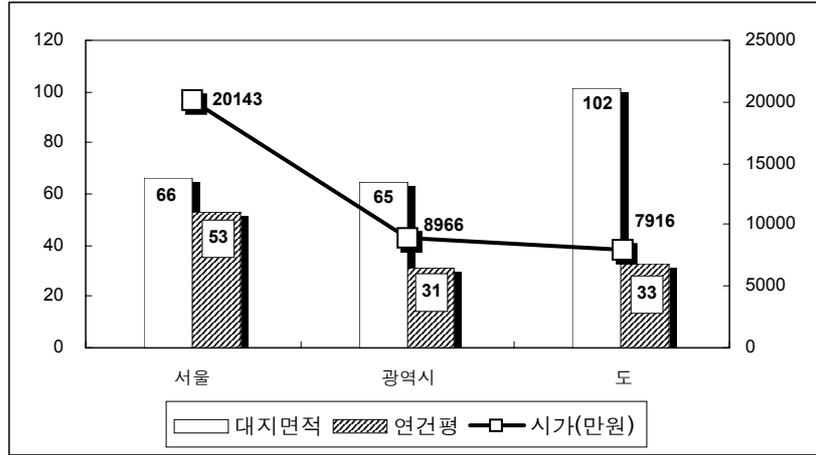
아파트 거주자의 비중 또한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31.8%로 광역시(39.1%)와 도지역(38.5%)에 비해 낮지만, 단독주택보다는 오히려 2.2%p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 응답자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거주자의 비중이 28.6%로 도지역(13.1%)과 광역시(18.3%)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13]은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자가의 분포와 유사하게 대지면적의 경우 도지역이 102평으로 가장 넓은 데 비해서 연건평은 서울지역이 53평으로 가장 넓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주거지 시가의 경우 서울지역은 평균 2억143만원인데 비해서 타지역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8천 966만원(광역시)과 7천916만원(도지역)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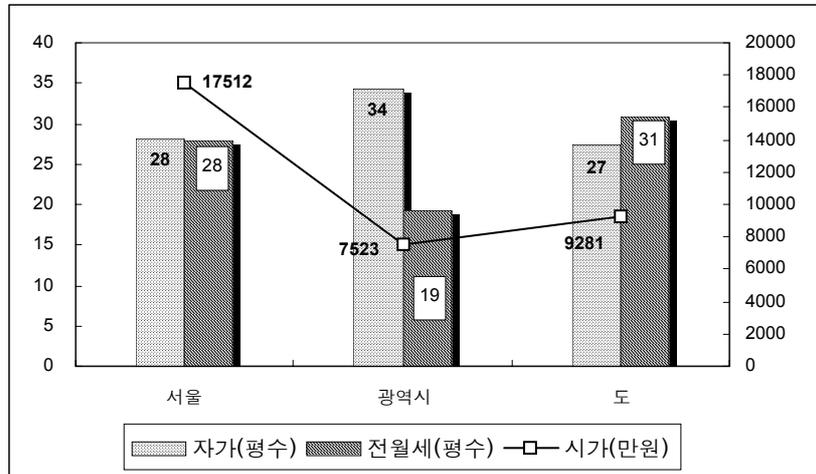
이어서 [그림 4-14]는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와 시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파트가 자기 집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광역시가 34평으로 서울(28평)이나 도(27평)보다 6~7평 정도 넓었으며, 전·월세인 경우 아파트 평수는 도지역이 31평, 서울이 28평, 광역시가 19평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가 소유자일 경우 아파트 시가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1억7천512만원으로 광역시(7천523만원)보다는 2.3배, 도지역(9천281만원)보다

는 1.9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각 지역별로 아파트 평수가 같을 경우에는 지역간의 시가차이가 더욱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3] 5차년도 거주지별 단독주택의 대지면적·연건평 및 시가(평균)



[그림 4-14] 5차년도 거주지별 아파트의 평수 및 시가(평균)



제 4 절 자산 및 부채

이 절에서는 4차년도 응답가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널 조사에서 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어 조사되었으며 소득이나 소비 문항과는 달리 해당 연도의 현재를 기준(4차년도의 경우 2001년 현재)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부동산 자산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의미하며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이나 건물, 임야,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대여부)와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지 여부(부동산 임차 여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금융자산에는 은행예금, 주식, 채권, 신탁, 보험, 아직 타지 않은 계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포함된다. 패널 조사에서 부채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쓴 돈이 있는지 여부와 개인적으로 빌린 돈,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 할 계돈 등을 포함한다.

1. 부동산 자산

먼저 부동산 자산을 살펴보면 5차년도 패널 응답가구 중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22.3%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시가총액 분포를 살펴보면 5차년도의 경우 1~5억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지만 이전 연도와 비교할 때 부동산 시가가 5~10억원 미만 또는 10억원 이상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가 5~10억원 미만의 가구는 2차년도에 3.6%에서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각각 1%p 가량 감소하였으나, 5차년도에는 10.2%로 2차년도에 비해 6.6%p나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부동산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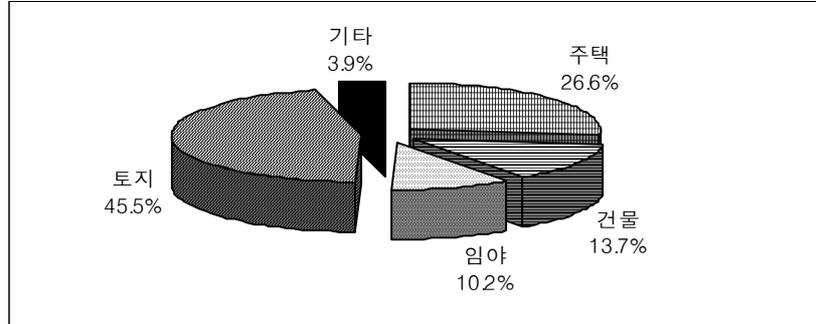
고 있는데, 2차년도에는 1.5%, 3차년도에는 1.3%, 4차년도에는 1.8%에 그치고 있으나 5차년도에는 20.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2〉 부동산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508	4,266	4,331	4,298
부동산 소유여부				
없 음	78.7	80.0	77.7	77.7
있 음	21.3	20.0	22.3	22.3
1 천 만 원 미 만	8.7	6.2	8.3	6.2
1천~5천만원 미만	28.9	29.9	27.7	13.0
5천~1억원 미만	24.2	23.8	26.5	20.5
1억~5억원 미만	28.4	35.5	30.9	27.9
5억~10억원 미만	3.6	2.3	2.8	10.2
10억 원 이 상	1.5	1.3	1.8	20.3
잘 모 르 겠 음	4.6	1.0	2.0	2.0

〔그림 4-15〕 5차년도 소유 부동산 자산의 종류 분포



주: 이 항목은 복수설문이므로 각 %는 전체 응답개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

5차년도 조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종류에 대한 조사문항은 가구당 최대 5개까지의 복수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림 4-15]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이 토지로 전체 응답 중 45.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주택이 26.6%, 건물이 13.7%, 임야가 10.2%, 기타가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4-13>을 통해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 자산 총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동산 자산의 시가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소득계층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12.2%인데 반해 월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8%,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5.5%, 300만원 이상인 가구는 2.7%로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이 1억~5억원 미만인 경우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2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5.8%를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 14.9%를 차지하고 있으나,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10%p이상 높은 2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3>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동산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94	212	181	299
1 천 만 원 미 만	12.2	6.8	5.5	2.7
1천~5천만원 미만	22.1	15.6	11.9	6.8
5천~1억원 미만	21.3	25.0	20.5	16.9
1억~5억원 미만	22.2	24.2	24.2	35.8
5억~10억원 미만	6.8	12.1	11.1	10.3
1 0 억 원 이 상	14.9	15.5	23.3	25.4
잘 모 르 겠 음	1.5	0.8	3.5	2.1

2. 금융 자산

<표 4-14>를 통해서 5차년도에 조사된 가구 중 금융자산을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는 2차년도 71.2%에서 3차년도 63.9%, 4차년도 65.9%, 5차년도 66.3%로 지난 5년동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차년도 1344만원에서 3차년도 1396만원, 4차년도 1582만원, 5차년도에는 1차년도보다 254만원이 증가한

1598만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5차년도 조사에서 금융자산이 있는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별 비중을 살펴보면 1천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이 2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50만원 미만인 가구가 12.4%, 500에서 1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1.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금융소득이 1000~5000만원 미만인 가구를 기준으로 이보다 금융소득이 적은 가구일 경우 그 비중이 지난 5년간 감소한 반면, 금융소득이 이보다 많을 경우 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4-14〉 금융 자산의 시가 총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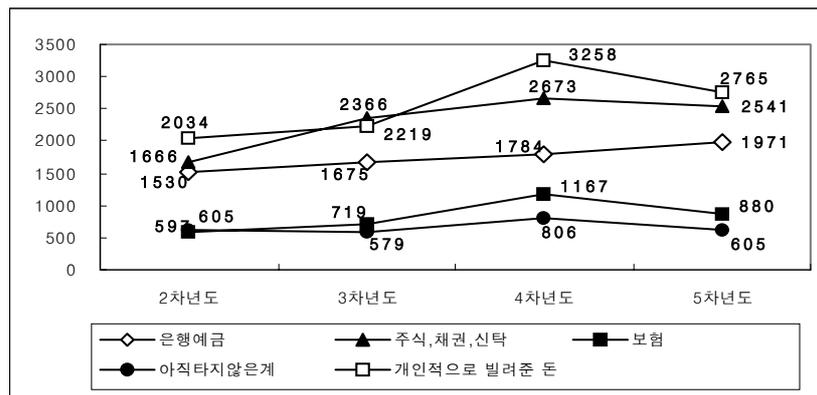
(단위: 가구, %)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493	4,243	4,200	4,276
없 음	28.8	35.1	34.1	33.7
250 만 원 미 만	15.7	12.7	14.7	12.4
250~500만원 미만	8.6	7.4	6.1	5.6
500~1000만원 미만	12.7	12.4	12.3	11.4
1000~5000만원 미만	27.8	25.2	25.4	27.7
5000~1억원 미만	4.4	4.6	4.4	6.1
1 억 원 이 상	2.0	2.7	3.1	3.0
평 균	1344	1396	1582	1598

주: 금융자산 시가총액의 평균은 금융자산이 0인 가구를 포함한 수치임.

〔그림 4-16〕 2~5차년도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추이

(단위: 만원)



다음으로 [그림 4-16]을 통해서 금융자산의 종류별 금액 추이를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의 절대적 비중 및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은 2차년도에 평균 2034만원이었으나 4차년도에 3258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이보다 493만원이 감소한 2765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주식/채권/신탁과 같은 제2금융권의 금융자산 비중은 은행예금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간 격차 또한 연도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에는 주식/채권/신탁이 1666만원으로 은행예금(1530만원)보다 136만원 정도 높지만, 3차년도와 4차년도에는 그 격차가 더욱 벌어져 각각 692만원과 88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5차년도에는 이보다 다시 감소한 59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보험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차년도 605만원에서 4차년도에는 최고 1167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5차년도에는 8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아직 타지 않은 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변동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차년도와 5차년도 조사가 각각 평균 60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표 4-15>는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2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2%를 차지하고 있다. 월소득이 100~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35.5%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금융자산이 1000~5000만 미만인 비중이 24.1%에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월소득 200~3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금융자산 1000~5000만원 미만으로 그 비중이 37.4%에 이르며,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은 24.4%에 그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소득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없다는 응답이 16.6%까지 줄어들었으며, 1000~500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42.2%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5000~1억원 미만의 금융자산을 가졌다는 응답도 15.3%에 이르며 1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비중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계층별 금융 자산 소유의 불평등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금융자산 분포

(단위: 가구, %)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122	1,295	977	904
없 음	55.4	35.5	24.4	16.6
250만원 미만	19.2	15.1	9.1	4.6
250~500만원 미만	4.6	7.6	6.6	3.0
500~1천만원 미만	7.9	13.1	14.4	9.9
1천~5천만원 미만	10.3	24.1	37.4	42.2
5천~1억원 미만	1.6	2.9	6.5	15.3
1억원 이상	1.0	1.6	1.7	8.5

3. 가구의 부채

5차년도 조사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7.5%를 차지하여 1차년도 조사(40.6%)당시보다 약 7%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6> 참조). 평균 부채잔액도 1차년도 773만원에 그쳤으나 2차년도 1045만원, 3차년도 1043만원, 4차년도 1072만원, 5차년도 1092만원으로 계속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가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이어지긴 했지만 가계부채 또한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성장이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의 이용이 일반화되면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패널자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5차년도를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의 분포를 부채 잔액별로 살펴보면 <표 4-17>과 같다. 먼저 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 64.2%에 이르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부채비중도 함께 증가하여 월평균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가구에서는 44.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라 부채

잔액의 비중이 가장 크게 변동하는 구간은 5000만원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9%에 그치고 있으나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4.4%로 3.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잔액이 1000~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7.8%에 그치는 반면, 월평균 소득이 30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33.4%로 두 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670만원이지만, 월소득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957만원, 200~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80만원,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55만원으로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부채잔액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6〉 부채 잔액 분포

(단위: 가구,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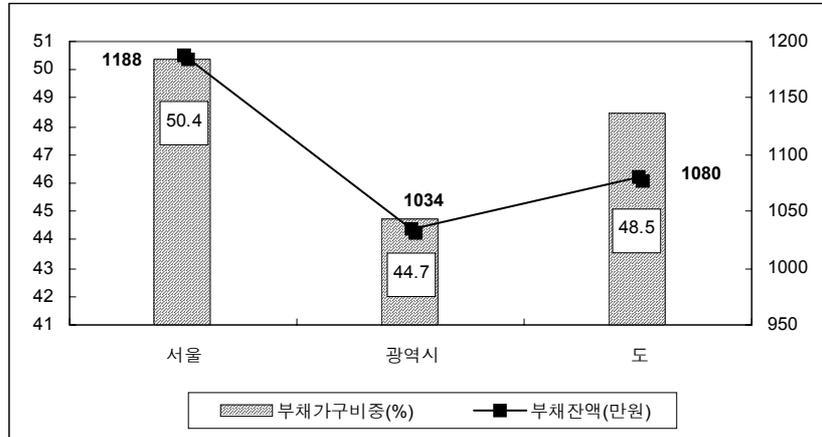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4,942	4,490	4,259	4,224	4,281
부 채 없 음	59.4	51.17	55.37	52.44	52.48
5 0 0 만 원 미 만	6.79	7.74	5.89	6.25	5.88
500~1000만원 미만	5.77	7.38	6.35	6.73	6.52
1000~5000만원 미만	24.76	27.21	25.12	27.65	27.79
5 0 0 0 만 원 이 상	3.34	6.49	7.26	6.92	7.33
평 균	773	1045	1043	1072	1092

〈표 4-17〉 5차년도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가구 분포

(단위: 가구, %, 만원)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1,099	1,259	931	796
부 채 없 음	64.2	52.0	47.5	44.2
5 0 0 만 원 미 만	7.8	6.7	4.6	3.7
500~1천만원 미만	6.2	7.9	7.0	4.3
1천~5천만원 미만	17.8	28.3	33.2	33.4
5 천 만 원 이 상	3.9	5.2	7.8	14.4
평 균	671	957	1280	1555

(그림 4-17) 5차년도 가구의 거주지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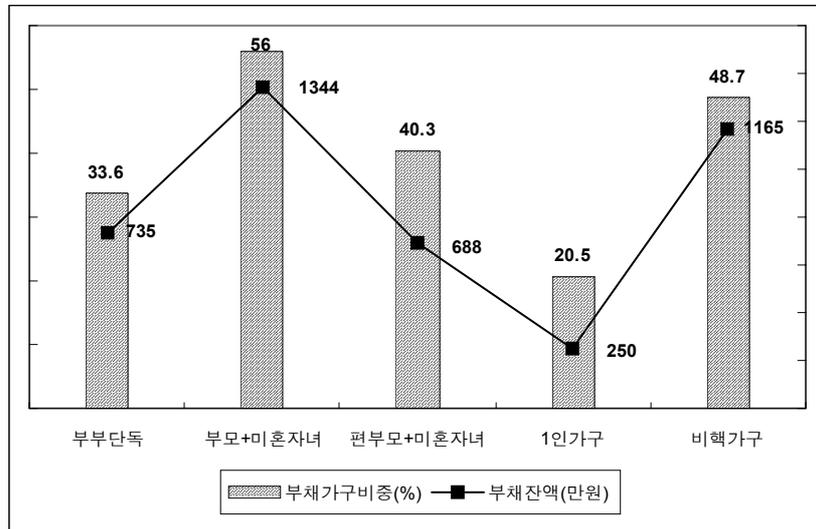


이어서 [그림 4-17]을 통해 거주지별로 부채가구의 비중과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구의 비중은 서울지역이 50.4%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광역시 지역이 44.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부채가구의 비중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평균 부채잔액이 1034만원으로 서울지역(1188만원) 보다 134만원 정도 적고 도지역에 비해서 46만원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 도 지역의 부채가구 비중과 부채잔액이 큰 이유는 농촌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그림 4-18]을 통해 가구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가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핵가족 형태인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부채가구의 비중이 56%로 가장 높으며,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도 부채가 있다는 비중이 40.3%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등록금과 같은 교육비 문제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부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확대가족 형태의 비핵가구의 경우에도 48.7%가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부채잔액을 살펴보면, 앞서 거주지별 부채잔액과 마찬가지로 부채가구비중과 비슷한 분포를 보여주

[그림 4-18] 5차년도 가구의 가족구성별 부채가구 비중 및 부채잔액



고 있다. 부채잔액이 가장 높은 가구형태는 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로 1344만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이 비핵가족(1165만원), 부부단독가구(735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편부모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부채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은 부부단독가구보다 높았으나 부채잔액은 오히려 낮은 688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유경준·김대일(2002),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유경준(2003), 소득분배 국제비교를 통한 복지정책의 방향, 『KDI 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제 5 장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

제 1 절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 현황

한국노동패널(KLIPS)조사에서는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표 5-1>과 같이 이용하는 기관의 수와 종류²⁹⁾, 주당이용횟수, 1회 이용시간, 그리고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월평균 수업료 등의 항목을 최대 5가지까지 조사하며 사교육과 보육시설이용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매우 부담된다’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고 있다.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항목은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처음 실시된 1차년도(1998년)에 재수생 이하 자녀가 아닌 초등학교3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2차년도(1999년)에는 관련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3차년도(2000년) 이후부터 재수생 이하 자녀를 포함하여 조사되었다. 본 장에서는 위의 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하여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이용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가구단위와 자녀단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9) 한국노동패널(KLIPS)에서 조사되는 사교육기관의 종류는 ①학원, ②개인 및 그룹과의, ③학습지, ④방과후교내 보충학습(별도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⑤방과후교실(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특기지도 혹은 보충학습)의 5가지이고, 보육시설의 종류는 ①국공립어린이집, ②민간어린이집, ③놀이방, ④직장보육시설, ⑤보육까지 맡아주는 유치원, ⑥일반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자녀의 사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의 여부를 가구의 자녀수와 연령, 그리고 가구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사교육 및 보육시설을 이용한 가계의 월평균 지출비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교육 및 보육시설 비용에 대해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였다. 제2절에서는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자녀연령별 사교육기관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 종류 수에 따른 유형을 구분한 후 이들 유형별로 사교육비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제4절에서는 7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의 이용 및 비용을 분석하고 보육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5-1> KLIPS의 사교육 관련 측정항목과 예

사교육 이용여부	이용하는 기관 수	사교육종류	주당이용 횟수 ¹	1회 평균 이용시간	월평균 수업료 (만원)
1.이용함	5	학 원	3	1	15
2.이용안함		과 외	1	3	20
		학 습 지	1	1	2
		교재보충학습	2	1	2
		방과후교실	1	2	2

1. 사교육 보육시설의 이용 여부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에 조사된 4,298가구 중 재수생 이하 자녀가 있는 1,961가구이다. <표 5-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가구의 64.8%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로 나타났다.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보육시설의 평균 기관의 수는 1.5개이고 69.6%가 1곳을 이용하고, 47.0%가 주당 사교육·보육시설을 5회~10회 미만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상당수 가구의 자녀들이 주중에 하루 이상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 재수생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단위: 가구, %)

		빈도	비율(%)
전체		1,961	100.0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음	691	35.2
	이용함	1,270	64.8
이용하는 사교육·보육시설 기관의 수	1곳	884	69.6
	2곳	247	19.5
	3곳	94	7.4
	4곳	27	2.1
	5곳	18	1.4
	평균		1.5
주당 사교육·보육시설 이용횟수	5회 미만	569	44.8
	5회~10회 미만	597	47.0
	10회 이상	104	8.2
	평균		5.8

주: 주당이용횟수에 분석된 가구는 955가구임.

〈표 5-3〉 자녀수 대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자녀수

(단위: %)

재수생 이하 자녀수(A)	교육이용자녀(B)					
	전체	0명 (이용안함)	1명	2명	3명	4명
1명	100.0	40.0	60.0	-	-	-
2명	100.0	12.8	22.9	64.3	-	-
3명	100.0	13.2	16.1	27.0	43.7	-
4명 이상	100.0	33.4	22.3	11.2	0.0	33.4
자녀수대비 사교육 이용 자녀수 비율 (B/A)	69.5%					
평균 사교육이용 자녀수(명)	1.7명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자녀의 비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의 재수생 이하 자녀수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수를 비교하였다. <표 5-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평균 자녀의 수는 1.7명이고 이용비율은 재수생 이하 자녀수 대비 69.5%로 나타났다. 이는 10명의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연령대의 자녀가 있을 경우 7명의 자녀가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자녀수별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자녀수를 살펴보면 재수생 이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60%가 이용을 하고, 자녀가 2명인 경우 2명 모두 이용하는 비율과 2명 중 한 명만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64.3%와 22.9%로 나타났다. 자녀가 3명인 경우는 3명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43.7%로 가장 높고 3명 중 2명이 이용하는 비율이 27.0%, 1명이 이용하는 비율이 16.1%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33.4%로 자녀수 3명 이하의 가구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5-4〉 가구주 특성에 따른 사교육 이용여부

(단위: %, 천원)

전 체	범 주	이용안함		
		이 용 함	월평균 비용	
	1,961(100.0)	35.2	64.8	
연 령	1 5 ~ 2 9 세	81.2	18.8	63
	3 0 ~ 3 9 세	31.8	68.2	245
	4 0 ~ 4 9 세	29.0	71.0	282
	5 0 세 이 상	46.7	53.3	165
교육수준	고 졸 미 만	48.6	51.4	136
	고 졸	31.1	68.9	215
	전 문 대 졸	34.5	65.5	270
	대 졸 이 상	25.7	74.3	384
취업형태	임 금	32.7	67.3	247
	비 임 금	30.4	69.6	280
	미 취 업	49.5	50.5	140
직 업	전 문 관 리 직	27.4	72.6	327
	사 무 직	27.9	72.1	329
	서 비 스 직	31.4	68.6	260
	농 립 어 업 직	54.9	45.1	126
	생 산 직	33.5	66.5	216
근로소득	1 0 0 만 원 미 만	49.7	50.3	147
	100~200만원 미만	35.4	64.6	187
	200~300만원 미만	25.6	74.4	312
	3 0 0 만 원 이 상	19.0	81.0	447

주: 직업은 통계청의 표준직업 신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근로소득은 가구주 개인의 근로소득임.

<표 5-4>는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취업형태, 직업, 근로소득 등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 및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산출한 결과이다. 먼저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15세~29세인 경우 81.2%의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령대의 가구주의 경우 생애주기에 있어 자녀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어린 영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이 30세~39세의 경우 68.2% 가구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들 가구가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24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로 접어들면서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과 그에 따른 지출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 가구주의 연령이 40세~49세인 가구의 경우에 이용비율과 월평균 지출비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가구주가 있는 가구의 71.0%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월평균 28만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경우 74.3%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졸 미만인 경우는 51.4%만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에 있어서도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월평균 38만4천원을 지출하는 반면 고졸 미만인 경우는 13만6천원을 지출하여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자녀에 대한 인적 자본투자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학력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취업형태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의 경우가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높으며 특히 가구주가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취업한 가구의 경우가 임금근로의 형태에 취업한 가구주의 가구보다 이용비율과 월평균 비용에 있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있어서도 가구주가 전

문관리직이나 사무직에 취업한 경우의 자녀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72.6%와 72.1%로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지출비용도 각각 32만7천원과 32만9천원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주가 농림어업직에 취업한 경우는 가장 낮은 45.1%의 이용비율과 월평균 12만6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가구주의 학력 및 거주지역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따른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평균 가구주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50.3%에 불과했던 비율이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경우 64.6%, 200만원~300만원 미만 74.4%,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1.0%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에 있어서도 가구주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들이 평균 14만7천원 지출하고, 가구주의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은 평균 44만7천원을 지출하여 30만원 가량 차이를 보였다. 이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에 대한 지출비용이 크게 차이난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부(wealth)에 따른 교육에 대한 기회가 영유아기 때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5> 자녀연령별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여부

(단위: %, 명)

	비율	이용여부		
		이용함	이용안함	빈도(전체비율)
7세 이하(미취학 아동)	34.3	61.8	38.2	1,834(100.0)
8세 ~ 13세(초등학생)	30.9	82.4	17.6	1,479(100.0)
14세 ~ 20세(중·고등학생)	34.8	51.7	48.3	1,709(100.0)
전체	100.0	64.4	35.6	5,02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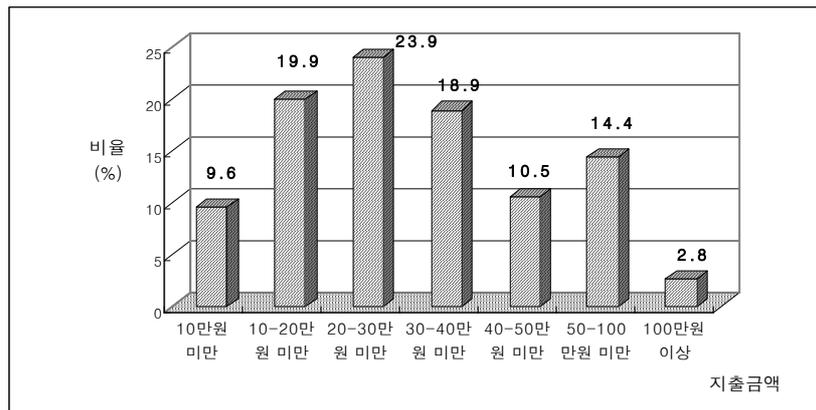
가구단위의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여부가 아닌 자녀 개인단위의 이용여부도 살펴보기 위하여 <표 5-5>에서와 같이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자녀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된 대상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1,961 가구의 재수생 이하 5,022명의 자녀이다.

전체 자녀 5,022명 중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으로 분류되는 7세 이하의 자녀수는 1,834명으로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초등학교인 8세~13세의 경우는 1,479명으로 30.9%를 차지하며, 재수생을 포함하는 중·고등학교 연령인 14세~20세의 경우는 1,709명으로 전체의 34.8%이다. 자녀의 연령별로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61.8%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령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연령에서는 82.4%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 연령에서는 51.7%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교 연령대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 사교육 보육시설 비용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70가구의 사교육과 보육에 지출하는 비용은 평균 34.0만원이다. 이들 가구가 사교육·보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분포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그림 5-1]과 <표 5-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월평균 20만원~30만원을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2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만원~20만원 미만이 19.9%, 30만원~40만원 미만이 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7.2%의 적지 않은 비율의 가구가 월평균 50

[그림 5-1] 월평균 사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분포



〈표 5-6〉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가구의 지출 비용

(단위: %)

월평균 사교육·보육비용	비율
10만원미만	9.6
10~20만원미만	19.9
20~30만원미만	23.9
30~40만원미만	18.9
40~50만원미만	10.5
50~100만원미만	14.4
100만원이상	2.8
전체	1,270(100.0)
전체 평균(천원)	340

만원 이상을 사교육·보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교육·보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자녀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고자 자녀수에 따른 사교육·보육비 지출액을 비교하였다. <표 5-7>은 자녀수에 따라 가구의 유형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이상 가구로 나누고 가구 유형과 자녀연령에 따른 월평균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 지출금액을 제시한 것이다. 먼저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한 자녀의 가구가 가장 많은 월평균 22만7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보면, 7세 이하의 어린 자녀가 포함된 두 자녀 가구의 경우가 36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사교육·보육비를 지출하고, 중·고등학생이 있는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가장 낮은 10만 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일정할 때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의 자원의 분배가 적게 이

〈표 5-7〉 자녀수에 따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단위: 천원)

	한 자녀 가구	두 자녀 가구	세 자녀 이상 가구
7세 이하(미취학 아동)	199	365	-
8세 ~ 13세(초등학생)	137	190	-
14세~20세(중·고등학생)	181	134	103
전체 평균	227	207	159

투어진다든 사실이 사교육비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별 분포와 소득분포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표 5-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을 지출하는 가구의 30.1%가 월평균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며 24.8%가 100만원 미만, 23.2%가 200만원~3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액수를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으로 지출하여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들의 월평균 이용비용은 가장 많은 56만7천원이고, 400만원~500만원 미만의 가구들은 35만6천원,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30만5천원의 순이며,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과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인 가구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의 차이는 47만8천원으로 그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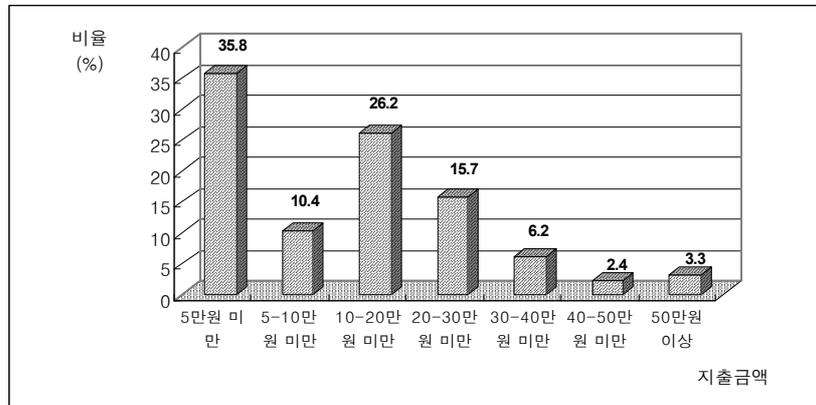
<표 5-8> 가구의 소득수준별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

(단위: %, 천원)

	비 율	월평균 지출액
1 0 0 만 원 미 만	24.8	89
100 ~ 200 만 원 미 만	30.1	155
200 ~ 300 만 원 미 만	23.2	254
300 ~ 400 만 원 미 만	11.1	305
400 ~ 500 만 원 미 만	4.4	356
5 0 0 만 원 이 상	6.4	567
전 체	100.0	340

가구 단위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비용과 함께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1,270가구 자녀 3,236명의 평균 보육비용을 산출하였다. [그림 5-2]와 <표 5-9>는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시설비를 범주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월평균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은 20만7천원이고, 지출 금액의 범주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5만원 미만을 사교육·보육시설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이 35.8%로 가장 높으며, 10만원~20만

[그림 5-2]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의 지출 분포



<표 5-9> 자녀1인당 사교육·보육비용 지출 분포

(단위: %)

월평균 사교육비용	비율
5 만 원 미 만	35.8
5 ~ 10 만 원 미 만	10.4
10 ~ 20 만 원 미 만	26.2
20 ~ 30 만 원 미 만	15.7
30 ~ 40 만 원 미 만	6.2
40 ~ 50 만 원 미 만	2.4
5 0 만 원 이 상	3.3
전 체	100.0
평균(천원)	207

<표 5-10> 자녀연령별 사교육·보육비용

(단위: %, 천원)

	월평균 지출액	5만원 미만	5~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전체
7세 이하 (미취학아동)	168	37.5	10.3	32.9	12.5	4.1	1.9	0.8	100.0
8세~13세 (초등학생)	181	19.7	15.6	33.6	21.5	5.0	1.7	2.9	100.0
14세~20세 (중·고등학생)	291	48.4	5.9	13.1	13.7	9.5	3.2	6.1	100.0

원 미만이 26.2%, 20만원~30만원 미만이 15.7%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사교육·보육비용을 자녀의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자녀가 7세 이하의 경우 월평균 16만8천원을 사교육·보육비용으로 지출하며, 37.5%가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고 32.9%가 10만원~20만원 미만의 금액을, 12.5%가 20만원~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시기인 8세~13세의 경우 월평균 18만1천원을 지출하며, 10만원~2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33.6%, 20만원~30만원 미만의 금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21.5%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기에 비해 지출액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취학 아동 연령대와 초등학교 연령대의 차이는 월평균 2만7천원에 불과한 것에 반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차이는 월평균 9만원으로 미취학 아동 연령과 초등학교 연령대 차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연령대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사교육 보육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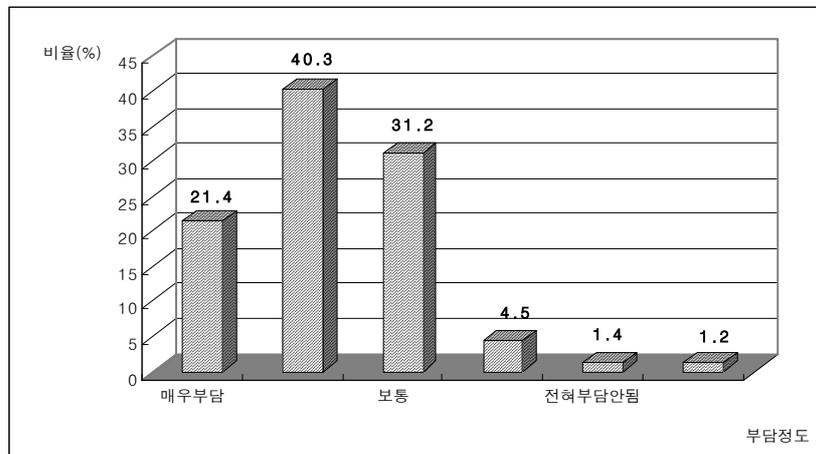
자녀의 사교육·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가구의 지출 금액에 대하여 가계가 체감하는 경제적인 부담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계의 부담정도를 ‘매우 부담된다(5점)’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림 5-3]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는 1,270가구가 응답한 사교육·보육시설비의 부담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전체 가구의 61.7%가 사교육·보육시설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 중 21.4%는 매우 부담스러운 것으로 응답하였다.

위와 같은 가계의 부담정도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5점 척도로 측정한 평균 부담정도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의 가구들의 4.0점으로 가장 강하게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200만원~400만원 미만의 가구들은 이보다 낮은 3.8점, 400만원 이상의 가구들은 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의 부담감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보육시

설 이용에 따른 지출에 부담감을 덜 느낀다는 것이며 가구들이 체감하는 부담감이 소득이 200만원씩 더해지면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담정도에 따른 가구들의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7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여 5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경우 부담된다는 비율이

[그림 5-3] 사교육·보육시설 이용 비용의 경제적 부담정도



<표 5-11> 소득수준별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정도

(단위: %, 점)

소득수준	평균 부담정도	전혀 부담안됨 (1)	별로 부담안됨 (2)	보통임 (3)	부담됨 (4)	매우 부담됨 (5)	무응답	전체
100만원 미만	4.0	1.3	3.9	8.6	27.8	36.7	1.7	100.0
100~200만원 미만	4.0	1.2	3.3	21.3	48.9	24.0	1.3	100.0
200~300만원 미만	3.8	1.7	4.1	30.5	43.5	18.9	1.3	100.0
300~400만원 미만	3.87	1.9	4.9	35.1	36.1	20.8	1.2	100.0
400~500만원 미만	3.6	0.7	6.7	40.3	34.8	16.7	0.0	100.0
500만원 이상	3.6	0.4	6.7	48.1	28.1	15.0	1.7	100.0

43.1%로 이 소득수준의 가구들은 절반 이상의 가구가 사교육·보육비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방식으로 사교육·보육비 수준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표 5-1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평균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지출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부담정도는 높아져 50만원에서 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경우가 4.2점으로 체감하는 부담정도가 가장 높으며 1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계는 이보다 낮은 4.1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평균 100만원

<표 5-12> 사교육·보육비 지출 금액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점)

	평균 부담정도	전혀 부담안됨 (1)	별로 부담안됨 (2)	보통임 (3)	부담됨 (4)	매우 부담됨 (5)	무응답	전체
10 만 원 미 만	3.2	8.1	14.8	41.8	24.9	9.8	0.6	100.0
10-20 만 원 미 만	3.8	0.3	5.5	33.8	43.6	13.8	3.0	100.0
20-30 만 원 미 만	3.8	0.5	2.8	32.5	44.7	18.5	1.0	100.0
30-40 만 원 미 만	3.8	1.0	1.7	32.4	43.5	21.4	0.0	100.0
40-50 만 원 미 만	3.8	1.5	6.5	26.3	37.3	28.4	0.0	100.0
50-100 만 원 미 만	4.2	0.4	2.4	21.8	36.6	36.7	2.1	100.0
100 만 원 이 상	4.1	0.0	0.0	23.1	41.4	35.5	0.0	100.0

이상을 사교육·보육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가구의 경우는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고액을 자녀의 사교육·보육비로 지출할지라도 50만원~10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월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들의 부담정도가 평균 3.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10만원~2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평균 3.8점으로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와 큰 차이를 보였으나 5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와는 동일한 수준으로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식으로 가구소득 대비 사교육·보육비 지출 비율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표 5-1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먼저 평균 부담정도를 살펴보면 가구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들의 경우 5

점 척도의 ‘보통’ 수준에 가까운 평균 3.1점으로 나타났으나 5%~10% 미만의 경우 3.7점으로 부담정도가 강해지고 10%~20% 미만의 경우는 3.9점으로 ‘부담 된다’는 수준에 가까우며 가구소득의 20%를 넘는 지출을 한 가구들의 경우 ‘부담 된다’는 4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지출비율이 높을 수록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정도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담정도에 따른 분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가구소득의 5%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의 26.9%만이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5%~10% 미만은 52.0%, 10%~15% 미만은 68.7% 순으로 점차 증가하여 25% 이상의 가구소득을 사교육·보육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계는 83.4%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중 54.3%가 매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단위: %, 점)

	평균 부담정도	전혀 부담안됨 (1)	별로 부담안됨 (2)	보통임 (3)	부담됨 (4)	매우 부담됨(5)	무응답	전체
5% 미만	3.1	5.4	15.6	51.3	19.2	7.7	0.8	100.0
5-10%미만	3.7	0.5	4.6	40.5	40.9	11.1	2.4	100.0
10-15%미만	3.9	0.9	2.1	27.4	44.7	24.0	0.9	100.0
15-20%미만	3.9	1.2	2.5	22.9	50.9	22.5	0.0	100.0
20-25%미만	4.2	0.0	1.0	11.8	55.6	30.0	1.6	100.0
25% 이상	4.4	0.6	0.6	14.6	29.1	54.3	0.8	100.0

제 2 절 사교육 이용 유형

1.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종류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종류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를 본 분석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 3,236명 중 보육시설만을 이용하는 664명을 제외한 2,572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종류를 연령별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14>는 자녀의 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5가지의 사교육기관 중 연령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는 기관은 학원이며 초등학생 연령대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82.2%로 가장 높아 사교육이 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세 이하의 미취학아동의 경우는 학원 다음으로 학습지(17.0%)의 이용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으며, 적은

<표 5-14> 자녀연령별 주로 이용하는 사교육기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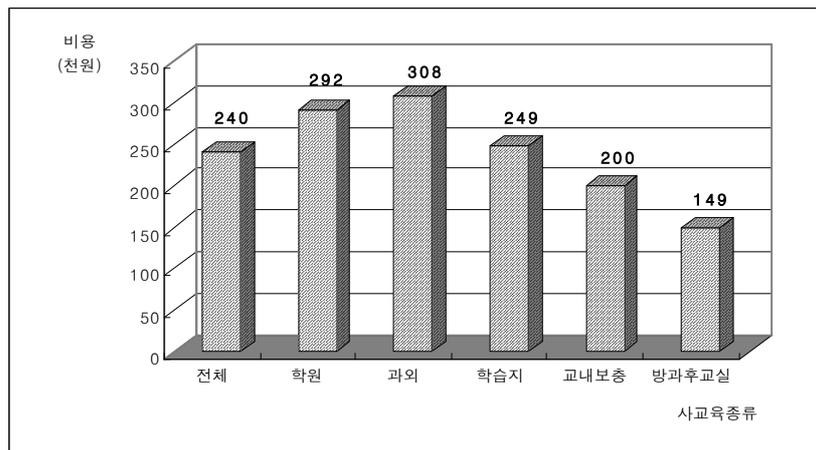
	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내보충	방과후 교실	전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75.8	3.3	17.0	-	3.9	100.0
8세~13세 (초등학생)	82.2	6.7	8.1	1.2	1.8	100.0
14세~20세 (중·고등학생)	79.4	12.7	6.1	1.6	0.2	100.0

비율이기는 하나 과외 또는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연령대의 경우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학원을 제외하고는 학습지(8.1%), 과외(6.7%)의 순으로 이용비율이 높았다. 중·고등학생연령대의 경우는 과외(12.7%)의 이용비율이 학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과외의 이용비율은 미취학 아동기 이후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두 배 가량 이용비율이 증가하고 중·고등학교인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그 비율은 다시 두 배 가량 증가한다. 결국 자녀의 사교육은 초등학교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학원과 학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연령대에서는 학원과 과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의 분포가 위와 같다면 사교육종류별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인가?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교육종류별 사교육비를 산출하였다. [그림 5-4]는 5가지의 사교육종류별 월평균 가구가 지출하는 사교육비를 비교한 것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제외한 사교육기관 이용자녀 2,572명 전체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다. 종류별로는 과외비가 월평균 30만8천원으로 사교육 종류 중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다음으로는 학원비가 29만2천원, 학습지가 24만9천원의 순이다. 이들 세 가지 사교육종류는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평균 지출액보다 낮은 수준의 금액을 지출하는 사교육종류는 방과후 교내 보충(20만원)과 방과후 교실(14만9천원)이다. 그러나 방과후 교내보충 수업료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앞서 논의했던 자녀의 사교육이 학원과 학습지 또는 학원과 과외라는 사실을 염두해 볼 때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사교육종류를 중심으로 절대적인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5-4] 사교육 종류별 월평균 사교육비



2. 연령별 사교육 이용 현황

자녀의 사교육 이용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수와 주당 이용횟수, 1회 이용 시간, 그리고 월평균 자녀 1인당 사교육비용을 <표 5-15>와 같이 자녀연령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평균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수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이하 연령의 경우가 중학생 이상의 연령에 비해 평균 0.4곳 정도 더 많이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사교육기관 이용횟수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의 경우가 평균 6.2회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도 평균 6회 이상 이용하여 저연령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용시간의 경우는 미취학아동의 경우가 평균 4.8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2.4시간으로 가장 짧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생의 경우는 여러 사교육기관을 빈번히 이용하나 그 이용시간은 짧으며,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의 수와 이용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1회 이용시간은 초등학생에 비해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가 평균 사교육을 이용하는 횟수가 많고 1회 이용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들이 보육의 기능까지 더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납득 가능한 결과로 보아진다. 평균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의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들이 평균 1.3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1.1종류를 이용하는 중·고등학교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은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교육으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점차 지출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가 16만8천원인 것에 비해 고등학생 및 재수생 자녀의 경우는 31만8천원으로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가 15만원 가량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사교육 지출비용의 증가추이는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의 지출비용에 있어 그 차이가 9만3천원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의 지출비용의 차이는 4만4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교육기관 및 종류를 이용하여 사교육을 이용하는 횟수나 이용시간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에 비해 더 많을지라도 사교육 이용의 지출비용에 있어서는 중학교 진학 이후에 급격히 증가하고 이후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소폭 더 증가하여 자녀 사교육비에 대한 가계의 부담은 중학교 이후에 가중됨을 짐작할 수 있다.

〈표 5-15〉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기관수, 이용횟수, 시간, 비용

(단위: 곳, 회, 시간, 천원)

	평균 사교육 기관 수	주당 이용횟수	1회 이용시간	평균 사교육 종류 수	월평균 사교육 비용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1.6	6.0	4.8	1.3	168
8세~13세 (초등학생)	1.6	6.2	2.4	1.3	181
14세~16세 (중학생)	1.2	4.8	2.7	1.1	274
17세~20세 (고등생 및 재수생)	1.2	4.9	3.5	1.1	318

〈표 5-16〉 자녀연령별 사교육종류에 따른 비용

(단위: 천원)

	학원	과외	학습지	방과후 교내보충	방과후교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165	191	83	-	188
8세~13세 (초등학생)	177	269	140	62	198
14세~16세 (중학생)	215	380	121	32	100
17세~20세 (고등학생 및 재수생)	270	543	193	77	-

자녀의 연령에 따른 월평균 지출 사교육비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표 5-16>에서는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에 따른 지출비용을 제시하였다. 먼저 학원을 살펴보면 자녀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에 대한 지출비용이 증가하여 미취학아동의 경우 월평균 16만5천원을 지출하나 고등학생 및 재수생자녀의 경우는 27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이가 10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대에 따른 학원비의 증가는 미취학아동보다 초등학생이 1만2천원,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3만8천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및 재수생자녀가 5만5천원 정도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자녀연령대에 따른 사교육 이용의 지출

액 증가는 과외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히 지출액과 증가량에 있어서는 더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5가지 사교육 중 과외의 지출비용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교육으로 나타났고, 특히 고등학생 및 재수생의 과외비 지출은 월평균 54만3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연령대에 따른 증가량에 있어서도 미취학아동에 비해 초등학생이 7만8천원,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11만1천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 및 재수생의 경우가 16만3천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습지나 방과후 교내보충학습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자녀가 중학생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나, 고등학생보다는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교실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월평균 19만8천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며 미취학아동들의 경우도 18만8천원을 지출하여 초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들의 방과후 교실에 대한 지출 비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사교육종류에 따른 유형과 비용

사교육종류 5가지 중 자녀 한 명이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의 수는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자녀연령별 사교육 종류의 수를 비교하였다. <표 5-17>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연령에서 한 종류를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중·고등학교 연령대인 14세~20세 미만의 자녀들은 92.7%가 한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 이하 연령대에서는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비해 두

<표 5-17>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의 수

(단위: %)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	전 체
7세 이하	71.5	24.6	3.9	-	100.0
8세~13세	72.8	23.7	3.3	0.2	100.0
14세~20세	92.7	6.3	1.0	-	100.0

종류나 세 종류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두 종류를 이용하는 7세 이하의 자녀의 비율은 24.6%이고 초등학교연령대의 자녀의 비율은 23.7%이다. 세 종류를 이용하는 비율은 7세 이하의 경우가 3.9%이고 초등학교연령대가 3.3%이며 이 연령대에서는 네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도 0.2%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 한 명당 이용하는 사교육의 종류의 수에 따라서 사교육이용 유형은 달라지며 그에 따른 지출 비용도 각기 다를 것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먼저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에 따라 사교육 유형을 구분한 후 자녀들이 각각의 유형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유형에 따른 사교육 지출 비용도 함께 산출하였다. <표 5-18>은 자녀가 이용하는 사교육종류에 따른 유형과 지출비용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종류는 최대 4가지이며 대부분이 학원을 중심으로 다른 사교육 종류가 조합된 형태를 보여준다.

먼저 한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사교육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 종류의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81.5%가 학원을 이용하며 학습지(9.7%), 과외(6.2%), 방과후교내보충(1.9%), 방과후교실(0.7%)순으로 이용하나,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은 과외가 37만9천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학원(18만2천원), 방과후교실(10만2천원)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용하는 비율은 학원이 가장 많으나 지출하는 금액은 과외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사교육유형은 크게 세 가지의 유형, 즉 학원을 중심으로 한 조합(학원+과외, 학원+학습지, 학원+교내 방과후보충, 학원+방과후교실), 과외를 중심으로 한 조합(과외+학습지), 그리고 학습지를 중심으로 한 조합(학습지+교내 방과후보충, 학습지+방과후교실)으로 나누어 진다.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학원+학습지’ 유형으로 두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73.4%가 이 유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지출에 있어서는 과외를 중심으로 한 ‘과외+학습지’유형이 월평균 90만4천원을 지출하여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며, 이는 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원+과외’ 유형의 평균 지출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두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유형 중 가장 적

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유형은 학습지를 중심으로 한 ‘학습지+방과후교실’로 월평균 15만7천원을 지출하고, ‘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도 16만9천원의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의 수에 따른 유형

(단위: %, 천원)

	유 형	전 체	
		비 율	평균 지출액
1종류 이 용	①학원	81.5	182
	②과외	6.2	379
	③학습지	9.7	99
	④교내방과후보충	1.9	56
	⑤방과후교실	0.7	102
	전 체	100.0	183
2종류 이 용	①학원+과외	6.8	397
	②학원+학습지	73.4	242
	③학원+교내방과후보충	9.1	191
	④학원+방과후교실	3.7	230
	⑤과외+학습지	4.7	904
	⑥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1.0	169
	⑦학습지+방과후교실	1.3	157
	전 체	100.0	304
3종류 이 용	①학원+과외+학습지	52.9	335
	②학원+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33.5	177
	③학원+학습지+방과후교실	7.5	294
	④학원+과외+교내방과후보충	4.8	259
	⑤과외+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1.3	250
	전 체	100.0	274
4종류 이 용	①학원+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방과후교실	100.0	500

세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사교육유형은 ‘학원+과외+학습지’ 조합의 이용비율이 52.9%로 가장 높고 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도 33만5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의 이용비율은 33.5%이고 월평균 지출 사교육비는 17만7천원으로 이용비율은 두 번째로 높으나 지출비용은 가장 낮다. ‘학원+학습지+방과후교실’의 이용

비율은 7.5%이고 사교육비는 29만4천원으로 이용비율은 세 번째이고 지출비용은 두 번째로 높으며, '학원+과외+교내방과후 보충'의 이용비율은 4.8%, 사교육비용은 25만9천원으로 세 번째로 지출비용이 높다. '과외+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의 경우는 이용비율은 1.3%로 가장 낮으나 사교육비용은 월평균 25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업료를 지불하는 과외를 중심으로 한 조합이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네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사교육유형은 과외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사교육기관의 조합으로 '학원+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가장 많은 종류를 이용하는 이 유형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원으로 이용하는 종류의 수가 많은 만큼 많은 비용을 지출하나, '과외+학습지'를 이용하는 두 종류유형의 월평균 사교육비 90만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용하는 사교육종류 수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월평균 지출액을 살펴보았으나 두 종류 이상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사교육에 얼마를 지출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4종류이용 유형³⁰⁾을 제외하고 두 종류와 세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의 이용하는 사교육기관 조합에 따라 각각의 사교육의 1회 이용시간과 주당이용횟수 그리고 월평균 수업료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였다. 단 학습지의 경우는 특성상 수업료만 분석되었다. <표 5-19>와 <표 5-20>은 두 종류 이용자와 세 종류 이용자의 사교육조합에 따른 분석결과이다.

먼저 <표 5-19>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종류 조합의 사교육 중 이용하는 자녀의 비율이 가장 많았던 '학원+학습지'의 경우에 있어서 학원의 경우 1회 평균 이용시간은 2.3시간이고 주 6.1회 이용하며 월평균 17만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함께 이용하는 학습지는 월평균 7만1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종류 조합의 사교육 중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진 '과외+학습지'의 경우에 있어서 과외는 1회 평균 2.1시간을 이용하고 주 3.2회 이용하며 월평균 36만원을 지출

30) 4종류를 이용하는 자녀의 수는 단 2명이다.

〈표 5-19〉 자녀별 두 종류 사교육이용자의 유형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수업료
(단위: 시간, 회, 천원)

2종류 이용자의 유형	사교육 A			사교육 B		
	1회 이용 시간	주당 이용 횟수	월평균 수업료	1회 이용 시간	주당 이용 횟수	월평균 수업료
학원(A)+과외(B)	2.7	5.6	182	1.7	2.4	176
학원+학습지	2.3	6.1	171	-	-	71
학원+교내방과후보충	2.3	6.4	160	1.2	2.8	31
학원+방과후교실	1.7	4.8	117	2.1	6.0	113
과외+학습지	2.1	3.2	360	-	-	58
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	-	117	1.6	3.0	52
학습지+방과후교실	-	-	41	3.4	5.2	117

주: 앞의 사교육종류가(A)이고, 뒤의 사교육종류가(B)임.

〈표 5-20〉 자녀별 세 종류 사교육이용자의 유형별 이용시간, 이용횟수, 수업료
(단위: 시간, 회, 만원)

3종류 이용자의 유형	사교육 A			사교육 B			사교육 C		
	1회 이용 시간	주당 이용 횟수	월평균 수업료	1회 이용 시간	주당 이용 횟수	월평균 수업료	1회 이용 시간	주당 이용 횟수	월평균 수업료
학원(A)+과외(B)+학습지(C)	5.3	1.7	13.3	3.0	1.6	14.5	-	-	5.8
학원+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5.3	2.3	9.3	-	-	5.5	2.6	1.0	2.9
학원+학습지+방과후교실	5.7	2.1	13.2	-	-	7.2	4.4	1.2	9.0
학원+과외+교내방과후보충	8.6	2.0	17.3	1.7	1.0	5.6	2.3	1.0	3.0
과외+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	2.0	2.0	20.0	-	-	2.0	2.3	1.0	3.0

주: 첫 번째 사교육종류가 (A), 두 번째 사교육종류가 (B), 세 번째 사교육종류가 (C)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함께 이용하는 학습지는 월평균 5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외의 경우는 1회 가장 짧은 이용시간을 가지며 주당 이용횟수도 5가지 사교육 종류에 있어서 가장 적으나 월평균 수업료에 있어서는 다른 사교육의 두 배 가량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외를 중심으로 한 두 종류의 사교육조합이 높은 사교육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다.

<표 5-20>의 세 종류의 사교육기관 조합에 따른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비율이 가장 높았던 ‘학원+과외+학습지’ 조합에 있어서 학원의 경우는 1회 이용시간이 5.3시간이고 주당 이용횟수 1.7회이며 월평균 수업료로 13만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과외의 경우는 1회 이용시간이 3.0시간으로 학원이용시간의 절반가량이며 주당이용횟수는 학원이용횟수와 비슷한 1.6회이나 월평균 수업료는 학원수업료보다 다소 많은 14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이용하는 학습지는 월평균 5만8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을 중심으로 한 세 종류의 사교육기관 조합 중 ‘학원+과외+교내방과후보충’의 경우는 1회 이용하는 시간이 가장 많은 8.6시간이고 월평균수업료 지출도 과외보다는 학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외를 중심으로 한 ‘과외+학습지+교내방과후보충’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외의 월평균 지출금액이 20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두 종류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에 비해 세 종류를 이용하는 자녀들의 학원이용시간이 두 배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들이 주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어 결과적으로는 이용하는 사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사교육에 할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3절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별 비교

1.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사교육비 지출의 지역 간 불평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액을 지역별로 비교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지역을 크게 4개 지역(서울, 경기, 광역시, 그 외기타 지역)으로 나누고, 다시 서울지역을 강남권(강동, 송파, 강남, 서초구)과 비강남권 그리고 경기도 지역을 신도시(일산, 과천, 분당, 산본, 평촌)지역과 그 외 비신도시 지역으로 나누었다. <표 5-21>은 분석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이다.

〈표 5-21〉 사교육 이용가구의 거주지역별 분포

	빈도(%)	구분	빈도(%)
전 체	1,270(100.0)		
서 울	294(23.2)	강남권	54(18.4)
		비 강남권	240(81.6)
경 기	287(22.6)	신도시	40(13.9)
		비 신도시	247(86.1)
광 역 시	393(30.9)		
기 타	296(23.3)		

〈표 5-22〉 지역별 자녀수대비 사교육이용자녀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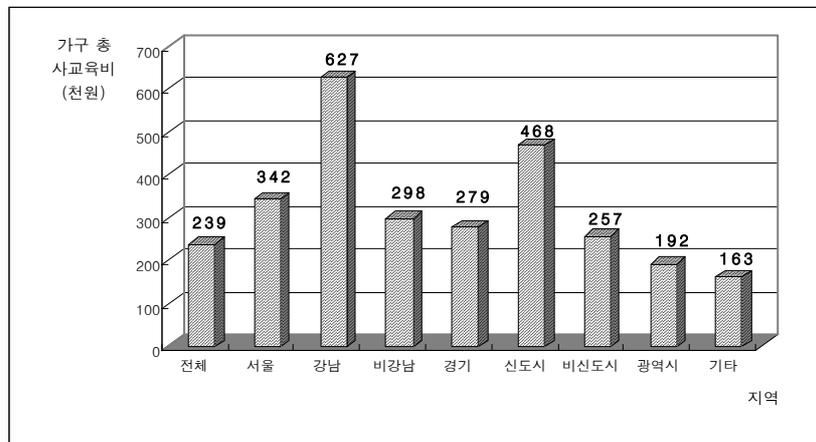
(단위: %)

	서 울			경 기			광역시	기타	전체
	강남	비강남	전체	신도시	비신도시	전체			
1명	62.2	61.9	62.0	60.9	55.7	56.2	51.1	42.1	52.5
2명	82.4	80.4	80.7	90.5	75.3	77.2	72.0	68.4	74.4
3명	75.5	66.8	68.3	-	73.5	73.5	59.0	63.2	65.7
4명	-	50.0	50.0	-	51.7	51.7	47.4	43.9	47.8
지역평균비율	73.3			70.9			64.2	58.7	66.4

〈표 5-22〉는 지역별로 사교육 이용률의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녀수 대비 사교육이용 자녀의 수를 지역별로 비교한 것이다. 〈표 5-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지역이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비율이 73.3%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기(70.9%)-광역시(64.2%)-기타지역(5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별로 살펴보면 자녀가 한 명인 경우 서울의 강남지역이 62.2%로 가장 높은 사교육이용비율을 보였으며, 42.1%의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낸 기타지역과는 20.1%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는 4개 지역 중 서울의 이용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과 경기도를 세분화한 결과 경기도의 신도시 지역

의 이용비율(9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차이가 2.0% 수준인 것에 비해 경기도의 경우는 신도시와 그 외 지역의 차이가 대략 15.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 비해 경기도가 행정구역내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세 명인 경우는 서울의 강남권이 75.5%로 가장 높으며 신도시 거주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기도(73.5%)와는 2%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5) 지역별 가구의 월평균 총 사교육비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의 총액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5-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전체 1,270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개 지역 중 서울 34만2천원, 경기 27만9천원, 광역시 19만2천원, 기타지역 16만3천원의 순이고, 이들 지역간의 차액은 최대 17만9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의 지역을 세분화한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권(62만7천원)과 비강남권(29만8천원)의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32만9천원 정도 차이를 보였고, 경기도의 경우도 신도시(46만8천원)와 비신도시(25만7천원)의 차이가 21만1천원으로 두 배 가량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세분화해본 사교육비는 서울의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신도시 지역이며, 기타지역이 가장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서울의 강남권과 가장 낮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기타지역을 비교하여보면 지역간 차액은 46만4천원으로 4개 지역을 비교하여 나타난 편차 17만9천원의 2.5배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간 편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의 사교육비의 차이가 서울의 강남지역과 경기도의 신도시의 사교육비에 의해 주도되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표 5-23〉 소득수준별 가구의 총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단위:천원)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강남	비강남	전체	신도시	비신도시	전체		
100만원 미만	67	108	102	261	81	172	64	66
100~200만원 미만	160	183	181	137	152	147	144	131
200~300만원 미만	604	327	354	402	247	276	208	182
300~400만원 미만	660	304	338	247	301	260	348	229
400~500만원 미만	553	453	489	435	356	358	288	249
500만원 이상	1,723	556	758	948	514	646	313	315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를 소득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2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가구의 총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비교하여보면 4개 지역 중 경기도가 월평균 17만2천원의 가장 높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도시의 경우는 26만1천원의 사교육비를 부담하여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8만1천원에 비해 18만원 정도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는 서울의 비강남지역이 18만3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도에서도 비신도시 지역이 신도시 지역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1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지역이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 서울의 강남권은 월평균 60만4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300만원~4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 경우는 66만원을 지출하며 400만원~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55만3천원, 500만원 이상에서는 무려 172만3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의 경우도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정에서는 평균 94만8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의 총 사교육비의 액수는 대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강남권과 그 외 지역의 사교육비의 차이는 소득 200만원 이상에서부터 확연히 나타나 강남권과 그 외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액수가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총 사교육비가 가구의 총소득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5-24>은 산출한 사교육비 지출비율 수준에 따른 지역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고, [그림 5-6]은 평균 사교육 지출비율을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5-24> 가구 총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율분포 : 지역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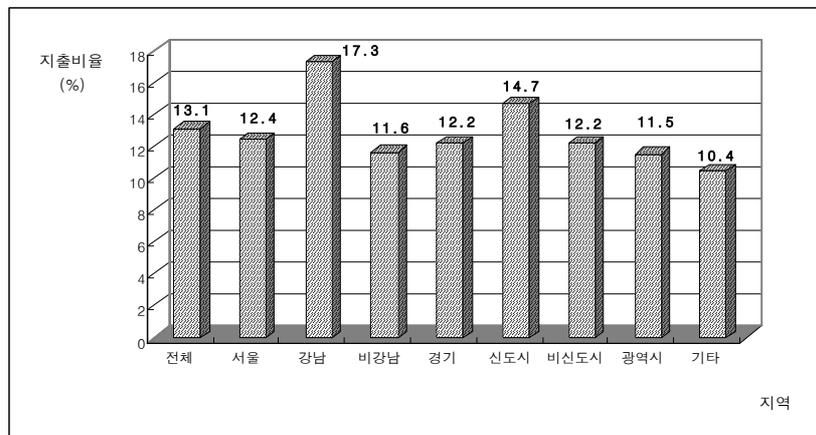
(단위: %)

	서 울			경 기			광역시	기타
	강남	비강남	전체	신도시	비신도시	전체		
5% 미만	26.5	33.9	32.9	18.1	33.2	31.6	39.6	44.6
5~10% 미만	14.3	19.7	19.0	26.1	22.4	22.8	21.7	24.6
10~15% 미만	19.9	16.8	17.2	18.8	16.6	16.9	18.7	14.5
15~20% 미만	10.8	14.2	13.8	11.3	12.4	12.3	9.5	8.7
20~25% 미만	7.4	7.3	7.3	15.7	6.2	7.2	4.8	2.8
25% 이상	21.1	8.1	9.8	10.0	9.2	9.2	5.7	4.8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가구의 가구 총 소득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13.1%이고, 서울의 강남권이 1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경기의 신도

시(14.7%) 보다 높은 수준의 지출비율을 나타내었다. 지출비율의 범주별로 살펴보면, 가구 총 소득의 5% 미만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타지역(44.6%)으로 나타났다. 즉 기타지역의 경우는 절반 수준에 가까운 가구들이 소득의 아주 적은 비율을 사교육으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5%에서 10% 미만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경기도의 신도시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지역(24.6%), 광역시(21.7%) 순으로 나타났다. 10%에서 15% 미만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은 서울의 강남권이 19.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신도시(18.8%), 광역시(18.7%) 순으로 나타났으나, 15%에서 20% 미만의 경우는 서울의 비강남권이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에서 25% 미만의 경우는 신도시가 15.7%로 그 외 지역과 두 배 이상 분포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가구 총소득의 25%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가구의 비율은 강남권이 21.1%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을 볼 때, 강남권 가구들이 소득의 상당한 비율을 사교육비에 할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 지역별 가구 총 소득대비 평균 사교육비 지출 비율



최근 3년의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KLIPS 3차년도(2000년)와 4차년도(2001)의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와 2000년을 기준으로 한 2001년과 2002년의 실질사교육비(명목사교육비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 그리고 2001년과 2002년의 전년대비 실질사교육비의 증가율을 산출하여 <표 5-25>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2000년 이후 사교육비의 지출액수는 증가하여 2000년에 월평균 14만9천원이었던 것이 2001년에 17만8천원으로 19.8%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22.4만원으로 전년대비 2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이 2000년 평균 18만3천원, 2001년에는 26.8%가 증가한 23만2천원, 2002년에는 37.9% 증가한 32만원 수준이며 경기도의 경우 2000년 14만9천원, 2001년에는 32.2%가 증가한 19만7천원, 2002년에는 36.0% 증가한 26.8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도 2000년에 15만1천원, 2001년에는 1.3%가 증가한 15만3천원, 2002년 17.6% 증가한 18만원으로 증가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지역의 경우는 지출액이나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증가하는 추세는 동일하

<표 5-25> 월평균 가구 총 사교육비의 증가율 : 지역별 비교

		2000	2001		2002	
		사교육비 (만원)	사교육비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사교육비 (만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 체		14.9	17.8	19.5	22.4	25.8
서울	강 남	30.5	33.2	8.9	58.7	76.8
	비 강 남	15.9	21.2	33.3	27.5	29.7
	전 체	18.3	23.2	26.8	32.0	37.9
경기	신 도 시	16.3	20.8	27.6	43.8	110.6
	비신도시	13.9	19.7	41.7	24.7	25.4
	전 체	14.9	19.7	32.2	26.8	36.0
광역시		15.1	15.3	1.3	18.0	17.6
기 타		11.7	13.2	12.8	15.2	15.2

주: 1) 2001년과 2002년의 사교육비 액수는 2000년을 기준(100)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분(2001=104.1, 2002=106.9)을 감안한 실질사교육비(실질사교육비=명목사교육비/CPI×100)이고, 증가율은 실질사교육비를 기초로 산출하였음.

2) 2000년 1,399가구(서울:331(강남60+비강남310), 경기:295(신도시41+비신도시254), 광역시 429, 기타 305), 2001년 1,324가구(서울:331(강남62+비강남269), 경기: 279(신도시27+비신도시 252), 광역시 398, 기타 316)임.

〈표 5-26〉 강남권과 신도시 지속거주 가구의 총 사교육비 변화

지역	사례수	2001	2002	
		사교육비 (천원)	사교육비 (천원)	전년대비 증가율(%)
강남	27	295	844	186
신도시	21	229	462	79.0

〈표 5-27〉 강남권과 신도시 지속거주 가구의 총소득 변화

지역	사례수	2001	2002	
		월평균소득 (천원)	월평균소득 (천원)	전년대비 증가율(%)
강남	27	3,567	3,636	1.9
신도시	21	2,155	3,283	52.3

여 2000년에 11만7천원, 2001년에는 12.8% 증가한 13만2천원, 2002년에는 15.2% 증가한 15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의 강남권이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무려 73.7%나 급증하였고, 경기의 신도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10.6%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본 분석에서 사용된 샘플 수에 영향을 받은 결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00년~2002년까지 KLIPS 조사의 계속응답자 중 강남권과 신도시지역 각각의 지속 거주자들만을 가려내어 이들 가계의 총 소득의 변화와 가구 총 사교육비의 변화를 <표 5-26>과 <표 5-27>에서와 같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5-26>에서와 같이 강남지역의 경우는 2001년과 2002년 사이에 평균 29만5천원에서 84만4천원으로 사교육비가 무려 186.0%가 급증하였고, 신도시의 경우에도 22만9천원에서 46만2천원으로 7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강남권과 신도시의 사교육비의 급증이 적은 샘플수에 의해 영향을 받은 편중된(biased) 결과가 아니라 실제 응답자들의 지출액수가 이 기간 중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근거로 이들 두 지역의 2001년과 2002년의 소득수준³¹⁾을 살펴보

31) KLIPS에서의 소득은 세 후 소득이다.

면 <표 5-27>에서와 같이 신도시의 경우 2001년 소득이 215만5천원이고, 2002년의 소득은 전년대비 52.3%가 증가한 328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득의 증가는 사교육비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강남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년에서 2002년의 소득변화가 1.9% 증가한 것에 그쳐 이들 두 지역의 사교육비의 급증이 소득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고소득층인 강남권과 중산층인 신도시 가구들을 중심으로 한 사교육비의 급증이 2001년과 2002년 사이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의 증가를 주도하였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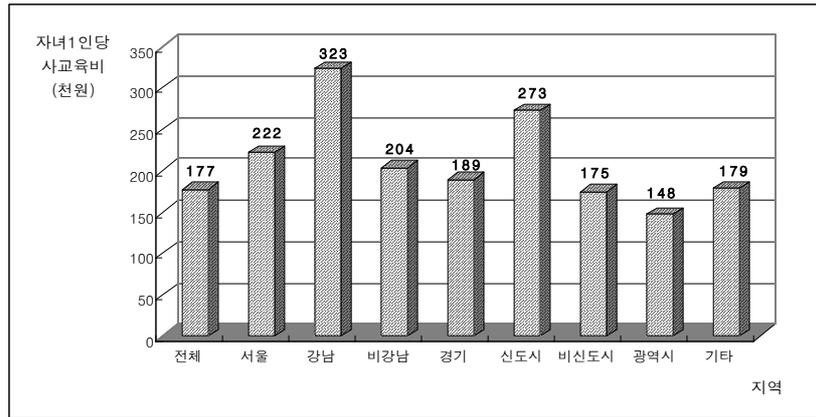
2. 자녀단위 사교육비

가구 단위에 이어 자녀단위의 사교육비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총 사교육비를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수로 나누어 각 가구의 자녀당 사교육비를 산출하였다. [그림 5-7]과 <표 5-28>는 자녀당 사교육비를 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우선,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7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강남권이 32만3천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 두 배 가량 높으며, 신도시 27만 3천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20만4천원으로 광역시(14만8천원)나 기타(17만9천원)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지출하는 사교육비 수준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5만원 미만의 경우는 광역시가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지역도 4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에서는 적은 액수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의 경우는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기타지역(25.9%)과 광역시(25.0%) 그리고 서울의 비강남권 지역(24.2%)에서 높게 나타났다. 20만원에서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신도시의 경우가 37.3%로 가장 높으며 기타지역의 경우도 20.6%로 나타났다. 30만원에서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강남권의 분포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 배이며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서

울과 신도시의 비율이 각각 9.8%, 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5-7] 자녀 1인당 지역별 평균 사교육비용 : 지역별 비교



<표 5-28> 자녀 1인당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단위: %, 천원)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강남	비강남	전체	신도시	그외	전체		
5만원 미만	285	341	333	135	400	268	470	396
5~10만원 미만	93	93	93	132	124	128	109	37
10~20만원 미만	180	242	233	143	270	175	250	259
20~30만원 미만	123	193	158	373	134	254	139	206
30~40만원 미만	141	72	111	79	42	61	23	72
40~50만원 미만	80	21	50	43	11	27	-	07
50만원 이상	98	38	68	95	19	57	09	23

자녀의 사교육비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각기 달리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미취학기에서 학령기로 접어들면서 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비용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표 5-29>는 자녀연령별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역별로 제시한 것이다.

7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비를 살펴보면 신도시가 21만7천원으로

로 가장 높고 이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이 18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이보다 낮은 15만7천원으로 나타났고, 강남권(15만1천원) 보다는 비강남권(16만2천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8세부터 13세까지 초등학교의 경우는 서울의 강남권이 22만3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도시가 20만6천원, 서울의 비강남권이 18만2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14세에서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및 재수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서울의 강남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도시도 44만원으로 근소한 차이의 사교육 지출비를 나타냈다.

초등학교까지는 서울과 경기도의 같은 지역 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4세 이후의 중·고등학교 연령에 있어서는 같은 지역 내의 사교육 지출비용의 차액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서울지역의 강남권과 그 외 지역 및 경기도의 신도시와 그 외 지역은 대략 20만원 정도의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5-29〉 자녀연령별 자녀당 사교육비 : 지역별 비교

(단위:천원)

	서울			경기			광역시	기타	전체
	강남	비강남	전체	신도시	비신도시	전체			
7세 이하 (미취학)	151	162	157	217	142	180	124	148	888명
8세~13세 (초등학생)	223	182	202	206	162	184	147	160	1,133명
14세~20세 (중·고등학생 및 재수생)	450	259	354	440	220	330	188	227	835명

주: N=2,856명임.

제4절 보육시설 이용 및 비용

1. 보육시설의 이용 여부 및 현황

한국노동패널(KLIPS)의 사교육·보육시설의 이용현황과 관련한 조사항목은 제2절에서 사교육기관 이용자녀의 이용현황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보육시설 이용 대상이 되는 7세 이하 미취학 자녀들의 보육시설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7세 이하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파악하고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사교육기관 이용여부에 따라 보육시설만을 이용하는 자녀들과 보육시설과 사교육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자녀를 구분하여 <표 5-30>에 제시하였다. 먼저 사교육·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의 자녀 중 7세 이하에 해당하는 1,834명이다. 이들 중 63.3%인 1,214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나머지 36.7%에 해당하는 620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중 70.9%인 454명은 보육시설만 이용하고, 29.1%인 166명은 보육시설과 사교육기관을 모두 이용하는 것으로 밝혀져 미취학 아동기부터 보육시설과는 별도로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비율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5-30> 7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전 체	1,834(100.0)			
이용여부	이용안함	63.3		
	이 용 함	36.7	보육시설	70.9
			보육시설+사교육기관	29.1
			전 체	100.0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여성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확충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으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육시설의 이용대상이 되는 7세 미만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비율은 아직 40.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질이 한 두 명의 자녀를 둔 젊은 부모들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이 부모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되거나 선호되지 않고 여전히 동거 혹은 비동거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사적인 차원에서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기관의 확대로 보육수요가 학원 등으로 흡수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으나 보육시설과는 별도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대략 30.0%에 이르는 것을 보면 그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짐작된다.

<표 5-31> 7세 이하 자녀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여부

(단위: %)

	이 용 합			이용안함	전 체
	보육시설만	보육시설+사교육기관	전체		
2세 미만	8.1			91.9	378(100.0)
	96.6	3.4	100.0		
2세~5세	52.6			47.4	1,005(100.0)
	75.7	24.3	100.0		
6세 이상	21.4			78.6	451(100.0)
	41.0	59.0	100.0		

7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2세 미만, 2세~5세, 6세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표 5-31>은 세 집단으로 구분된 자녀들의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비교한 것이다. 2세 미만의 어린 영아의 경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8.1%로 매우 낮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이 어린 영아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사적인 차원에서 부모가 직접 보육하거나 가족 또는 친인척에 의하여 보육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2세~5세의 영·유아 자녀들의 경우는 52.6%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며 이들 중 75.7%는 보육시설만을 이용하고 24.3%는 보

육시설과 사교육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에 들면서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비율은 6세 이상의 유아기에 들면 더욱 급증하여 오히려 이 연령대에서는 보육시설과 사교육기관을 함께 이용하는 비율(59.0%)이 보육시설만 이용하는 비율(41.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령기에 가까워지는 연령이 되면서 취학을 준비하는 사교육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7세 이하 자녀의 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은 부모가 직접 보육하거나 가족·친지와 같은 사적인 차원에서의 보육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임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어린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동거하는 가족의 구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표 5-32>는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가족구성과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1,834가구 중 부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은 1,369가구, 편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은 16가구, 비핵가족은 449가구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의 구성은 핵가족으로 63.0%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편부·모가족자녀의 경우가 가장 낮은 29.8%의 이용비율을 보였다. 비핵가족의 경우는 편부·모가족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36.4%로 나타났다. 비핵가족의 7세 이하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낮다는 것은 부모 이외에 가족 내 자녀보육을 맡아 줄 수 있는 성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핵가족에 비해 많아 사적인 차원에서의 보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편부·모가족의 자녀가 보육시설 이용비율이 낮다는

<표 5-32> 7세 미만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가족구성

(단위: %)

	부부+미혼자녀	편부모+미혼자녀	비핵가족
이용함	63.0	29.8	36.4
이용안함	37.0	70.2	63.6
전체	1,369(100.0)	16(100.0)	449(100.0)

주: N=1,834명임.

것은 대부분의 편부·모가계 특히 편모가계의 경제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비용의 문제로 인한 결과로 추측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이용하는 정도와 지출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사교육기관의 이용현황을 파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주당 이용횟수, 1회 이용시간, 월평균 지출비용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5-33>은 자녀의 연령을 구분하고 각각의 연령대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횟수는 6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가 가장 많은 주 7회를 이용하고 6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는 주당 5.5회로 평균적으로 주중에 매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어린 영아의 이용시간이 1회 평균 8.8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이용하며 2세~5세의 영유아는 6.5시간, 6세 이상의 유아는 6.2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부모가 선택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즉 이들의 부모는 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월평균 보육시설에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서도 어린 영아일수록 지출

<표 5-33> 보육시설 이용자녀의 연령별 평균 이용횟수, 시간, 비용

	2세 미만	2세~5세	6세 이상
주당 이용횟수(회)	5.5	5.5	7.0
1회 이용시간(시간)	8.8	6.5	6.2
월평균 비용(천원)	327	174	201

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2세 미만의 영아의 월평균 지출비용은 32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녀연령대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정도가 다르다면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또한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보육시설기관의 분포를 살펴보고 이용하는 보육시설기관에 따른 지출비용을 파악하였다. <표 5-34>는 자녀

연령별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및 월평균 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의 1인당 지출비용은 18만7천원이다. 보육시설종류별 평균 지출비용을 살펴보면 놀이방의 이용비용이 21만7천원으로 가장 높고, 일반유치원과 보육하는 유치원을 포함하는 유치원이 월평균 2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어린이집(15만6천원)이나 민간어린이집(16만원)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자녀연령별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와 비용을 살펴보면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놀이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39.9%로 가장 높으며 비용도 348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 2세~5세의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38.8%로 가장 높고 일반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도 24.9%로 높게 나타났다³²⁾. 보육하는 유치원의 이용비율까지 합하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35.1%에 달한다. 비용에 있어서는 보육하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월평균 21만5천원을 지출하고, 일반유치원이 이보다 조금 적은 19만7천원, 놀이방이 18만4천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세 이

〈표 5-34〉 자녀연령별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종류 및 월평균 비용
(단위: %, 천원)

	2세 미만		2세~5세		6세 이상		전 체 평 균 비 용
	비 율	비 용	비 율	비 용	비 율	비 용	
국공립어린이집	-	-	16.0	155	20.3	158	156
민간어린이집	18.6	255	38.8	154	22.0	192	160
놀이방	39.9	348	6.6	184	3.6	170	217
직장보육시설	8.0	0.0	0.3	0.0	2.2	0.0	0.0
보육하는유치원	-	-	10.2	215	14.9	198	212
일반유치원	-	-	24.9	197	36.2	230	205
기타	33.5	361	3.2	160	0.8	30	213
전체	100.0	327	100.0	178	100.0	206	187

32) 일반유치원은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이 아닌 사교육기관으로 분류하기도 하나,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일반유치원에서 보육의 기능이 점차 확대되어 본 분석에서는 보육시설로 분류하였다.

상의 유아의 경우는 일반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이 3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에 있어서는 일반유치원의 경우가 가장 많은 월평균 23만원을 지출하고, 보육하는 유치원이 19만8천원, 민간어린이집이 19만2천원 순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과 함께 사교육을 이용하는 자녀의 경우 어떠한 보육시설과 어떠한 사교육을 이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5-35>는 보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을 모두 이용하는 166명의 이용하는 사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2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는 그 비율이 매우 작기는 하나 사교육으로 학습지를 이용하고 보육시설로 놀이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0.4%로 나타났다. 이는 아주 어린 연령부터 사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결과이다. 2세~5세의 경우는 보육시설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43.2%로 가장 높고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이용하는 비율이 비슷한 수준인 28.6%와 28.2%이며,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은 65.6%가 과외, 28.2% 학원, 5.5% 학습지, 0.7% 방과후교실로 나타

<표 5-35> 보육시설과 사교육 모두 이용하는 자녀의 연령분포와 이용기관 (단위:%)

	전 체 (100.0)	사 교 육		보육시설	
		종 류	비 율	종 류	비 율
2세 미만	2(0.4)	학 습 지	100.0	놀 이 방	100.0
2세 ~5세	113(67.2)	학 원	28.2	국공립어린이집	28.6
		과 외	65.6	민간어린이집	43.2
		학 습 지	5.5	놀 이 방	28.2
		방과후교실	0.7	-	-
		전 체	100.0	-	-
6세 이상	51(32.4)	학 원	58.6	국공립어린이집	42.3
		과 외	29.0	민간어린이집	41.1
		학 습 지	7.7	놀 이 방	6.0
		방과후교실	4.7	직장보육시설	10.6
		전 체	100.0	전 체	100.0

주: N=166명임.

났다. 6세 이상의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각각 42.3%와 41.1%이고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도 10.6%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은 2세~5세 연령대와는 달리 학원이 58.6%, 과외 29.0%, 학습지 7.7%, 방과후교실 4.7%로 나타났다.

2. 모(母)의 특성에 따른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과 경제적 부담

자녀의 보육시설의 이용여부는 모(母)의 특성, 특히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과 관련한 논의들의 대부분은 어린자녀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즉 자녀의 보육의 문제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와는 부수적인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어머니가 취업자인 경우가 미취업자인 경우에 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상태를 비롯한 연령과 교육수준 등의 특성에 따라서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5-36>은 7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를 어머니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것이다.

<표 5-36>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여부와 모(母)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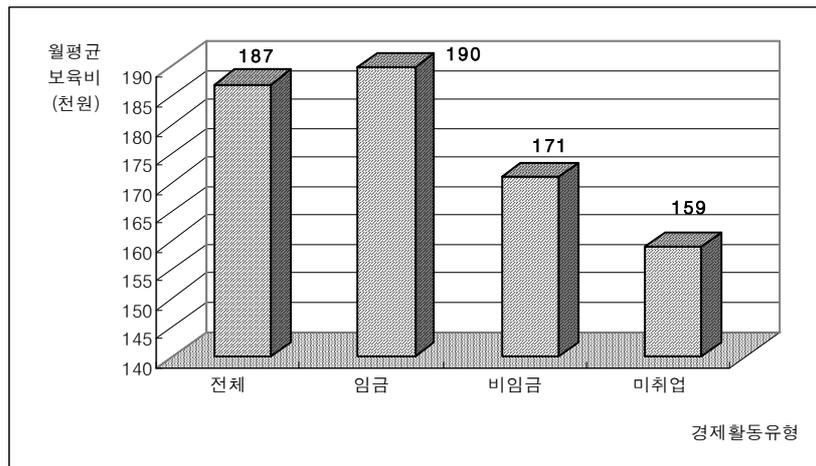
(단위: %)

	범 주	이 용 함	이용안함	전 체
연 령	20세~29세	28.8	71.2	100.0
	30세~39세	41.4	58.6	100.0
	40세 이상	31.6	68.4	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34.4	65.6	100.0
	전문대졸	35.6	67.4	100.0
	대졸이상	47.0	53.0	100.0
취업여부 및 형태	임 금	49.0	51.0	100.0
	비임금	48.5	51.5	100.0
	미취업	31.5	68.5	100.0

주: N=1,834명임.

먼저 연령에 따른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30대인 경우가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에 있어 41.4%로 가장 높으며, 40대가 31.6%, 20대가 28.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것은 생애주기에 있어 자녀의 연령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만큼 어린 자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대졸 이상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형태에 따른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이용비율은 31.5%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임금근로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49.0%)가 비임금근로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48.5%)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8] 모(母)의 경제활동유형과 자녀이용 보육시설 종류에 따른 보육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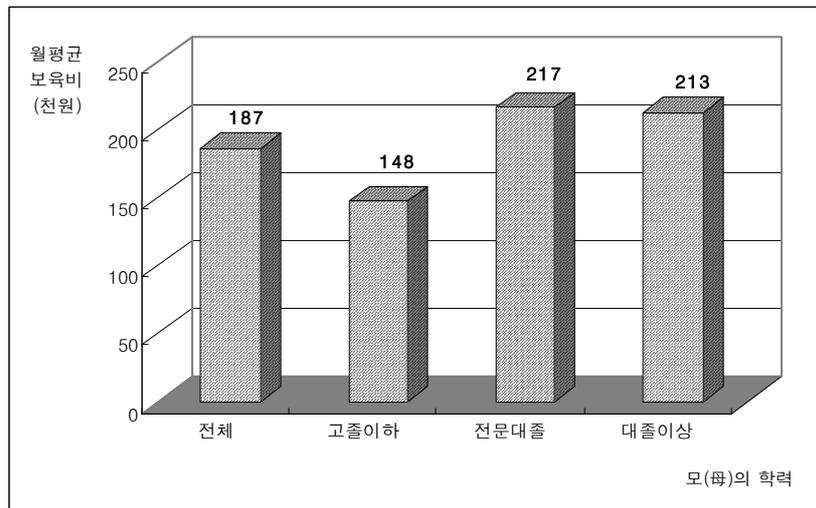
월평균 지출하는 보육비용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취업 여부 및 형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림 5-8]은 어머니의 경제활동유형과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에 따른 월평균 지출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미취업자보다는 취업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비임금근로의 형태보다는 임금근로의 형태로 취업한 경우가 자녀의 보육비용으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어머니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장 많은 보육비용(19만원)을

지출하고, 비임금의 경우는 17만1천원, 미취업의 경우는 15만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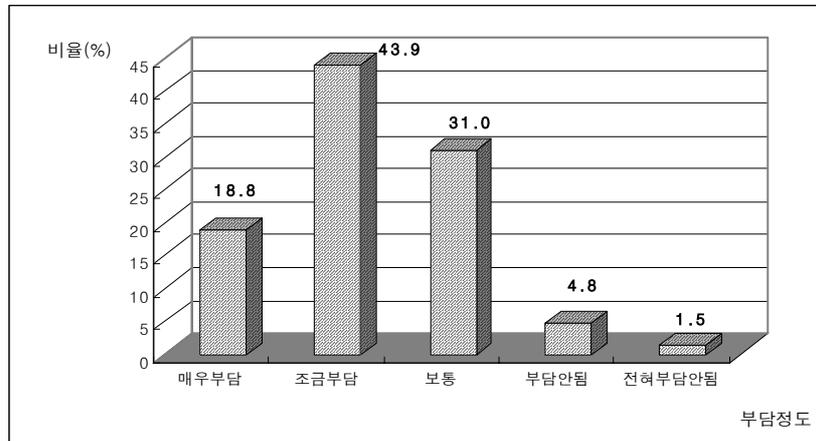
어머니의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월평균 지출하는 보육비용이 이와 같다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보육비용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9]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월평균 보육시설 이용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비용은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비용이 높았으나 비용에 있어서는 전문대졸의 경우가 월평균 20만7천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인 경우와 대졸 이상인 경우의 차이는 지출하는 비용에 있어 평균 3천원에 불과하나 고졸이하의 학력의 경우와는 6만9천원의 큰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지출하는 자녀의 보육시설비용에 대해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 정도는 [그림 5-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62.7%가 부담된다고 하였으며 이들 중 18.8%가 매우 부담된다고 하여 사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보육비 또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하나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보육시설의 이용비율과 비용 그리고 경제적 부담정도를 종합적으

[그림 5-9] 모(母)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보육시설이용종류에 따른 보육비용



(그림 5-10) 보육시설 이용 가계의 경제적 부담정도



로 고려해보면 적지 않은 지출액이 요구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의 질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곧 저렴한 보육비용을 신뢰할 수 있는 공보육 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표 5-37>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보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는 어머니가 취업자인 경우에 더 강한 부담을 느껴 61.7%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업자인 경우에는 50.6%가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사회에 제대로 된 공보육 시설의 확충이 취업여성들의 짐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5-37> 모(母)의 취업여부에 따른 보육비용의 부담정도

(단위: %, 점)

	전혀부담 안됨(1)	부담안됨 (2)	보 통 (3)	조금부담 (4)	매 우 부담됨(5)	평 균 부담정도
취 업	1.5	5.9	30.9	39.0	22.7	3.8
미취업	1.3	9.3	34.3	37.2	17.9	3.6

참고문헌

-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제10권 3호, 101~121쪽.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137~149쪽.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2호, 189~206쪽.
- 이성립(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9호.
- Becker, G. S.(1994),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for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Mincer, J.(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pp.281~302.
- Schultz, T. W.(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1, pp.1~17.
- 통계청(2003),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 보도자료.
동아일보 2003년 10월 16일자 사교육관련 신문기사.
중앙일보 2003년 10월 18일자 사교육비관련 신문기사.

제 6 장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매년 잠재적 생산가능인구인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개인에 대해서 경제활동참가 여부, 고용형태, 구직활동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조사항목들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002년도 제5차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나타난 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의 분석 결과는 2003년도에 개발된 신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루어졌으며 연도간 비교 분석 시에는 종단면 가중치를, 2002년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된 각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는 <표 6-1>에서 제시되어 있다.

제 1 절에서는 개인 응답자들을 경제활동참가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특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직업별 분포, 취업 중 구직활동을, 제 3 절에서는 미취업자들의 구직의사, 구직활동 여부, 구직방법,

<표 6-1> 연도별 분석 자료의 사례수 : 1998~2002년

(단위:명)

		전 체	개인자료	신규자료
1차년도		13,321	13,321	-
2차년도		11,709	11,236	473
3차년도		10,797	10,494	303
4차년도		10,499	10,268	231
5차년도	종단 분석	10,295	10,065	230
	횡단 분석	10,924	10,522	402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 1 절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1. 경제활동상태

<표 6-2>는 조사 연도별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조금이라도 일을 한 사람(취업자)”, 혹은 “가족 또는 친지를 위해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998년 조사 당시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48.3%로 나타난 취업자 비중은 2002년에 53.9%로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실업자³³⁾의 비중을 살펴보면 5년간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999년도와 2000년도에

<표 6-2> 경제활동상태비교 : 1998~2002년

(단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1998	48.3 (48.3)	7.6 (9.4)	44.1 (42.3)
1999	50.4 (50.4)	3.8 (4.5)	45.9 (45.1)
2000	51.4 (51.4)	2.4 (2.9)	46.2 (45.7)
2001	52.4 (52.4)	2.1 (2.6)	45.5 (45.0)
2002	53.9 (53.9)	2.0 (2.3)	44.1 (43.8)

주: ILO 기준 실업자 정의(OECD 기준 실업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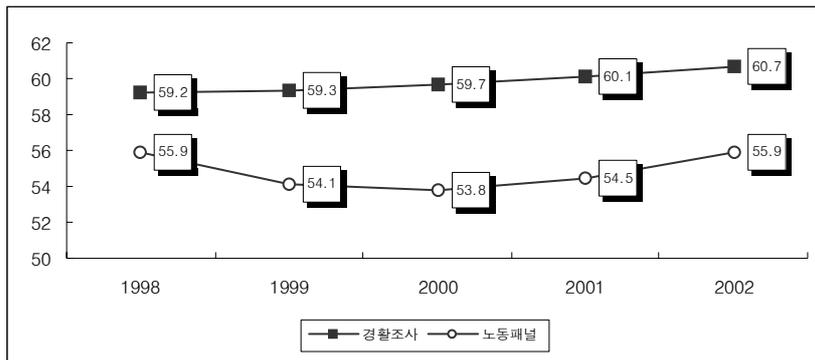
33) 현재 공식통계에서 사용되는 실업자의 정의는 크게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기준과 OECD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ILO 기준은 ‘지난 1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는데 반해, OECD 기준은 ‘지난 1개월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지난 주 취업가능했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에서 전자를 실업자의 정의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후자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두 지표 모두 이용가능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ILO 기준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는 2000년을 정점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실업자 중에서 비경제활동으로 빠지기보다는 취업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림 6-1]과 [그림 6-2]는 지난 5년 간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하 경활조사)와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통계청과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3~4%p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실업률은 1차년도를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결과의 경우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이 높게 추정되고 있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중이 경활조사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높게 추정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노동패널의 1차년도 경제활동상태 중에서 실업률은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1차년도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야 할 응답자 중에서 일부가 실업자로 보고한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두 자료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차이를 염두에 둘 때 제한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6-1] 경제활동 참가율 비교 : 1998~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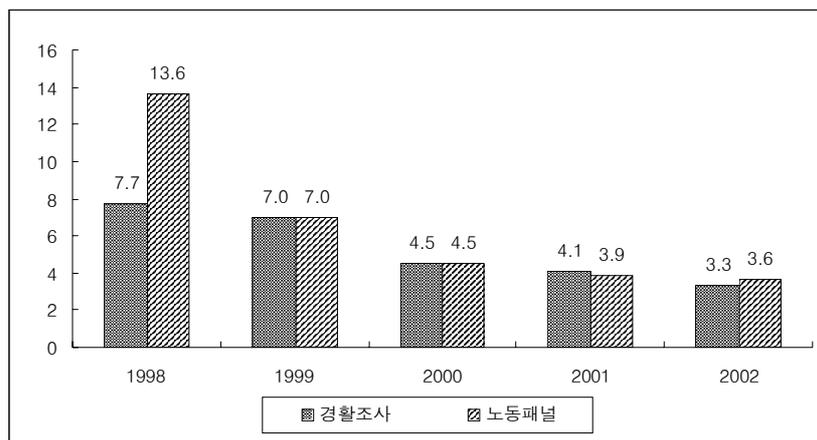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부문임.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100.

두 자료는 가구 조사라는 공통점과 1주간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가 용이하나 경활조사는 매월 진행되는 조사인데 비해서 노동패널조사는 1년 중 4~5개월 간 진행되는 조사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곧, 노동패널은 응답자마다 답변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간 변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률같이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의 경우 두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노동패널 1차년도 조사의 실업자 추정은 과다 추정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 조심스럽게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6-2] 각 연도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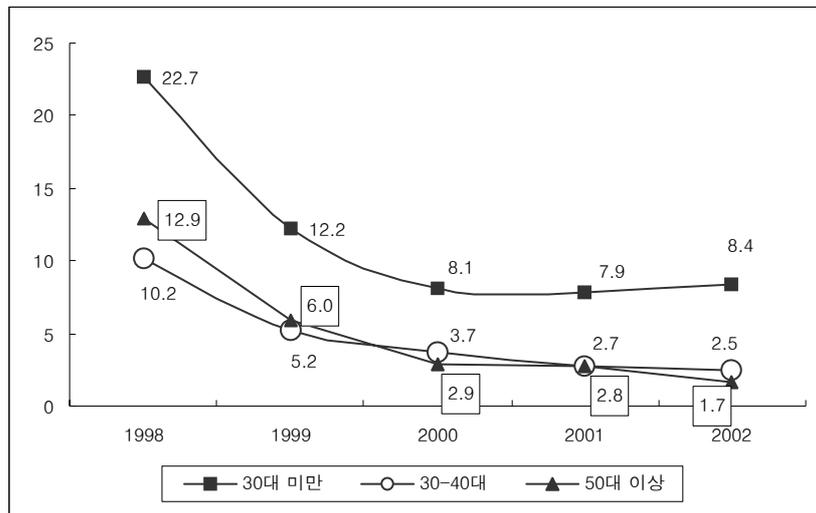
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총조사』, 비농가부문임.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그림 6-3]은 노동패널의 각 조사 연도별로 연령 집단에 따른 변화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연령과 상관없이 최근으로 올수록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추세는 연령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여준다.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을 구분해 보면, 30대 이상은 실업률의 감소 폭이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30대 미만은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활조사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인데, 경활조

사의 경우 2002년까지 30세 미만 청년층의 경우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다가 2003년에 들어서서 상승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청년층의 실업률의 경우 1998년과 2002년은 노동패널이 높게, 1999년부터 2001년은 노동패널이 약간 낮게 추정되고 있다. 30세 이상을 30~40대와 5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99년까지 50대 이상의 실업률이 30~40대보다 높았으나 2000년부터는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경활조사와는 다른 결과인데 경활조사의 경우 50대 이상이 줄곧 30~40대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3] 각 연도별 연령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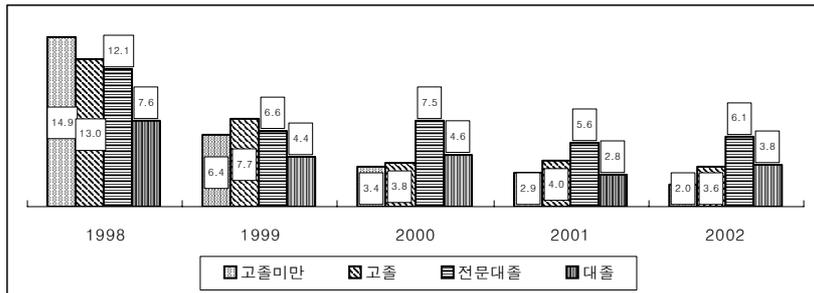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6-4]는 각 연도별로 교육수준에 따른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고졸 이하의 경우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1999년부터 소폭 하락 혹은 반등 양상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먼저 고졸 미만의 경우 1999년 6.4%에서 2002년 2.0%로 4.4%p 감소하였으며 고졸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4.1%p 실업률이 감소하였다. 반면 전문대졸의 경우 동기간 동안 0.5%p, 대졸자의 경우

0.6%p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2001년과 2002년을 비교해 볼 때 각각 0.5%p, 1.0%p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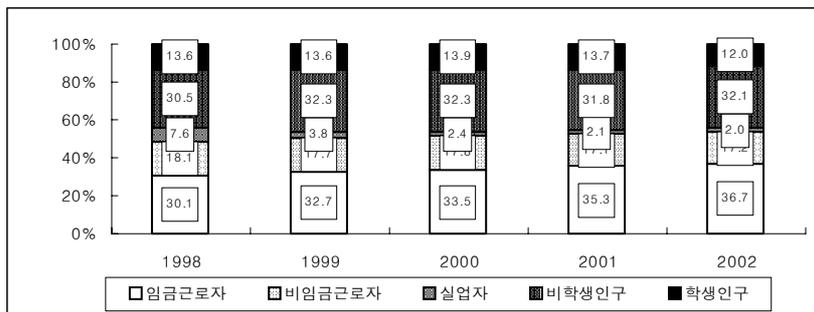
[그림 6-4] 각 연도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비교 : 1998~2002년

(단위 : %)



[그림 6-5] 각 연도별 경제활동상태 비교 : 1998년~2002년

(단위 : %)



이어서 [그림 6-5]는 보다 세부적으로 경제활동상태를 연도별로 제시하여 그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취업자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양상(1998 : 2000 : 2002 = 30.1 : 33.5 : 36.7)을 보여주고 있는 대신, 비임금근로자는 감소하는 양상(1998 : 2000 : 2002 = 18.1 : 17.8 : 17.2)을 보여주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연도별로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인구는 감소 추세(1998 : 2002 = 13.6 : 12.0)를, 비학생인구는 증가 추세(1998 : 2002 = 30.5 : 32.1)를 보

여주고 있다.

이제부터 2002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6-3>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경제활동인구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8.2%인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인 44.2%에 비해 20%p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격차는 지난 5년 동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남녀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는 27%p에서 23%p로 감소하였다(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7.0 : 24.7 : 25.6 : 24.1 : 23.0).

다음으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40대의 연령층이 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0세 미만은 7.8%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40대를 정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역 U자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실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5~19세의 실업자가 18.4%, 20대의 실업자가 7.1%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경우 실업자의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3>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 특성 : 2002년

(단위 : %)

	경제활동인구			
	소 계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남 성	68.2	65.2	31.9	2.9
여 성	44.2	64.5	31.6	3.9
15~19세	7.8	78.3	3.3	18.4
20~29세	54.9	86.3	6.6	7.1
30~39세	72.1	70.9	26.3	2.8
40~49세	77.0	58.6	39.2	2.2
50~59세	66.9	54.2	43.9	1.9
60세이상	28.3	37.8	61.2	1.0
고졸 미만	43.7	52.6	45.5	2.0
고 졸	66.7	64.6	31.9	3.5
대재밋중퇴	25.2	76.3	17.0	6.7
전문대졸	73.2	77.0	17.7	5.3
대졸 이상	74.5	76.1	20.5	3.4

〈표 6-4〉 성별 비경제활동인구의 특성

(단위: %)

	비경제활동인구		
	소 계	학생인구	비학생인구
전 체	44.1	26.1	73.9
남 성	31.8	39.7	60.3
여 성	55.8	18.7	81.3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대학재학 및 중퇴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고졸 미만이나 고졸인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52.6%, 64.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계층에서는 각각 70% 이상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비중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학생인구와 비학생인구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은 26.1%, 비학생인구의 비중은 73.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학생인구의 비중이 39.7%인 반면 여성은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성의 경우 학업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비학생인구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학업 보다는 가사나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혹은 취업의사는 있지만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구직을 포기한 사례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2. 경제활동 상태의 변화

<표 6-5>는 1998년 1차조사와 2002년 5차조사 자료를 재구성하여 1차 조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태의 변화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당시의 경제활동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도(대각선 행렬)가 높은 경우는 임금근로자(73.2%)와 비학생인구(72.8%)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경우는 실업자(2.8%)와 학생인구(34.4%)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의 유지율이 낮은 경우 중 전자는 5년 사이에 경제상황이 매우 호전되었음을 보여주며 후자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조사 대상 가구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표 6-5〉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변화 : 1998 ~ 2002년

(단위: %)

2002 \ 1998	임 금	비 임 금	실 업 자	비학생인구	학생인구
임 금	73.2	9.9	1.5	14.9	0.4
비 임 금	13.8	70.2	0.8	15.0	0.2
실 업 자	50.1	13.1	2.8	32.6	1.4
비학생인구	16.7	7.6	1.6	72.8	1.2
학생인구	35.7	2.0	4.3	23.5	34.4

1998년 당시 임금근로자인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 가구원의 연령 증가에 따른 비경제활동인구 편입(비학생인구 = 14.9%)이 두드러지며 100명 중 10명 가량은 비임금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취업자 내부 이전(비임금 → 임금 : 임금 → 비임금 = 13.8% : 9.9%)에 있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3.9%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편입의 경우는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1998년 당시 실업자의 경우 절반이 임금근로자(50.1%)로 편입되었으며 비임금근로자로의 편입은 임금근로자로의 편입에 비해서 절반 이하(13.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98년 당시 실업자 중 30%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32.6%)되어 실망실업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황조사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나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거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이내에 구직경험이 있는 구직단념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다. 구직단념자 수는 2000년에 69,000명에서 2001년 117,000명, 2002년에는 165,000명으로 2년 사이 2.4배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살펴보면, 비학생인구의 경우 70% 이상이

1998년 당시의 경제활동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인구의 경우 10명 중 3명 가량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로의 편입 정도를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자로의 편입은 학생인구(35.7%)의 경우가 비학생인구(16.7%)에 비해서 2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는 비학생인구(7.6%)가 학생인구(2.0)에 비해서 약 4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조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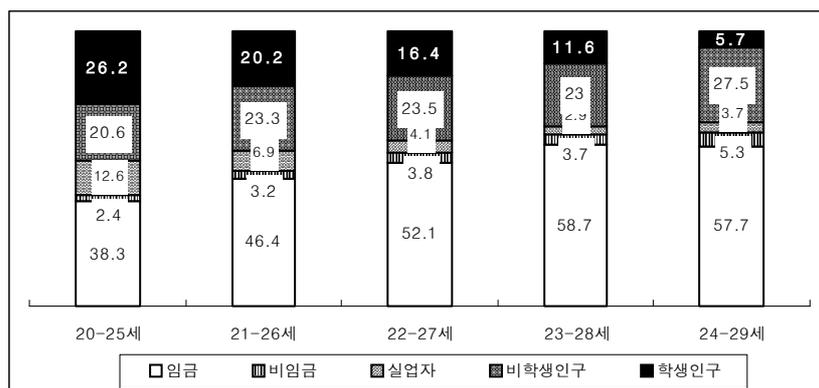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6-6]과 [그림 6-7]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노동시장 진입과 퇴장 과정을 동일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분석(SCA : Systematic Cohort Analysis)한 것으로 노동시장 진입단계에 있는 청년층(20~25세)과 노동시장 퇴장단계에 있는 고령층(55~60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그림 6-6]은 1998년 1차조사 당시 20~25세였던 연령집단을 추적한 것으로, 대체로 이 시기는 학교를 졸업한 후 본격적인 경제활동참여가 최초로 이루어지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취업자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당시 38.3%에서 2002년 당시 57.7%로 19.4%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동일기간동안 2.9%p 증가한데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학생인구의 경우 동일 기간동

[그림 6-6] 20~25세 연령 cohort별 경황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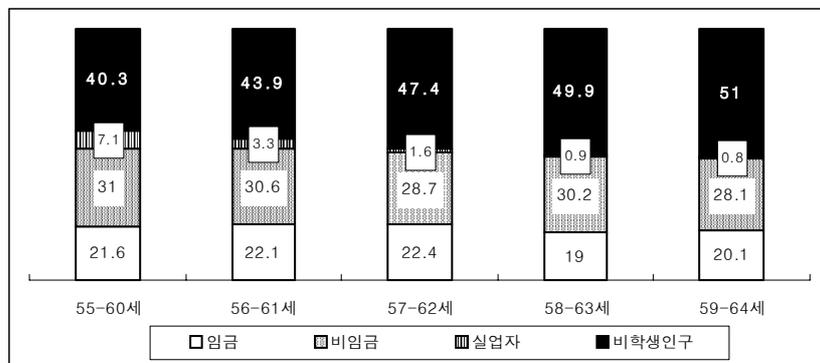
(단위: %)



안 26.2%에서 5.7%로 20.5%p나 감소하였으나 비학생인구는 6.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학생인구가 증가한 것은 청년층 일자리 부족 현상 때문이거나 고시, 취업준비 등 기타 사유로 노동시장에서 벗어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특히 24~29세에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연령대가 여성의 경우 결혼 적령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결혼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7) 55~60세 연령 cohort별 경황 상태

(단위: %)



[그림 6-7]은 1998년 1차조사 당시 55~60세이던 연령집단을 추적하여 노동시장 이탈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취업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8년 당시 52.6%에서 2002년 59~64세에는 48.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감소 추세는 임금근로자(21.6% → 20.1%)보다는 비임금근로자(31.0% → 28.1%)의 경우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진입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당시 55~60세인 경우에 40.3%에서 2002년 59~64세의 경우 51.0%로 10.7%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취업자에서 유입된 경우보다는 실업자에서 구직단념자로 전환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취업자의 비중은 5년 사이에 4.4%p 감소한데 비해서 실업자의 비중은 6.3%p 감소했기 때문이다.

제 2 절 취업자의 특성

1. 산업·직업·인구학적 특성별 취업자의 분포

<표 6-6>과 <표 6-7>은 산업별로 노동패널 조사와 경황조사의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패널자료의 경우 1차년도 조사 당시 농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경황조사보다 연도와 상관없이 체계적으로 농림어업 종사자의 비중이 약 1%p 가량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농림어업 종사자 비중의 연도별 추이는 경황조사와 대동소이하게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공업과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을 살펴보면 변화 추이의 경우 동

<표 6-6> 노동패널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 간접자본 및서비스업)
1998	9.3	21.4	69.4
1999	8.6	22.5	68.9
2000	8.3	22.7	68.9
2001	7.6	21.2	71.2
2002	6.6	21.2	72.2

주: 농림어업에는 농업, 수렵 및 임업, 어업 등을 포함. 전기/가스수도사업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을 포함. 금융 및 부동산업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이 포함. 공공서비스업에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외국기관 등을 포함.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일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공업은 두 조사 결과 모두 200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2000년에 광공업의 비중이 22.7%까지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21.2%로 1.5%p 감소하였고 경찰조사 역시 2000년에 33.8%까지 광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2002년에 32.2%로 1.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은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반대로 200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찰조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표 6-7〉 경찰조사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단위: %)

	1차 산업 (농림어업)	2차 산업 (광공업)	3차 산업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98	10.0	32.9	57.0
1999	9.5	33.2	57.3
2000	9.2	33.8	57.4
2001	8.3	33.1	58.6
2002	7.8	32.2	60.0

주: 산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6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7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준함.

산업별 비중에 있어서는 노동패널의 결과가 경찰조사에 비해서 광공업은 10%p 가량 낮고 사회간접 자본 및 서비스업의 비중은 10%p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노동패널의 경우 경찰조사에 비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낮게 되면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게 추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1998년의 경우 노동패널의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0.2%에 이르고 있으나 경찰조사는 28.8%이며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25.4%로 나타나 노동패널 결과가 5%p 가량 높게 추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⁴⁾. 또

34) 이에 대해서는 김기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2003년 가중치』, 『매월노동동향』, 2003년 8월호 통권 제25호, 61~73쪽 참조.

다른 이유로는 경황조사가 노동패널에 비해서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이 5%p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경황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경황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임금근로자의 비중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 6-8>은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경우 회를 거듭할수록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1998 → 2002 = 20.9% → 23.2%)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농림어업직은 감소하는 양상(9.4% → 6.4%)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직은 200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1998 → 2000 → 2002 = 14.0% → 11.0% → 12.4%)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생산직은 2000년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양상(31.5% → 37.2% → 35.6%)을 보여주고 있어 대조적이다.

<표 6-8> 노동패널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20.9	14.0	24.3	9.4	31.5
1999	20.8	10.6	23.3	8.4	36.9
200	21.5	11.0	22.2	8.2	37.2
200	22.0	12.2	22.1	7.3	36.4
200	23.2	12.4	22.4	6.4	35.6

주: 전문관리직에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등을 포함. 서비스판매직에는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농림어업직에는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등을 포함. 생산직에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근로자, 장치·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노무직근로자 등을 포함.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표 6-9>를 통해서 노동패널 조사와 경황조사의 직업별 종사자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노동패널 조사가 농림어업직을 제외하고 2~3%p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별 추이를 비교했을 때 언급하였듯이 노동패널 조사의 경우 농가가구를 제외하고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설계가 이루어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둔다면 두 비교 자료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연도별 변화 추이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5개년 동안 거의 동일한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동시에 직업별 비중의 크기에 있어서도 두 조사 결과, 전문관리직의 2002년도 결과를 제외하고 생산직 > 서비스·판매직 > 전문관리직 > 사무직 > 농림어업직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2002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산업·직업 및 인구학적 특성별로 취업자의 분포를 <표 6-10>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업별로

<표 6-9> 경활조사의 직업별 취업자 분포 비교 : 1998~2002년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1998	18.8	12.4	23.6	11.5	33.7
1999	19.1	11.3	23.7	10.7	35.1
2000	18.9	11.6	23.8	10.0	35.7
2001	20.9	12.1	25.6	9.2	32.2
2002	21.0	12.2	25.2	8.5	33.1

주: 직업분류의 변경에 따라서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제4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5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준함. 단, 연도별 비교를 위해 제4차 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 중에서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제시함.

<표 6-10>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 분포

(단위: %)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산업	농림어업	0.9	19.1
	광공업	25.9	12.3
	건설업	10.7	4.7
	전기/가스 및 수도업	6.7	5.7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8	41.8
	금융 및 부동산업	14.3	5.8
	공공서비스업	22.8	10.8
직업	전문관리직	25.8	14.2
	사무직	16.0	3.3
	서비스판매직	14.8	39.8
	농어업직	0.7	18.9
	생산직	42.7	23.8

〈표 6-11〉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산업 분포 : 2002년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도업	도소매/ 음식숙박업	금융 및 부동산업	공공 서비스업
성 별	남 성	6.5	23.1	13.6	9.1	21.5	11.5	14.7
	여 성	7.6	18.9	1.5	2.4	33.5	11.4	24.8
연 령	15~19세	0.0	22.9	0.0	1.7	36.0	9.8	29.5
	20~29세	1.0	20.9	4.4	5.3	25.2	15.2	27.9
	30~39세	1.2	25.8	9.1	6.2	26.8	12.8	18.1
	40~49세	4.3	24.6	10.0	7.8	28.3	8.7	16.3
	50~59세	12.6	16.2	11.6	7.1	24.5	9.7	18.2
	60세이상	36.5	7.5	7.6	3.1	22.7	12.1	10.6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18.1	21.4	10.8	4.5	28.1	5.8	11.3
	고 졸	3.1	26.3	10.0	7.4	30.2	11.1	12.0
	대재중퇴	1.3	16.0	6.0	6.7	27.4	12.3	30.3
	전문대졸	1.6	19.4	5.6	7.5	24.7	16.2	25.0
	대졸이상	0.5	14.2	5.1	6.7	16.9	18.4	38.2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광공업 종사자의 비중이 25.9%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전기·가스 및 수도업이 22.8%,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8%, 금융 및 부동산업이 14.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4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공업 종사자는 12.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생산직의 비중이 4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전문관리직 25.8%, 사무직이 16.0%, 서비스·판매직이 14.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서비스근로자가 약 40%를 차지한 반면, 사무직의 비중이 3.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취업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1〉은 취업자의 산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광공업에 23.1%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나, 여성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33.5%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농림어업에는 50대 이상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광공업에는 40대 이하의 모든 연령층이 20% 이상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도

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15~19세 종사자가 전년도의 36.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문관리직은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보여주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을 비롯하여 서비스·판매직, 생산직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6-12〉 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직업별 분포

(단위: %)

		전문관리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직	생산직
성 별	남 성	23.0	9.7	16.8	6.3	44.3
	여 성	20.6	15.0	32.0	7.3	25.1
연 령	15~19세	21.5	22.5	33.0	0.0	23.0
	20~29세	33.5	25.2	20.2	0.6	20.6
	30~39세	26.9	14.2	21.3	1.2	36.3
	40~49세	19.3	7.6	26.5	4.2	42.3
	50~59세	13.9	5.5	23.4	12.3	44.9
	60세이상	7.0	0.9	20.4	35.5	36.1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3.0	2.3	25.8	17.8	51.1
	고 졸	12.8	13.0	27.4	2.8	43.9
	대재및중퇴	25.9	20.5	27.0	0.5	26.1
	전문대졸	35.6	22.1	20.0	1.4	20.8
	대졸이상	61.2	17.5	11.0	0.6	9.7

〈표 6-12〉는 취업자의 직업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분포에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부문은 서비스·판매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가량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서, 생산직의 비중은 남성이 20%p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전문관리직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2.4%p로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의 경우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지만, 20대에서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전문관리직의 비중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졸 미만의 경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경우 3.0%에 불과하지만, 대졸 이상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61.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취업자의 구직 활동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 직장의 지속여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묻고 있으며, 부업을 원하거나 전직을 원한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경우에는 취업상태에서의 구직여부를 묻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직방법, 구직기간, 구직이유, 희망 수입 등을 묻고 있으며, 비구직자에게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표 6-13〉 취업자의 현직장 지속여부

(단위: %)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	현재의 일자리에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함	일을 완전히 그만두고 싶음	현재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다른 일자리를 원함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음
1차(98년)	73.5	8.8	4.7	2.7	10.2
2차(99년)	77.8	10.6	4.9	1.4	5.3
3차(00년)	82.6	8.7	3.8	0.9	4.0
4차(01년)	83.8	6.4	3.7	1.3	4.8
5차(02년)	85.2	5.7	3.0	0.9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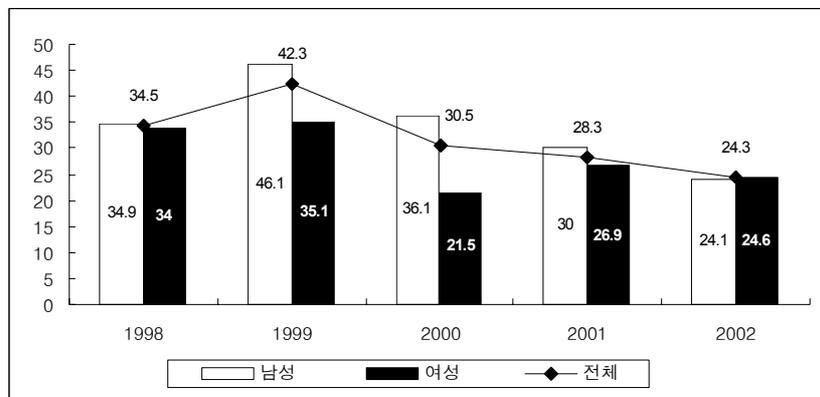
먼저 취업자의 현 직장의 지속여부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표 6-13>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주로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일하기를 원함’이라는 응답은 1차년도(73.5%)부터 5차년도(85.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일자리로 바꾸고 싶다’라는 응답은 1차년도 10.2%에서 5차년도 5.2%로 감소하였다. 다만, 2002년 들어서 이에 대한 응답이 전년도에 비해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중 구직을 희망하는 사례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패널조사는 부업을 원하거나 전직을 원한다고 응답한 취업자에 한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는데, [그림 6-8]은 이들 중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이 설문항목에 대한 조사를 위해

취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주로 하는 일의 지속 여부에 대한 본인의 계획’을 묻고 있으며,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항목 중 ‘현재의 일에 추가하여 다른 일을 가지고 싶다’(부업희망자)고 응답하거나 ‘다른 일로 바꾸고 싶다’(전직희망자)고 응답한 대상자에 한하여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구직 여부를 묻고 있다.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1999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서 취업중 구직희망자의 비중이 높으나 그 정도는 점차 감소해 왔으며 2002년도 5차조사의 경우 남녀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전직에 대해서 좀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곧 불만이 있더라도 현 직장을 유지하려는 추세가 남성의 경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6-8) 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중 비교 : 1998~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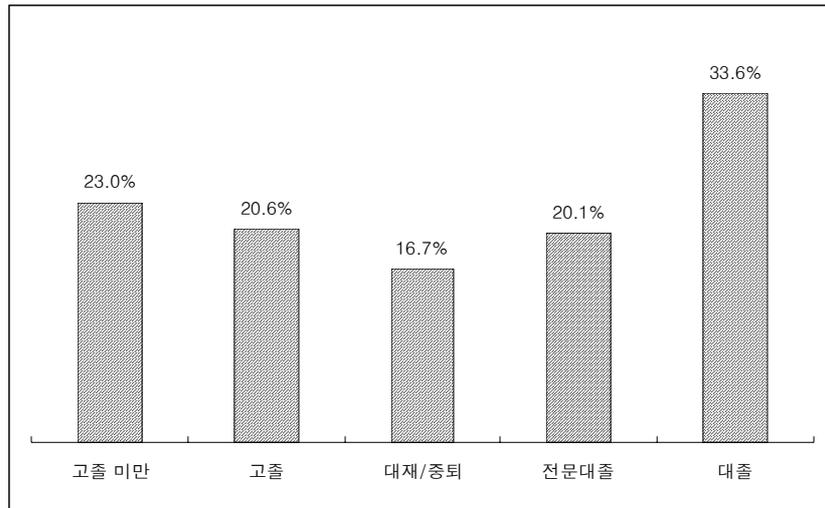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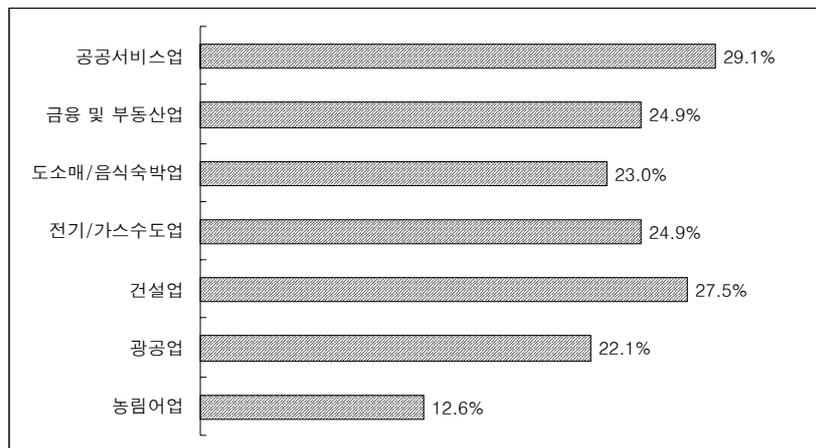
이어서 2002년도의 결과를 중심으로 직업·산업별 혹은 교육수준별로 취업자의 구직희망자의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그림 6-9]를 통해 교육수준별 취업 중 구직희망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대졸자들의 구직희망자 비중이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재/중퇴의 경우가

16.7%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대졸자들의 구직희망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직 기회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며 전직의 가능성도 고학력자들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그림 6-9] 교육수준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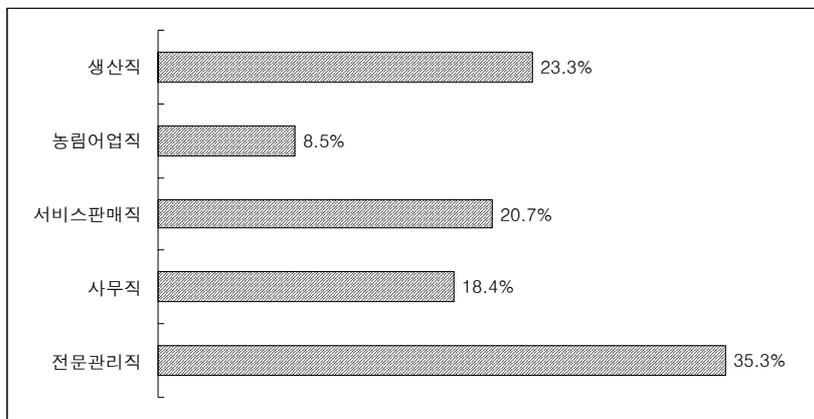
[그림 6-10] 산업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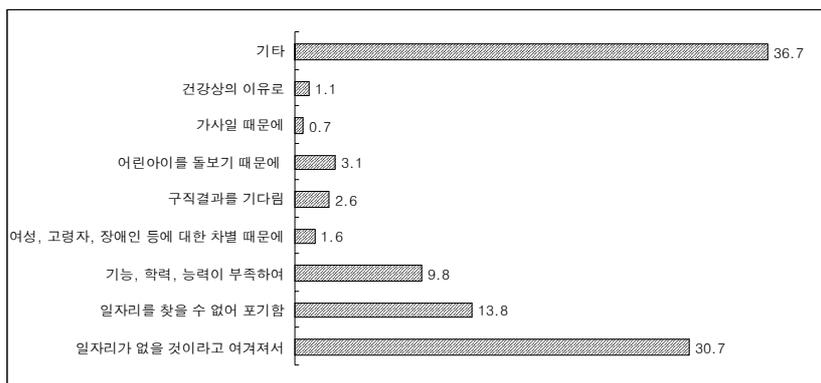
이어서 [그림 6-10]과 [그림 6-11]은 산업 및 직업별로 취업 중 희망구직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의 비중(12.6%)이 가장 낮고 공공서비스업의 비중(29.1%)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의 경우 35.3%로 가장 높고 역시 농림어업직의 경우 8.5%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교육수준별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직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 및 직업 종사자들의 경우 현 일자리에서 벗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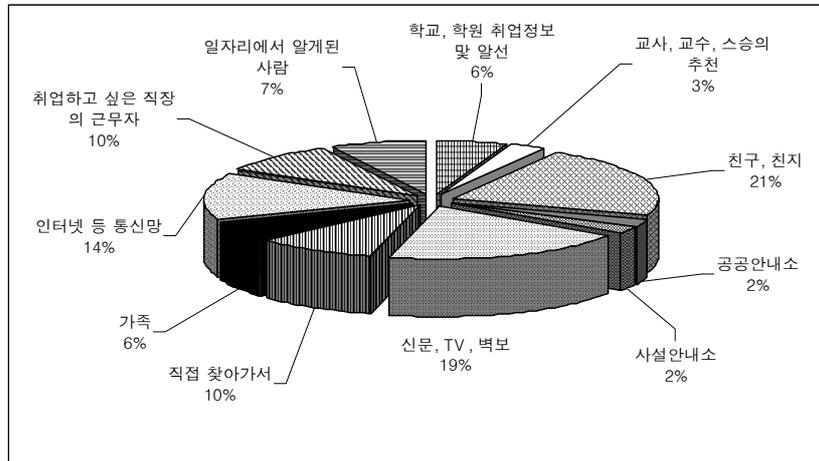
[그림 6-11] 직업별 취업 중 구직활동 여부 비교 : 2002년



[그림 6-12] 취업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 2002년



[그림 6-13] 취업 중 구직 방법 : 2002년



고 싶을 경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림 6-12]는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서’와 ‘일 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했다는 응답이 각각 30.7%와 13.8%로 실망으로 인한 구직포기에 해당하는 비중이 약 44.5%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기능, 학력, 능력 부족’으로 인한 구직포기도 9.8%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13]은 취업자들이 전직을 위해 사용하는 구직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최대 3개까지의 구직방법에 대한 복수응답을 기초로 분석(Multiple Response Analysis)한 결과, 비공식적인 방법인 친구 및 친지를 이용한 경우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식적인 방법인 신문 및 TV나 벽보 등을 이용한 경우가 19%, 인터넷이나 통신을 이용한 경우가 14%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직방법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은 다음 절에서 미취업자의 구직방법을 다룰 때 소개하고자 한다.

제 3 절 미취업자의 특성

1. 구직활동 및 취업 가능성, 비구직 이유

<표 6-14>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각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성별과 상관없이 구직희망자의 비중이 회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8년 당시 지난주 구직을 했다는 응답 비중이 25.7%에서 2002년 5차조사의 경우 7.8%로 17.9%p나 감소하였으며 여성의 경우는 동기간동안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볼 때, 연도와 상관없이 남성이 여성보다 미취업자의 구직희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1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비중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5>는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가능성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미취업자의 취업 용이성 여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지난주 혹은 지난 1개월간 한 번이라도 구직활동 한 경우,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었다면 지난주에 일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일할 수 없었다'라고 응답한 미취업자의 비중

<표 6-14>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여부 : 1998~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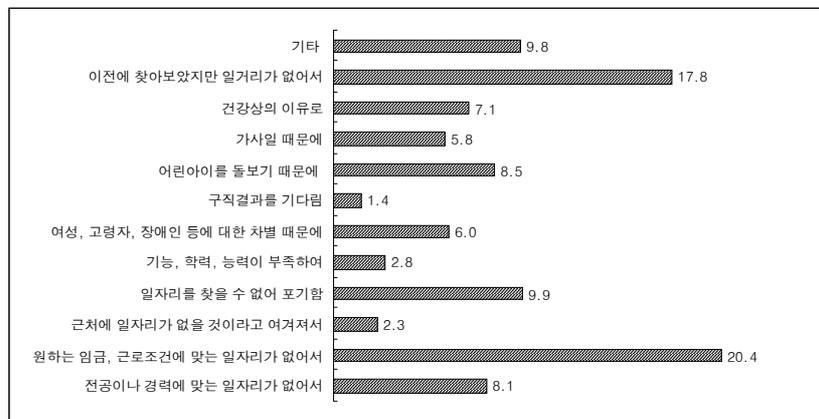
	남 성			여 성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 안함	지난주 구직함	지난주 아니지만 1개월 이내 구직함	지난 1개월 이내 구직안함
1998	25.7	5.4	68.9	12.1	4.2	83.7
1999	13.7	2.6	83.7	5.2	1.4	93.4
2000	9.1	1.4	89.4	3.6	1.1	95.3
2001	8.9	1.2	90.0	3.3	1.4	95.3
2002	7.8	1.3	90.8	4.9	1.0	94.1

〈표 6-15〉 미취업자의 지난주 취업 가능성 여부 : 1998~2002년

(단위: %)

	일할 수 있었다	일할 수 없었다
1차년도	82.3	17.7
2차년도	88.7	11.3
3차년도	86.9	13.1
4차년도	81.3	18.7
5차년도	70.3	29.7

〔그림 6-14〕 미취업 중 비구직 이유 : 2002년



은 1998년 17.7%에서 1999년 11.3%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 13.1%, 2001년에 18.7%, 2002년도에는 29.7%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그림 6-14]는 2002년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비구직 이유를 분석한 결과이다. ‘원하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여겨져서’라는 응답이 20.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중도 17.8%에 이르고 있다. 실망으로 인한 구직 포기의 비중을 살펴보면 58.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자중 구직희망자와 비교해 볼 때 14.0% 가량 높은 수치로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들 중 많은 수가 개인적 이유보다는 경기 여건이나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취업을 단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인적인 사유 중에서는 ‘어린이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란 응답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상의 이유’로가 7.1%,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때문’이란 응답도 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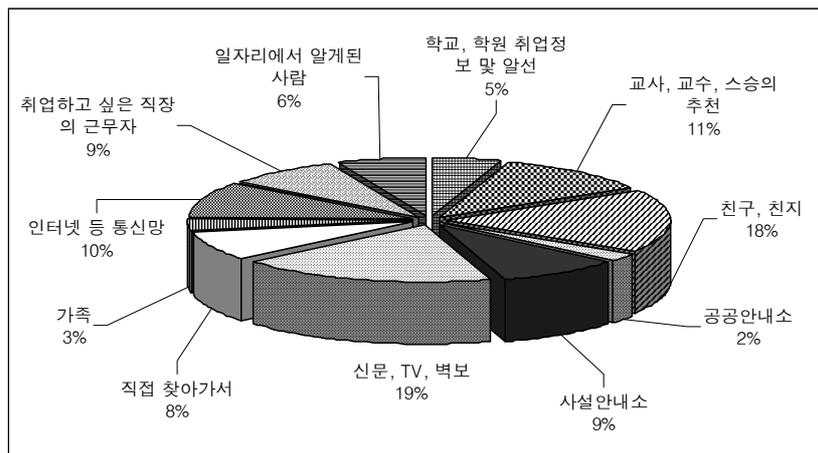
2. 구직방법 및 구직기간, 구직시 어려움

구직방법은 구직자들이 직업탐색과정에서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는지와 연관된다. 2002년 노동패널조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최대 3개까지 사용한 구직방법을 기재하도록 조사하였다.

[그림 6-15]는 미취업자의 구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비공식적인 방법인 신문 및 TV, 벽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19%로 가장 높고 친구, 친지를 이용하는 경우도 1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교수, 스승의 추천이 11%,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10%, 취업하고 싶은 직장의 근무자를 만나서가 9%, 사설직업안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좀더 분석적으로 미취업자들이 구직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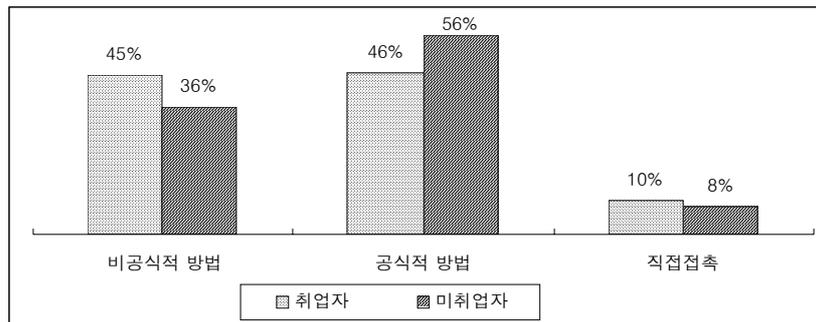
(그림 6-15) 미취업자의 구직 방법 : 2002년



결망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구분법³⁵⁾이 공식적 구직방법, 비공식적 구직방법, 직접접촉 등으로 구분하여 미취업자와 취업자간에, 미취업자의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하며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경우 새로운 구분법³⁶⁾인 사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제도적 연결망을 이용한 방법, 직접지원 등으로 구분한 결과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그림 6-16]과 [그림 6-17]은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을 비교해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구직의 비중이, 미취업자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구직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직장 경험이 있거나 취업 중인 사람의 경우 직업세계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이나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용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의 양과 질에 있어서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미취업자의 경우에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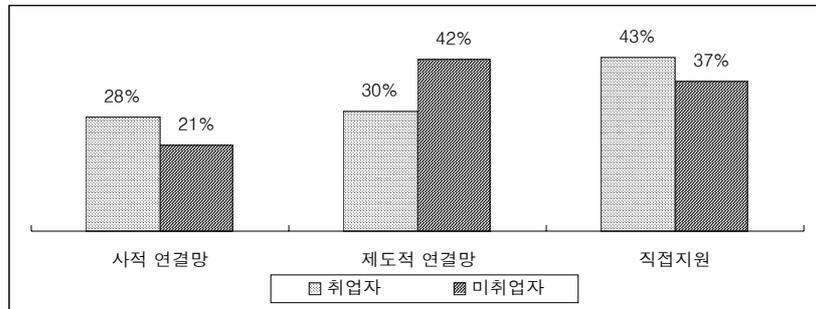
(그림 6-16)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비교(비공/비공식) : 2002년



35) 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학교·학원·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이용 등이 해당된다. 비공식적 채널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친지의 소개’,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직접접촉’이라 함은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36) 사적 연결망에 의한 구직방법으로는 ‘가족의 소개’나 ‘친구, 친지의 소개’ 등이 포함되며 제도적 연결망에 의한 구직방법은 ‘학교의 추천’이나 ‘교사·교수·스승의 소개’, ‘공·사설 직업안내소’, ‘취업하고 싶은 일자리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전일자리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을 통해’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직접 지원은 ‘신문,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인터넷, 통신의 이용’ 및 ‘일하고 싶은 곳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림 6-17]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비교(사적/제도적) : 2002년



대적으로 취업자에 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접촉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구분법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경우 사적 연결망의 비중이 높게, 미취업자의 경우 제도적 연결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직과정에서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적 연결망과 제도적 연결망은 구분되는데, 전자는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것인데 비해 후자는 학교, 공공 및 사설 취업안내기관 혹은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체 등 조직에 본인이 참여하거나 접촉을 통해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학생, 주부, 취업준비생 등이거나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므로 학교추천이나 취업알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더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에 비해서 제도적 연결망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결과는 이를 확인케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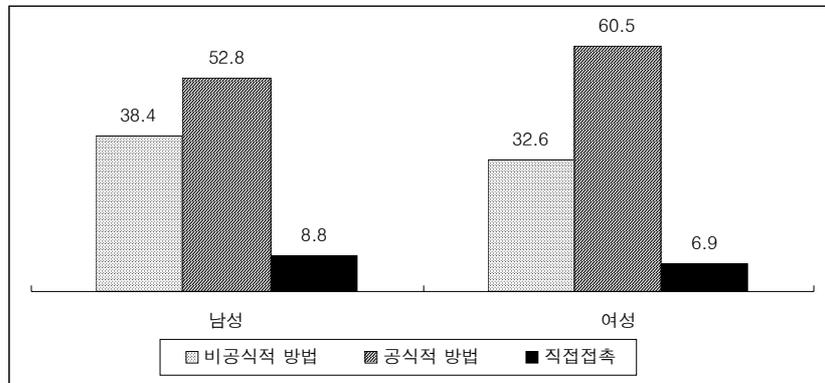
이어서 [그림 6-18]에서 [그림 6-19]까지는 일반적인 구분법에 따라 인구학적 특성별로 구직방법의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성별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관계없이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비공식적 방법, 직접접촉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서 비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비중이 5.8%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공식적인 방법의 경우에는 여성이 7.7%p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사회적 연결망 혹은 사회적 자본의 크기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남성

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적기 때문에 풀이해 볼 수 있는데 비공식적 방법이 취업 성공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9]를 통해 연령별 구직방법의 비중을 살펴보면, 20세 미만을 제외하고 비공식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연령층의 증가와 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대의 경우 공식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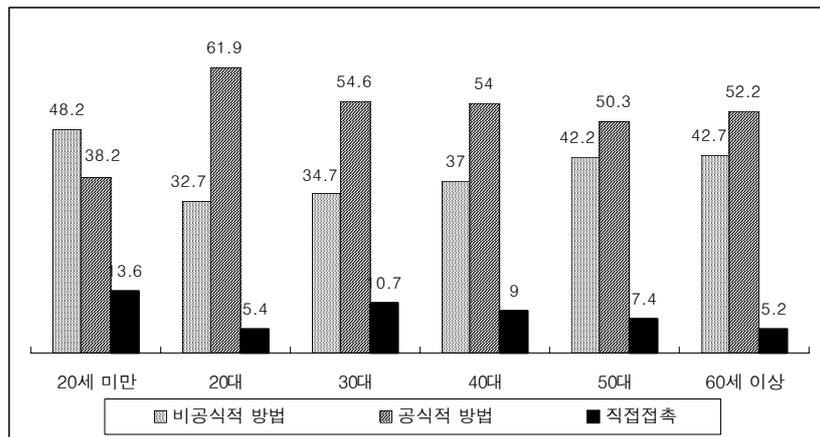
[그림 6-18] 성별 미취업자의 구직방법 : 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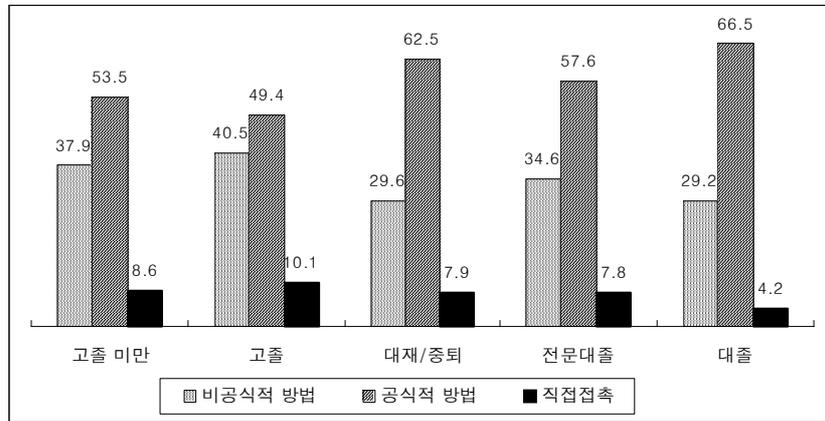
[그림 6-19] 연령별 구직방법 : 2002년

(단위: %)



(그림 6-20) 교육수준별 구직방법 : 2002년

(단위: %)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 미만과 30대의 경우 직접접촉에 의한 구직방법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 구직방법을 살펴보면 [그림 6-20]과 같다.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공식적인 구직방법이 많이 이용되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비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한 구직방법이 보다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표 6-16>은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비중을 보여

<표 6-16>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 희망하는 고용형태 : 1998~2002년

(단위: %)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1998	88.8	11.2
1999	79.2	20.6
2000	81.7	18.3
2001	88.2	11.1
2002	88.5	11.5

주: 희망하는 고용형태 중에서 가족종사자는 제외함. 1999년 0.2%를 제외하고 가족종사자를 희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음.

〈표 6-17〉 연도별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 1998~2002년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1998	69.7	30.3
1999	83.8	16.2
2000	84.8	15.2
2001	83.7	16.3
2002	84.3	15.7

주고 있다.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고용형태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1999년과 2000년에 10% p 가량 낮게 추정되고 있으나 2001년부터는 88% 이상으로 1998년도의 임금근로자 비중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일 경우,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질문하였다. 〈표 6-17〉을 통해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1998년)를 제외하고 80% 이상이 전일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의 경우 미취업 구직자의 30% 가량이 시간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되며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미취업 구직자의 1/3 가량은 전일제 일자리 취업을 고집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6-18〉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 고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령이 적을수록 임금근로자를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반면, 40대의 연령층의 경우 이러한 비중이 73.8%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 및 중퇴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9〉에서는 인구학적 특성별로 미취업 구직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미처 정규학교과

정을 마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10대의 경우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28.6%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도 대졸 및 중퇴의 경우 52.9%가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8〉 인구학적 특성별 미취업 구직자의 희망고용형태 : 2002년

(단위 : %)

		임금근로자	고용주 및 자영업자
성 별	남 성	86.1	13.9
	여 성	89.8	10.2
연 령	15~19세	100.0	0.0
	20~29세	92.4	7.6
	30~39세	85.3	14.7
	40~49세	73.8	26.2
	50~59세	90.0	9.1
	60세이상	100.0	0.0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87.6	12.4
	고 졸	85.4	14.6
	대재밋중퇴	94.3	5.7
	전문대졸	87.6	12.4
	대졸이상	89.8	10.2

〈표 6-19〉 미취업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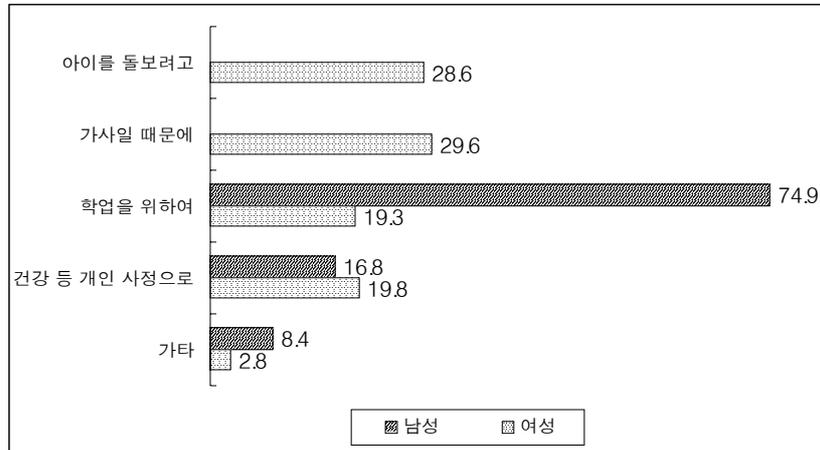
(단위 : %)

		전일제	시간제
성 별	남 성	92.6	7.4
	여 성	73.5	26.5
연 령	15~19세	71.4	28.6
	20~29세	88.3	11.7
	30~39세	80.6	19.4
	40~49세	78.9	21.1
	50~59세	80.5	19.5
	60세이상	87.3	12.7
교 육 수 준	고졸미만	85.6	14.4
	고 졸	80.5	19.5
	대재밋중퇴	47.1	52.9
	전문대졸	100.0	0.0
	대졸이상	93.2	6.8

주 :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32명은 분석에서 제외

[그림 6-21] 시간제 근로 희망 이유

(단위: %)



마지막으로 [그림 6-21]은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이유를 성별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경우 학업을 위하여가 74.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 학업이나 건강 등 개인 사정 보다는 육아나 가사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각각 28.6%, 29.6%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 7 장

임금근로자의 특성

본 장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임금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지난조사와 마찬가지로 취업시작 시기 및 종료 시기, 산업·직업, 기업의 형태 및 규모, 고용형태와 근로계약 유무 및 기간, 근로시간 형태,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및 임금, 사회보험 가입여부 및 수급현황, 노동조합 관련 사항 등이 조사되고 있다.

<표 7-1>에서는 1~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본 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임금근로자의 수가 제시되어 있다. 1차년도 조사에서 파악된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62.4%인 4,012명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64.7%(4,014명), 3차년도에는 65.2%(3,742명), 4차년도에는 67.3%(3,8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차년도 조사에서는 68.1%에 해당하는 3,975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7-1> 각 연도별 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2년

(단위:명, %)

	표 본 수	취업자 대비 임금근로자		
		전 체	남 성	여 성
1차년도	4,012	62.4	64.1	59.8
2차년도	4,014	64.7	65.1	64.2
3차년도	3,742	65.2	65.7	64.7
4차년도	3,846	67.3	67.7	66.7
5차년도	3,975	68.1	67.9	68.5

제 1 절 고용형태

본 절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다양한 고용형태와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사상 지위는 크게 상용직·임시직·일용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고용형태는 근로계약유무나 근로시간, 정규/비정규 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근로계약유무 및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형태의 특성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의 유무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진 후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기간과 계약의 반복·갱신여부를 묻고 있다. 먼저 근로계약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이 있다’(이하 유기계약)는 응답이 약 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2> 참조). 유기계약의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차 조사당시 4.4%에서 IMF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컸던 2차 조사에 이르러 5.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2〉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 유무 비교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무기계약	유기계약	무기계약	유기계약	무기계약	유기계약
1차	95.6	4.4	95.9	4.1	95.2	4.8
2차	94.3	5.7	95.0	5.0	93.2	6.8
3차	94.4	5.6	94.5	5.5	94.4	5.6
4차	94.5	5.5	94.2	5.8	95.0	5.0
5차	95.0	5.0	95.6	4.4	94.3	5.7

주: 모름/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

다음으로 근로계약 유무를 성별로 살펴보면, 5차년도 조사에서 여성(5.7%)이 남성(4.4%)에 비해 유기계약자의 비중이 1.3%p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남녀 모두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기계약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살펴보면 <표 7-3>과 같다. 먼저 5차년도 조사결과 파악되고 있는 평균계약기간은 2년 3개월이며, 이중 남성(2년 11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계약기간이 11개월 가량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을 범주별로 살펴보면 계약기간이 '1~2년

<표 7-3> 근로계약 평균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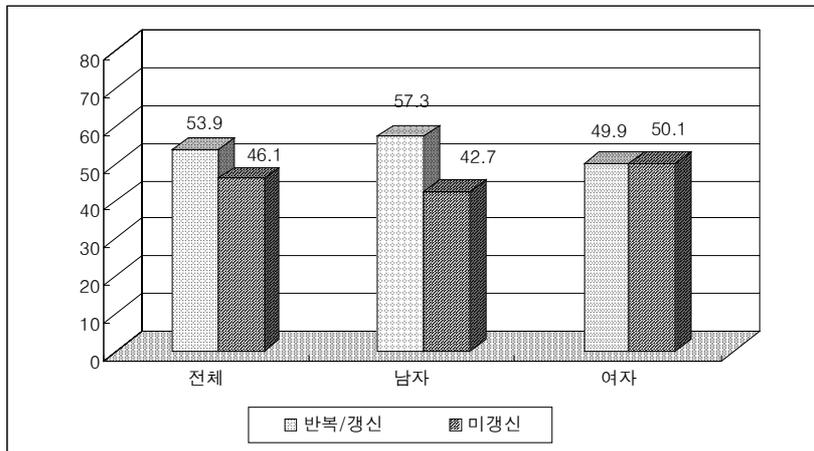
(단위: %, 개월)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6 개 월 미 만	18.4	15.0	20.2
6개월~1년 미만	9.5	5.9	13.7
1년~2년 미만	53.6	56.6	50.1
2 년 이 상	19.5	22.5	16.0
평균계약기간	27	35	20

주: 유기계약자 중 근로계약 '무응답자'는 1개월 미만자로 간주, 0개월로 처리.

(그림 7-1) 유기계약자들의 근로계약기간 계약 반복·갱신 여부

(단위: %)



미만'인 근로자가 50%를 넘는 가운데, 여성의 경우는 '6개월 이하'와 '6개월~1년 미만'의 근로계약자의 비중이 남성의 비중 대비 1.6배 정도 높은 반면, 남성은 '1년~2년 미만', '2년 이상' 근로계약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림 7-1]을 통해 유계약자들 중 근로계약 반복 및 갱신이 이루어지는 비중을 살펴보면, 유계약자들의 53.9%가 근로계약을 반복 및 갱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히, 남성(57.3%)이 여성(49.9%)보다 근로계약 갱신 비중이 7.4%p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종사상 지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종사상 지위를 규정할 때 부가급여 수혜 여부와 같은 근로조건이나 일자리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고용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한국노동패널에서의 세부적인 정의는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②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는 상용직 근로자로,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②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이다)는 임시직 근로자로, 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②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③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다.

<표 7-4>는 각 연도별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지위 분포를 보여 주고 있다. 5차년도의 조사 결과, 상용직근로자의 비중이(78.5%) 가장 높은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각각 11.2% 와 10.3%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난 조사년도와 비교해보면, 2차년도 조사당시 73.6%였던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차년도에 78.5%로 IMF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의 종사상 지위 변동이 매우 활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차년도 조사당시 여성 상용직의 비중(66.6%)은 남성(78.4%)에 비해 약 11.8%p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상용직의 증가 추세만을 놓고 볼 때 여성이 남성을 앞지르고 있어 2002년 조사에서 성별간 격차가 7.2%p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 완화는 전체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활성화 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인력 필요와 활용 증대가 여성 상용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7-4>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비교 (1~5차)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임시	일용
1차	80.7	9.7	9.6	83.8	7.2	9.0	75.4	14.0	10.7
2차	73.6	14.6	11.8	78.4	10.3	11.3	66.6	21.2	12.5
3차	77.4	11.9	10.7	81.0	7.8	11.2	71.7	18.3	10.1
4차	78.4	11.7	9.9	82.3	7.5	10.2	72.5	18.1	9.5
5차	78.5	11.2	10.3	81.4	7.3	11.3	74.2	17.0	8.8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를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살펴보면 <표 7-5>와 같다. 먼저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용직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의 비중은 '15~19세(30.2%)'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데 비해, '40대(9.3%)'의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은 '60세 이상(31.2%)'이 가장 높고 '20대(2.9%)'에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고학력일수록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계층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90%를 넘는데 비해, 고졸과 중졸은 각각 79.5%와 58.4%로 학력간 종사상 지위 구성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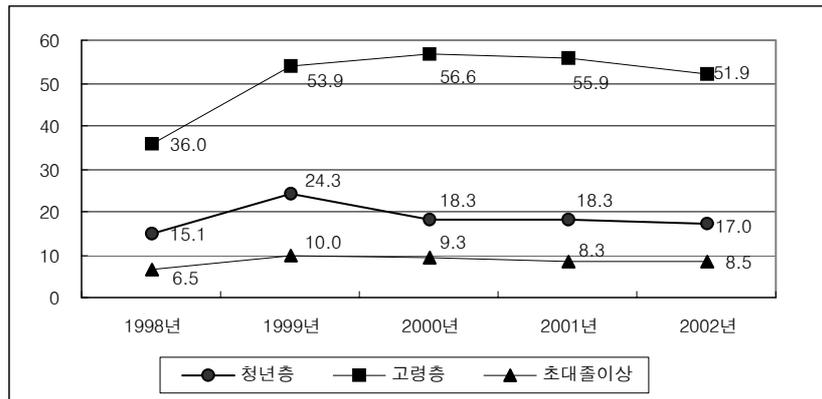
〈표 7-5〉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100.0	77.4	11.2	10.7
연 령	15~19세	1.1	58.6	30.2	11.1
	20~29세	23.5	83.9	13.2	2.9
	30~39세	30.2	84.2	8.6	7.2
	40~49세	26.0	76.5	9.3	14.2
	50~59세	13.9	69.9	12.3	17.8
	60세이상	5.2	48.1	20.7	31.2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23.9	58.4	16.3	25.3
	고 졸	36.9	79.5	10.1	10.4
	대학재학	4.7	65.0	25.5	9.5
	전문대졸	11.3	91.2	6.9	2.0
	대졸이상	23.1	91.9	7.1	1.0

[그림 7-2] 연령·학력별 임시·일용직의 추이 : 1998~2002년

(단위: %)



[그림 7-2]는 지난 5년간의 임시·일용직의 추이를 연령 및 학력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층은 2차년도 조사 당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24.3%에 이르고 있으나, 3차년도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차년도 조사당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36%수준이었으나 3차년도에는 20%p 이상 증가한 56.6%에 이르렀으며, 5차년도에는 51.9%를 나타내었다. 이는 최근 정리해고 및 조기퇴직으로 인해 정년이 줄어들어 따라 고령자들

의 취업기회 자체가 적은데다가 취업을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 등과 같은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하게 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전문대를 포함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계층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지난 5년 동안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력간 종사상 지위의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6〉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사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

(단위: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100.0	78.0	11.2	10.8
산업별	농 립 어 업	0.8	33.0	14.5	52.5
	제 조 업	26.0	85.8	9.0	5.2
	건 설 업	10.6	40.2	8.4	51.4
	전기 가스 수도업	6.7	93.5	4.2	2.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18.0	77.3	15.5	7.2
	금융 및 부동산업	5.9	91.6	8.4	-
공 공 서 비 스 업		32.0	80.5	13.3	6.2
직업별	전 문 관 리 직	25.8	92.0	7.6	0.4
	사 무 직	16.1	91.1	8.1	0.8
	서 비 스 직	15.8	73.0	19.4	7.7
	농 립 어 업 직	0.7	32.0	28.0	39.9
	생 산 직	41.6	66.7	11.5	21.8
사업체종류	민 간 회 사	76.6	80.8	10.6	8.7
	외 국 인 회 사	0.8	93.3	-	6.7
	공 기 업	4.0	82.9	13.7	3.4
	법 인 단 체	4.3	83.8	13.8	2.4
	정 부 기 관	8.0	90.7	6.5	2.9
	기 타	6.4	18.3	22.8	59.0
사업체 규모	1 0 인 미 만	32.6	71.9	15.7	12.4
	1 0 - 4 9 인	28.7	83.3	9.1	7.6
	5 0 - 9 9 인	9.0	87.5	8.2	4.3
	1 0 0 - 4 9 9 인	11.9	90.1	8.1	1.8
	5 0 0 인 이 상	17.8	91.5	6.8	1.9

주: 1) 산업별 분류에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도소매·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금융 및 부동산업 :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공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방송 공공사업,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업분류 불가 및 결측은 생략
 2) 직업별 분류에서 군인, 분류 불가 및 결측은 생략

<표 7-6>은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사업체 특성별 종사상 지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근로자의 경우는 ‘금융 및 부동산업’(91.6%)과 ‘전기·가스 수도업’(93.5%)에서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임시직의 비중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5.5%)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는 ‘농림어업’과 ‘건설업’에서 50% 이상 차지하였는데, 이들 산업의 특성상 한시적으로 많은 인력의 동원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맞게 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의 약 40%정도에 해당하는 생산직근로자 중에서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약 33%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의 과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에도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27%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종류별로 종사상 지위의 구성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업체 비소속) 혹은 기타 업체에 소속되었다는 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18.3%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는 평균을 상회하는 상용직 보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회사와 정부기관은 상용직의 비중이 90%를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종업원 규모 10인 미만의 사업체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71.9%에 그치고 있지만, 500인 이상 대기업에 이르면 이보다 1.3배 정도 높은 수준인 9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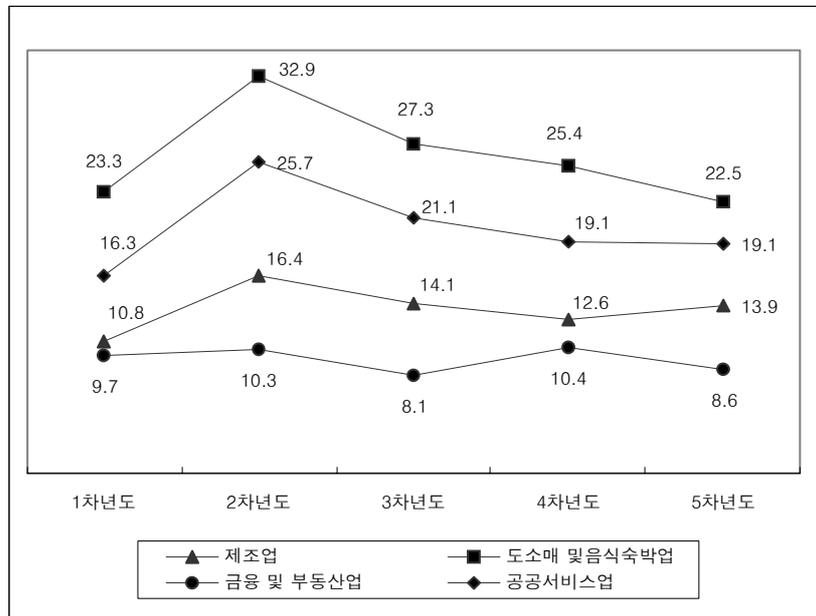
임시·일용직의 비중을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그림 7-3]과 같다. 먼저 제조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2차년도에 16.4%까지 증가하였으나, 3차년도 14.1%, 4차년도 12.6%로 감소하다가 5차년도에는 1.3%p로 증가한 13.9%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공공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차년도에 임시·일용직 비중이 각각 32.9%, 25.7%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하여 5차년도에는 각각 22.5%, 1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의 경우 IMF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의 일시적 충격으로 인해 임시·일용직의 수요가 컸던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경제충격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기술의 도입 등으로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이 형성되면서 이들 고용형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7-3]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시·일용직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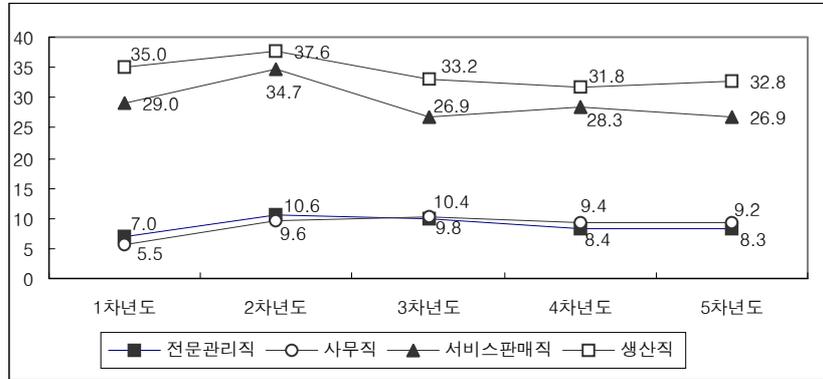


주: <표 7-6>의 분류 참조.

다음으로 직업별 종사상 지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7-4]와 같다. 먼저 임시·일용직의 절대적 비중은 1~5차년도 기간동안 생산직과 서비스판매직이 전문관리직 및 사무직에 비해 약 4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비스판매직의 경우 연도간 임시·일용직의 변동이 다른 직종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경기에 매우 민감한 이들 직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7-4] 직업별 입시·일용직의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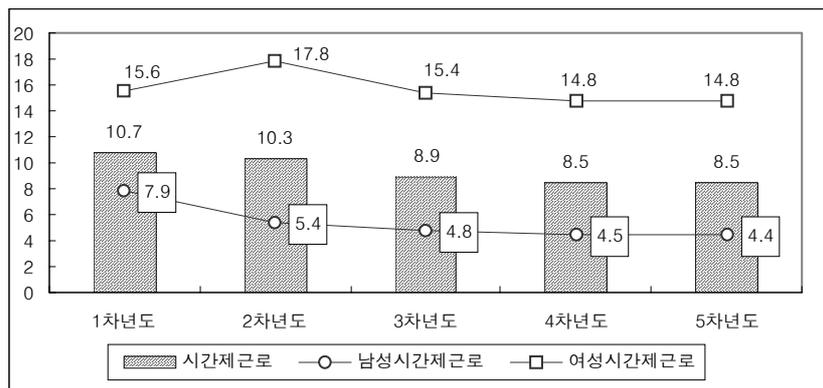


3. 시간제/전일제 근로

임금근로는 근로시간 형태에 따라 시간제와 전일제로 구분할 수 있다. KLIPS에서는 ①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②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는 경우 또는 ③ 임금이 시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를 시간제 근로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전일제로 규정하여 응답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7-5] 1~5차년도 시간제근로의 비중 : 1998~2002년

(단위: %)



먼저 시간제 근로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7-5]와 같다. 임금 근로 중에서 시간제 근로의 비중은 1차년도 10.7%에서 2차년도 10.3%, 3차년도 8.9%, 4차년도 8.5%, 5차년도 8.5%로 지난 5년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편, 여성의 시간제 비중은 1차년도에 15.6%로 관찰되고 있으나, 이후 그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전체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에 약 1.7배 정도 높은 1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표 7-7>을 통해 연령 및 교육수준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 분포의 추이가 앞서 살펴본 임시·일용직의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연령별로는 '15~19세'와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시간제 근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수준별로는 '대학재학'의 경우에 시간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5~19세'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가 높으며, '60세 이상'은 소일거리 등으로 시간제 근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재학생의 경우에도 아르바이트로 인한 시간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7-7>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시간제·전일제 근로

(단위: %)

		시 간 제			전 일 제			전 체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8.7	4.4	14.9	91.3	95.6	85.1	100.0
연령	15~19세	33.6	47.3	25.2	66.4	52.7	74.8	1.2
	20~29세	8.6	7.3	9.7	91.4	92.7	90.3	23.5
	30~39세	8.0	2.4	19.3	92.1	97.6	80.7	30.2
	40~49세	8.6	3.4	16.3	91.4	96.6	83.7	26.0
	50~59세	6.7	2.7	14.2	93.4	97.3	85.8	14.0
	60세이상	14.4	12.2	18.0	85.6	87.8	82.0	5.2
교육수준	중졸이하	11.4	5.4	17.5	88.6	94.6	82.5	23.9
	고졸	8.2	4.0	14.6	91.8	96.0	85.4	37.0
	대학재학	29.4	23.9	39.4	70.6	76.1	60.6	4.7
	전문대졸	4.0	-	8.4	96.0	100.0	91.6	11.3
	대졸이상	4.9	2.2	10.7	95.1	97.8	89.3	23.1

제 2 절 근로시간

제5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는지와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함으로써 근로시간에 대한 설문문이 종료되며,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근무시간 및 월평균 근로일수를 질문하게 된다. 또한, 초과근무시간과 관련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방식, 월평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상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설문 문항들을 근로시간의 규칙성,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으로 구분하여 각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로시간 규칙성과 정규근로시간

KLIPS 설문에서는 일자리의 규칙적 여부 선택에 있어, 일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일자리(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면 규칙적이라고 규정하고, 직장 또는 일거리 자체가 ‘있다 없다’하는 경우는 불규칙적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불규칙 일자리에 대해서는 계절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분하고 있다.

<표 7-8>은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차년도 현재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8.8%로, 4차년도에 비해 약 1.4%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9>를 통해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유무를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97.4%가 규칙적이라고 응답한데 반해, 임시직의 경우는 81.4%, 일용직의 경우는 33%만이 규칙적으로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시간 형태별로도 시간제 근로의 경우 67.0%만이 현재의 일자리에서 규칙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근로시간의 규칙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8〉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단위: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규칙적	9.7	13.3	10.1	9.8	11.2
규칙적	90.3	86.7	89.9	90.2	88.8

〈표 7-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근로시간 규칙성

(단위: %)

		전 체	불규칙적	규 칙 적
전 체		100.0	11.6	88.4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9	2.6	97.4
	임시직	11.3	18.5	81.4
	일용직	10.8	67.0	33.0
근로시간형태	시간제	8.7	33.0	67.0
	전일제	91.3	9.17	90.8

〈표 7-10〉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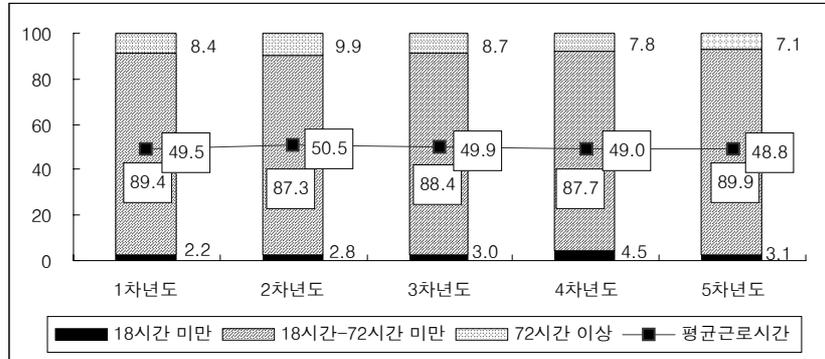
(단위: %)

		전 체	정규근로시간	
			있 음	없 음
전 체		100.0	79.5	20.5
종사상 지위	상용직	77.9	86.4	13.6
	임시직	11.3	72.5	27.5
	일용직	10.8	38.9	61.1
근로시간형태	시간제	8.7	54.3	45.7
	전일제	91.3	82.3	17.8

다음으로 5차년도 조사에서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79.5%로 4차년도 조사(80.4%)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7-10〉참조). 정규근로시간 유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의 경우 86.4%가 정규근로시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38.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자의 82.3%가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데 반해, 시간제 근로자는 54.3%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근로시간의 유무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7-6]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주: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진 응답자의 경우 주당근무시간을, 정규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에는 주평균 근무시간을 사용하여 계산함.

다음으로 [그림 7-6]을 통해 임금근로자의 평균 정규근로시간을 살펴 보면, 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 정규근로시간은 지난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차년도 조사에서는 48.8시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음으로 임금근로자의 정규근로시간을 범주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72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 역시 2차년도 약 10%에 이르고 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7.1%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당 정규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3.1%로 4차년도에 비해서는 1.4%p가 감소하였으나, 2차년도(2.8%) 및 3차년도(3.0%)와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1>은 임금근로자의 정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주당 5시간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하는 응답자의 비중도 12.4%p 더 높게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의 평균근무시간이 주당 50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길며, 법정근로시간 초과 응답자 비중은 57.1%로 나타났다.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10대이며, 30대, 40대, 60대 이상은 거의 49시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

을수록 근로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와 고졸은 주당 근무시간이 각각 51시간과 50시간으로 대졸 이상(46시간)에 비해 4~5시간 정도 평균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졸 이상의 경우 임시·일용직 비중이 시간제 근로의 비중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또한 저학력층보다 적다는 점에서 학력에 따른 근로시간 격차가 대부분 종사상지위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종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7-11>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44시간 이하	44시간 초과	주당평균 근로시간
전 체		45.6	54.4	49
성별	남 성	40.6	59.4	51
	여 성	53.0	47.0	46
연령	15~19세	45.1	54.9	44
	20~29세	45.5	54.5	48
	30~39세	49.0	51.0	49
	40~49세	43.7	56.3	49
	50~59세	42.9	57.1	50
	60세이상	44.0	56.0	49
교육 수준	중졸이하	35.5	64.5	50
	고 졸	38.9	61.1	51
	대학재학	55.5	44.5	45
	전문대졸	47.8	52.2	49
	대졸이상	64.0	36.0	46

<표 7-12>는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근로시간형태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융 및 부동산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4시간으로 가장 짧은 반면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주당근로시간은 53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4차년도 조사 결과³⁷⁾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 건설업, 전기·가스

37) 4차 주당평균근로시간(산업) : 농림어업 54시간, 광공업 50시간, 건설업 49시간, 전기·가스수도업 54시간,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51시간, 금융 및 부동산업 46시간, 공공서비스업 47시간이다.

수도업, 공공서비스업 등의 경우 주당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의 경우는 오히려 주당평균근로시간이 2시간 정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직이 53시간으로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가장 짧은 것은 전문관리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4차 조사 결과³⁸⁾와 비교해보면 농림어업직과 생산직이 상대적으로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정규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44시간 이하	44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전 체		45.6	54.4	49
산 업	농 립 어 업	36.9	63.1	50
	광 공 업	38.8	61.2	50
	건 설 업	36.8	63.2	48
	전기·가스 수도업	39.5	60.5	52
	도소매및음식숙박업	30.0	70.0	53
	금융및부동산업	71.9	28.1	44
공 공 서 비 스 업		59.3	40.7	46
직 업	전 문 관 리 직	61.6	38.4	44
	사 무 직	58.8	41.2	48
	서 비 스 직	32.2	67.8	53
	농 립 어 업 직	43.3	56.7	50
	생 산 직	35.5	64.5	51
근로시간 형 태	시 간 제	67.7	30.3	35
	전 일 제	43.5	56.5	50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일제 근로형태가 시간제 근로에 비해 주당 평균15시간 더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4차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전일제의 근로시간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시간제 근로의 경우 2001년에 비해 주당평균 2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38) 4차 주당평균근로시간(직업) : 전문관리직 45시간, 사무직 47시간, 서비스직 52시간, 농림어업직 56시간, 생산직 52시간이다.

2. 초과근로시간

임금근로자 가운데 정규근로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3,176명을 대상으로 초과근로의 유무, 초과급여 지급방식 및 월평균 초과급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13>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정규근로시간 이외에 초과로 일하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32.5%로 나타나 4차 조사 결과보다는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 근로자의 36.6%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으며,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4.6%와 5.2%만이 초과근로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1~4시간'이 초과근로임금근로자 중 35.2%로 가장 많았으며, '16시간 이상'인 경우는 8.3%로 가장 적었다. 또한, '주당 16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비중은 2차년도 조사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3>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초과근로 분포

(단위: %, 시간)

		1차	2차	3차	4차	5차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초과근로를 안함		59.9	67.0	66.6	69.0	67.4
초과근로를 함		40.1	33.0	33.4	31.0	32.5
주당 초과 근로 시간 (%)	1~4시간	27.2	34.0	30.5	34.9	35.2
	5~6시간	19.1	20.4	25.0	20.4	21.4
	7~10시간	26.1	20.7	20.1	20.1	22.3
	11~15시간	13.3	12.3	10.1	12.1	12.0
	16시간 이상	11.9	12.1	13.4	10.4	8.3
	모름/무응답	2.4	0.6	1.0	2.2	0.8
주당평균초과근로시간(시간)		8.9	8.5	8.5	8.2	7.8

마지막으로 초과급여에 대해 살펴보면, <표 7-14>와 같다. 먼저 초과급여 지급 여부를 살펴보면, 초과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 중 57.9%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그 비중은 1차년도 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초과급여 지급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간에 따라 결정 (78.2%)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과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 되는 경우도 15.3%에 달하였다. 시간 당 초과급여는 5,900원으로 4차 조사에 비해 400원정도 증가하였으며, 범주별로는 '5천원~1만원 미만'인 경우가 19.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14〉 초과근로 임금근로자의 초과급여

(단위: %, 백원)

		1차	2차	3차	4차	5차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초과급여지급 안함		54.5	54.2	45.7	43.4	42.1
초과급여지급 함		45.5	45.8	54.3	56.6	57.9
초과 급여 지급 방식	시간에 따라 계산	74.2	80.0	83.6	78.6	78.2
	일정금액	21.9	16.2	11.5	13.4	15.3
	기준없음	3.6	3.3	4.9	7.5	6.6
	모름/무응답	0.3	0.6	-	0.6	-
시간당 초과 급여	1천 5백원미만	2.4	8.0	6.0	5.4	3.6
	1천5백원~3천원 미만	4.8	14.1	15.7	11.3	11.1
	3천원~5천원 미만	5.0	15.0	12.6	17.3	15.7
	5천원~1만원 미만	2.9	11.7	13.9	14.3	19.4
	1만원 이상	1.3	4.0	4.4	6.1	6.9
	모름/무응답	83.7	47.0	47.4	45.6	43.3
시간당 평균초과급여(백원)		45	45	52	55	59

주: 시간당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급여/월평균 초과근로시간) 계산에 사용한 월평균 초과근로시간은 주당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평균초과급여 계산은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급여 관련 항목 모두응답자만을 표본으로 함.

제 3 절 임 금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주기, 임금산정방식, 임금수준, 성과급적용 여부와 해당 성과급제 그리고 임금 내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임금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에 대하여 종사상 지위·인구학적 특성·사업체 특성별로 그 특성을 펴보도록 한다.

1. 임금지급주기 및 임금산정방식

<표 7-15>를 통해 임금지급주기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92.6% 정도가 ‘한 달’ 주기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시로 지급받는다’와 ‘매일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각각 4.0%, 2.4%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금지급주기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98.9%)과 임시직(90.1%)의 대부분이 ‘한달’ 주기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일용직의 경우는 ‘한달’ 주기가 절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5> 임금근로자의 임금지급 주기와 임금산정방식

(단위: %)

		전 체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전 체 (명)		3,948	3,079	441	428
임금 지급 주기	한 달	92.6	98.9	90.1	50.0
	보 립 / 주	0.8	0.4	1.9	2.3
	일 (하 루)	2.4	0.1	1.5	19.3
	수 시	4.0	0.5	5.7	27.4
	기 타	0.3	0.1	0.8	1.0
임금 산정 방식	연봉계약제	5.4	6.5	2.2	0.5
	월 급	78.8	87.0	71.9	27.2
	주 급 / 격 주	0.2	0.1	0.4	0.9
	일 당	8.0	1.2	9.9	55.6
	시 간 급 제	1.9	0.9	5.8	4.3
	도 급 제	1.2	0.4	2.3	6.2
	실 적 급	4.0	3.5	6.1	4.7
기 타	0.5	0.4	1.4	0.7	

다음으로 임금산정방식으로 살펴보면, 연봉계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4.4%)보다 1%p 증가한 5.4%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급제의 비중은 78.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임시직 모두 월급제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상용직은 연봉계약제(6.5%), 임시직은 일당제(9.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의 일당제의 경우 지급 방식은 ‘한달’, ‘보림/주’, ‘일(하루)’, ‘수시’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용직의 경우는 일당제가 5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월급제가 27.2% 나왔다

다음으로 각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평균임금액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표 7-16>과 같다. 전반적인 임금산정방식은 성별 고용형태의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평균임금액 또한 대부분의 임금

<표 7-16>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산정방식과 산정결과 액수

(단위: %, 천원)

	전 체		남 성		여 성	
	비율	평균액	비율	평균액	비율	평균액
연봉계약제(년)	5.4	30,014	7.7	31,667	2.0	20,361
월급제(월)	78.8	14,09	77.7	1,679	80.1	1,020
주급제/격주제(주)	0.2	151	0.1	143	0.3	156
일당제(일)	8.0	54	9.4	65	6.3	31
시간급제(시간)	1.9	7	1.1	11	2.9	5
도급제	1.2	-	1.5	-	0.9	-
능력·실적제	4.0	117	1.9	147	7.0	106
기타	0.5	-	0.6	-	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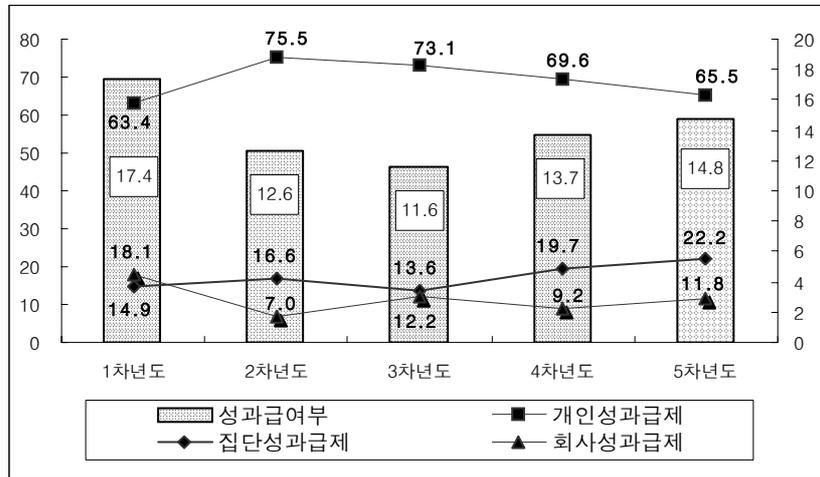
주: 연봉제는 연단위, 월급제는 월단위, 주급/격주제는 주 또는 격주단위, 일당제는 일단위, 시간급제는 시간단위, 능력·실적제는 기간이 필요 없이 능력과 실적만으로 금액을 지급.

산정방식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봉계약제의 경우 평균연봉액이 3천1만4천원으로 조사된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연봉계약제를 실시하는 비중은 약 3.8배 가량 높으며 그 액수도 남성(약 3천만원)이 여성(약 2천만원)보다 1.5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급제를 실시하는 비중은 남성이 여성보다 약 2.4%p 정도 낮은 77.7%로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월급액은 남성(167만9천원)이 여성(102만원)보다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본인의 해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직장에서 임금 결정시에 성과급제를 사용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성과급제의 종류로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개인 성과급제’와,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집단 성과급제’, 그리고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회사 성과급제’ 등이 있다.

(그림 7-7) 임금근로자의 성과급제여부와 성과급제 유형별 추이

(단위: %)



[그림 7-7]은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성과급의 종류별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998년(17.4%)부터 2000년(11.6%)까지는 성과급제의 적용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현재(14.8%)까지는 성과급제를 적용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제의 종류별로는 개인성과급제의 비중이 65.5%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집단성과급제의 경우 2차년도에 약 16.6%에서 3차년도에는 13.6%까지 감소하였지만, 이후 그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22.2%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사성과급제의 경우에도 그 비중은 11.8%에 그치고 있지만, 2차년도(7.0%)와 비교할 때에는 약 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표 7-17>은 성과급제 실시여부 및 성과급제 종류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은 남녀간에 차이가 없으나 적용되는 성과급제의 종류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경우 집단성과급제 및 회사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이 각각 27%와 16.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비중이 약 24.8%p 높은 80.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17〉 성별로 본 성과급제 실시여부 및 종류

(단위: %)

	전 체	남 성	여 성
전 체	100.0	100.0	100.0
성과급제가 없다	81.6	81.9	81.2
성과급제가 있다	14.8	14.8	14.8
개인성과급제	65.9	55.8	80.6
집단(팀, 부서)성과급제	21.8	27.0	14.3
회사성과급제	11.8	16.3	5.1
해당사항 없음	0.5	0.9	-
모 립	3.6	3.3	4.0

주: 성과급제의 종류는 최대 3개의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주된 성과급제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표 7-18〉 사업체 특성별로 본 성과급제 실시여부 및 종류

(단위: %)

		성과급제 없다	성과급제 있다.				모 립	
			개 인 성과급제	집 단 성과급제	회 사 성과급제	해당사항 없음		
전 체		81.6	14.8	65.9	21.8	11.8	0.5	3.6
직 업 별	전문관리직	74.4	22.1	72.5	19.0	7.9	0.6	3.5
	사무직	80.8	16.1	47.3	38.8	13.9	-	3.1
	서비스직	80.6	16.5	81.2	12.9	5.9	-	3.0
	농림어업직	93.2	6.9	100.0	-	-	-	-
	생산직	86.7	9.0	58.1	20.1	20.5	1.3	4.3
사 업 체 종 류	민간회사	81.3	14.8	71.3	16.3	12.0	0.5	3.8
	외국인회사	64.0	36.0	48.4	17.1	34.6	0.4	-
	공기업	74.0	20.4	27.9	60.0	12.1	-	5.7
	법인단체	88.0	10.5	59.5	8.3	32.3	-	1.5
	정부기관	78.6	19.1	50.2	45.3	2.6	-	2.3
기 타	91.2	5.8	68.5	31.5	-	2.0	3.1	

주: 직업별 분류에서 군인과 분류불가능 생략

〈표 7-18〉은 사업체 특성별로 성과급제 실시여부와 종류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직업별로 살펴보면, 성과급제의 실시는 전문관리직 (22.1%)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반면, 생산직은 전문관리직의 2/5수준인 9%에 그치고 있다. 적용되는 성과급제의 종류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경우 개인성과급제의 비중(72.5%)이 높은 반면, 사무직의 경우 집단성과급제

(38.8%)도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회사(36%)가 상대적으로 성과급제를 가장 많이 실시하고 있으며, 공기업(20.4%)과 정부기관(19.1%)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적용되는 성과급제 유형은 사업체 종류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회사와 공기업 혹은 정부기관은 집단성과급제나 회사성과급제의 적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개인단위의 인센티브 제공이 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인회사 및 공기업(정부기관)들은 집단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는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항목별 임금수준이외에도 '현재 이 일자리에서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월평균임금(세후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7-19>에서도 제시되고 있듯이, 지난 5년간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 실질임금은 1차년도 조사(114만6천원)에 비해 2차년도 조사(105만7천원)에서는 89만원이 감소하였으나, 3차년도 110만1천원, 4차년도 116만8천원으로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123만7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월평균임금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5차년도 현재 여성의 월평균임금(97만4천원)은 남성(161만6천원)의 60.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격차는 지난 5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 조사당시 여성의 상대임금은 남성의 58.8%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0.7%p가 감소한 58.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3차년도 58.8%, 4차년도 59.3%로 남성과의 격차가 감소하여 5차년도에는 60.5%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매월노동통계조사』³⁹⁾와 비교해 볼 때 각 연도별 추이

39)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는 비슷하나 월평균임금액 자체는 한국노동패널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1998년 명목임금이 142만 7천원, 1999년 159만9천원, 2000년 172만7천원, 2001년 182만5천원, 그리고 2002년도가 203만 6천원으로 조사되어 5차년도만을 비교해볼 때,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고 있는 월평균임금이 약 6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한국노동패널에서 추정되고 있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주요하게는 조사대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는 가구조사로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개인들의 임금을 조사하므로 1인 이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반해 [매월노동통계조사]는 기업체 조사로 비농부문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⁴⁰⁾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며, 1인 이상 10인 미만의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는 제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있는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다.

〈표 7-19〉 연도별 월평균임금 비교

(단위: 천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명목임금	실질임금
1차년도	1,112	1,146	1,309	1,349	774	798
2차년도	1,034	1,057	1,237	1,275	724	746
3차년도	1,101	1,101	1,311	1,352	767	791
4차년도	1,216	1,168	1,447	1,491	855	882
5차년도	1,322	1,237	1,567	1,616	945	974

주: 실질임금 = 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표 7-20〉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임금을 성별·연령별·교육수준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93만 8천원으로 전체 평균의 71%수준인데 비해, 시간

40) [매월노동통계조사]는 1999년 이전에는 비농전산업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가 조사대상이었으나 1999년부터는 5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시계열의 일관성을 위해 10인 이상 자료를 수록한 『2003 KLI 노동통계』(한국노동연구원 발행)의 결과를 참조하였다.

당임금으로 환산했을 때에는 전체평균(6천7백원)의 78%수준(5천2백원)으로 그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의 월평균임금이 약 149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간당임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는 40대가 7천7백원으로 30대(7천1백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0세 미만의 청년층은 월평균임금이 전체평균의 41%(58만4천원), 시간당임금은 전체평균의 61%(4천1백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에서도 월평균임금과 시간당 임금액이 각각 전체 평균의 60%와 63%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평균임금은 교육수준별로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의 경우는 전체 평균의 144%(189만 2천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 반면, 중졸 이하의 경우는 월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 모두 대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0〉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천원, 상대비)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전 체		1,318	100	6.7	100
성별	남 성	1,573	119	7.7	115
	여 성	938	71	5.2	78
연령	15~19세	584	44	4.1	61
	20~29세	1,020	77	5.3	79
	30~39세	1,491	113	7.1	106
	40~49세	1,490	113	7.7	115
	50~59세	1,370	104	7.4	110
	60세 이상	786	60	4.2	63
교육 수준	중졸이하	915	69	4.6	69
	고 졸	1,245	94	6.1	91
	대학재학	1,093	83	6.7	99
	전문대졸	1,331	101	6.4	95
	대졸이상	1,892	144	10.0	149

- 주: 1) 월평균 임금이 무응답인 45명은 분석에서 제외함, 임금수준은 '현재 이 일자리에서 ___님의 임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얼마나 됩니까?'에 대한 응답내용을 사용하여 계산함.
- 2) 시간당 임금=(월평균 임금/월평균 총근로시간)을 계산시 사용한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주당 근로시간(정규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것임.
- 3) 월평균 상대임금 = (월평균 임금*100)/전체 월평균 임금. (시간당 상대임금도 같은 방법임. 전체 월평균=100)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은 고용형태별로 뚜렷한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1>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44만6천원으로 임시직에 비해 1.8배, 일용직에 비해서는 1.6배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당 평균임금 또한 7천원으로 상용직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임시직에 비해 2천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 형태별 임금격차 또한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월평균 임금으로 살펴볼 때 전일제 근로는 시간제 근로보다 약 2배정도 높지만, 시간당임금의 경우 전일제가 시간제에 비해 1.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21>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

(단위: 천원, 상대비)

		월평균임금		시간당 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전 체		1,318	100	6.7	100
종사상 지 위	상용직	1,446	110	7.1	106
	임시직	792	60	4.7	71
	일용직	918	70	5.6	83
근로시간 형 태	시간제	655	50	5.7	86
	전일제	1,378	105	6.8	101

주: 종사상 지위, 근로시간 형태 '모름/무응답'의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

다음으로 <표 7-22>는 산업·직업 및 기업체 특성별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금융 및 부동산업의 월평균임금(171만원) 및 시간당임금(9천1백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 가스 수도업(159만6천원)과 공공서비스업(136만4천원)으로 각각 전체 평균임금의 121%와 103%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체 평균임금의 84%(111만원)이고 시간당임금은 전체평균의 75%(5천1백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은 직업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관리직의 월평균임금은 173만 2천원으로 사무직에 비해 1.2배, 생산직과 서비스업

에 비해 약 1.6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간당임금으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짐을 알 수 있는데, 전문관리직의 시간당평균임금은 9천8백원으로 사무직의 1.3배, 생산직 및 서비스직과 비교할 때에는 1.9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2〉 임금근로자의 산업·직업 및 사업체 특성별 임금

(단위: 천원, 상대비)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평균액(천원)	상대임금
전 체		1,318	100	6.7	100
산 업	농 립 어 업	1,002	76	5.5	83
	광 공 업	1,262	96	5.9	88
	건 설 업	1,322	100	6.9	104
	전기가스 수도업	1,596	121	7.7	114
	도소매및음식숙박	1,109	84	5.1	75
	금융및부동산업	1,710	130	9.1	136
	공공서비스업	1,364	103	7.5	112
직 업	전 문 관 리 직	1,732	131	9.8	146
	사 무 직	1,461	111	7.1	106
	서 비 스 직	1,083	82	5.2	77
	농 립 어 업 직	1,078	82	5.8	86
	생 산 직	1,097	83	5.2	78
사 업 체 종 류	민 간 회 사	1,243	94	6.1	91
	외 국 인 회 사	1,857	141	9.1	136
	공 기 업	1,686	128	8.6	128
	법 인 단 체	1,650	125	11.1	165
	정 부 기 관	1,930	146	9.3	139
	기 타	924	70	6.5	97
사 업 체 규 모	10인 미만	997	76	4.8	72
	10~49인	1,217	92	5.9	88
	50~99인	1,306	99	6.2	92
	100~499인	1,536	117	7.7	115
	500인 이상	1,793	136	9.1	136

사업체 종류별로 살펴보면, 월평균임금의 경우에는 정부기관이 193만원으로 가장 높는데 반해, 시간당 평균임금은 법인회사(1만1천원)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민간회사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월평균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에는 기업규모에 따른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민간기업의 경우 60% 이상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구성된 반면, 외국기업·공기업·법인단체 등은 60% 이상이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이러한 차이를 낳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사업체 규모별 임금수준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사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일관되게 임금이 증가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4 절 사회보험 및 노동조합

1. 사회보험

한국노동패널에서는 3차년도 조사부터 임금근로자에게 직장을 통하여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조사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3,975명 중 62.2% 정도가 1개 이상의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3>은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경우는 3-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5% 전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는 40~50% 미만의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의 경우는 4차년도에 전년대비 0.9%p의 감소율을 보였으나 5차 조사에서는 전년대비 1.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3개년동안 미미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4차 조사때, 3차 대비 1%p 감소 후 48.2%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4차년도에, 3차대비 4.4%p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5차 조사에서는 0.2%p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3〉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자 비중 비교(3~5차)

(단위: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000	47.5	9.1	55.2	49.1	39.3
2001	49.4	8.3	55.7	48.2	43.8
2002	49.7	8.5	55.8	48.2	43.6

주: 각 사회보험별 수치는 전체 조사대상자 대비 가입자 비중임.

〈표 7-24〉는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사회보험 가입비중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 1.5배정도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1.7배나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3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게 자리 잡고 있으며, 60대가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국민연금(18.3%)과 고용보험(18.5%)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체계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학력 수준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30%대를 유지하는 반면 고졸·전문대졸·대졸 이상으로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사회보험 가입률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학 재학인 경우에는 고졸보다는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 체		49.1	8.5	57.2	47.5	43.1
성별	남 성	56.7	9.4	65.7	54.7	51.4
	여 성	38.0	7.1	44.7	36.8	30.8
연령	15~19세	37.9	-	38.0	38.0	36.6
	20~29세	56.6	4.8	61.6	54.8	48.0
	30~39세	55.8	8.6	62.8	53.7	47.8
	40~49세	44.1	10.7	52.8	42.4	40.0
	50~59세	44.3	13.5	55.9	42.9	39.1
	60세이상	18.3	1.5	35.5	18.5	20.9
교육수준	중졸이하	31.8	0.9	37.2	30.2	30.0
	고 졸	48.3	5.6	53.5	48.4	44.1
	대학재학	38.3	7.4	49.8	42.0	36.1
	전문대졸	64.4	7.1	71.0	59.9	51.0
	대졸이상	63.3	21.9	79.0	59.1	52.7

〈표 7-25〉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사회보험 가입여부

(단위: %)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 체		49.1	8.5	57.2	47.5	43.1
종사상 지 위	상 용 직	58.8	10.8	68.9	56.9	51.5
	임 시 직	22.7	1.2	25.2	22.1	20.2
	일 용 직	7.5	-	7.5	6.7	7.0
산 업	농 립 어 업	21.1	-	21.1	17.1	10.4
	광 공 업	67.8	1.6	70.1	65.2	62.9
	건 설 업	29.7	-	30.3	32.4	33.1
	전기/가스 수도업	76.2	9.0	84.1	78.9	75.5
	도소매음식숙박업	33.1	0.1	34.9	31.4	25.9
	금융및부동산업	58.7	0.2	62.8	54.8	42.7
	공공서비스업	43.1	23.4	63.0	40.4	34.4
직 업	전 문 관 리 직	55.7	17.9	69.7	51.6	44.6
	사 무 직	69.8	12.3	80.8	69.6	58.3
	서 비 스 판 매 직	23.8	6.1	30.0	23.1	20.1
	농 립 어 업 직	22.1	-	18.2	15.7	15.7
	생 산 직	47.0	2.2	51.2	46.0	45.2
사업체 종 류	민 간 회 사	52.9	0.6	55.4	50.9	46.4
	외 국 인 회 사	75.3	-	76.7	80.0	77.3
	공 기 업	76.7	11.6	86.8	74.8	66.9
	법 인 단 체	55.9	22.5	73.5	52.0	42.0
	정 부 기 관	25.5	81.9	88.4	28.5	29.9
사업체 규 모	10인 미만	22.3	0.4	25.2	20.3	17.9
	10-29인	57.8	0.8	61.9	56.2	51.3
	50-99인	72.8	9.4	81.2	72.5	66.7
	100-499	85.3	3.3	88.2	79.6	73.6
	500인 이상	78.4	3.4	79.8	76.7	69.9

주: 1) 산업별 분류에서

광공업 : 광업,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도소매·수리업, 숙박·음식점업

금융 및 부동산업 : 금융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공공서비스업 :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방송 공공사업, 기타·공공·사회 개인서비스업

산업 분류불가는 생략

2) 직업별 분류에서 군인, 분류 불가는 생략

<표 7-25>는 사업체 특성별로 사회보험 가입률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종사상 지위별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고용안정성이 높은 상용직 근로자의 가입률은 50% 이상인 것과는 달리 임시직의 경우는 20% 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는 8% 미만의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사무직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무직 종사자 가운데 80.8%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 가입자도 각각 69.8%와 5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20%~30%에 그치고 있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에 비해 2.7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체 종류별로는 특수지역연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회사와 공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포함된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정부기관의 가입률이 81.9%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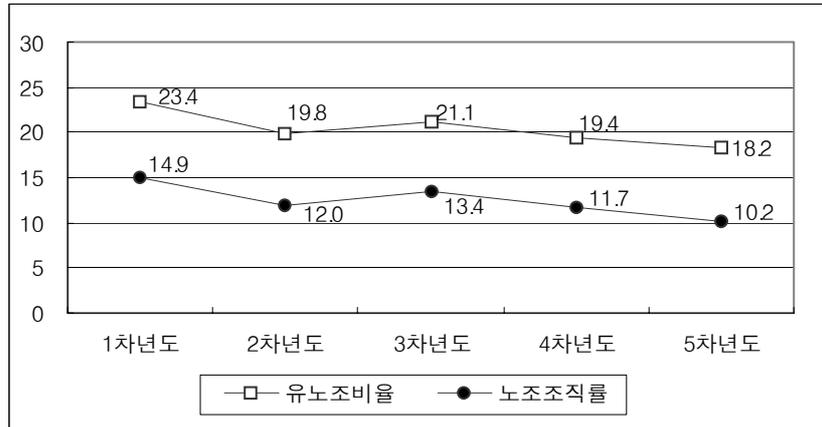
사업체 규모별로는 대체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보험 가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500인 이상의 경우는 100~499인보다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용직 종사자의 비중이 100~499인 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노동조합

노동조합과 관련된 조사내용으로는 사업체 내 노동조합 유무 및 본인의 가입 여부 등이 있다. [그림 7-8]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 중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하 '유노조비율') 및 본인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하 '노조조직률') 모두 1~5차년도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노조가 있다는 응답의 연도간 추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 유노조비율이 23.4%로 나타나고 있으나, 3차년도에는 21.1%, 4차년도에는 19.4%, 5차년도에는 18.2%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조직률의 경우에도 1차년도 14.9%에 이르고 있으나, 5차년에는 10.2%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노조조직률의 추이는 유노조비율의 변화와 그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대부분이 기업에 채용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유니온숍(union shop)의 특성을 가진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KLIPS의 노조조직률은 통계청이나 노동부에서 가장 최근에 집계된 2001년도 노조조직률(KLIPS 11.7%, 통계청 11.8%, 노동부 12.0%)과 비교할 때에도 그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림 7-8) 임금근로자의 유노조비율 및 노조조직률 : 1998~2002년 (단위: %)



<표 7-26>은 임금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노동조합 유무와 노동조합 존재시의 가입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56.2%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응답하였다. 또,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으나, 사업체 내에 노동조합이 '없다' 혹은 존재여부를 '모른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만일 노조가 있다면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해서 질문하였는데, 이때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8%로 조사되었다.

〈표 7-26〉 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노동조합 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

		노조 있음		노조 없음	모름/무응답	
		노조가입	노조비가입			
전 체		18.6	56.2	39.6	77.2	4.2
성 별	남 성	21.9	57.5	42.5	74.5	3.7
	여 성	12.7	52.8	47.2	82.1	5.1
연 령	15~19세	8.0	41.8	58.2	81.3	10.6
	20~29세	17.0	51.2	48.9	77.8	5.2
	30~39세	20.8	64.9	35.1	75.5	3.7
	40~49세	21.3	54.5	45.5	75.2	3.6
	50~59세	15.2	47.6	52.4	81.7	3.1
	60세이상	3.0	24.4	75.6	88.8	8.1
교 육 수 준	중졸이하	7.0	65.7	34.3	89.0	4.0
	고 졸	17.0	64.3	35.7	78.3	4.7
	대학재학	18.7	58.7	41.3	74.4	7.0
	전문대졸	22.1	56.3	43.7	71.6	6.3
	대졸이상	29.7	46.1	53.9	68.0	2.2

주: 노조 비가입은 '가입하지 않음'과 무응답을 합함.

노동조합의 유무와 가입 여부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근로자가 여성 근로자에 비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21.9%로 여성의 12.7%에 비해 약 9.2%p 정도 더 높으며, 가입 비중은 남성(57.5%)이 여성(52.8%)보다 약 5%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연령층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동조합 가입자의 비중도 이와 같은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표 7-2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노동조합유무와 노동조합 가입 여부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노동조합 가입비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 직업, 사업체의 특성별로 노조존재 유무와 노조가입 여부를 살펴

보면 <표 7-27>과 같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 수도업’ 종사자일수록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비중이 높으며, 노동조합 가입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이 있다’ 라는 응답은 ‘금융 및 부동산업’ 과 ‘광공업’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부분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설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존재 비중도 6.6%로 낮으나 노조 가입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7-27> 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노동조합 존재유무 및 가입 여부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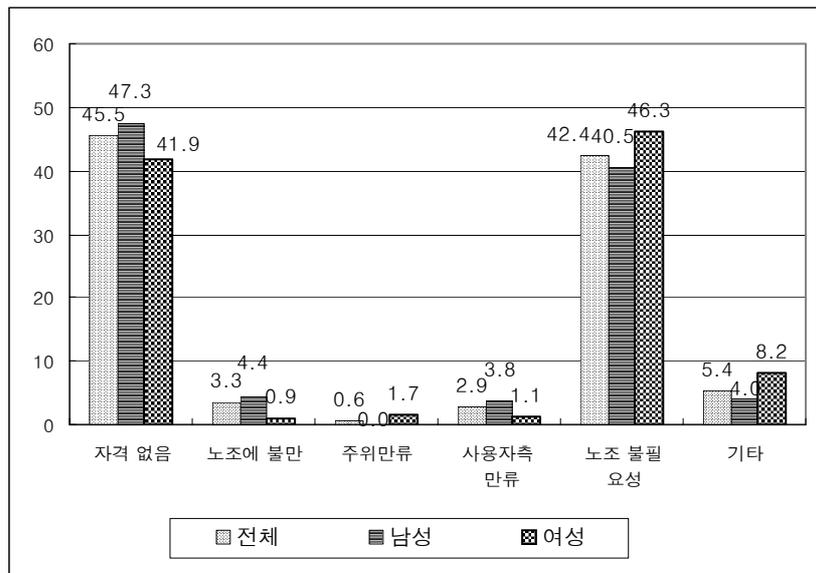
		노 조 있 음	노 조		노조 없음	모름/ 무응답
			노조가입	노 조 비가입		
전 체 (100.0)		18.6	56.2	43.8	77.2	4.2
산 업	농 립 어 업	4.7	-	100.0	77.4	18.0
	광 공 업	23.4	60.0	40.0	71.8	4.8
	건 설 업	6.6	41.7	58.3	91.2	2.2
	전기가스 수도업	52.0	70.2	29.8	42.9	5.1
	도소매및음식숙	8.5	52.8	47.2	87.4	4.1
	박 업	31.9	56.8	43.2	61.1	6.9
	금융및부동산업	14.0	44.3	55.2	82.6	3.4
	공공서비스업					
직 업	전 문 관 리 직	22.9	38.9	61.1	74.6	2.5
	사 무 직	28.9	54.7	45.3	64.9	6.3
	서 비 스 직	6.3	53.2	46.8	89.6	4.1
	생 산 직	15.6	73.3	26.7	80.0	4.5
사 업 체 종 류	민 간 회 사	16.0	56.9	43.1	79.6	4.4
	외 국 인 회 사	42.1	59.0	41.0	51.6	6.4
	공 기 업	59.6	62.2	37.8	31.8	8.6
	법 인 단 체	29.4	54.2	45.8	65.8	4.9
	정 부 기 관	23.8	42.8	57.2	72.5	3.7
사 업 체 규 모	10인 미만	0.8	27.1	72.9	98.0	1.2
	10~49인	5.7	60.9	39.1	91.1	3.3
	50~99인	19.8	48.5	51.5	74.3	5.9
	100~499인	42.3	62.5	37.5	52.3	5.4
	500인 이상	57.8	58.6	41.4	38.6	3.6

직업별로는 ‘생산직’(15.6%)보다 ‘전문관리직’(22.9%), ‘사무직’(28.9%) 종사자 쪽에 노동조합 존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 비중을 보면 ‘생산직’이 73.3%로 ‘전문관리직’의 38.9% 나 ‘사무직’의 54.7%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 종류별로는 ‘공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민간기업은 ‘외국인회사’보다 노동조합 존재율이 2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동조합 가입 비중은 ‘민간회사’가 ‘공기업’ 다음으로 높으며, ‘민간회사’와 ‘외국인회사’의 차이는 3%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9)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사업체 규모별로는 노동조합 존재 유무가 사업체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가입 비중은 ‘100~499인’이 62.5%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10~49인’, ‘500인이상’, ‘50~99인’, ‘10인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

있을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림 7-9]와 같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약 45.5%가 ‘가입자격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2.4%가 ‘노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측의 만류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9%에 그쳐 노동조합 가입 여부는 개인의 고용상태와 선호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에는 제시되어있지 않지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4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조의 가입자격이 없어 노조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차년도 41.1%에서 5차년도 45.5%로 4.4%p 증가했으나 사용자나 주위의 만류 때문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사용자만류+주위만류=> 4차. 6.3% 5차. 3.5%). 한편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자격이 없어서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41.9%)보다 노조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46.3%)이 다소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제 5 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는 200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정규직 관련 부가조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정교하게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1~5차년도 조사까지 진행되어왔던 기존의 조사항목으로는 임금근로자용 유형설문에서 조사되어 오던 종사상 지위(상용·임시·일용) 및 자기 판단에 기초한 정규-비정규 여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 등이 있다. 이 외에 5차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유형설문에서 조사되고 있는 호출근로(혹은 일용대기 근로)외에 취업자용 설문 중 문52~문57에서 조사된 근로의 지속가능성 여부, 향후 지속가능기간, 근로지속 불가능 이유, 파견 및 용역근로 여부, 독립도급근로여부, 가내근로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항목들을 이용하여 KLIPS에서 분석가능한 비정규직의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류기준은 종사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달리 종사상 지위를 규정할 때 부가급여 수혜 여부와 같은 근로조건이나 일자리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고용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임시·일용직은 고용관계가 단속적인 비상용직을 의미하므로 비정규직의 범주로 파악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분류기준은 정규직-비정규직 여부를 본인의 판단에 의해 응답하도록 한 것이다. 정규직-비정규직에 관해 아무런 예시나 설명이 없이 본인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문항은 형식적인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보다는 사실상의 고용관계를 중시하는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형태에 관한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고용유형을 판별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고용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1. 비정규직의 규모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이처럼 다양한 기준에 의해 비정규직을 정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규모와 관련해 매우 일관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7-28>은 종사상 지위와 자기판단에 의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보여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달리 직장 내 규범의 적용 여부, 퇴직금 및 상여금 수령 여부, 그 외 부가급여 수혜 여부와 같은 근로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임시·일용직 등 비상용직의 규모는 22%로 파악되어 본

<표 7-28> 본인의 인식과 종사상 지위에 의한 비정규직

(단위: %)

	종사상 지위				본인의 인식	
	상용직	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정규	비정규
전체	78.0	22.0	11.3	10.8	77.9	22.1
여성	73.8	26.2	16.8	9.4	73.1	26.9
남성	80.8	19.2	7.5	11.7	81.1	18.9

인이 인식하는 비정규직의 규모(22.1%)와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여준다. 다음으로 <표 7-29>는 5차년도 조사에서부터 파악이 가능해진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고용형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항목은 독립도급근로(33.4%)이며, 시간제근로(26.7%)와 일용대기근로(21.1%)의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접고용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는 3.4%와 5.1%로 이들 고용형태 내에서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29>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과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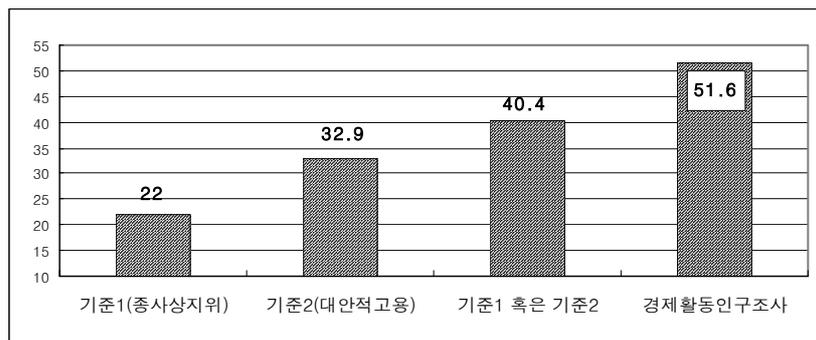
(단위: %)

	고용형태 ¹⁾							조작적 정의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²⁾	정규	비정규
전 체	23.3	3.7	5.7	36.9	3.5	14.1	12.8	67.1	32.9
여 성	17.1	3.9	6.3	37.5	6.4	19.6	9.2	61.7	38.3
남 성	28.9	3.6	5.1	36.3	0.9	9.1	16.0	70.7	29.3

- 주: 1) 각 고용형태는 개별 기준에 의해 정의되어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표에서 제시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분류된 결과임.
 2) 단기계약직이란, 유기계약 +무기계약 중 향후 계속 근무 가능한 기간이 1년 이하인 노동자를 의미함.

[그림 7-10] 다양한 조작적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2년도 비농가부문 임시·일용직 비중임.

이상과 같이 다양한 기준별로 살펴볼 때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10]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임시·일용직 기준으로 나타나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22%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51.6%와 비교할 때 무려 2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함하는 조작적 정의를 이용할 때에는 32.9%로 경찰조사와의 격차가 감소하며, 종사상 지위상으로 임시·일용직에 속하거나 다양한 고용형태에 속하는 경우(<기준1> 혹은 <기준2>),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추정될 수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40.4%까지 증가하여 그 격차가 10%p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 결국 두 조사간 조사방법상의 차이점⁴¹⁾을 감안하면 이러한 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임금

여기서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한 비정규직의 조작적 정의(기준2)를 기준으로 이들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7-12]에서도 제시되어 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47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53시간)에 비해 주당 평균 6시간 정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각각의 고용형태별로 근로시간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파견근로(51시간), 용역근로(52시간), 단기계약(52시간) 등은 거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슷한 시간동안 일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시간제근로(39시간), 가내근로(42시간), 일용대기근로(43시간)의 경우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근로시간 격차를 살펴보면, 여성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1시간으로 전체 비정규직 평균에 비해서도 6시간이 적은 것으로 비정규직내에서 특히 여성의 근로시간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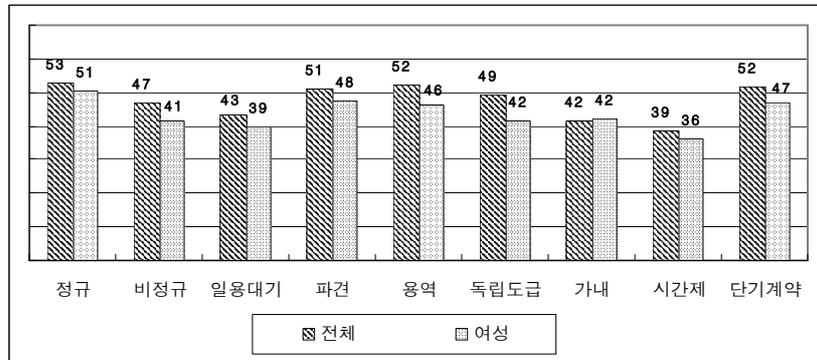
41) KLIPS에서는 각종 사회보험 및 퇴직금 가입 여부와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만, 상여금 수령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상여금이나 각종 부가급여 제공 등을 감안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종사상 지위를 판별하여 기입한다.

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노조유무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에도 비슷한 패턴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유무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격차는 약 8시간(노조없음:45.6시간, 노조있음:53.2시간)이며 노조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된 반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격차(노조없음:53.2시간, 노조있음:51.8시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7-11)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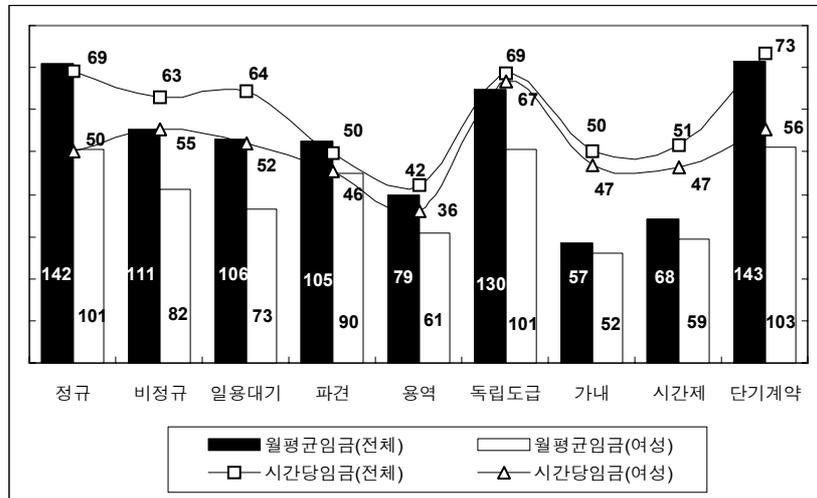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그림 7-12]와 같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1만원으로 정규직(142만원)근로자의 약 78%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9천3백원으로 정규직 근로자(6천9백원)의 9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각각의 고용형태에 따라 매우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파견, 용역, 가내근로, 시간제 근로 등은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에서 전체 평균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가내근로는 월평균임금이 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단기계약근로와 독립도급 근로는 거의 정규직과 대등한 수준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여성보다 낮지만, 이를 시간당임금액으로 환산하면 오히려 여성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시간당 월평균임금이 82만원으로 정규직 여성(101만원)에 비해 19만원이 낮으나, 시간당임금은 5천5백원으로정규직 여성보다 5백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7-12)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 및 시간당 임금액

(단위 : 월평균임금/만원, 시간당임금/백원)



주: 1) 임금수준은 명목 임금임.

2) 시간당 임금액의 계산에 사용된 월평균총근로시간은 주당평균근로시간에 4.3을 곱한 값임.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노조유무별로 살펴보면, 앞서 근로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가 있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65만원의 월평균임금을 받아 정규직 근로자(188만원)보다 약 23만원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이 약 102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어 정규직근로자(130만원)보다 28만원이 적고,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

자보다는 63만원이 적으며, 노조가 있는 사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86만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당 임금측면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9천2백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8천3백원,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는 6천3백원, 노조가 없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6천원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및 임금의 측면에서는 성별 격차보다 노조유무에 따른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10명 미만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사에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업체의 경우 명목상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하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노조가 미결성된 곳이 많으므로 이러한 사업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및 만족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특수직 연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36.0%, 건강보험 38.7%, 고용보험, 32.8%, 산재보험 28.7%로 정규직 근로자의 보험가입률과 비교할 때 2/3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지급률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약 절반 수준인 32.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업체 조사인 노동부의 『2002년 비정규근로자 근로실태 조사』에서는 국민연금 38.2%, 건강보험 40.8%, 고용보험43.7%, 산재보험 52.2%로 나타나고 있어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사회보험 가입률과 비교할 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비슷한 가입률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0%p와 20%p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퇴직금 지급률 또한 위의 조사(47%)보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15%p 정도 낮게 조사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각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가입률이 낮은 것부터 ‘가내근로>일용대기근로>시간제근로>독립도급근로·용역·파견근로>단기계약근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지급비율이 낮은 것부터 ‘가내근로>일용대기근로>시간제

근로>파견·용역·독립도급근로>시간제근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기계약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 측면에서 대부분 정규직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퇴직금 측면에서도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비정규직 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7-30〉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보험 및 퇴직금 지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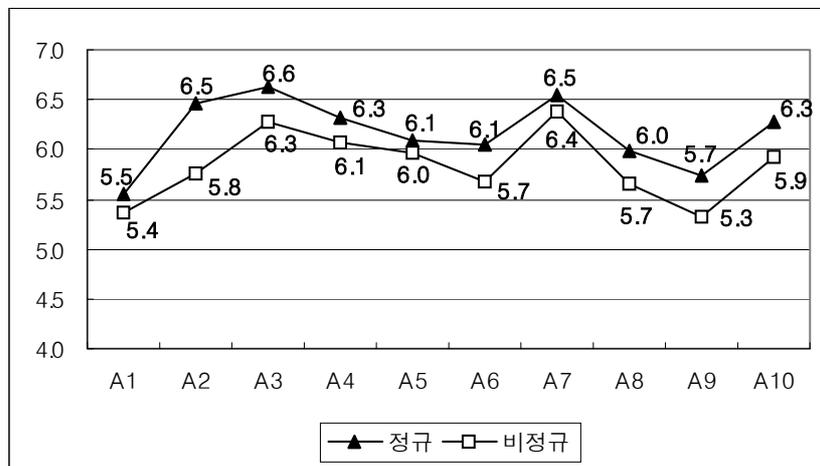
(단위: 가입률)

	고용형태 ¹⁾							조작적 정의	
	일용 대기	파견	용역	독립 도급	가내	시간제	단기 계약 ²⁾	정규	비정규
국민연금	15.8	47.9	49.4	43.4	8.6	17.9	69.5	65.6	36.0
건강보험	16.6	47.3	60.4	46.9	8.6	19.9	71.6	66.5	38.7
고용보험	12.5	47.8	42.2	42.8	8.6	17.9	55.3	54.8	32.8
산재보험	12.7	44.7	36.4	36.6	6.4	18.1	44.3	49.1	28.7
퇴직금	16.0	42.1	43.5	43.3	8.6	16.4	47.5	64.4	32.4

주: 1) 여기서 사회연금은 국민연금 혹은 특수직 연금으로 구성된 것이며, 퇴직금 항목은 법정 퇴직금 혹은 누진 퇴직금으로 구성됨.

(그림 7-13)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

(단위: %)



주: 만족도는 5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임. 매우불만족 = 1, 매우만족 = 10
 A1: 임금만족도, A2: 취업의 안정성, A3: 일의 내용, A4: 근로환경, A5: 근로시간, A6: 발전가능성, A7: 의사소통·인간관계, A8: 인사고과의 공정성, A9: 복지후생, A10: 전반적 만족도

다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다양한 수준에서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10개 항목 모두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이들 항목중에서 취업의 안정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정규직(6.5점)에 비해 비정규직(5.8점)이 0.7점으로 가장 큰 점수차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금에 대한 만족도는 절대적 수치에서는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지만, 정규직과의 격차는 가장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그림에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노조가 없을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수준은 각 항목별로 대부분 0.1점 정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노조유무에 따른 만족도 격차도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규모는 어떤 정의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통계조사와 비교할 때에도 그 신뢰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별로 근로시간, 임금, 사회보험 및 퇴직금, 고용상의 여러 만족도 수준을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 내에서도 가내근로자는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을 보이는 반면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형태와 상황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책 또한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황수경(2003), 『내부자 노동시장과 외부자 노동시장의 구조분석을 위한 탐색적 연구』, 노동정책연구, 2003년, 제3권 제3호.
- 이상호(2003), 『한국노동패널(KLIPS) 5차년도 조사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KLIPS Research Brief.

제 8 장

비임금근로자의 특성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게 비임금근로자에게도 매년 유형설문과 취업자용 설문을 통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주요 설문항목으로는 종사상 지위, 사업체의 규모, 월평균 소득과 연간 매출액, 근로시간 규칙성, 주당 근로시간과 월 평균 근로일수, 사업체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한 특성들이 조사되고 있다. 특히 5차년도 조사에는 사업체의 창업자본금 및 화폐가치에 관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어 비임금근로자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표 8-1〉 각 연도별 비임금근로자의 수와 비중 : 1998~2002년

(단위: 명, %)

	표본수 (명)	취업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		
		전체	남성	여성
1차년도	2,415	37.6	35.9	40.2
2차년도	2,229	35.3	34.9	35.8
3차년도	2,072	34.8	34.3	35.3
4차년도	1,981	32.7	32.3	33.3
5차년도	1,980	31.9	32.1	31.5

1~5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파악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수는 <표 8-1>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이후의 분석은 가중치²⁾를 이용한 분포를 제시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표본수를 제시하지 않는다.

제 1 절 종사상 지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 이 때 고용주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임금을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이르며, 자영업자는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종업원이 없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는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지 않고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로 각각 정의된다.

먼저 <표 8-2>를 통해 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가 27.7%, 자영업자 50.9%, 그리고 가족 종사자는 21.5%인 것으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특히, 고용주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20.8%에 그치고 있으나 2차년도에 22.4%, 3차년도 23.9%, 4차년도 26.3%, 로 매년 1-2%p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KLIPS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결과⁴³⁾와 비교할 때 고용주의 비중은 1.9%정도 높은데 비해, 자영업자의 비중은 4.5%정도 낮게 추정되고 있다.

<표 8-2>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별 비교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1차년도	20.8	55.1	24.1
2차년도	22.4	54.3	23.3
3차년도	23.9	53.0	23.1
4차년도	26.3	53.0	20.8
5차년도	27.7	50.9	21.5

<표 8-3>는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과 산업별 특성으로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영업자(59.9%), 고용주(35.7%), 가족종사자(4.4%)의 순

42)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도별 분석에서는 종단 가중치를, 2002년도 자료에 대한 횡단면 분석에서는 횡단 가중치를 적용.

43)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조사』 비농가 부문에서는 고용주가 25.8%, 자영업자가 55.4%, 무급가족종사자가 18.8%로 각각 조사되고 있다.

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종사자(47.8%)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자(37.8%), 고용주(14.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41.6%로 20대에 비해 9.6%p 정도 적게 나타나고 있으나, 40대와 50대는 각각 48.5%와 55.9%를 차지하다가 60대에 이르르면 60%를 넘어서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분포는 교육수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주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대졸 이상은 고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⁴⁴⁾로는 공공서비스업(41.8%), 광공업(40.4%), 그리고 건설업(38.4%)에서 고용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8-3〉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 분포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전 체		27.0	51.0	22.0
성 별	남 성	35.7	59.9	4.4
	여 성	14.3	37.8	47.8
연 령	15~29세	27.3	51.2	21.5
	30~39세	35.4	41.6	23.0
	40~49세	31.3	48.5	20.2
	50~59세	23.5	55.9	20.7
	60세이상	13.3	62.9	23.8
교육수준	중졸이하	12.1	59.6	28.3
	고 졸	29.5	48.7	21.8
	대학재학 및 중퇴	31.3	45.8	22.9
	전문대졸 대졸이상	40.3 63.7	49.1 30.2	10.6 6.1
산 업	농림어업	6.1	62.4	31.6
	광공업	40.4	36.8	22.8
	건설업	38.4	55.5	6.1
	전기·가스 수도업	14.1	79.6	6.3
	도소매및음식숙박업	28.5	47.1	24.5
	금융및부동산업	20.5	61.2	18.3
	공공서비스업	41.8	44.2	14.0

44) 2000년 개정 산업표준분류.

제 2 절 근로시간

본 절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 주당 평균 근로일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등과 관련된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설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에 규칙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여기서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 함은 일거리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업(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라 함은 사업 또는 일자체를 ‘하다 안하다’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로 다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주당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와 관련하여서는 ‘이 일자리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하십니까?’, ‘일주일에 보통 몇 시간이나 일하십니까?’라고 각각 조사하고 있다.

1. 근로시간의 규칙성과 월평균 근로일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칙성 여부 및 월평균 근로일수의 분포는 <표 8-4>와 같다. 먼저 근로시간의 규칙성 여부에 관해 살펴보면, ‘규칙적’인 경우가 76.2%, 불규칙적인 경우가 23.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일 경우에는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18.8%)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약 4배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시간의 규칙성에 대해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응답이 고용주가 90.5%인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는 68.3%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인 경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비중이 고용주(7.3%)보다는 자영업자(24.5%)와 가족종사자(19.8%)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47.9%가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계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34.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서비스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 등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규칙적이며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1~3%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5차년도에 조사된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근로일수는 27.1일이며 종사상 지위별(자영업자 27.1일, 고용주 26.6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면서 특히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전기·가스 수도업(23.9일)과 건설업(25.9일)의 월평균근로일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4〉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의 규칙성 및 월평균근로일수

(단위: %, 일)

		규칙적	불규칙적		월평균 근로일수(일)
			계절영향 없음	계절영향 있음	
전 체		76.2	5.0	18.8	27.1
종사상 지위	고 용 주	90.5	2.2	7.3	26.6
	자 영 업 자	68.3	7.2	24.5	27.1
	가 족 종 사 자	76.8	3.4	19.8	27.9
산업	농 립 어 업	32.4	1.3	66.2	28.6
	광 공 업	87.2	6.5	6.3	26.2
	건 설 업	52.1	13.0	34.9	25.9
	전기·가스 수도업	82.2	7.1	10.7	23.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9.6	4.0	6.4	28.1
	금융 및 부동산업	90.0	8.8	1.2	26.8
	공 공 서 비 스 업	90.2	6.7	3.2	26.2

2. 주당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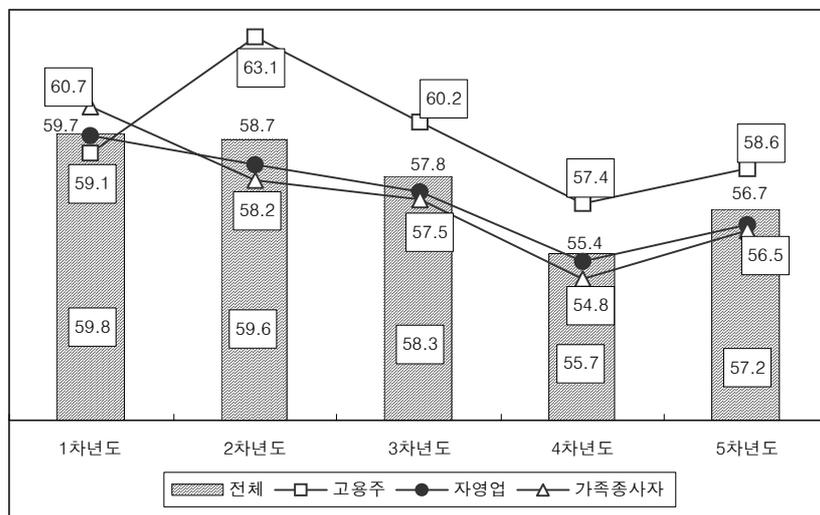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1~4차년도 조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5차년도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1]에서 볼 수 있듯이, 1차년도(59.8시간)와 2차년도(59.6시간)에 조사된 주당근로시간은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3차년도에 58.3시간, 4차년도에는 55.7시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2년에는 57.2시간으로 1.5시간 가량 증가하였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자영업과 가족종사자의 경우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는데 반면, 고용주의 경우는 1999년 주당평균 63.1시간으로 1998년 대비 주당평균 4시간 상승한 후, 2001년까지 가파른 감소세를 보여 주고 있다. 2002년도는 고용주 58.6시간, 자영업 56.7시간, 가족종사자 56.5시간으로 2001년도 대비 각각 1.2시간, 1.3시간, 1.7시간 증가하였다.

(그림 8-1) 1~5차년도 비임금근로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

(단위: 시간)



<표 8-5>는 주당근로시간 분포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비임금근로자의 76.2%가 주당 44시간 이상 일하고 있으며, 주당평균근로시간 또한 57.4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임금근로자의 경우와 비교할 때, 주당 4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비중(54.4%)은 1.4배 정도이며, 주당평균근로시간과 비교할 때는 임금근로자(약49시간)보다 약 8시간 정도 더 높은 수치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주당 71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25.9%)이 남성보다 4.1%p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당평균근로시간은 여성

이 약 1시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당평균근로시간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보면 남성 비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주당 6시간 더 일하는 것에 비해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11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8-5〉 비임금근로자의 인구학적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주당평균 근로시간 (시간)
전 체		5.7	10.7	7.6	17.1	35.6	23.5	57
성 별	남 성	5.2	9.4	6.5	21.5	35.6	21.8	57
	여 성	6.3	12.5	9.1	10.7	35.5	25.9	58
연 령	15~29세	6.6	9.0	8.2	7.8	45.5	23.0	58
	30~39세	4.6	9.7	10.4	17.7	33.5	24.2	58
	40~49세	4.1	5.9	6.6	20.2	36.1	27.1	60
	50~59세	5.4	11.9	4.6	15.1	38.8	24.2	59
	60세이상	10.6	20.5	9.9	14.0	30.9	14.1	49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5.7	14.1	7.3	12.8	36.1	24.0	57
	고 졸	5.2	7.4	7.6	16.8	36.3	26.8	60
	대학 재학	18.8	7.4	11.7	15.9	26.8	19.5	51
	전문대졸	6.7	6.6	8.5	21.0	43.1	14.1	55
	대졸 이상	4.4	10.7	7.3	30.5	30.4	16.8	54

연령별로는 ‘40~49세’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60.3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주당평균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연령대는 49시간의 ‘60세 이상’ 연령층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60세 이상의 경우만이 49시간으로 임금근로자와 비슷한 주당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대학 재학’을 제외하고 고졸(60시간)이 가장 긴 주당 근로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54시간)의 근로시간과의 차이는 주당평균 6시간으로 ‘고졸’이 더 길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교육 수준의 임금근로자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최소 6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6>은 비임금근로자의 주당근로시간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으며, 특히 ‘71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 응답자가 광공업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었다.

<표 8-6>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특성별 주당 근로시간 분포

(단위: %, 시간)

		1~18 시간	19~35 시간	36~43 시간	44~54 시간	55~70 시간	71시간 이상	평균 근로 시간
산업	농림어업	9.5	24.3	10.5	11.5	35.0	9.2	48
	광공업	5.3	5.2	6.5	29.2	37.0	16.9	56
	건설업	5.6	7.3	10.4	38.7	30.6	7.4	51
	전기·가스수도업	1.7	9.5	7.7	17.2	42.8	21.2	57
	도소매음식숙박업	4.4	5.1	5.5	13.5	36.6	34.9	64
	금융 및 부동산업	5.9	9.4	8.7	16.9	45.8	13.3	55
	공공서비스업	5.9	12.2	8.9	17.1	29.9	26.1	56
사업 규모	0인 (자영업)	7.6	12.1	6.7	14.0	35.3	24.4	59
	1 ~ 4인	4.3	6.2	24.9	37.7	37.6	24.8	61
	5 ~ 9인	2.3	10.3	30.6	30.6	30.6	21.0	57
	10인 이상	5.3	12.1	52.2	16.5	16.5	10.1	49

사업체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이 61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고용주의 주당평균근무시간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근무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은 59시간으로 5-9인 사업장의 고용주 57시간보다 2시간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종업원 수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고용주의 경우는 주당평균근로시간이 49시간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제 3 절 근로소득

〈표 8-7〉 연도별 월평균소득 비교

(단위 : 천원)

	전 체		남 성		여 성	
	명목소득 (천원)	실질상대소득	명목소득 (천원)	실질상대소득	명목소득 (천원)	실질상대소득
1차년도	1,269	100.0	1,465	100.0	795	100.0
2차년도	1,284	100.4	1,430	96.8	852	106.2
3차년도	1,407	107.6	1,578	104.5	905	110.4
4차년도	1,779	130.7	1,993	126.8	1,211	141.8
5차년도	2,099	150.1	2,319	143.6	1,414	161.3

주 :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100,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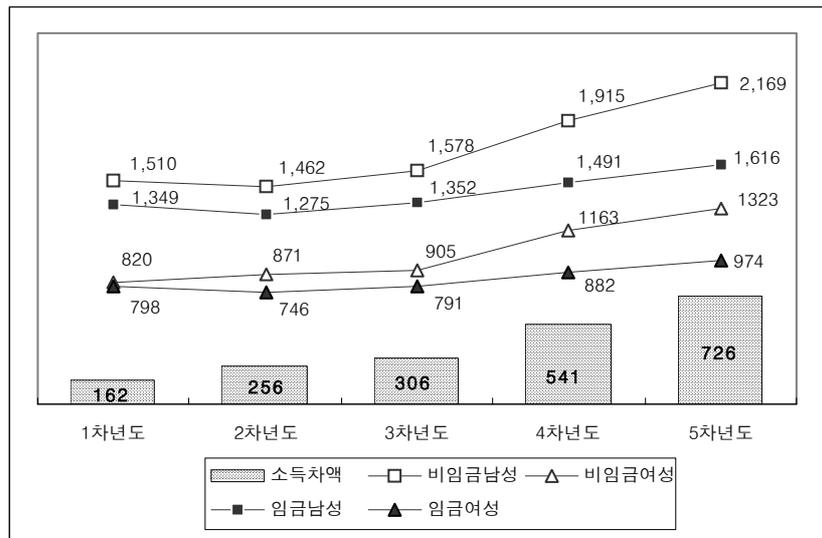
실질상대소득은 1차년도 실질소득을 100으로 두었을 때의 각 연도별 상대소득임.

〈표 8-7〉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명목소득(이하 월평균소득)과 월평균실질소득을 연도별로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지난 5년간 월평균소득의 추세를 살펴보면, 1998년 126만9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에는 209만9천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소득증가는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의 실질소득을 100으로 할 때 2차년도에는 0.4%p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3차년도에는 7.6%p, 4차년도에는 30.7%p까지 증가하여 5차년도에는 1차년도에 비해 약 50.1%p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월평균소득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남녀간 소득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차년도 당시 여성의 월평균소득은 79만5천원으로 남성(146만5천원)의 54%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후 2차년도에는 여성의 월평균소득이 남성의 59%, 3차년도에는 63%까지 이르러 다소 그 격차가 완화되는 듯 하였으나 4차년도와 5차년도에는 각각 남성의 60%,와 61%로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5차년도의 실질상대소득은 1차년도에 비해 남성이 43.6%p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61.3%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을 비교한 결과가 [그림 8-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에서 조사되고 있는 비임금근로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으며 그 격차도 1차년도 16만2천원에서 2차년도 25만6천원, 3차년도 30만6천원, 4차년도 54만1천원, 5차년도 72만6천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다시 성별로 나누어 구분할 경우 비임금남성>임금남성>비임금여성>임금여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1차년도 조사에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비임금남성이 비임금여성에 비해 1.9배 정도 높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5차년도에는 2.3배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2]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비교

(단위: 천원)



주: 소득차액 =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소득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실질임금

<표 8-8>은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을 연령 및 교육수준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월평균소득이 높지만, 월 3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비중은 30대 및 4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에도 30세 이하는

150만원, 30대 200만원, 40대 200만원, 50대 150만원, 60대 6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30대와 40대의 소득수준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육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월평균소득 및 월 300만원 이상 소득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졸 이상의 월평균소득은 약 354만원으로 전문대졸의 1.3배, 고졸의 1.7배, 중졸에 비해서는 무려 2.8배나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표 8-8> 비임금근로자의 연령 및 교육수준별 월평균소득

(단위: %, 천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천원)
		적자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 200만원	200 만원 ~ 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7.7	36.0	29.9	14.0	12.4	2,051
연령	15~29세	12.9	35.6	28.0	15.5	8.1	2,528
	30~39세	5.8	25.9	36.8	16.1	15.4	2,377
	40~49세	8.2	25.1	34.0	17.8	14.9	2,346
	50~59세	7.0	39.2	28.4	13.2	12.2	1,968
	60세이상	9.3	68.0	14.4	4.2	4.1	1,001
교육수준	중졸이하	9.9	53.6	24.4	7.7	4.3	1,264
	고 졸	5.8	27.0	36.7	18.4	12.1	2,083
	대학재학	8.7	32.9	28.3	17.9	12.2	2,610
	전문대졸	5.7	26.3	26.9	19.4	21.7	2,806
	대졸이상	7.7	17.2	28.4	16.9	29.9	3,541

주: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표 8-9>는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에 대해 사업체 특성 및 매출액 규모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로는 건설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264만원)이 가장 높으며, 공공서비스업(241만원) 및 제조업(240만원)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수가 0(자영업자)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147만9천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1-4인일 경우에는 자영업의 1.9배, 5-9인인 경우에는 2.6배,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3.6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월평균소득은 연간매출액이 높을수록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액이 1천만원 미만(월평균소득 62만원)인 경우에 비해 매출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는 월평균소득이 494만원으로 약 8배 정도 높은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9〉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적 특성 및 매출액규모별 월평균소득

(단위: %, 천원)

		월평균 근로소득 분포					월평균 소득액 (천원)
		적자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이상	
전 체		43.7	11.4	15.3	17.3	12.3	2,051
산업별	농림어업	9.2	69.5	12.6	3.8	4.8	970
	제조업	9.5	21.1	30.3	20.7	18.5	2,404
	건설업	7.6	13.7	40.2	21.5	17.1	2,642
	전기·가스 수도업	1.2	22.1	57.1	14.3	5.4	1,885
	도소매음식숙박업	7.5	34.0	30.1	15.3	13.2	2,206
	금융 및 부동산업	14.1	33.6	28.7	7.0	16.6	1,943
	공공서비스업	6.6	32.6	31.4	15.0	14.5	2,412
사업규 모별	0인(자영업)	5.2	7.9	47.4	30.0	9.6	1,479
	1-4인	6.7	14.6	34.0	23.8	20.9	2,757
	5-9인	11.8	6.1	21.5	21.4	39.3	3,824
	10인 이상	8.2	11.5	10.3	19.2	50.8	5,410
매출액 규모별	1천만원미만	16.1	76.7	3.9	2.0	1.3	623
	1천-2천만원	3.2	61.7	33.5	0.7	0.9	1,097
	2천-3천만원	2.4	20.7	60.8	14.2	2.0	1,931
	3천-5천만원	5.3	14.3	43.3	26.8	10.3	2,255
	5천만-1억	2.5	9.0	38.2	28.8	21.4	2,598
	1억초과	5.1	3.6	17.3	25.1	48.9	4,942

주: 월평균근로소득 계산시 '적자' 응답자 제외

제 4 절 사업체의 창업과 운영

본 절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업체 창업과정 및 운영과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5차년도 조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지난 조사당시 하던 일자리를 현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경

우(유형3)에 사업체의 화폐가치·장기적 전망·이직 희망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7)에는 본인이 창업했는지 여부·창업자본금액수 및 조달방법·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사업체의 창업

비임금근로자의 고용주와 자영업자 중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가진 경우(유형3)는 293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롭게 시작한 사업체의 창업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표 8-10>을 통해 창업주체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기 보다는 90% 이상이 본인 스스로 혹은 동업을 통해 창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여성 고용주의 경우에는 가족 또는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경우가 15.2%로 남성 고용주보다 3배 이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 및 친지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는 친구의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31.6%)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조부모(27.6%), 형제자매(23.5%), 배우자(1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의 경우 피상속인이 형제자매(46.2%)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자의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인 경우(34.9%)나 친구(34.0%)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동업을 통해 사업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 남성은 형제나 자매에게 물려받거나(66.7%),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는다(33.3%)라고 응답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친구의 사업체를 물려받거나(51.4%), 형제자매(28.6%), 배우자(20.0%) 등에게 물려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창업·동업에 의한 사업체의 시작 비중이 남성과 여성 모두 동일하였으며,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상속인에 있어서는 남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사업체를 물려받거나(48.9%) 친구의 사업체를 물려받는 경우(40.2%)가 대부분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받는 경우(32.7%)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대체적으로 피상속자의 경로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0> 사업체의 창업 여부와 상속 여부

(단위: %)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창업 및 동업	90.3	90.2	92.1	84.8	90.4	90.4	90.4
가족 및 친지의 사업을 물려 받음	6.9	7.3	4.6	15.2	6.6	5.7	8.1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13.8	10.8	-	20.0	15.6	-	32.7
형제자매	27.6	15.4	33.3	-	34.9	48.9	19.6
친구	23.5	46.2	66.7	28.6	9.8	-	20.5
기타	31.6	27.6	-	51.4	34.0	40.2	27.2
기타	3.6	-	-	-	5.7	10.9	-
기타	2.8	2.5	3.3	-	3.0	3.9	1.5

<표 8-11>은 일자리 시작 당시 사업체에 들어간 비용 또는 투자액을 세부항목별로 조사한 결과이다. 고용주의 창업당시 총 투자액은 평균 8천 610만원이며, 이때 남성 고용주의 사업 투자액(9천544만원)이 여성 고용주의 사업 투자액(5천820만원)에 비해 1.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남녀모두 부동산 및 시설비와 같은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남성의 경우 상품값과 원료비가 21.2%로 그 다음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권리금이 18.4%에 이르고 있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창업 투자액이 평균 2천414만원이며, 이중 남성의 총투자액은 2천602만원, 여성은 2천11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세부항목별로는 고용주와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시설비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다음이 상품값/원료비, 권리금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권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용주(6.6%)에 비해 자영업자(13.0%)가 약 6.4%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8-11〉 일자리 시작 당시의 투자액

(단위: %, 만원)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부동산	35.0	34.2	39.4	36.0	29.5	48.6
월임대료	0.6	0.6	1.0	0.8	0.8	0.9
시설비	32.8	32.8	32.7	25.1	29.5	16.6
상품값/원료비	18.9	21.2	7.8	20.2	21.1	18.5
권리금	6.6	4.2	18.4	13.0	14.9	9.3
기타비용	6.0	7.1	0.7	4.9	4.3	6.2
총투자액(만원)	8,610	9,544	5,820	2,414	2,602	2,118

주: 총투자액은 세부 항목의 합계에 의한 것임.

- 부동산비용: 구입비 또는 임대 보증금
- 시설비: 인테리어, 집기, 기계 등
- 상품값 또는 원료비: 판매 또는 생산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원재료 등의 가격
- 기타비용: 홍보비, 특허사용료, 프랜차이즈 비용, 등록비 등등

다음으로 가족, 친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새로 사업체를 시작하는 응답자에게 사업비용을 어떻게 조달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표 8-12〉 종사상 지위별 자본금 구성비

(단위: %)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본인 또는 가족, 친지	69.0	71.3	61.5	75.8	74.2	78.4
동업자	5.4	4.5	8.0	2.1	1.8	2.5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융자	22.5	20.4	29.0	16.5	17.8	14.2
다른 개인으로부터 빌려서	1.0	1.2	0.9	3.5	2.8	4.9
사채업자	1.2	1.5	0.5	-	-	-
정부의 보조, 지원	0.9	1.1	-	-	-	-
기 타	-	-	-	2.1	3.4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8-12〉를 통해 사업 자본금 조달방법을 살펴보면 응답대상자의 73.2%가 본인 가족, 친지에 의해 조달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정부의 보조 및 지원은 전체 사업비 구성에서 0.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종사상 지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고용주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비중이 69.0%,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용자가 22.5%를 차지하며, 정부의 보조 지원은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 친지에 의한 자본금 조달 비율이 75.8%로 고용주에 비해 6.5%p 정도 높는데 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용자는 16.5%로 고용주보다 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3>은 창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자금, 기술 및 인력의 확보, 행정절차, 업종 및 사업장 위치 선정 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이나 인력 등 다른 항목들은 '그런대로 괜찮았다'라는 응답이 39~56% 수준으로 다른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대로 괜찮았다'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금확보 면에서는 '매우 어려웠다' 혹은 '어려운 편이었다'가 34.1%로 나타났고, 그 이외의 기술의 확보, 적당한 인력의 확보, 행정적인 절차, 업종 선정, 사업장 위치선정 등은 '쉬운편이다', '매우쉽다'가 33%-44%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노동패널조사에 응답한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 회사 창업시 기술이나 인력의 확보, 혹은 다른 외적 요인들보다는 자금확보 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8-13> 창업과정에서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이다	그런대로 괜찮다	쉬운 편이다	매우 쉽다	모름/무응답	접수
자금의 확보	7.8	26.3	39.9	19.9	3.7	2.6	3.0
기술의 확보	1.4	9.4	51.1	30.1	6.2	1.8	3.4
적당한 인력의 확보	3.1	6.8	53.7	27.4	5.9	3.0	3.4
행정적인 절차	0.3	5.7	55.7	27.3	7.2	3.8	3.6
업종 선정	0.7	9.9	44.0	35.8	8.3	1.3	3.5
사업장 위치선정	2.0	9.7	47.1	33.7	6.1	1.3	3.4

주: 행정적인 절차 : 인허가, 창업지원 등

2. 사업체의 운영

사업체의 운영에 관련해서는 현 사업체의 가치와 사업체에 대한 중장기적 목표,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의사 희망 여부, 임금근로자로 전환시 희망 연봉 등을 질문하였다.

우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고용주가 생각하는 가치액(약 1억5천만원)이 자영업자(약 5천2백만원)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8-14> 참조). 이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체의 창업비용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보증금 및 임대료와 시설

<표 8-14> 현재 사업(일)의 가치

(단위: 백만원)

	고용주			자영업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부동산의 가격보증금	48.6	47.0	59.3	67.6	67.4	69.0
월임대료와 월관리비	0.8	0.8	0.8	0.8	0.7	1.1
시설비	23.1	23.5	20.8	14.9	15.6	10.7
상품 또는 원료의 값	15.6	17.2	5.0	10.4	10.4	10.3
권리금	9.6	9.1	13.1	4.9	4.5	7.6
기타	2.2	2.4	1.1	1.5	1.5	1.3
총가치액(백만원)	151	162	104	52	62	26

주: 총가치액은 세부 항목의 합계에 의한 것임.

<표 8-15>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사업체 장기적 전망

(단위: %)

	성장 가능성의 정도						
	전체	매우 높다	어느정도 있다.	현재와 비슷하다	현재보다 다소 못하다	현재보다 훨씬 못하다.	모름/무응답
전체	100.0	2.1	12.8	49.6	26.7	8.2	0.6
농림어업	100.0	0.8	2.0	39.1	42.8	14.6	0.6
광공업	100.0	3.4	11.5	53.9	19.4	11.1	0.6
건설업	100.0	1.3	30.0	41.3	21.9	4.2	1.3
전기가스수도업	100.0	-	7.3	66.0	22.2	3.5	1.0
도소매음식숙박업	100.0	1.9	12.7	52.1	25.9	7.0	0.5
금융부동산업	100.0	-	22.2	38.1	30.2	9.5	-
공공서비스업	100.0	4.6	20.6	51.9	18.5	4.5	-

비와 같은 고정자산 항목들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체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약 34.9%정도가 현재보다 다소 못하거나 훨씬 못하다고 전망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14.9%)에 비해 2.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에는 건설업, 공공서비스업의 경우 현재보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반면, 농림어업의 경우 57.4%가 장기적 전망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이직희망 여부

5차년도 조사에서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만일 희망한다면 얼마나 반기를 원하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91.5%는 취업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정금액 이상의 월급이라면 취직하겠다는 사람은 6.7%, 월급과 상관없이 옮기고 싶어하는 응답자는 1.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직 희망 여부를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의사가 없다는 비중이 고용주(95.7%)가 자영업자(89.3%)보다 6.4%p 더 높는데 반해,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른 곳에 옮기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자영업자가 고용주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8-16〉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서의 이직 희망 여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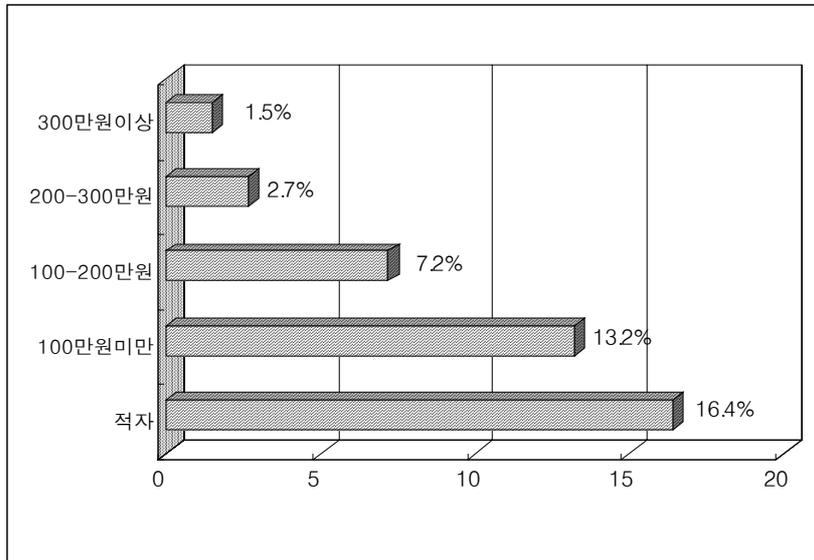
	전체	고용주	자영업자
(1) 전혀 취직 의사 없음	91.5	95.7	89.3
(2)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준다면 취직의사 있음	6.7	4.2	8.1
희망급여(세후)(만원)	160	205	148
(3) 월급과 상관없이 자리만 있으면 취직	1.8	0.1	2.6

일정금액 이상이면 다른 곳으로 옮길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평균 희망급여는 160만원이며, 현재의 월평균소득(119만원)보다 약 1.3 배 이상의 소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고용주의 희망급여(205만원)는 자영업자(143만원)보다 약 1.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3]은 현재의 월평균소득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준다면 취직의사가 있거나 월급과는 상관없이 자리만 있으면 취직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벌고 있는 경우 1.5%만이 이직할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월 평균 소득이 200-300만원인 경우에는 2.7%, 100-200만원 경우에는 7.2%,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3.2%, 적자인 경우에는 16.4%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에는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성별로는 여성(9.7%)이 남성(8.2%)보다 높은 이직의사를,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의사가 높은 가운데 30세 미만인 연령층은 그 비중이 1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8-3) 현재의 월평균소득수준별 이직희망자의 비중

(단위: %)



참고문헌

성지미·안주엽(2003),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 한국노동패널연구 2003-01.

제 9 장

생활 · 직무 만족도 및 조직 몰입, 사회계층
소속감

본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 15세 이상의 개인이 응답한 생활 전반에 관한 내용을 한 축으로 한다면 다른 한 축은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개인의 생활과 경제활동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왔다면, 이 장에서는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하여 생활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을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와 이를 구성하는 세부항목으로 가족의 수입, 여가 생활,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및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고 있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회계층 소속감과 관련해서는 1차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2차년도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을 물었고 3차년도 조사와 5차년도 조사에서는 경제적 소속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구분하여 질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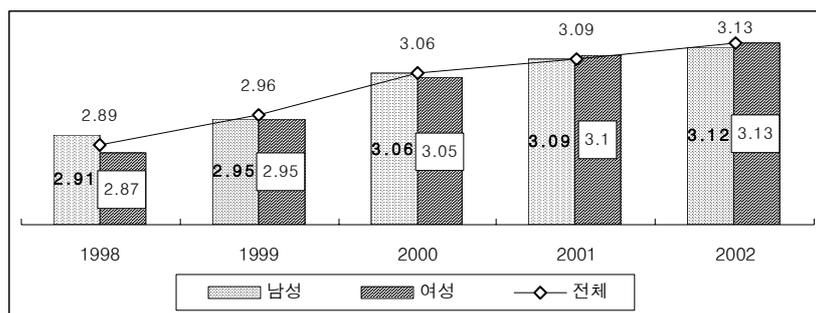
제2절에서는 직업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결과들로 1차년도 조사부터 포함된 직무 만족도, 직무 불일치도를 비롯하여 5차년도 조사부터 처음 설문문항에 포함된 조직 몰입 등을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년도부터 취업자의 일자리에 관해서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를, 특히 임금근로자의 경우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에 관한 만족도를 묻고 있으며 3차년도 조사부터 전반적인 직업만족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교육이나

기술(기능) 수준과 일자리에서 요구하는 교육 혹은 기술(기능) 수준간의 불일치도를 1차년도 조사부터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본인의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5차년도 조사부터 취업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업체 혹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조직 몰입에 관한 질문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1절 생활 만족도와 사회계층 소속감

본 절에서는 생활 전반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선 생활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이어서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회계층 소속감을 다룬다. [그림 9-1]은 지난 5년 동안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에 관한 응답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98 → 2002 = 2.89 → 3.13). 성별로 볼 때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한 응답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남성의 경우(2.91 → 3.12)보다는 여성의 경우(2.87 → 3.13)가 연도별 추이에 있어서 약간 더 빠르게 생활에 관한

[그림 9-1]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 1998~2002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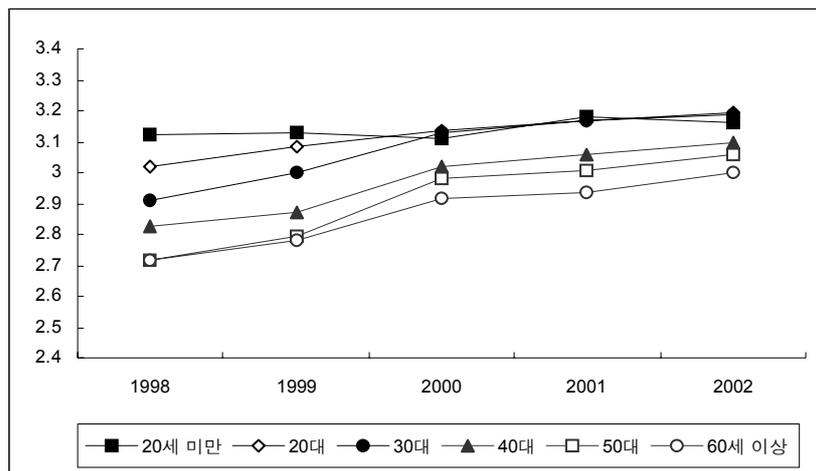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림 9-2]는 연령별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연령별로는 큰 변별력이 없으나 젊은층일수록 생활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2년 당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제시해 보면, 20대의 경우가 63.8점으로 가장 높고 60세 이상은 60.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평균적으로 63점대를 보여주고 있으나 40대 이후로는 61점대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간 추이에 있어서는 젊은층보다는 고령층일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50대의 경우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20세 미만의 경우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1998년 당시 3.12점에서 2002년 당시 3.16점으로 0.04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20대의 경우 0.17점(3.02 → 3.19), 30대의 경우 0.27점(2.91 → 3.18), 40대의 경우 0.27점(2.83 → 3.09), 50대는 0.34점(2.72 → 3.06), 60대 이상은 0.28점(2.72 → 3.00)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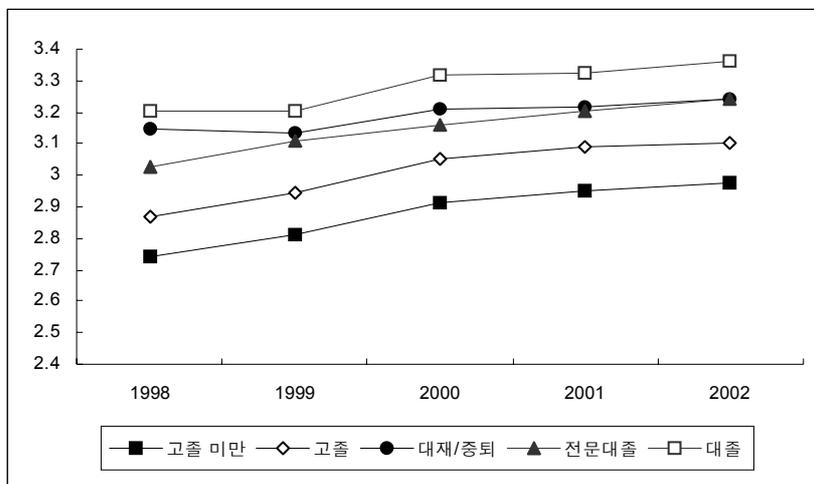
[그림 9-3]은 교육수준별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관한 만족이

(그림 9-2)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연령별 추이 : 1998~2002년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평균 생활 만족도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고졸 미만의 경우 60.0점인데 비해서 대졸자는 67.2점으로 7.2점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연도간 추이에 있어서는 저학력자일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졸 미만이나 고졸자의 경우 1998년과 2002년 점수를 비교해 볼 때 둘다 0.23점 가량 증가했으나 대재 및 중퇴는 0.09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대졸자들도 0.15점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림 9-3]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점수 교육수준별 추이 : 1998~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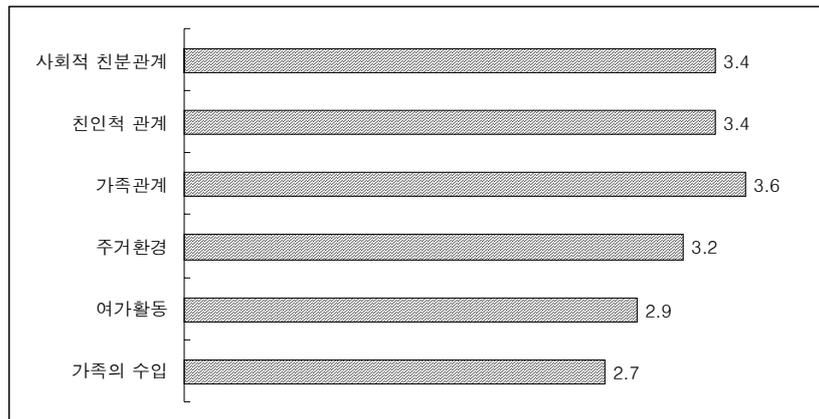
이러한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를 구성하는 각 항목의 만족도 분포를 2002년도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9-1>과 같다. 일곱 가지 항목 중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의 수입(33.3%)과 여가(26.2%)로 나타났고, 만족스럽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가족관계(54.6%), 친인척관계(41.5%), 사회적 친분관계(37.2%)로 나타났다. 결국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생활의 경제적인 부분과 시간적인 부분에서의 불만족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의 만족과 상쇄되어 보통의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림 9-4]는 각 항목별 생활 만족도의 평균 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이 역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3.6점)이 가장 높고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2.7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1〉 항목별 생활 만족도 분포 : 2002년

(단위:%)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 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족의 수입	0.4	10.7	49.8	33.3	5.8
여가활동	0.4	18.9	51.6	26.2	2.9
주거환경	1.2	34.3	49.4	13.7	1.5
가족관계	4.5	54.6	37.1	3.4	0.4
친인척 관계	2.3	41.5	51.5	4.2	0.4
사회적 친분관계	2.7	37.2	56.0	3.6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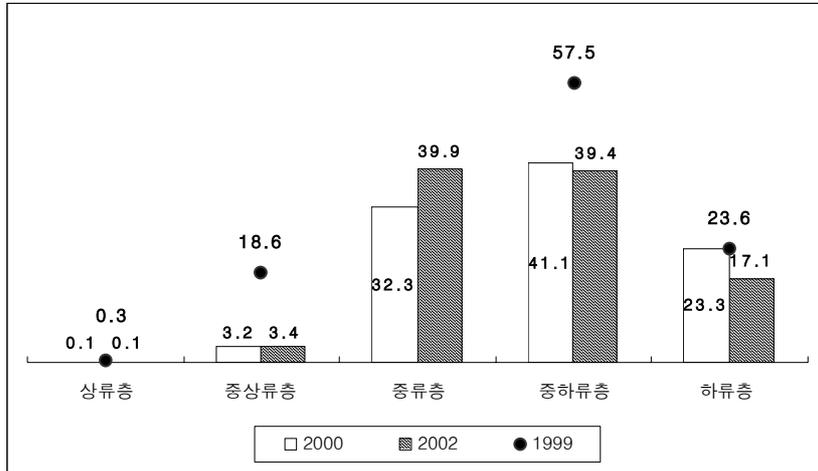
(그림 9-4) 항목별 생활 만족도 점수 비교(2002년, 점수)



다음으로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은 2차년도에 전반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을 묻고 있으며 2000년과 2002년에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여 사회계층 소속감을 묻고 있다. [그림 9-5]는 경제적 수준의 사회계층 소속감의 2개년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류층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최근으로 올수록 중류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하류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5]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경제적 수준) : 2000/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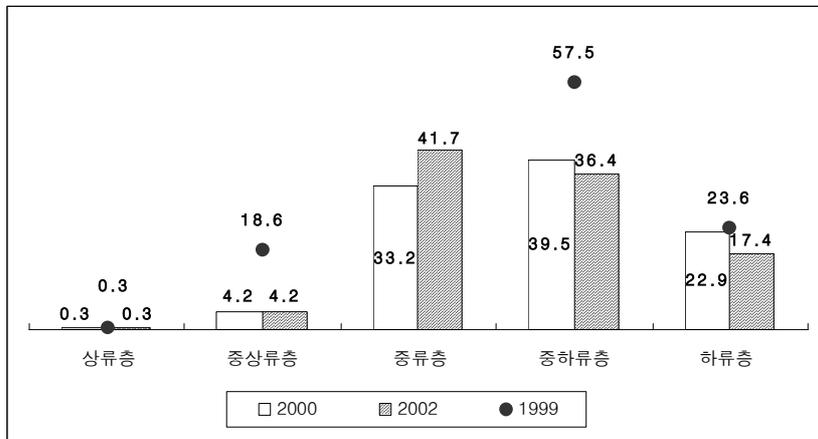
(단위: %)



주: 1999년의 경우는 4점 척도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계층 소속감을 묻고 있음.

[그림 9-6]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사회적 지위) : 2000/2002년

(단위: %)



[그림 9-6]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사회계층 소속감을 살펴보면 이 역시 최근으로 올수록 중류층이 증가하고 하류층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상관없이 노동패

닐 조사의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좀더 나아지고 있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2000년 당시의 주관적 사회계층이 2002년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9-2>는 경제적 수준에 대해서, <표 9-3>은 사회적 지위 측면에서 주관적 사회계층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대각선 행렬은 사회계층의 유지율, 대각선 상 행렬은 사회계층의 하락율, 대각선 하 행렬은 사회계층의 상승을 의미한다.

<표 9-2>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소속감 변화(경제적 수준) : 2000~2002년
(단위:%)

2002 2000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상류층	0.0	82.8	17.2	0.0	0.0
중상류층	2.6	29.4	56.1	11.5	0.5
중류층	0.2	5.2	62.2	27.9	4.5
중하류층	0.0	1.2	33.1	50.1	15.6
하류층	0.0	3.3	39.2	39.6	17.9

<표 9-3> 개인의 주관적 사회계층소속감 변화(사회적 지위) : 2000~2002년
(단위:%)

2002 2000	상류층	중상류층	중류층	중하류층	하류층
상류층	6.0	49.2	41.2	3.5	0.0
중상류층	2.6	31.7	52.0	10.3	3.4
중류층	0.5	6.2	62.7	25.4	5.1
중하류층	0.0	1.3	35.0	47.5	16.2
하류층	0.0	4.1	40.8	36.7	18.1

먼저 대각선 행렬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든 사회적 지위이든 상관없이 2000년 당시 중류층이 사회계층 유지율이 62.7%로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의 사회계층 유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각선 상 행렬(사회계층 하락)과 하 행렬(사회계층 상승)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이동이 하강이동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앞서 살펴본 연도별 추이에서 중류층의 비중이 상승하고 하류층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것은 주관적 사회계층의 전반적인 상승이동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다. 중류층의 증가는 중상류층의 하강이동과 중하류층과 하류층의 상승이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승이동은 하류층일수록, 하강이동은 상류층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다른 경우에는 큰 차별성이 없으나 상류층의 경우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류층의 하강이동에 있어서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중상류층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응답 비중은 17.2%에 불과하지만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동일한 응답 비중은 44.7%에 이르고 있다.

〈표 9-4〉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계층 소속감(경제적 수준) : 2002년

(단위: %)

	하류층	중하류층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
매우불만족	6.3	0.2	0.0	0.0	0.0
불만족	32.4	11.7	1.5	0.4	0.0
보통	55.9	72.5	62.4	17.2	7.2
만족	5.3	15.4	35.3	79.5	77.2
매우 만족	0.1	0.2	0.7	2.9	15.5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본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사회계층 소속감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상류층으로 갈수록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아지고 하류층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뚜렷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하류층의 경우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별로 만족한다는 비중(만족 + 매우 만족)이 각각

5.4%, 5.9%에 불과하지만 상류층의 경우 각각 92.7%, 75.4%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주관적으로 측정된 사회계층이기는 하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양적인 측면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관적 사회계층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지위를 비교해 보면, 다른 경우에는 큰 차별성이 없으나 상류층의 경우에만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계층이 상류층인 경우 생활에 만족한다는 비중(92.7%)이 사회적 지위에 따른 사회계층이 상류층인 경우(75.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상류층에 한해서 경제적 수준이 사회적 지위보다 생활에 관한 만족과 더 관련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5〉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계층 소속감(사회적 지위) : 2002년 (단위: %)

	하류층	중하류층	중류층	중상류층	상류층
매우불만족	6.0	0.3	0.0	0.3	0.0
불만족	31.8	12.1	1.9	0.4	0.0
보통	56.3	72.3	63.6	22.9	24.5
만족	5.8	15.1	33.8	74.1	64.3
매우 만족	0.1	0.2	0.7	2.3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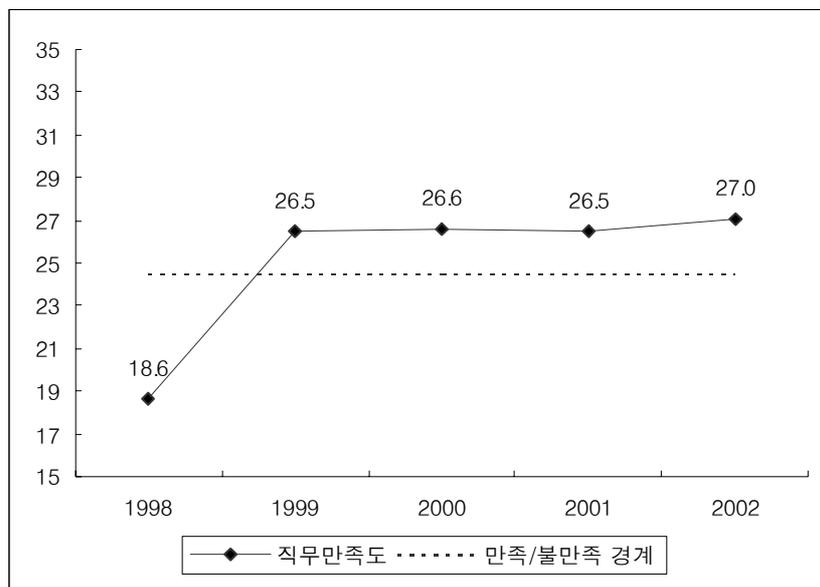
제2절 직무만족도 및 불일치도, 조직몰입

1. 직무만족도

본 절에서는 먼저 1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 조사된 응답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다루고자 한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1차 년도 조사부터 임금, 취업안정성, 일의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개인의 발전가능성,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복리후생제도 등 9개 항목에 관한 직무만족도를 문항에 포함하고 있으며 3차 년도 조사부터는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었다. 노동패널 조사에서 직무만족 문항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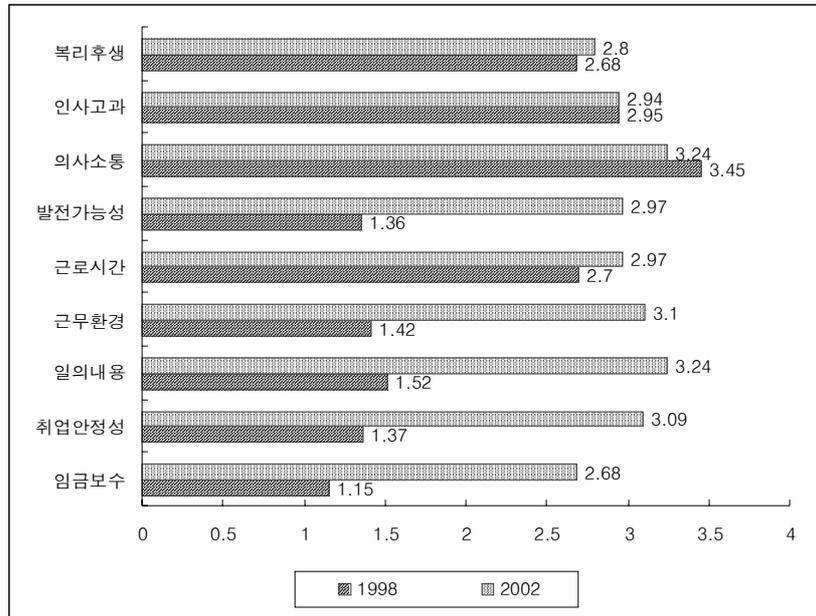
(그림 9-7)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2000~2002년



주: 제시된 결과는 9개 직무만족 항목의 평균점수의 합임(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45).

[그림 9-7]을 통해서 연도별로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노동패널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직무만족도를 별도로 질문하고 있으나 이 문항이 3차 년도부터 포함되었기 때문에 1차 년도부터 문항이 포함된 9개 항목을 합산하여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1998년 당시에는 당시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여 직무만족에 관한 평균 점수가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응답비중이 높아 만족/불만족 경계를 밑돌았으나 1999년부터 만족/불만족 경계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8] 각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추이 : 1998/2002년



주: 제시된 결과는 평균점수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매우 불만족=1~매우 만족=5).

[그림 9-8]에서는 각 항목별로 직무만족도 점수의 추이를 1998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복리후생, 인사고과 및 의사소통 항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항목별 직무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만족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임금/보수나 취업안정성 등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 등에 관한 불만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 점수가 5년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은 취업안정성(1998 → 2002 = 1.37점 → 3.09점)과 일의 내용(1.52 → 3.2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낮아진 경우는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45 → 3.24), 인사고과의 공정성(2.95 → 2.94) 등이었다.

다음으로 2002년을 중심으로 직무 만족의 항목별 차이와 인구학적 특성, 산업·직업별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9-6>은 직무 만족의 각 항목별로 응답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매우 만

족+만족)이 높은 항목은 일의 내용(34.8%),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30.1%)였으며 불만족스럽다는 응답 비중(불만족+매우 불만족)은 임금/보수(41.3%), 근로시간(26.4%) 등이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직무 만족의 경우 앞서 살펴본 연도별 변화 추이에 있어서 1차 년도 당시 만족 점수가 높은 항목이었으나 5년 사이에 만족 점수가 낮은 항목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장시간 근로에 관한 불만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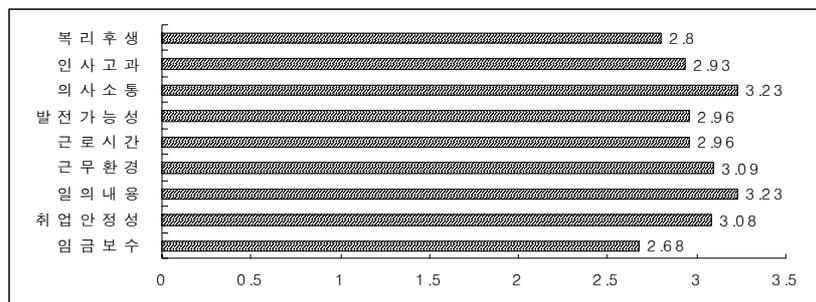
〈표 9-6〉 항목별 직업만족도 분포 : 2002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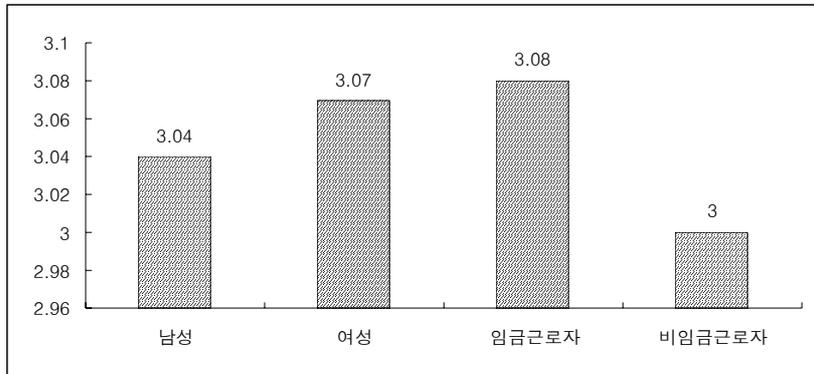
	매우 만족스럽다	만족스럽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임금/보수	0.4	13.3	44.9	36.3	5.0
취업안정성	1.0	28.2	50.2	19.1	1.5
일의 내용	1.9	32.9	52.3	12.0	0.7
근무환경	0.9	26.1	55.4	16.5	1.1
근로시간	0.7	23.6	49.3	24.4	2.0
발전가능성	1.3	18.1	57.3	21.6	1.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6	28.5	61.8	7.6	0.5
인사고과의 공정성	0.3	12.5	70.4	13.6	3.1
복리후생	0.3	12.5	59.0	22.9	5.3

[그림 9-9]는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를 제시한 것으로 임금/보수에 관한 직무만족 점수(2.68점)가 가장 낮고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일의 내용에 관한 직무만족 점수(3.2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9) 항목별 직무 만족도 점수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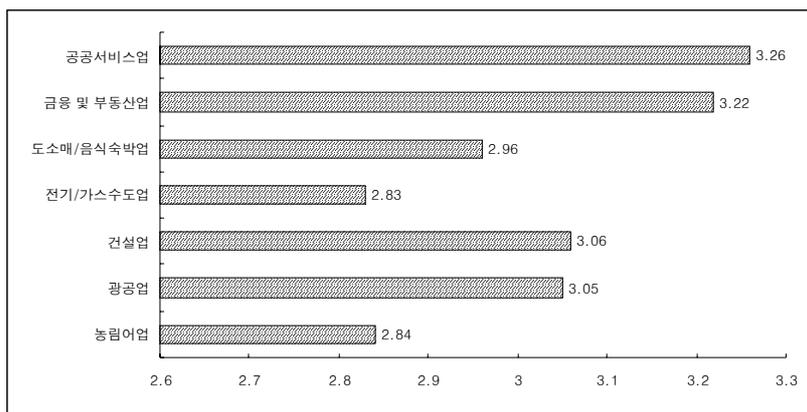


(그림 9-10) 전반적인 직무만족도 점수(성별/고용형태별)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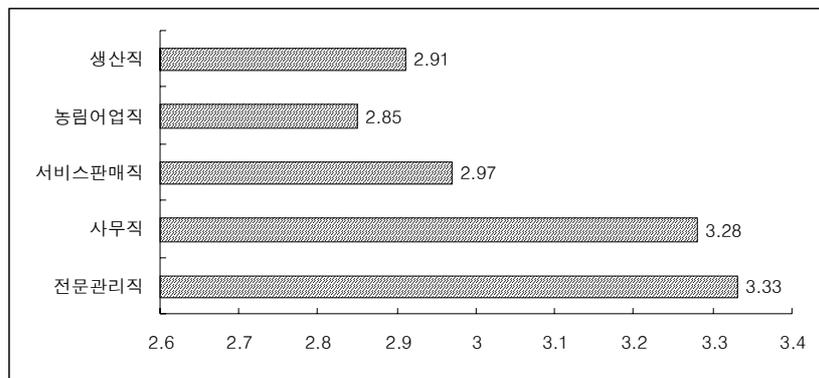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9-10]은 전반적인 직무만족 점수를 성별과 고용형태별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성별로 볼 때 남성(3.04점)보다는 여성(3.07)의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항목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무만족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나는 일의 내용(남성 : 여성 = 3.24 : 3.23)과 인사고과의 공정성(2.94 : 2.93), 복리후생(2.80 : 2.79) 등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3.08점)가 비임금근로자(3.00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만 응답한 인사고과의 공정성, 복리후생을 제외하고 전 항목에서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11)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산업별) : 2002년



[그림 9-11]과 [그림 9-12]는 산업 및 직업별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산업별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직무만족 점수(3.26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 종사자의 직무만족 점수(2.83)와 농림어업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점수(2.84)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직업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관리직의 직무만족 점수(3.3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어업직의 직무만족 점수(2.85 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12]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 점수(직업별) : 2002년



2.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

한국노동패널에서는 인력 수급의 질적 불일치 실태와 관련하여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직무불일치는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의 수준(level)간의 차이나 내용(type)간의 차이에 따라 통상 구분되는데 3차년도 청년용 부가조사를 제외하고 수준간의 차이와 관련하여 교육불일치를 측정하는 문항과 기술(기능)불일치를 측정하는 문항을 묻고 있다. 교육불일치는 수요 측면에서 일자리에 요구하는 교육수준과 공급 측면에서 본인의 교육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하며 본인의 교육수준이 일자리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를 가리켜 하향취업 혹은 과잉교육이라고 부른다. 기술(기능) 불일치는 수요측면

에서 요구되는 기술수준과 본인의 기술수준간의 차이를 의미한다. 만약 본인의 수준이 일자리의 수준보다 높다면 과잉(over)으로, 본인의 수준과 일자리의 요구수준이 동일할 경우 적합(fit)으로, 일자리의 요구수준이 오히려 높을 경우 과소(under)로 정의한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본인의 교육수준이나 기술(기능)수준과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3항으로 구성된 2차 년도를 제외하고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다시 3점 척도로 변경하여 과잉(수준이 매우 낮다, 수준이 낮은 편이다), 적합(수준이 맞다), 과소(수준이 높은 편이다,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로 표기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패널 조사에는 2000년 조사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기능)의 유용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관한 질문은 “현재의 일자리에서 일하시면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기술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직장에 들어갈 경우 얼마나 유용합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① 현 직장에서의 거의 똑같이 유용하다, ②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③ 거의 쓸모가 없다, ④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표 9-7〉 인구학적 특성별 교육불일치 결과 : 2002년

(단위 : %)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9.9	78.5	1.6
성 별	남 성	20.5	77.8	1.7
	여 성	19.0	79.7	1.3
연 령	15~19세	25.5	73.2	1.3
	20~29세	23.0	74.4	2.3
	30~39세	19.5	79.2	1.3
	40~49세	19.6	78.5	1.9
	50~59세	18.2	81.1	0.7
	60세이상	18.4	81.0	1.6
교육수준	고졸미만	15.5	83.7	0.8
	고 졸	20.9	77.3	1.8
	대재밋중퇴	36.8	61.1	2.1
	전문대졸	24.4	74.8	0.7
	대졸이상	19.4	78.1	2.5

<표 9-7>과 <표 9-8>은 2002년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과 기술(기능) 수준의 직무 불일치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교육불일치를 살펴보면 취업자 10명 중 2명꼴(19.9%)로 하향취업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젊을수록 과잉교육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및 중퇴를 제외하고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9-8>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불일치 결과 : 2002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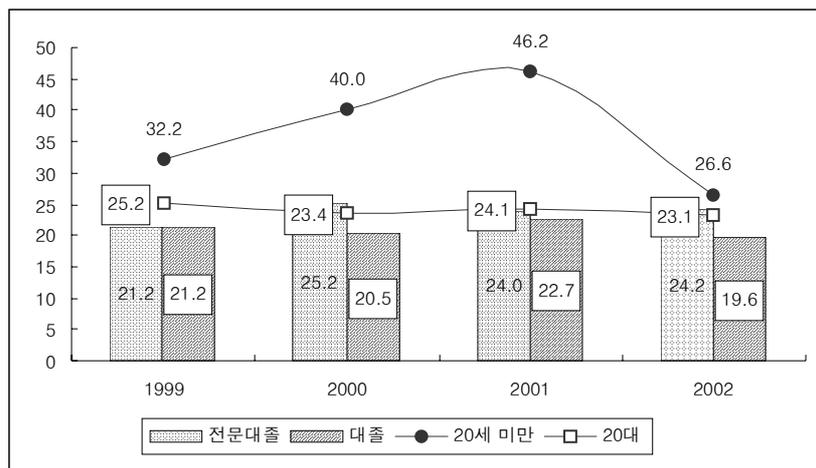
		과잉(over)	적합(fit)	과소(under)
전 체		19.0	79.5	1.5
성 별	남 성	19.7	78.6	1.7
	여 성	17.9	80.8	1.3
연 령	15~19세	25.5	73.2	1.3
	20~29세	21.6	76.2	2.2
	30~39세	18.3	80.3	1.4
	40~49세	18.7	79.5	1.7
	50~59세	17.9	81.1	0.9
	60세이상	18.1	81.0	1.5
교육 수 준	고졸미만	15.4	83.9	0.7
	고 졸	19.4	78.9	1.6
	대재및중퇴	36.7	60.8	2.5
	전문대졸	21.7	77.2	1.1
	대졸이상	19.1	78.4	2.5

이어서 <표 9-7>을 통해 기술(기능) 불일치를 살펴보면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취업자 중 19.0%가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 보면 교육 불일치보다 약간 높게 남성(19.7%)이 여성(17.9%)보다 과잉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교육수준별 응답 유형 역시 교육불일치와 유사하게 젊을수록, 대재 및 중퇴이거나 전문대졸인 경우 과잉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불일치 결과와 관련하여 젊은층의 하향취업 비중이 높다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일자리 부족과 고실업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전문대졸자의 하향취업이 높다는 것은 전문대 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점차 협소해지고 있으며 전문대졸자들의 교육투자 수익률도 고졸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젊은층과 전문대졸자의 높은 하향취업 현상이 연도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30대 미만 청년층과 전문대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항목이 처음으로 포함된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층의 결과를 살펴보면 30대 미만 청년층의 경우 30대 이상 청년층보다 높은 하향취업 비중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9-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대 미만의 경우 2001년도에 하향취업 비중(46.2%)이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까지 치달고 있다. 다만, 2002년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30대 미만 청년층의 하향취업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전문대졸자의 경우에는 1998년 21.2%로 대졸자와 동일한 과잉교육 비중을 보여주었으나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24% 이상의 과잉교육 비중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대졸자와의 격차(1999 → 2002 = 0.02%p → 4.60%p)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13] 연도별 청년층 및 고등교육 졸업자의 교육불일치 추이 : 1999~2002년



다음으로 <표 9-9>를 통해서 기술(기능) 유용성에 관한 인구학적 특성별 응답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 보면,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는 응답 비중(똑같이 유용+부분 유용)의 경우 남성(82.4%)이 여성(73.7%)보다 8.7%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와 30대의 경우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의 기술(기능)이 유용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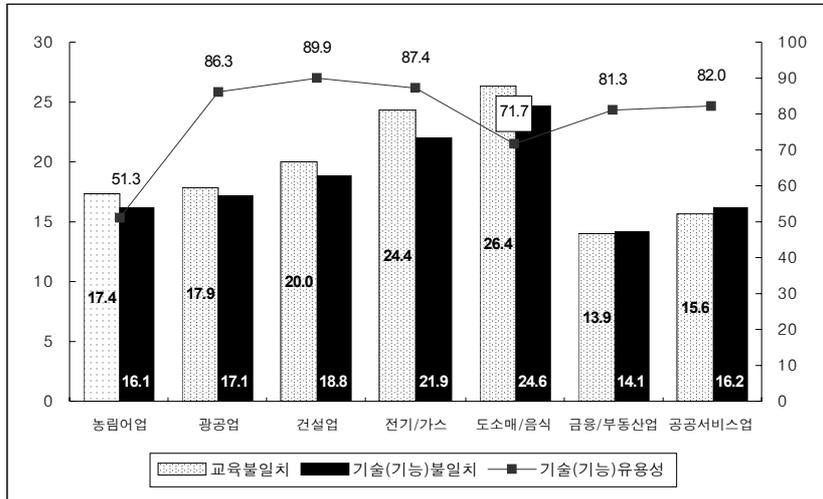
<표 9-9> 인구학적 특성별 기술(기능) 유용성 결과 : 200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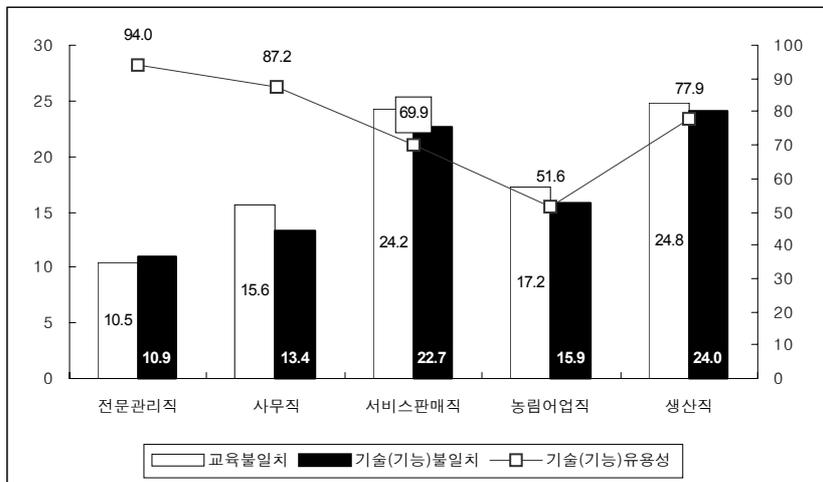
		똑같이 유용	부분 유용	거의 쓸모 없음	특별한 기술/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일자리아님
전 체		49.8	29.6	11.0	10.1
성 별	남 성	51.5	30.9	9.7	7.8
	여 성	46.0	27.7	12.8	13.5
연 령	15~19세	42.1	29.5	17.6	10.7
	20~29세	54.4	33.3	7.9	4.4
	30~39세	54.4	31.2	7.4	7.0
	40~49세	49.9	29.1	10.5	10.4
	50~59세	41.7	27.8	14.6	15.8
	60세이상	35.4	21.9	22.6	20.2
교육 수준	고졸미만	41.4	26.1	15.5	16.9
	고 졸	47.3	31.5	10.8	10.5
	대재및중퇴	45.6	31.7	17.6	5.1
	전문대졸	54.8	33.3	7.3	4.6
	대졸이상	63.2	29.5	4.7	2.6

[그림 9-14]와 [그림 9-15]는 산업 및 직업별로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 유용성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융 및 부동산업과 공공서비스업의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기능) 유용성 정도는 농림어업(51.3%)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직무불일치 비중이 가장 높았던 도소매·음식숙박업(71.7%)의 기술(기능) 유용성 비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9-14] 산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2년



[그림 9-15] 직업별 직무불일치 및 기술(기능) 유용성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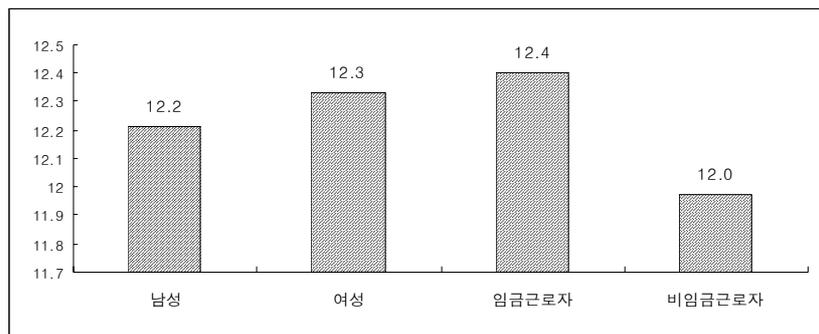
다음으로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직무불일치와 기술(기능) 유용성간에 거의 대칭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문관리직의 경우 직무불일치는 가장 낮게, 기술(기능)의 유용성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서 농림어업직은 직무불일치의 경우 가장 높게, 기술의 유용성의 경우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조직몰입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들이 얼마나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일자리)에 헌신하는가의 정도를 인구학적 특성 및 산업, 직업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서는 2002년 5차년도 조사부터 설문항에 조직몰입도에 관한 다섯 문항을 추가하고 있다.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일자리)은 다닐만한 좋은 직장이다, ② 나는 이 직장(일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③ 직장(일자리)을 찾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이 직장을 추천하고 싶다, ④ 나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일자리)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 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이 직장(일자리)을 계속 다니고 싶다” 등이다. 본 분석에서는 이 다섯 문항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여 조직몰입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다섯 번째 문항을 제외했을 때 크론바흐(Cronbach) α 계수의 값이 0.900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문항을 제외한 네 개 문항의 합으로 조직몰입도를 추정하였다.

[그림 9-16] 성별/고용형태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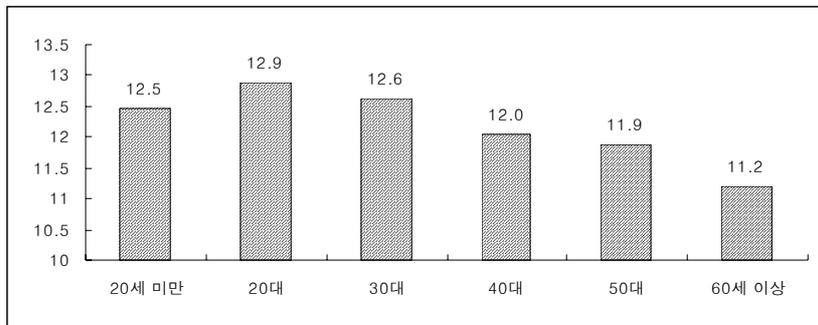


주: 제시된 결과는 4개 조직몰입 항목의 합(최소 4점/ 최대 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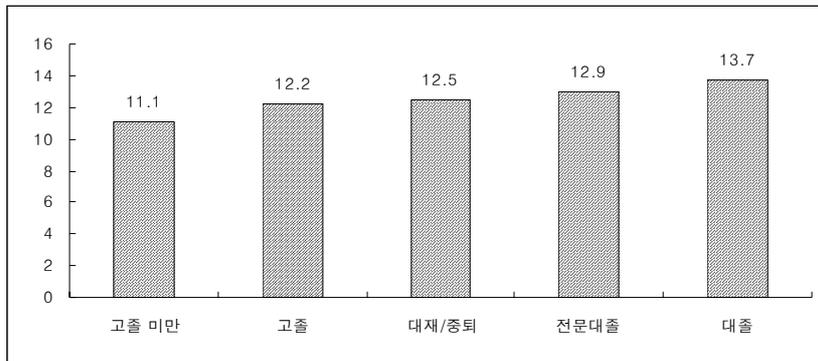
[그림 9-16]은 성별과 고용형태별로 조직 몰입 점수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가 비임금근로자에 비해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조직 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조직 몰입 점수가 가장 낮게 추정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조직 몰입 점수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9-17] 연령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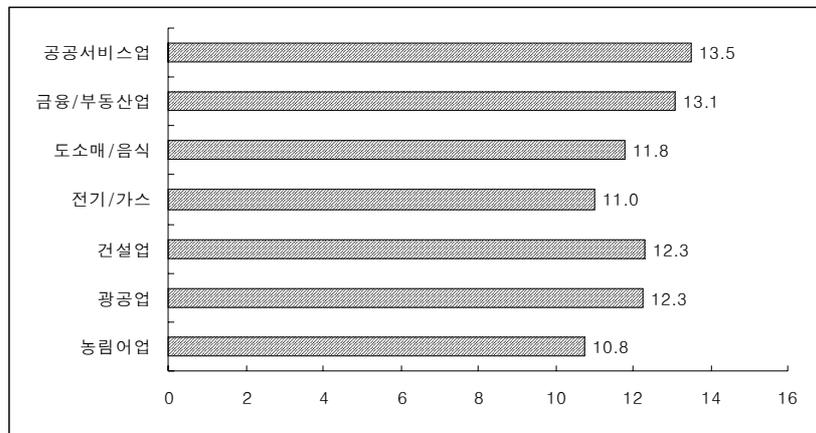
[그림 9-18] 교육수준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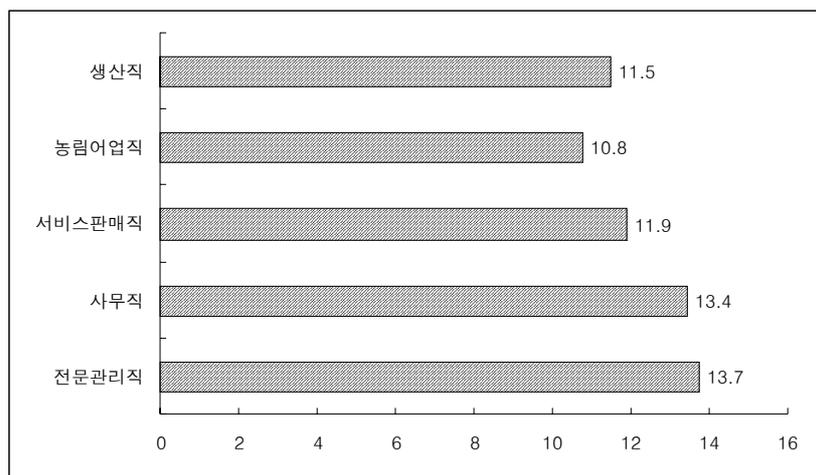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9-19]와 [그림 9-20]을 통해서 산업 및 직업별로 조직 몰입 점수를 비교해 보면 산업별로는 공공서비스업과 금융 및 부동산업

의 조직몰입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통신업의 경우가 낮은 조직몰입을 보여주고 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상대적으로 서비스·판매직이나 생산직보다 높은 조직몰입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9-19] 산업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그림 9-20] 직업별 조직몰입 점수 비교 : 2002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V)

- 발행연월일 | 2003년 12월 26일 인쇄
2003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 이 원 덕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02-782-01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9층
☎ 대표 (02) 782-0141 Fax : (02) 786-1862
- 조판·인쇄 | 거목정보산업(주) (02) 853-2255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등록번호 | 제13-155호

© 한국노동연구원'